2023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해양수산부

2023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해양수산부

2023년도 해양수산부 성과관리 시행계획, 2023. 3.
해양수산부 혁신행정담당관 (☏ 044-200-5197, 6175)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555호

목 차

Ⅰ. 그간의 정책성과 및 2023년도 정책 추진방향 ····· 1

1. 그간의 정책성과 ····· 3

2. 2023년도 정책 추진방향 ····· 8

Ⅱ. 일반 현황 및 계획의 개요 ····· 11

1. 해양수산부 일반 현황 ····· 13

2. 성과관리 시행계획 개요 ····· 16

Ⅲ. 세부 추진계획 ····· 21

전략목표Ⅰ. 세계를 선도하는 해운물류강국으로 도약한다. ····· 23

전략목표Ⅱ. 안전하고 국민 친화적인 해양·항만을 조성한다. ····· 107

전략목표Ⅲ. 경제활력을 높이고, 국민행복을 키우는 해양공간을 구축한다. ····· 147

전략목표Ⅳ. 경쟁력있는 수산업을 육성하고 활력넘치는 어촌을 조성한다. ····· 245

Ⅳ. 환류 등 관련계획 ····· 347

1. 이행상황 점검 계획 ····· 349

2. 평가결과 환류체계 ····· 352

3. 변화관리 계획 ····· 354

4. 현장의견의 정책반영 계획 ····· 361

【붙임】

1. 성과지표 현황 ····· 365

2. 관리과제와 국정기조 등 연계 현황 ····· 380

Ⅰ. 그간의 정책성과 및 2023년도 정책 추진방향

Ⅰ 그간의 정책성과 및 2023년도 정책 추진방향

1. 그간의 정책성과

가. 해운 · 항만 분야

○ **(최대실적 달성) '22년 해운매출액**(50조원 이상, 잠정),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105만TEU) 등 **해운산업 주요지표 최대실적 달성**

* (HMM 영업이익) '21년 전체 7.4조원 → '22년 상반기에만 6.1조원 실적기록

○ **(안정적 시장점유)** HMM 소속 얼라이언스*(THEA)의 **미주·유럽 항로 점유율**은 **26%, 25%**로 HMM 가입('20.4) 이후 안정적 유지중

* 초대형 컨선(16K 이상) 보유척수는 HMM 20, 하팍로이드 6, ONE 6, 양밍 0으로, 규모화에 따른 비용절감 기여도가 높은 HMM은 견고한 입지 구축

○ **(선박발주 확대) 해양진흥공사 설립**('18.7) **이후** 총 105개 선사에 **8조원 지원** → 국적선사의 **선박발주 60%**(규모 기준) **확대***

* (규모) 1,349 → 2,146만GT / (척수) 298 → 336 / (금액) 114.2 → 269.5억달러

○ **(연안해운) 국가보조항로**(27개) 운영, **민간선사 운항결손 지원***('18~), **섬 주민 여객·차량 운임보조 확대**** 등으로 **항로단절**을 **방지**

* 1일 생활권 구축 항로 및 2년 연속 적자항로 지원('18년 3개 → '23년 11개) 등
** 섬 주민 대상 여객·차량 운임의 최대 50% 보조

○ **(해운인력)** 실습선 2척 신조 등 **교육인프라 확충**, 인권교육 법제화('23), 선원 최저임금 인상* 등 선원의 **근로여건 개선 및 복지 확대**

* ('17) 176만원 → ('18) 198 → ('19) 215 → ('20) 221 → ('21) 225 → ('22) 248

○ **(항만경쟁력) 부산항**을 **세계 2위 환적 허브항만**('22년 2,207만TEU 중 환적물량 53%), **광양항**을 **세계 11위 종합항만**('22년 2억 4,060만톤)으로 육성

○ **(스마트물류)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20~'25), **스마트물류센터 2개소** 건립(부산항·인천항) 등 스마트 해운물류 전환 착수

* '25년까지 IMO level 3(선원없이 원격제어), '30년까지 level 4(완전자율) 수준 개발

나. 해양 분야

○ (**해양신산업**)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전략**’을 수립·발표(’22.12)하여 해양수산 신산업 5대* 분야 집중 육성 추진

* ①친환경·첨단 선박, ②스마트 블루푸드, ③해양레저관광, ④해양바이오, ⑤해양에너지·자원

- 벤처·창업기업을 위한 **해양모태펀드**를 신규 조성(1개 자펀드, 186억원)하고, 기조성된 6개 자펀드에서 총 36개사, 390억원 투자 완료(~’22)

- ‘**해양바이오산업 신성장 전략**’을 마련(’22.7)하고, 해양바이오기업을 **全주기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추진

* 산업화지원센터(~’24), 인증지원센터(’23~), 해조류 활성소재 GMP시설(~’24), 메디컬·헬스케어 연구센터(’23~) 건립 및 해양바이오 뱅크 확대(화장품 소재 등 5개)

○ (**해양관광**) **동북아 최초로 크루즈 운항**을 **전면 정상화**(’22.10)하고, 지역에 특색있는 **해양레저관광 여가 기반 확대**를 위한 **인프라***를 **조성**

* 해양레저관광 거점 5개소, 마리나 비즈센터 2개소, 거점형 마리나 6개소 등

-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21.12), **해양치유센터**(4개소)*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체계**** 마련

* 완도(스포츠재활형), 태안(레저복합형), 울진(중장기 체류형), 경남고성(기업연계형)

** 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 마련(’22.9) 및 표준 교육교재 개발(’22.12)

○ (**해양문화**) 해양문화 저변확대를 위한 권역별로 인프라*를 구축

* 해양과학관 준공(울진, ’20), 해양박물관(인천, ’21.11)·미래해양과학관(청주, ’22.11) 착공 등

○ (**심해·극지 연구**) **대형 해양과학조사선**(이사부호)을 활용하여 **인도양 열수 생명자원 연구**와 **북서태평양 태풍 연구** 등 추진(’22~’26)

* 인도양 생명자원 탐사로 신종 생명체 발견이 기대되는 세계 4번째 인도양 新 열수구를 발견(’18.7)

- ‘제4차 남극 연구활동 진흥 기본계획(’22~’26)‘ 수립(’22.4),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 개념설계 **착수**(’22.7), ‘**제1차 극지활동 진흥 기본계획**(’23~’27)‘ 수립(’22.11) 등 극지 진출 기반 마련

○ (**해양영토**) 해양과학조사·예보 **인프라 확대*** 및 **무인도서 이용**** **활성화**

* 이안류 감시 시스템 확대 운영(`21. 9개소→`22. 10개소)

** 무인도서에서 행위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무인도서법」개정(’22. 11 국회제출) 추진

다. 수산 · 어촌 분야

○ (**수산식품**) **비대면 수출지원** 확대 등으로 **수산물 수출**은 전년 대비(28.3억달러) 대비 **11.7% 증가***하여 역대 **최고 수출액 경신**

* 수출액(억달러): ('18) 23.8 → ('19) 25.1 → ('20) 23.1 → ('21) 28.3 → ('22) 31.6

○ (**물가대응**) 비축수산물 상시방출체계 가동, 수산물 상생할인지원 확대 등 소비자 물가 대비 **수산물 물가상승폭*** **최소화**에 주력

* 수산물 물가상승률(전년 대비, %): (3월) 0.6 → (5월) 2.7 → (7월) 3.5
전체 물가상승률(전년 대비, %): (3월) 4.1 → (5월) 5.4 → (7월) 6.3

○ (**수산자원**) 총허용어획량(TAC) 확대, 자원조성 등으로 전년 대비 **어선어업 생산량**은 **1%**(0.9만톤) 증가

- 국민인식 전환*을 통해 **'어린 갈치' 판매 비율**이 전년 대비 **18.4%p 감소**(22.2%→ 3.8%)하는 등 불법어업·유통 감소

* 신규 대형어업지도선(3천톤급, 3척) 건조, 우리 민간어선을 활용한 한·중 잠정조치 수역 자원조사 등으로 안정적 조업환경 조성

○ (**친환경**) **배합사료 사용률**은 전년동기 대비 **1.9p%*** 증가, **친환경 수산물 인증건수**도 전년 대비 **148% 증가****하여 친환경 가속화

* 배합사료 사용률(%): (`21.6) 28.0 → (`22.6, 잠정) 29.9(+1.9p)
** 친환경수산물 인증(건): (`20) 22 → (`21) 50 → (`22.9) 124

○ (**생활복지**) 소멸 위기에 처한 어촌에 **총 3조원**을 투자하여 **복지·문화** 등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추진기반 마련

* 지자체 대상으로 '23년 신규사업 대상지(60개소) 공모 및 공모가이드라인 배포(9월)

○ (**소득안정**) 유류비 상승*으로 어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유가연동 보조금 긴급지원**을 통해 **어업인 부담**을 **경감**(1인당 평균 최대 154만원)

* 면세경유 가격(원/ℓ): ('21) 603→ ('22.1) 700→ ('22.7) 1,471(전년 대비 43.9% 증가)

○ (**어가 경영안정 제고**) **어업인**의 **소득안정** 및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기존 직불제(4종) 외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제**(2종) **신규 도입**

라. 해양환경·안전 분야

○ (**기후변화대응**) 2030년 해양수산 온실가스 **70% 감축**('18년比)을 목표로 '**제4차 기후변화대응 해양수산분야 종합계획**' 발표('22.9)

- 블루카본(염습지) **온실가스 흡수·저장량**을 국내 최초로(세계 3번째) **국가 공식통계**에 반영('22.10, △1.1만톤)

○ (**日원전 오염수 대응**)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관련 **해양수산 대응방안**을 **수립**('21.4)하고, 관련 예산 확보 및 제도적 기반 마련

* 연안해역 방사능 모니터링 강화,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국내 생산수산물 방사능 검사 강화,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및 원산지 단속 강화 등

○ (**해양공간 통합관리**) 해양 보전-개발 간 갈등을 합리적으로 **예방·조정**하기 위해 **영해 全해역 해양공간계획 수립완료**('22.6)

- 지자체 간 해양관할구역 **갈등**의 **근원적 해소**를 위한 「**해양관할구역 설정법**」 마련('22.11), 해양공간의 **공정하고 합리적 이용**을 위한 「**공유수면법**」 **전면 개정**안 마련('22.12)

○ (**해양쓰레기 관리**) 수거·처리 중심에서 **발생예방·재활용 및 인식증진***으로 정책영역을 **확장**하여 '제1차 해양폐기물 기본계획**('21~'30)' 수립 및 본격 이행

* 어구·부표 관리 강화를 위한 「수산업법」 전부개정('22.1), 하천 기인 쓰레기 저감, 해양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대책 수립('22.12), 국제해양폐기물콘퍼런스 개최('22.9) 및 범부처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개최('22.12) 등

** 「해양폐기물관리법」 제정('19.12) 및 제1차 기본계획 수립('21.5)을 통해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 '30년 60% 저감, '50년 제로화 추진 목표 설정

○ (**해양생태계 보전**) 해양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해 **해양보호구역**을 지속 **확대***하고, 국내 갯벌이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21.7)된 후 **람사르 습지도시**('22.5) 인증 **획득**

* 목표 : ('12) 18개소 360㎢ → ('32) 29개소 1,798.7㎢ / ('22) 울진 나곡리 해역, 고흥갯벌 신규 지정

** 한국의 갯벌 : 서천, 고창, 신안, 보성·순천 갯벌(총 면적 1284.11km^2)

- 해양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한 **해양보호생물 지정 확대***, 수족관 해양동물 복지 개선을 위한 **「동물원·수족관법」** 개정('22.11)

* 해양보호생물 지정 종 : ('19) 80종 → ('21) 88종 → ('22) 91종

○ **(해사안전관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출범**('19.7), **「지능형해상교통정보법」 제정**('20) 등 **해사안전관리 강화**로 **인명피해 저감**

* 최근 **5년 인명피해**('18~'22, 545명)는 종전 대비('13~'17, 931명) **41.5%**(386명) **감소**

- 전해상 100km까지 디지털**통신망 구축**(263개 기지국)으로 바다 내비게이션을 통한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 이용이 **지속 증가***

* ('21.1분기) 9TB → ('21.4분기) 31TB → ('22.4분기) 89TB

2. 2023년도 정책 추진방향

□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물류체계 구축

○ 저탄소·무탄소선박 기술을 개발·상용화하고, 공공·민간부문 친환경선박 보급을 확대하여 선도적인 **해운부문 탄소중립** 실현

○ 연안해역 교통환경 변화대비, **실시간 모니터링**, 빅데이터 기반 **기상·안전 정보** 분석·제공 등 **디지털 해상교통관리체계** 구축

○ 선화주 상생, 해운항만물류 인프라 확충 등 **해운물류 공급망 강화**를 통해 **국가 수출물류 안정적 지원**

○ 국적선사 경영 안전판 마련, 민간중심 선박투자 확대 등 **해운 불황기 대비 국적선사 경영 안정 지원**

○ 해운분야 친환경·탈탄소화 전략을 추진하고, 자율운항선박 상용화를 촉진하는 **스마트·친환경 해양모빌리티 육성·전환**

□ 지속가능한 수산업, 돌아오는 연안·어촌 구현

○ 어촌 **생활공간**을 **혁신**하고, 과감한 제도 개선을 통해 **일자리·투자**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어촌소멸을 방지

○ **수산식품산업**, **어선어업**, **양식산업**의 지속가능한 혁신성장을 위해 인프라 확충, 제도 개선 및 스마트·친환경 전환 추진

○ 지역별 **항만재개발** 사업의 신속한 추진으로 연안지역의 활력 제고

□ 깨끗한 바다, 안전한 연안 조성

○ 해양 기후변화 대응체계 정비, **탄소배출 저감** 및 **탄소흡수원 적극 발굴**을 통해 2050년 **국가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

○ **해양폐기물 '예방-수거-처리-재활용'**의 **전주기 관리**를 지속 강화하고, 해양쓰레기 저감 **범국민 캠페인** 및 **국제협력** 공고화

○ 엄격한 **공유수면 관리**로 **공유자원**으로서의 **가치를 보전**하고, 국민 **실수요** 및 **정책여건**에 맞게 제도의 **합리화·유연화 추진**

- 아울러, 기관별·업무별로 **분산된 해양수산정보**의 **통합·연계** 및 **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한 **플랫폼 고도화 시행**

○ 어선사고 저감, 연안·항만의 안전관리 강화, **촘촘한 해양방사능 유입 감시체계**로 **해양수산 전분야 안전관리 강화** 추진

□ **역동적인 신해양경제 육성**

○ **해양바이오 등 유망 신산업 육성** 제도 및 인프라 보강, 극지 생물자원 응용 연구 확대, 해저공간 창출로 과학기술 역량 제고

○ 해양문화·레저관광 향유 공간 및 인프라 확충을 통해 해양문화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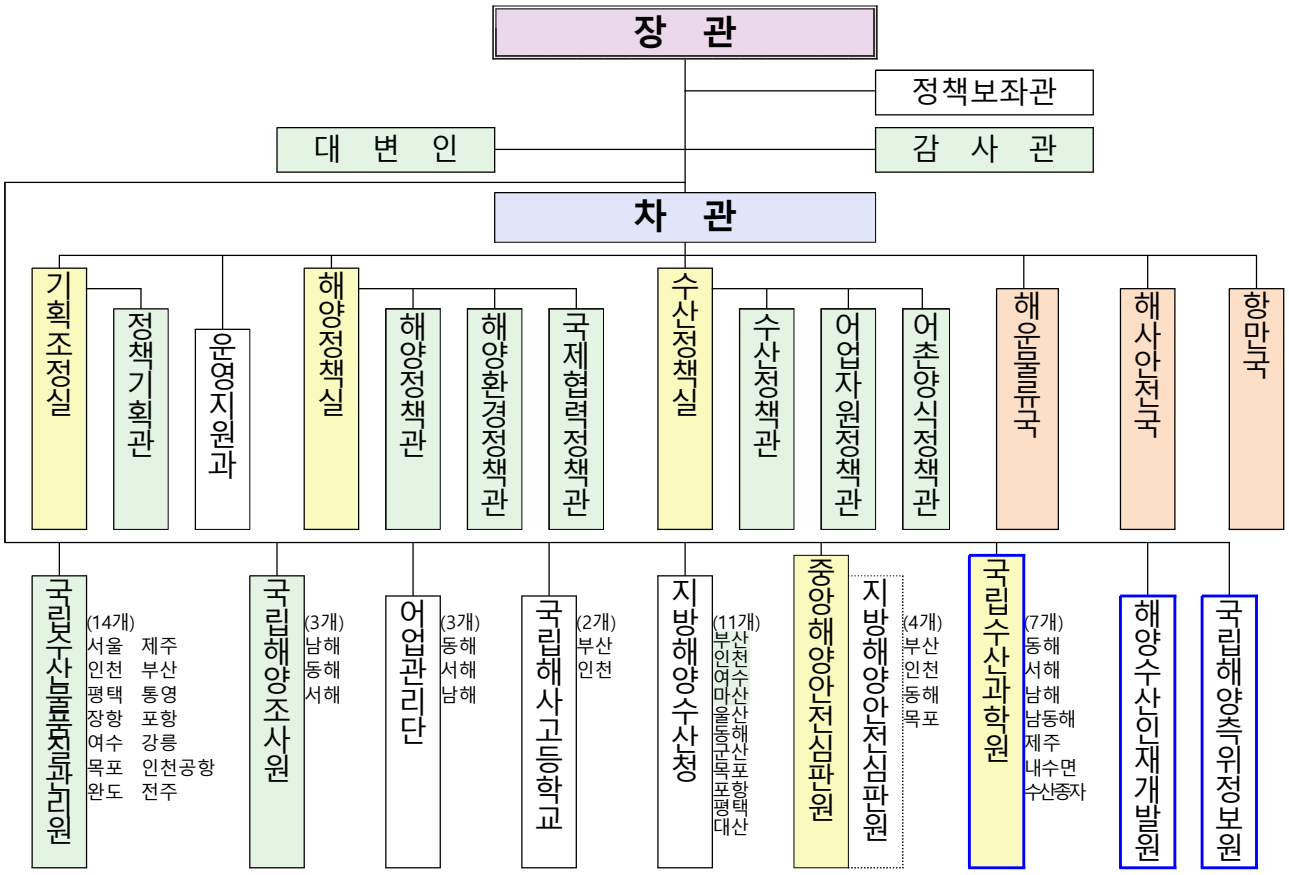
Ⅱ. 일반 현황 및 계획의 개요

Ⅱ 일반 현황 및 계획의 개요

1. 해양수산부 일반 현황

(1) 조직

◆ (본부) **1차관 3실 3국 9관** (50과 5팀, 자율기구 포함)
◆ (소속) **69개** (1차 22개, 2차 40개, 3차 7개)
* **책임운영기관** : **3개**(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국립해양측위정보원)



(2) 인원

(단위 : 명, 운영정원 기준)

구 분	계	정무직	별정직	고공단	3·4급	4급	4·5급	5급	6~9급	연구직		교원직	전문직
										연구관	연구사		
합 계	4,264	2	2	39	17	83	76	448	3,121	99	258	111	8
본 부	624	2	2	15	13	37	54	218	277	2	2	-	2
소속기관	2,937	-	-	17	3	41	20	204	2,478	8	49	111	6
책운기관	703	-	-	7	1	5	2	26	366	89	207	-	-

(3) 재정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2	'23	'24	'25	'26
□ 재정사업 합계					
ㅇ 총지출	63,849	64,333	84,129	87,082	92,660
(전년대비증가율, %)		(0.8)	(30.8)	(3.5)	(0.7)
ㅇ 총계	83,653	79,614	89,401	87,791	87,853
(전년대비증가율, %)		(△4.8)	(12.2)	(△1.8)	(0.1)
□ 총지출 구분					
ㅇ 인건비	3,487	3,551	3,799	4,065	4,349
(전년대비증가율, %)		(1.8)	(7.0)	(7.0)	(7.0)
ㅇ 기본경비	4,279	4,346	4,477	4,611	4,749
(전년대비증가율, %)		(1.5)	(3.0)	(3.0)	(3.0)
ㅇ 주요사업비	56,083	56,436	75,853	78,406	83,562
(전년대비증가율, %)		(0.6)	(34.4)	(3.4)	(6.6)
□ 예산					
ㅇ (총)지출	58,613	57,633	64,210	63,437	63,623
(전년대비증가율, %)		(△1.7)	(11.4)	(△1.2)	(△0.2)
ㅇ 총계	74,386	71,260	81,440	79,576	79,929
(전년대비증가율, %)		(△4.2)	(14.3)	(△2.3)	(0.4)
【 일반회계】					
ㅇ (총)지출	21,604	21,848	24,313	23,507	22,750
(전년대비증가율, %)		(1.1)	(11.3)	(△3.3)	(△3.2)
ㅇ 총계	37,376	35,473	41,543	39,645	39,056
(전년대비증가율, %)		(△5.1)	(17.1)	(△4.6)	(△1.5)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ㅇ (총)지출	18,127	14,552	15,160	15,427	14,850
(전년대비증가율, %)		(△19.7)	(4.2)	(1.7)	(△3.7)
ㅇ 총계	18,127	14,552	15,160	15,427	14,850
(전년대비증가율, %)		(△19.7)	(4.2)	(1.7)	(△3.7)

구 분	'22	'23	'24	'25	'26
【 교통시설특별회계】					
ㅇ (총)지출	16,450	15,888	19,489	19,399	19,566
(전년대비증가율, %)		(△3.4)	(22.7)	(△0.5)	(0.8)
ㅇ 총계	16,450	15,888	19,489	19,399	19,566
(전년대비증가율, %)		(△3.4)	(22.7)	(△0.5)	(0.8)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ㅇ (총)지출	1,075	663	679	692	704
(전년대비증가율, %)		(△38.3)	(2.4)	(1.9)	(1.7)
ㅇ 총계	1,075	663	679	692	704
(전년대비증가율, %)		(△38.3)	(2.4)	(1.9)	(1.7)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ㅇ (총)지출	1,357	4,681	4,569	4,410	5,751
(전년대비증가율, %)		(245.0)	(△2.4)	(△3.5)	(30.4)
ㅇ 총계	1,357	4,681	4,569	4,410	5,751
(전년대비증가율, %)		(245.0)	(△2.4)	(△3.5)	(30.4)
□ 기금					
ㅇ (총)지출	5,236	6,699	6,829	6,879	6,792
(전년대비증가율, %)		(28.0)	(2.0)	(0.7)	(△1.3)
ㅇ 총계	9,267	8,354	7,960	8,214	7,924
(전년대비증가율, %)		(△10.0)	(△4.7)	(3.2)	(△3.5)
【 수산발전기금】					
ㅇ (총)지출	5,236	6,699	6,829	6,879	6,792
(전년대비증가율, %)		(28.0)	(2.0)	(0.7)	(△1.3)
ㅇ 총계	9,267	8,354	7,960	8,214	7,924
(전년대비증가율, %)		(△10.0)	(△4.7)	(3.2)	(△3.5)

2. 성과관리 시행계획 개요

(1) 시행계획의 주요특성

□ '2022 ~ 2026년 성과관리 전략계획'('22.8)을 토대로 2023년 업무보고 내용을 중심으로 시행계획을 마련

□ 성과관리 전략계획에 따라 4대 전략목표, 15대 성과목표 설정

○ (**해운물류강국 도약**) 저시황기 국적선사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체계 강화,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및 규제개선, 디지털 해양 교통정보 서비스 시행, 두터운 선원복지 제공 등을 관리과제로 선정

○ (**안전·친화적인 해양·항만 조성**) 부산항 북항 글로벌 경쟁력 강화, 기후변화 대비 등을 위한 재해 안전항만 강화, 해양 수산 재난관리체계 선진화 등을 관리과제로 선정

○ (**경제활력·국민행복 해양공간 구축**) 해양바이오산업 기반 구축, 해양관광 명소 조성 및 콘텐츠 확산, 해양쓰레기 전주기 대응, 해양보전과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한 해양공간관리기반 구축 등을 관리과제로 선정

○ (**경쟁력 있는 수산업 및 활력 넘치는 어촌**) 어촌 활력증진을 위한 기반 확보, 수산자원 조성 및 자원관리체계 고도화, 첨단 친환경 양식 산업 육성, 수산식품 가공·수출 인프라 확대 등을 관리과제로 선정

(2) 시행계획의 목표체계

임무	**해양영토**(44만㎢, 육상면적의 4.4배)의 **보전·이용·개발**을 통해 **해양산업**을 **진흥**하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통합 해양행정 구현**

비전

“도약하는 해양경제, 활력 넘치는 바다공동체 구현”

전략목표 · 성과목표

전략 목표		성과 목표
Ⅰ	세계를 선도하는 해운물류강국으로 도약한다.	1. 국적 선대 확충 및 선화주 상생을 통해 안정적인 해상수송망을 구축한다. 2. 스마트기술 융합을 통한 물류서비스 고도화하고 항만 경쟁력을 제고한다. 3. 디지털 해상교통망을 구축하고 친환경 선박시장을 주도한다. 4. 해운강국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해상물류인력을 양성한다.
Ⅱ	안전하고 국민 친화적인 해양항만을 조성한다.	1. 연안·항만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한다. 2. 재해·기후위기에 안전한 연안·항만을 조성한다. 3. 해상사고 사전 예방을 통해 국민안전을 확보한다.
Ⅲ	경제활력을 높이고, 국민행복을 키우는 해양공간을 구축한다.	1. 해양 신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여 해양선도경제를 조성한다. 2. 국민 행복을 위해 해양레저관광·해양문화 강국으로 도약한다. 3.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해양 경제영토 확장 및 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4. 해양환경 위해요소에 대한 안전망 구축 및 해양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여 지속가능한 해양이용 기반을 마련한다.
Ⅳ	경쟁력있는 수산업을 육성하고 활력넘치는 어촌을 조성한다.	1. 어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어업인의 경영여건을 개선한다. 2. 수산자원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어업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3. 친환경·스마트양식업으로 전환하여 지속가능한 양식생산 환경을 조성한다. 4. 신선수산물 유통·소비체계를 구축하고, 식품산업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한다.

(3) 목표 및 과제 현황

(단위 : 개)

전략목표	전략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4	5	15	15	53	96

성과목표	관리과제	국정기조 연계
전략목표 Ⅰ. 세계를 선도하는 해운물류강국으로 도약한다.		
1. 국적 선대 확충 및 선화주 상생을 통해 안정적인 해상 수송망을 구축한다.		
	①[핵심]저시황기 국적선사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	국정 40-1
	②[핵심]국적선사-수출입기업 간 상생 촉진	국정 40-2
2. 스마트기술 융합을 통한 물류서비스 고도화하고 항만경쟁력을 제고한다.		
	①[핵심]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및 규제개선	국정 40-3
	②[핵심]한국형 스마트항만 구축과 물류거점 항만개발로 항만 경쟁력 강화	국정 40-3
	③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고부가가치 항만 실현	국정 40-3
	④[핵심]해외 물류거점 확보 등 진출 지원 강화	국정 40-2
	⑤[핵심]'컨' 항만 경쟁력 및 경제적 가치 제고	국정 40-2
	⑥[핵심]민간참여를 통한 항만 고부가가치 창출 및 해외협력 기반 마련	국정 40-3
	⑦[핵심]항만 서비스의 품질제고 및 항만운영의 안정성 확보	
3. 디지털 해상교통망을 구축하고 친환경 선박시장을 주도한다.		
	①[핵심]디지털 해상교통정보(바다내비) 제공 및 신산업 육성	국정 40-4
	②[핵심]차세대 해양 위치정보(PNT) 및 디지털 안전정보 서비스 제공	국정 40-4
	③[핵심]그린 쉬핑(Green Shipping) 생태계 기반 확충	국정 40-4
4. 해운강국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해상물류인력을 양성한다.		
	①양질의 국적선원 일자리 창출	국정 40-5
	②두터운 선원복지 제공	국정 40-5
전략목표 Ⅱ. 안전하고 국민 친화적인 해양·항만을 조성한다.		
1. 연안·항만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한다.		
	①항만 및 연안공간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기반 조성	국정 41-5
	②부산항 북항 글로벌 경쟁력 강화	국정 102-3
2. 재해·기후위기에 안전한 연안·항만을 조성한다.		
	①기후변화 대비 등을 위한 안전항만 구축 추진	국정 41-5

성과목표	관리과제	국정기조 연계
3. 해상사고 사전 예방을 통해 국민안전을 확보한다.		
	①국가 해양수산 재난관리체계 선진화	국정 40-4
	②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범정부 해사안전대책 시행	국정 40-4
	③연근해어선 안전관리 체계화	국정 41-7, 73-4
전략목표 Ⅲ. 경제활력을 높이고, 국민행복을 키우는 해양공간을 구축한다.		
1. 해양 신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여 해양선도경제를 조성한다.		
	①해양에너지, 해양플랜트 등 해양과학 新산업 육성	국정 41-1
	②해양신산업 전략적 육성을 위한 해양바이오산업 기반 구축	국정 73-6
	③해양산업 창업·투자 생태계 조성	국정 73-6
2. 국민 행복을 위해 해양레저관광·해양문화 강국으로 도약한다.		
	①권역별 해양관광명소 조성 및 해양관광 콘텐츠 확산	국정 73-7
	②해양교육문화 콘텐츠 확충 및 향유기회 확대	
3.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해양 경제영토 확장 및 관리역량을 강화한다.		
	①무인도서의 체계적·효율적 관리 강화	국정 41-1
	②해양영토의 과학적 관리기반 확충	국정 41-1
	③극지 진출 및 대양연구 기반 구축	국정 41-1
	④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산분야 통상협상 대응	
	⑤해양수산 ODA 확대 및 양자협력 증진	
	⑥해외 수산자원 확보를 위한 국제협상력 강화	
4. 해양환경 위해요소에 대한 안전망 구축 및 해양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여 지속가능한 해양이용기반을 마련한다.		
	①해양쓰레기 전(全)주기 대응 및 보전·개발이 조화로운 해양 관리 강화	국정 41-6,7
	②지속 가능한 해양환경관리체계 마련	국정 41-6,7
	③개발과 보전의 상생 및 공존을 위한 해양공간관리 체계화	국정 41-6
	④해양자산 관리 강화 및 해양생태계 보전	국정 41-7
	⑤국민이 행복한 청정·안심 해양환경 안전망 구축	국정 41-6, 7, 73-3
전략목표 Ⅳ. 경쟁력있는 수산업을 육성하고 활력넘치는 어촌을 조성한다.		
1. 어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어업인의 경영여건을 개선한다.		
	①어촌·어항 개발을 통한 어촌경제 활성화	국정 73-4
	②어촌 활력증진을 위한 기반 확보	국정 73-4
	③어업인의 생활·복지 지원 강화 및 안정적 경영 여건 조성	국정 73-4,5
	④수산업·어촌 공익증진과 연계한 어가 소득 기반 강화	국정73-5
	⑤연안해운 공공성 및 안전관리 강화	국정 41-4

성과목표	관리과제	국정기조 연계
2. 수산자원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어업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①수산자원조성 및 자원관리체계 고도화	국정 41-7, 73-1
	②어선어업 구조개선 추진	국정 41-7
	③어업 안전 보장 및 조업질서 유지 역량강화	국정 41-1, 73-1
	④연근해어업 경쟁력 강화	국정 41-7
	⑤해외 수산물 공급기반 확충	
3. 친환경·스마트양식업으로 전환하여 지속가능한 양식생산 환경을 조성한다.		
	①[핵심]첨단 친환경 양식산업 육성	국정 73-1,5
	②고부가 양식품목 전략적 개발 육성 및 연관산업의 동반성장	국정 73-1,5
	③지속가능한 양식산업 경쟁력 확충	국정 73-4
	④깨끗하고 안전한 양식수산물 생산기반 조성	국정 41-7
4. 신선수산물 유통·소비체계를 구축하고, 식품산업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한다.		
	①수산물 수급·물가위기 관리체계 구축 및 안심 유통환경 조성	국정 73-3
	②[핵심]수산식품 가공·수출 인프라 확대	국정 73-2
	③수산업 활성화를 위한 수산정책 지원 강화	국정과제 73-5,6

Ⅲ. 세부 추진계획

전략목표 Ⅰ.

세계를 선도하는 해운물류강국으로 도약한다.

1. 국적 선대 확충 및 선화주 상생을 통해 안정적인 해상 수송망을 구축한다.
2. 스마트기술 융합을 통한 물류서비스 고도화하고 항만경쟁력을 제고한다.
3. 디지털 해상교통망을 구축하고 친환경 선박시장을 주도한다.
4. 해운강국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해상물류인력을 양성한다.

Ⅲ 세부 추진계획

전략목표 Ⅰ 세계를 선도하는 해운물류강국으로 도약한다.

기 본 방 향

◇ 배경 · 필요성(중요성)

○ 해운산업은 국가 경제의 기간산업으로 항만인프라 확충 및 민간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국적 선사 육성을 위해 지원대상과 규모를 확대하여 원가 경쟁력 확보 등 역량 강화 필요

○ 국제 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선박 원천기술 확보 및 친환경 전환 가속화와 함께 자율운항선박·자동화항만 등 해운항만 산업의 스마트 전환 필요

○ 연안해역 이용 증대 및 新 교통수단 도입 등 환경 다변화에 따라 공간 중심 디지털 해상교통관리체계(교통망) 구축으로 해양사고 예방 필요

◇ 그간의 성과

○ 선박 신조보증 등 해운업 금융 지원체계 구축, 「해진공법」 개정을 통한 지원 범위 확대 및 친환경선박·설비 설치 지원으로 조선·해운 상생 도모

○ 선대 확충을 기반으로 임시선박 투입 등 적극적인 물류지원을 통해 수출 호조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뒷받침

○ 세계최초 바다내비 시행 등 스마트 해사안전관리 정책기반 조성

- 디지털통신망(LTE-M) 구축, 해양 PNT 고도화 추진계획을 마련('19. 5)

◇ 주요 내용

○ 국적선박 발주량 확대, 해외물류기지 추가 확보로 수출기업에 안정적으로 선적공간을 제공하고, 국적선원 확충 및 선원 근로여건·복지 개선

○ 자동화항만 도입 인프라 조성, 친환경·자율운항선박 시장 선점 기반 구축

○ 전국 연안에 유형별 해상 교통로 지정, 디지털 항해·통신장비 고도화 등을 통해 디지털 해상교통관리체계로 전환

◇ 임무와의 상관관계

○ 해운재건을 통해 수출입 물류비용 절감, 규모의 경제 등 글로벌 경쟁력 확보, 해운산업 및 지역경제 지원을 위해 항만인프라 적기 확충 추진

<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관리과제 · 성과지표 체계 >

(단위 : 개)

전략목표	전략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1	1	4	4	14	25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전략목표 Ⅰ. 세계를 선도하는 해운물류강국으로 도약한다.		①원양 선복량(만TEU)
1. 국적 선대 확충 및 선화주 상생을 통해 안정적인 해상 수송망을 구축한다.		①정책금융기관의 지원실적(백억원)
	①[핵심]저시황기 국적선사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	①중소선사 경영안정 프로그램 추진율(%) ②선박투자 활성화 방안 추진율(%)
	②[핵심]국적선사-수출입기업 간 상생 촉진	①수출입 물류지원 추진율(%) ②선·화주 상생 추진율(%)
2. 스마트기술 융합을 통한 물류서비스 고도화하고 항만경쟁력을 제고한다.		①부산항 컨테이너 부두별 하역능력 합산(만TEU)
	①[핵심]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및 규제개선	①자율운항선박 요소기술 시험평가 및 시제품 제작(건) ②「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달성도(%)
	②[핵심]한국형 스마트항만 구축과 물류거점 항만개발로 항만 경쟁력 강화	①항만물류 인프라 적기 확충 및 스마트항만 도입 추진율(%)
	③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고부가가치 항만 실현	①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고부가가치 항만 실현 추진율(%)
	④[핵심]해외 물류거점 확보 등 진출 지원 강화	①해외물류시장 신규 진출건수(건) (계획포함)
	⑤[핵심]'컨' 항만 경쟁력 및 경제적 가치 제고	①주요 항만 '컨' 물동량(1~11월)(만TEU) ②민간투자유치 실적(억원)
	⑥[핵심]민간참여를 통한 항만 고부가가치 창출 및 해외협력 기반 마련	①항만 민자사업 추진율(%) ②해외항만개발협력 지원체계 구축 추진율(%)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⑦[핵심]항만 서비스의 품질제고 및 항만운영의 안정성 확보	①항만서비스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율 (%) ②항만안전투자율 및 항만보안시설 확충률(%)
3. 디지털 해상교통망을 구축하고 친환경 선박시장을 주도한다.		①공공선박·친환경선박 전환 실적
	①[핵심]디지털 해상교통정보(바다내비) 제공 및 신산업 육성	①디지털 해상교통정보 제공 및 저변확대(%) ②디지털 해상교통정보 신산업 육성 추진율 (%)
	②[핵심]차세대 해양 위치정보(PNT) 서비스 제공	①고품질 해상활동 지원 인프라 구축율(%) ②스마트 항로표지 기반시설 구축율 및 해로드 앱 활성화(%)
	③[핵심]'그린 쉬핑(Green Shipping) 생태계 기반 확충	①친환경선박 전환 및 신기술 상용화 기반 마련율(%) ②국제협력 및 온실가스 감축규제 대응 추진율(%)
4. 해운강국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해상물류인력을 양성한다.		①국적 해기사 양성 및 취업 연계(명)
	①양질의 국적선원 일자리 창출	①해기인력 양성 및 취업목표 달성율(%) ②해기사 글로벌 역량강화 및 승선실습 제도개선 추진율(%)
	②두터운 선원복지 제공	①선원근로여건 개선 추진율(%) ②선원복지 증진사업 추진율(%)

전략목표 I 세계를 선도하는 해운물류강국으로 도약한다.

(1) 주요내용

□ **국적선대 확충 및 선화주 상생**을 통해 글로벌 선사와 경쟁하고, **안정적인 해상 수송망**을 구축

- ㅇ 해양진흥공사를 통한 **종합적**(산업·경영·금융 등) **지원**과 **선박 조세리스제도 도입** 추진 등을 통해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 ㅇ 임시선박 투입, 중소기업 전용 선적공간 제공, 장기운송계약 확대 추진 등 **국적선사-수출기업 상생기반 마련**

□ 미래 항만인프라 선제 확충 및 운영 효율화를 위해 **스마트기술 융합**을 통해 **물류서비스**를 **고도화**하여 **항만경쟁력 제고**

- ㅇ 글로벌 물류경쟁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기술기반 항만 자동화 테스트베드를 구축**하여 관련 기술·산업 활성화
- ㅇ 항만배후단지의 기능 고도화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항만배후단지를 고부가가치 물류플랫폼으로 육성**
- ㅇ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물류기반 확보** 및 현지 기업지원을 위한 주요항만 내 **해외 물류거점 지속 확장 및 활성화** 추진

□ **디지털 해상교통망을 구축하고, 친환경 선박 시장을 주도**

- ㅇ **디지털 해상교통정보 신산업**을 **육성**하고, **차세대 해양위치정보**(PNT) **서비스** 제공 기반을 구축
- ㅇ 저탄소·무탄소 선박기술 등 **혁신기술개발** 및 **관공선·민간선박**의 **친환경선박**으로 **전환**을 촉진

□ 외국인 선원을 국적 선원으로 대체하고, 선원복지 개선 등을 통해 해운강국을 뒷받침하는 해상물류인력 양성 추진

(2) 성과지표

< 전략목표 성과지표 >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7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8	'19	'20	'21	'22	'27			
①원양 선복량 (만TEU)	49	51	78	105	105	130	시황변동에 따른 경쟁력 강화방안('22.11)에 따른 원양 '컨' 선복량 목표 ('22/105만→'27/130만TEU↑) 달성	연도별 원양 컨테이너 선사 선복량	Alphaliner社의 선사별 선복량 (12월 기준)

(3) 외부환경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 및 글로벌 선사와의 경쟁 상황 개선

○ **정부주도 구조조정**으로 한진해운 파산('16) 이전 수준의 **수송력은 회복***했으나, **글로벌 선사**와 **격차 확대, 물류난 지속** 상황에서 불확실성 증가

* 원양 '컨' 선복량(TEU) : ('16.8) 105만 → ('16.12) 46만 → ('21) 105만(신조 포함)

□ 해상운임 급락, 저시황기 본격 진입

○ 전 세계적으로 **긴축정책 기조**가 주를 이루며 컨테이너의 **활발한 교역 수요**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 반면, '20년 하반기 이후 발주된 선박들이 '23년부터 본격 인도되어 **수급 불균형 심화**에 따른 **운임하방 압력 가중** 예상

* 23년 물동량(수요) 증가율 2.2%, 선복량(공급) 증가율 : 7.0% (출처 : MSI '22.4분기 보고서)

□ 코로나19 팬데믹, 美·中 무역분쟁 등 외부 충격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등 **해운·항만 분야의 급격한 변화 전망**

○ 세계 경기침체로 물동량이 감소되는 가운데, 전략적 필수 물자, 생필품 등을 중심으로 **물류체인**의 **변화**가 **예상**(중심화→분산화·다변화 전략)

* 항만의 지향 가치 : (기존) 효율 지향, 비용절감 → (향후) 안전·신뢰 지향, 복원성

□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국내외 규제 및 시장변화 대응

○ 선박기인 온실가스·대기오염물질 감축을 위한 **국내·외 제도**를 **충실히 이행**하고 **신규제도 도입 논의**에 **적극 참여**해 대응방안 마련

○ 국내 유망기술 발굴 및 기준 마련, 실선탑재 이력(Track Reacord) 확보를 위한 육·해상실증 지원 등 **신기술 상용화 지원체계** 마련

□ **항만인프라 확충 추진과 관련된 갈등 발생**

○ **국가산업 지원 측면**에서는 추진 중인 항만인프라 개발과 관련하여 **공해발생, 연안침식** 등을 이유로 인근 **주민과의 갈등** 발생 가능

○ **사전협의** 및 **설득, 영향 최소화** 등을 통해 갈등 발생 방지 필요

(4) 기타

□ **친환경·스마트化 : 친환경선박 전환, 디지털 물류전환 가속화**

○ (**친환경**)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 강화**로 **친환경선박 전환**이 **불가피** → **LNG·LPG추진선** 등 친환경선박 발주 확대('21년 200척)

- '23년부터 현재 운항 중인 외항선박에 대한 IMO의 **온실가스 감축 규제**가 시행됨에 따라 해운선사는 규제 대응을 위한 준비 필요

- 미국, EU, 환태평양 국가 간 경제공동체, 포럼 등의 안건으로 **청정해운**(Green Shipping) 관련 다양한 기술협력 제안

* 한·미 정상회담('22.5.21) 청정해운 협력 강화, 에너지·기후 주요경제국포럼

○ (**스마트**) 세계 최초 **완전무인 자율운항선박 시험운항**(노르웨이 콩스버그社), 해운물류 **블록체인 플랫폼 상용화**(머스크-IBM) 등 혁신 추진

□ **물류거점 확보 : 공급망 위기 속 국제물류 경쟁 심화**

○ **국제물류 네트워크**는 **수출 경쟁력**의 주요 요소 → 中·日 등 **주요국**과 **글로벌 물류기업**은 **해외물류시장 진출** 및 **점유율 확대*** 추진 중

* 세계 10대 글로벌 터미널 운영사(GTO)가 전 세계 물동량의 약 43%(3.4억 TEU) 점유('20)

성과목표 Ⅰ-1 국적 선대 확충 및 선화주 상생을 통해 안정적인 해상 수송망을 구축한다.

(1) 주요 내용

□ 해운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적선사의 선대 확충 및 경영혁신 지원

○ 국적선사의 **선복량 확충**을 위해 선박도입 및 재금융 수요를 적시 지원('23년 7,240억원, 해진공)하고, 국적선사 발행 **녹색채권*** **보증** 등 정책금융 방식 다양화, **정책펀드 확대**** 등 **신조**투자 **여건 조성**

* 환경친화적 프로젝트 투자금 마련을 위해 발행하며, NYK(日), 에버그린(대만), 머스크(덴)에 이어, 일부 국적선사도 '21년 발행 개시(팬오션 500억원, SK해운 400억원)

** (현재) 21억불(신조지원 15억불, 친환경선박 펀드 6억불) → (~'26) 최대 36억불까지 확대

○ HMM 메탄올 '컨' 선(9K) 9척 발주('23.2월)로 '23년 원양 '컨' 선복량 113만 TEU로 확대(HMM 106만(82만+24만발주), SM상선 7만)

* '국제해운 탈탄소화 전략' 발표(탄녹위, 2월)와 연계하여 메탄올 '컨' 선 발주 협약식 추진

○ **신규투자 확대 및 경영혁신** 등 **'HMM 중장기 경쟁력제고 전략'**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해진공 지원 확대

○ 해운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해운 공동행위 관리·감독 체계 정립**을 위해 관련 기관 등과 협의하여 **제도개선** 추진

□ 국적선사-수출기업 상생기반 마련

○ 자동차운반선 부족에 따른 **국내 자동차 업체의 수출애로 해소**를 위해 **비상대책반 구성, 자동차 카보타지 예외항만 확대** 등 자동차 수출 지원방안 마련·추진

○ 우수 선화주 인증제 대상에 **부정기선**도 **포함**하고, 장기계약 체결 등 **선화주 상생**에 기여한 **기업**(우수선화주 인증)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의 **요건 완화** 및 **감면 기준 다양화**

* (현행) 포워더 중 매출액 100억원 이상, 국적선사 이용비중 40% 이상인 경우에만 법인세 감면 → (개선) 매출액 요건 완화, 국적선사 이용비중별 감면 혜택 차등화

○ 개별 중소 화주기업이 각자의 물량을 모아 장기운송계약에 참여 가능한 수준으로 물량을 확대하여, **선사**에게 **운송**을 **의뢰**하는 **중소화주 장기운송계약 시범사업** 추진

* 선사는 장기 물량을 확보하는 대신 전용선복 제공, 저렴한 운임 등 인센티브를 화주에 제공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0	'21	'22	'23			
① 정책금융기관의 지원실적(백억원)	167	64	127*	110	해운산업 低시황기가 예측됨에 따라, 국적선사의 선박 도입 등 투자수요 및 '23년 사업 계획 등을 감안하여 전년도 목표(1조원) 대비 10% 상승한 1.1조원 수준으로 목표 설정	국적 해운선사의 선박 발주, 터미널 확보 등에 대한 정책금융기관의 금융지원 실적	정책금융기관의 지원실적 취합

* '22년에는 해운호황기 풍부한 유동성 확보에 따른 선박발주 수요 증가로 선박금융 지원이 급등하며 목표치를 상회하는 실적 달성

(3) 외부환경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국내 선박금융시장 활성화 필요

○ **국내 선박금융 시장**은 높은 투자리스크 등으로 **정책금융** 및 **외국계금융 의존도**가 높은 상황

* 선박금융 중 정책금융·외국계 비중 : ('19) 83% → ('20) 66% → ('21) 80%

○ 민간 투자 인센티브 마련과 더불어, 정책펀드는 **위험도가 높은 후순위 투자**에 집중하여, **민간 투자의 마중물**로 **활용**할 필요

□ 글로벌 경기침체 지속, 금리·환율 상승 등 경영부담 가중

○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증대로 물동량 **수요 감소** ↔ 3년 내 현존선 30%에 달하는 선박 인도 등 **공급 증가**로 해운시황 지속 악화 전망

○ 위기대응펀드 투자, 공공선주사업 추진, 위기경보체계 구축 등 3조원 규모 **안전판 대책** 이행을 통해 **안정적 경영 지원** 필요

□ 현존선 대상 EEXI, CII 시행 등 온실가스 배출 규제 강화

○ '23년부터 현존선 규제 시행, 선박 온실가스 저감 **목표 상향*** 전망 ↔ 친환경 신조선 6.4%, 노후선박 254척 등 **전환 저조**

* IMO, (현재) '50년까지 '08년 기준 대비 50% 감축 → (상향) 100% 감축

○ **해운정책 패러다임**을 '친환경 해운'으로 **완전히 전환**하기 위해 ❶**도전적 목표 설정**, ❷**정책·금융 전면 재설계** 등 추진 필요

⇒ '**국제해운 탈탄소화 전략**' 수립·이행('23년)

(4) 기타

□ 주요 글로벌 해운분석기관들의 향후 글로벌 해운경기 전망

<전세계 컨테이너 물동량 수요, 공급 전망>

(단위 : 백만TEU)

		2020	2021	2022	2023	2024
수요	물동량	203.8	215.8	213.4	218.2	232.6
	증감률(%)	-1.9%	5.9%	-1.1%	2.2%	6.6%
공급	선복량	23.7	24.7	25.8	27.6	29.6
	증감률(%)	3.5%	4.5%	4.4%	7.0%	7.0%

출처 : MSI(영국 시황분석 전문기관) 분기보고서('22.4분기)

○ '23년 수요(물동량) 2.2% 대비 공급(선복)은 7.0%로 예상되어 **수급 불균형 심화**에 따른 **운임하방 압력 가중**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1 저시황기 국적선사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Ⅰ-1-①)

해운정책과 (044-200-5718 / 5717 / 5720)

□ **추진배경 (목적)**

○ 그간 **정부 주도 구조조정**으로 '22년 해운서비스 수출액 역대 최대실적(383억$) 달성, 해운 수송능력 증가('22. 9,300만톤, 세계 4위)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 **정책금융**에 과도하게 **의존**하며 **시장의 자율성과 활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글로벌 선사와의 격차 확대와 세계 경기 둔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음**

- 이에, 국적선사 경영 안정을 위해 지난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3조원 규모 '국적선사 경영안정판 대책'을 적극 이행하고,

- '민간투자 활성화' 등 **민간 주도의 혁신성장 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고, 해운산업의 높은 변동성을 고려하여 **시장 안전장치 지원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① (**해진공 기능강화**) **중소선사**의 **경영**을 **안정**시키고, 선박 매입·임대를 전문으로하는 **선주사업**을 적극 **육성**

- (**중소선사 특별지원**) 선박금융을 통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선사를 위해 **투자요율 할인 확대**, **특별보증요율 적용** 등 지원 프로그램* 지속 추진

* (사업규모) 2,500억원('22~'26) / (지원대상) 중소 외항화물선사 98개사

- (**선주사업 육성**) 선주사업이 자리잡지 못한 국내여건을 고려하여, 우선 **해양진흥공사**에서 공공 선주사업을 추진('26년까지 최대 50척을 매입)

- (**위기대응 펀드**) HMM 배당금 수입 등 해진공 자체 재원을 통해 최대 1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①**위기선사 안전판 마련***과 ②**친환경 전환** 두 가지 목표에 집중하여 투자

* 구조조정 펀드: 중소·중견선사 경영위기 시 재무구조 개선, M&A 및 유동성 지원 등
** ESG 펀드: 중소·중견 선사의 친환경선박 건조 시 건조 중 금융, 녹색채권 인수 등

② (**HMM 경쟁력 제고**) 선대 확충, 거점 터미널 확보 등 **중장기 경쟁력 강화방안**을 **수립**하여 **자체 생존기반**을 **마련**

- (**중장기 경쟁력 강화**) **120만TEU 규모 선대 확충**(~'26)*, **핵심시장 물류역량 강화****, **친환경 규제 대응 강화, 사업다변화** 등 추진

* ('23.1月) 82만TEU → ('24)98.4만TEU('21.6月 발주한 13K 12척 투입) → ('26)120만TEU
** 미주, 아시아권 항만터미널 확보 및 핵심시장 내 국적 육상물류기업과 협력사업 발굴

③ (**민간 선박투자 활성화**) 환경규제로 인한 **친환경선박 건조 증가상황**을 고려하여 **국내 선박금융 시장 활력 회복** 기반 조성

- (**민간 : 인센티브 발굴**) 한국형 선박 조세리스 제도, 선박펀드 개편, 핀테크 기술 접목 등 다양한 '**민간 선박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23)

* **구체적 방안**은 연구용역('22.11~'23.5), 전문가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변동 가능**

【참고】 한국형 선박 조세리스 제도

▸ 선박자산에 세법상 가속상각을 허용하여 투자 초기 대규모 세무상 손금을 발생시켜 투자자에게 법인세 절감 등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조세 제도(英, 佛, 日 등 도입 중)
▸ '22년 조세특례 예타 실시 → 경제성 과소산정, 현행 제도와의 불합치 등으로 예타통과 실패
⇒ 연구용역('22.11~'23.5)을 통해 **예타 문제점 분석**, **제도 개선방안** 도출 예정

- (**공공 : 투자환경 조성**) 국적선사의 녹색채권에 대한 보증, 정책금융 투자펀드 확대* 등으로 **ESG 역량 강화**를 위한 **신조투자 여건 조성**

* (현재) 21억불(신조지원 15억불, 친환경선박 펀드 6억불) → (~'26) 최대 36억불까지 확대

< '2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중소선사 긴급경영자금지원 사업 지원규모 확대	'23.1월	국정 40-1
	글로벌 저탄소선박 정책 대응지원 사업 본격 추진	'23.2월	국정 40-1
	HMM 메탄올 추진선 발주	'23.2월	국정 40-1
	선주사업 민·관 협의체 구성 추진	'23.2월	국정 40-1
	HMM 매각타당성 점검 컨설팅 발주	'23.3월	국정 40-1
2/4분기	해양진흥공사 외화채권 발행	'23.5월	국정 40-1
	선박금융 전문가 협의체 개최	'23.6월	국정 40-1
	KOBC 해운시황포럼 개최	'23.6월	-
3/4분기	선박금융 전문가 협의체 개최	'23.7월	국정 40-1
	해운금융 전문인력 양성교육 실시	'23.9월	-
4/4분기	위기대응펀드 조성 추진	'23.10월	국정 40-1
	민간 선박투자 활성화방안 마련	'23.11월	국정 40-1
	해운 선사 컨설팅 사업 추진	'23.12월	국정 40-1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해운산업의 특성과 전후방산업으로서 **조선·항만·철강** 등 연관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全 산업 해당**

○ (**이해관계집단**) 특별한 이해관계자 **없음**

□ 기대효과

○ **선박 확보 지원**을 통해 국적선사는 대형·고효율 선박 중심으로 선대 경쟁력을 확충하고 **원가절감** 및 **재무구조 개선** 추진이 가능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2	′23
해운물류지원(Ⅲ-4-일반재정③)			
① 해운물류지원(6133)	일반회계	-	-
▪ 한국해양진흥공사출자(327)		300	-
▪ 해운물류전문인력 양성 지원(308)		49	49
(해운금융전문인력양성)		1	-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0	′21	′22	′23			
① 중소선사 경영안정 지원 실적(%) (가중치 50%)	신규	신규	신규	100	‘23년부터 저시황기가 예상됨에 따라 자금력이 열악한 중소선사 경영안정을 위해 중소선사 대출이자 지원사(’22년 151억원) 및 S&LB의 지원실적(’22년 2,426억원)이 전년도보다 증가할 경우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설정	{(중소선사 대출이자 지원사업 : ‘23년 실적이 22년 실적보다 높으면 1, 낮으면 0 x 0.5) + (S&LB 지원사업 : ‘23년 실적이 22년 실적보다 높으면 1, 낮으면 0 x 0.5)} ×100	내부 보고자료
② 선박투자 활성화 방안 추진율(%) (가중치 50%)	신규	신규	100	100	민간 선박투자 활성화 방안 수립 및 신규 정책펀드 조성 추진을 목표로 설정	{(민간선박투자 활성화 방안 수립×0.5) + (정책펀드 조성 추진×0.5)}×100	내부 보고자료

2 국적선사-수출입기업 간 상생 촉진(Ⅰ-1-②)

해운정책과 (044-200-5722 / 5718 / 5721)

□ 추진배경 (목적)

○ 선복량 확충에 발맞추어 안정적으로 화물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화주 상생협력 공고화** 필요

○ 수출 회복을 통한 경기 반등 뒷받침을 위해 그간 확보한 선복량을 기반으로 **수출기업의 물류 애로 해소 지원 강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① (**우수선화주 인증**) **우수 선화주 인증제 개편** 및 **관련 인센티브 정비**로 자발적 상생협력을 촉진

- 우수 선화주 기업을 지속 선정(22개사 선정 完)하고, 우수 선화주 인증제 대상 확대 및 법인세 감면 특례 정비 추진

② (**장기운송계약 지원**) 안정적 수출 물류망 조성을 위해 선화주가 상호에게 안정적으로 물량과 선복을 제공하는 장기계약 도모

- 물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안정적 수출경로 확보를 위해 화물 종류별 협회와 선사 간 장기운송계약 체결 지원('23년 시범사업)

- 시황변동에 따라 계약 미이행 유인이 존재하는 장기운송계약의 이행력 강화를 위한 **이행보증상품** 개발('23.下)

③ (**수출입 물류지원**) 주요항로에 **中企 전용선복·농수산식품 선적공간 지속 제공**(~'23.6,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연장 검토), **운임공표제 이행 실태점검**을 통해 **공정한 해운질서확립**

< '2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장기운송계약 체결 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	'23.1월	국정 40-2
	자동차운반선 카보타지 항만 확대	'23.1월	국정 40-2
	자동차 수출물류 비상대책반 운영	'23.2월	국정 40-2
	자동차 수출애로 해소를 위한 선화주 협의회 개최	'23.3월	국정 40-2
2/4분기	해운물류분야 공급망 강화방안 연구용역 착수	'23.4월	-
	장기운송계약 체결 지원 시범사업 실시	'23.6월	국정 40-2
	우수선화주 인증제 대상 확대를 위한 「해운법 시행령」 개정 추진	'23.6월	국정 40-2
3/4분기	장기운송계약 이행보증상품 제공 추진	'23.8월	국정 40-2
	해운시장 질서확립을 위한 운임공표제 이행 실태점검	'23.9월	-
4/4분기	우수 선화주 인증 기업 선정	'23.11월	국정 40-2
	우수선화주 인증제 법인세 감면 혜택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23.11월	국정 40-2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해운선사, 화주 또는 물류업체

○ (**이해관계집단**) 특별한 이해관계자 없음

□ 기대효과

○ 선화주 상생협력 방안 추진을 통해 국적선사의 화물 적취율을 제고하여 경영안정에 기여하고, 화주는 **안정적인 화물운송** 기대

□ 관련 재정사업 내역(해당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0	'21	'22	'23			
① 수출입 물류지원 추진율(%) (가중치 50%)	100	100	100	100	중소화주 및 농수산식품 전용 선적공간 제공 및 화주협회와 장기운송계약 체결 등 국적선사의 수출입 물류 지원 지속 추진을 목표로 설정	{(중소화주·농수산물 전용선적공간×0.5)+(장기운송 제공×0.5)} × 100	국적선사 지원실적 및 내부보고자료
② 선·화주 상생 추진율(%) (가중치 50%)	100	100	100	100	선화주 상생 추진계획에 따른 과제 달성을 목표로 설정	{(우수 선화주기업 선정×0.5)+(우수 선화주 기업인증 제도개선×0.5)} × 100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실적(해진공) 및 내부보고자료

성과목표 Ⅰ-2 스마트기술 융합을 통한 물류서비스 고도화하고 항만경쟁력을 제고한다.

(1) 주요 내용

□ 스마트 해운물류시스템 도입 촉진

○ (**자율운항선박**) 시험선 건조, 실해역 실증 등 **상용화 시스템** 및 입출항 관제 등 **스마트항만 연계시스템** 개발(~'25)

- 자율운항선박 기술 개발·실증, 전문인력 양성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자율운항선박 개발·상용화 촉진법**」 제정 추진

○ (**스마트물류**) **인천항·부산항**에 **스마트공동물류센터***를 조성하고, **선박-항만-육상물류 간 물류연계 최적화 시스템** 신규 개발 착수('22~'25)

* (인천항) 설계 및 착공('22) → 완공('24) / (부산항) 설계 및 착공('22~'23) → 완공('25)

□ 한국형 스마트항만 구축 등 항만 인프라 혁신

○ (**스마트항만**) 부산항 '컨' 물동량 증가 등에 대비, 한국형 스마트 메가포트로 개발 예정인 **부산항 진해신항** 개발 **사전절차** 실시*

* 예타 통과('21.12)에 따라 '22년 기초조사 등을 시작으로 '31년까지 '컨' 부두 9선석 개발(1단계)

- **자동하역·이송기술 개발***과 더불어, **광양항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22~'26)을 통해 한국형 스마트항만 기술의 실증·상용화 추진

* 컨테이너 자동하역시스템('19~'23), 자율협력주행 기반 화물운송시스템('22~'24) 등
** (규모/장비) '컨' 부두 4선석 / 자동화 크레인 43대(C/C·ARMGC), 자동이송장비 44대(L-AGV) 등

○ (**항만인프라**) **부산항·인천항·광양항** 등의 **부두 증설** 및 **신규 터미널 개장***, **중장기 운영 로드맵** 수립을 통해 항만물류·운영 효율화

* (부산신항) 서'컨' 부두 2-5단계(3선석, '23년), 2-6단계(2선석, '26년) 등 5선석 개장
(인천신항) '컨' 부두 3선석('27년 개장) / (광양항) 석유화학부두 2선석('22.12월 개장)

- 새만금신항 부두접근성 및 동해항 물류흐름 개선, 평택·당진항 배후수송망 조기확충 등 권역별 특화 항만인프라 확충

□ **항만배후단지 및 해외 물류거점 확충**

○ (**항만배후단지**) '30년까지 약 33㎢ 규모의 항만배후단지를 공급하기 위한 **제4차**('22~'30)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 수립('22.12)

- 인천항(전자상거래·콜드체인), 부산항·목포항(복합물류·제조) 배후단지에 **우수기업 유치** 및 울산항 배후단지에 친환경에너지 특화구역 지정 추진

- 민간개발·분양방식 도입으로 **'30년까지 배후단지 463만㎡ 단계별*** **확보, 항만배후단지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력 도모

* (인천신항) 1단계 189만㎡, (인천남항) 2단계 53만㎡, (평택당진항) 2단계 136만㎡, (부산항신항) 웅동2단계 85만㎡ 등 민간개발 추진

○ (**해외 물류거점**) 국내 기업의 물류서비스 수요가 많은 해외 주요항만 배후지역 현지물류 기업과 **해외물류센터 합작법인 설립** 추진('23.下)

- 美 서부(LA/LB항) 배후물류단지 내 물류센터 매입을 통한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확보로 중소 수출기업의 미국시장 진출 시 경쟁력 제고

□ **항만서비스**를 **다변화**하고 항만연관산업 경쟁력 제고 지원

○ (**서비스 다변화**) 수리조선소 건립, 피더·양곡부두 조성 등 **서비스 확대**

○ (**원스톱 항만서비스**) 검수·감정·검량 등 **필수 항만서비스**를 하역사가 **선사**에 **일괄 제공**할 수 있도록 '**항만종합서비스업**' **신설**

* 항만운송사업법령 개정을 통해 항만종합서비스업 신설 및 등록절차 마련

○ (**선박연료공급 시장 확대**) 선박연료 **정량공급 등 품질관리제 도입**을 통한 대외 신뢰도 제고 및 산업 성장 지원

○ (**선용품산업 육성**) **선용품 상품코드 개발**('22) 등 선용품 시장 활성화 기반 조성으로 국내 선용품 시장 규모(현 2.2조원)를 3조원대(~'27)로 확대

○ (**정책금융 지원**) **해진공 지원대상**을 **항만운송관련사업***까지 **확대**하여 규모화 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 추진

*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선박연료공급업, 「선박 입·출항법」에 따른 예선업 등

□ **항만에서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

○ (**총괄 안전관리**) **개별 항만사업장별**로 출입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총괄 관리·감독**하는 **시스템 도입**

○ (**항만안전점검관**) 「항만안전특별법」 시행('22.8)과 연계하여 **안전사고 예방 전담 항만안전점검관**을 전국 무역항에 **배치**, 안전관리 추진

○ (**안전투자 확대**) **'27년까지 중대재해 50% 저감** 목표로 정부(~'27, 200억원)와 민간*(~'27, 2,100억원)의 **안전시설*** 투자 확대

* 추락 및 협착 방지시설, 작업자 대피시설, 하역장비 후방감지센서, 이동식 조명탑 등

□ **해외항만개발협력**을 통한 **신시장 개척**을 추진하고, **맞춤형 지원** 및 **다각적 지원체계 구축**

○ **해외항만개발 협력사업***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항만개발사업 **수주 확대**를 위한 **협력 강화** 및 해외시장 진출 기반 조성

* 최빈국 대상 인도적 차원의 ODA형 사업과 우리 기업 수주 지원을 위한 성과창출형 사업으로 구분하여 사업유형별 개도국 마스터플랜(M/P), 타당성 조사(F/S) 수립 지원

○ **민·관 협력 지원체계** 및 다양한 진출기업 **지원기반**을 **마련**하여 민간수요를 반영한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 민간기업 주도 해외항만시장 개척을 위한 수주 활동 지원(민간경상보조금, 정부지원율 70%)

○ **중소·중견 해운물류기업**의 해외 신규 진출 시 필요한 재무 타당성 조사 및 해외시장 조사·컨설팅 지원으로 **해외진출 활성화 도모**

* (예산규모/지원대상) 年 5.4억원 규모/年 10개 내외 해외진출 물류기업

** (지원범위)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는 총비용의 50%에서 지원한도 8천만원, 「해외시장 조사·컨설팅 지원」은 물류기업 총비용의 50%에서 기업 단독 3천만원, 화주기업과 컨소시엄 4천만원

○ 인도적 차원의 **ODA형 사업**과 우리 기업 수주성과 달성을 위한 **성과창출형 사업**으로 구분하여 **사업유형별 맞춤형 지원 확대**(연중)

○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국제기구(MDB 포함) 등과의 **협력사업 추진***, **해외사업 정보 제공**** 등 **다각적 지원체계 구축**

* WB, AfDB(아프리카), CABEI(중미) 등 MDB와 항만, 연안방재, 어항 사업 등에 대한 개도국 차관 제공과정에 우리 부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 협의

** 해외항만개발 정보망(coscop.or.kr)을 통해 진출에 관심 있는 기업에게 동향, 입찰정보 제공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0	'21	'22	'23			
① 부산항 컨테이너 부두별 하역능력 합산(만TEU)	1,925	1,913	2,108	2,303	'23년 하반기 개장 예정인 신항 서컨 2-5단계 부두가 차질없이 개장할 수 있도록 운영사 선정, 항만 근로자 일자리 공급 등 절차를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 기존 하역능력(2,108만TEU)에 신규 부두 하역능력(195만TEU)을 합산하여 목표 설정	부산항 컨테이너 부두 하역능력	부산항만공사 산출자료 취합

(3) 외부환경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사상 최대의 물량 처리 등 양적 성장에도 불구, 중국 항만의 급격한 성장으로 **우리 항만**의 **순위**(물동량 기준) **하락***

* 부산항 순위 : ('01) 3위(791만TEU) → ('10) 5위(1,419만TEU) → ('21) 7위(2,271만TEU)

○ 높은 선박 입항빈도, 정기항로 확대 등으로 글로벌 연계성은 우수하나, 중국 항만과의 가격 경쟁으로 **고비용·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 한계**

ㅇ 피더서비스 제공, 대형 컨테이너 선박 기항 등 환적화물은 증가하였으나, 하역·보관 중심의 물류서비스 제공으로 **부가가치 창출 부족**

ㅇ 물류 처리와 함께, **선박수리**, **LNG벙커링**(연료공급), **배후시설**을 활용한 **물류 가공·제작** 등 서비스·산업 확대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 항만 하역장비·정보통신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국내는 여전히 반자동화 수준**(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기술도입 지연)

ㅇ 네덜란드, 독일, 싱가포르, 중국 등 전 세계 주요 항만 선진국은 미래신기술(AI, Big-Data, IoT 등)을 활용한 스마트항만 구축 본격화

* 로테르담항 PCS(Port Community System), 함부르크항 Smart Port Logistics, 싱가포르항 SAFER(Sense-making Analytics For maritime Event Recognition), 중국 스마트항만 등

ㅇ 국내 스마트항만은 부산항을 중심으로 항만자동화 및 정보연계가 부분적으로 진행되나, **해외 대비 스마트항만** 관련 **기술수준 미흡**

ㅇ 이에 대응하고자, '23년 하반기 개장 예정인 부산항 신항 서'컨' 2-5단계 부두*는 완전자동화 설비(AGV 등)를 도입하여 운영 예정

* 3선석 1,050m / 하역능력 195만TEU/年 / 국내최초 안벽-이송-야드 全구간 자동화

(4) 기타

□ 세계 주요 항만은 4차 산업혁명, 친환경 등 **미래 항만시장 주도**를 위해 스마트 항만, 허브항만 육성 등 **경쟁적 정책 추진中**

* 향후 21세기 선박대형화 추세에서 유일한 해답은 항만의 스마트 자동화(Dynamar)

ㅇ 물류기술 혁신과 해운·항만 여건변화에 따라 **주요국들도 중장기 항만계획을 수립**하여 항만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中**

* (싱) TUAS 신항은 '45년까지 자동화터미널을 포함한 컨테이너부두 65선석 개발 추진
(중) 상해 양산항, 청도항 자동화 등 11개 스마트항만 시범사업 추진
(일) 전략항만 허브기능 강화, 항만스마트화 등을 포함한 'PORT2030' 정책 발표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1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및 규제개선(Ⅰ-2-①)

스마트해운물류팀 (044-200-6202)

□ **추진배경 (목적)**

○ 유럽 조선·해운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자율운항선박 개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으며, 최근 중국·일본도 **국가가 전략적**으로 **개발 추진 중**

○ 우리 조선·해운 분야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미래 고부가가치 선박·해운서비스 시장**에서의 **주도권 확보 필요**

- 조선·해운산업 불황에 따른 민간차원의 **기술개발 투자여력 부족으로 정부 주도**의 **미래 성장 동력 육성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기술개발**) 2025년까지 IMO Level 3.0 수준의 자율운항 시스템을 개발하고 소형시험선 및 실제 컨테이너선박을 활용한 기술 실증 추진

- (**자율운항시스템 개발**) 선박의 최적 항로 결정 및 안전한 항해를 위한 실시간 충돌회피 기술개발

- (**소형시험선*** **활용 기술실증**) 장비 · 시스템의 전반적인 신뢰도 검증, 상황인식 및 최적항로 등 성능테스트

* 길이 24m, 총톤수 75톤, 속도 12노트, 최대 승선인원 10명(선원 4명, 연구원 6명)

- (**실제 컨테이너선박*** **활용 기술실증**) 한·중·일 항로를 운항하는 실제 컨테이너선박에 자율운항시스템을 탑재하여 기술 실증

* ('23.4월) 1,800TEU급 컨테이너선 건조 착수 → ('24.1월) 건조 완료 및 실증

○ (**규제개선**)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을 통해 해사 관련 법령의 규제개선 추진

현행	제정 법률안
<선박안전법> 제7조부터 제17조까지에 따른 선박의 검사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에 따른 선박시설 기준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에 따른 안전항해를 위한 조치	제22조(규제특례) ①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에서 자율운항선박을 시범운항 또는 실증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선박안전법」제7조부터 제17조까지에 따른 선박의 검사 2. 「선박안전법」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에 따른 선박시설 기준 3. 「선박안전법」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에 따른 안전항해를 위한 조치 4. 「선박직원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승무기준 및 선박직원의 직무
<선박직원법> 제11조(승무기준 및 선박직원의 직무) 제12조(결원이 생긴 경우의 승무기준의 특례) 제13조(허가에 의한 승무기준의 특례)	

< '2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지능항해 시스템 개발 및 세부 기술별 연계를 위한 워크숍 개최	'23.2월	국정 40-4
	IMO 자율운항선박 세미나 개최를 위한 IMO 아국 대표부간 협의	'23.2월	국정 40-4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진도점검 및 연구현황 공유, 업무협력을 위한 다부처(해수부-산업부) 통합 워크숍 개최	'23.3월	국정 40-4
2/4분기	한국 주관 IMO 자율운항선박 세미나 개최	'23.4월	국정 40-4
	IMO MSC-LEG-FAL MASS Joint Working Group (MASS-JWG, 자율운항선박 공동작업반) 참석 및 대응	'23.4월	국정 40-4
	노르웨이 전시회(NOR-Shipping 2023) 홍보 추진(현지 부스 개설 및 세미나 개최)	'23.6월	국정 40-4
3/4분기	인공지능 기반 선박·선원 통합관리 시스템 실선 시험	'23.7월	국정 40-4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 및 원격제어센터(해양대) 개소식 개최	'23.8월	국정 40-4
	스마트항만-자율운항선박 연계기술개발 통합 워크숍 개최	'23.8월	국정 40-4
	사이버 보안 게이트웨이 실선(해양대 실습선) 시험	'23.9월	국정 40-4
4/4분기	자율운항시스템 실증선 탑재를 위한 협의 및 실선(1800 TEU 컨테이너) 탑재 시작	'23.11월	국정 40-4
	자율운항선박 사고대응시스템 UI연동 시제품 제작	'23.11월	국정 40-4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사업 4차년도 연차 평가	'23.12월	국정 40-4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법」 추진	'23.12월	국정 40-4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조선사, ICT 분야 기자재 업체, 대학 및 연구소 등

○ (**이해관계집단**) 해운업·단체·협회, 화주, 조선사 등

□ **기대효과**

○ 선도적으로 자율운항선박 핵심기술 개발 및 상용화를 통해 세계 자율운항선박 시장('30년 295조원)의 50% 선점

○ 인적과실로 인한 해양사고의 75% 감소*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소로 인한 연간 3,400억원의 환경편익 유발 효과** 기대

* 연간 2,000여건 → 500건 (KMI, 2020 해양수산업 분석보고서)
** (환경편익) KIMST, '18년 자율운항선박기술영향 평가결과

○ 우리 조선·기자재 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35년까지 약 56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약 42만명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

* (경제적 파급효과) Clarkson Research, '20년 산업연관표

** (일자리 창출효과) KMI, 2020 해양수산업 분석보고서

□ **'22년도 부진과제 개선계획**

○ 성과지표 개선·보완 및 정책소통·확산방안 발굴 등 정책추진 노력 개선방안 제고

- (**성과지표**) 자율운항선박 요소기술 시험평가 및 시제품 제작 관련 **실제 산출 제품을 근거**로 **목표치 산출근거 구체적으로 설정**

- (**정책추진**)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 워크숍·이해관계자 간담회와 국제 세미나, 「자율운항선박법」 제정 관련 전문가 간담회 등 **국·내외 정책소통**을 위한 다양한 자리 마련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2	'23
해양수산연구개발(Ⅲ-4-일반재정③)			
① 항만물류기술개발(4149)	일반회계	-	-
▪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304)		126.71	100.9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0	'21	'22	'23			
① 자율운항선박 요소기술 시험평가 및 시제품 제작(건) (가중치 60%)	2	4	8	8	자율운항에 필요한 핵심 시스템 개발 기술의 성능 검증을 위한 시험평가 및 시제품 제작(건)을 목표치로 설정 * 1)차세대 통신, 2)사이버 보안, 3)보안게이트 웨이, 4)선박 운용 및 관리, 5)VDES 통신, 6)통합게이트웨이, 7)사이버보안게이트 웨이, 8)사고대응 시스템 콘솔 등 시스템 개발 단계별 시험 평가 수행 건 수 및 시제품 제작 (건) 수	- 측정산식 : 시험평가 실적(건) 및 시제품 제작 실적(건) *기본설계-상세설계-제작-성능시험-인증	연구단계별 실적 증빙 자료(설계문서, 시제품, 성능시험보고서, 시험성적서, 인증서 등)
②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달성도(%) (가중치 40%)	-	-	50	100	자율운항선박의 원활한 기술 개발 및 실증을 위해 일반선박 기준의 해사법령의 규제 해소가 필요하여 법률 제정 달성율을 성과지표로 설정	- 법률 국회 통과 시 100% 달성	법령정보시스템

2 한국형 스마트항만 구축과 물류거점 항만개발로 항만 경쟁력 강화 (Ⅰ-2-②)

항만개발과 (044-200-5931)

□ 추진배경 (목적)

○ (**항만경쟁력**) 항만은 우리나라 수출입화물의 99.8%를 처리하며 석유화학, 제철 등 주요 산업단지는 항만과 인접하는 등 경제·산업의 중요 거점

- 국내 물동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항만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가 하역능력 확보 필요(현재 하역능력 12.9억톤 수준)

* (총물동량) '22년 15.4억톤 → '30년 19.1억톤(연평균 증가율 2.7%)
(컨테이너) '22년 2,881만TEU → '30년 3,921만TEU(연평균 증가율 3.2%)

- 우리나라 '컨' 물동량은 최근 10년간('12~'22) 연평균 2.5%의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중국 등 주변 항만과 물동량 유치경쟁 심화

* 양적 성장에도 불구, 중국 항만의 급격한 질적 성장으로 **우리 항만의 순위는 하락**
(부산항 순위 : ('01) 3위(791만TEU) → ('10) 5위(1,419만TEU) → ('21) 7위(2,269만TEU))

○ (**스마트항만**) 세계 주요항만에서 자동화·지능화를 통해 안정적·효율적 운영이 가능한 스마트항만 구축 가속화*

* 코로나19, 러-우전쟁 관련 최근의 글로벌 공급망 위기로 주요 항만의 스마트화 가속

-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 상위 6곳에 전 영역 자동화항만이 구축되었으며 그 외 우리나라 부산항 등 4곳도 일부 자동화항만 도입

- 또한 해외 전 영역 자동화항만은 육해상 물류연계와 지능화는 초기단계로, 기술개발·시범사업 등을 추진 중

- 국내는 높은 초기 투자비와 일자리 감소 이슈 등에 따라 전 영역 항만자동화 도입이 늦은 상황

☞ **글로벌 항만물동량 증가와 선박 대형화에 대비하고, 중장기 항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항만 구축과 항만 인프라 적기 개발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항만물동량 증가에 대응한 하역능력을 적기에 확보하고 국내 기술 기반 스마트항만을 구축하여 공급망 안보강화 및 국제 물류경쟁력 강화

ㅇ 국내 주요 물류거점 항만을 특화 개발하여 항만 경쟁력 강화
* [부산항] 동북아 Mega-Port로 육성하여 글로벌 허브항만으로 위상 강화
* [광양항] 항만과 배후 산업 간 동반발전으로 아시아 최고 스마트 종합항만으로 육성
* [인천항] 수도권 최대 수출입 관문이자 對중국 물류허브로 육성
* [울산항] 동북아 에너지허브 육성을 위한 단계별 인프라 구축 지속 추진
* [거점항] 국내 산업원자재 공급을 위한 동해신항,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새만금신항 개발

ㅇ (**부산항**) 동북아 **물류 중심항의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한 **진해신항 정부분 외곽시설 발주**('23.6) 및 **신항 서컨부두 2-5단계 개발 완료**('23.12)

ㅇ (**광양항**) 아시아 최고 **종합물류항만**으로 **발전**을 위한 **여수 신북항 준공**('23.12.) 및 **세풍산단 매입 완료**('23.12)

- **항만이용자 안전확보**를 위한 **낙포부두 개축사업 착공**('23.12) 및 **묘도수도 직선화사업 착수**('23.5)

ㅇ (**인천항**) **대중국 수도권 물류허브 육성**을 위한 **항로연장 및 증심준설 착공**('23.7), **항만배후단지 1-1단계 2구역 완공**('23.11)

ㅇ (**울산항**) **에너지허브 육성**을 위한 2단계 **기반 인프라 확충**을 위해 **남방파제 2-2 준공**('23.9) 및 북항 방파호안(1단계) 기본·실시설계 추진('23.2~)

ㅇ (**거점항**) **동해신항 기타광석 및 잡화부두 발주**('23.9), **새만금 신항만 기반구축** 및 **특성화 계획 수립**('23.3), 진입도로 개설공사 발주('23.4) 등

ㅇ 스마트기술 융합을 통한 글로벌 허브항만 구축(국정과제)
* 스마트항만 도입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기반, 시장기반, 정책기반 구축

○ 스마트항만 관련 **산업 육성 정책 마련**

- **'스마트항만 기술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시행('23.1)하여 **신성장동력 확보, 공급망 안보강화** 및 국제 **물류경쟁력 확보**

○ 스마트항만 **기술개발** 및 **국산 기술 실증**

- **(R&D·용역) 안정적인 국내 항만 자동화 도입**을 위해 필요한 스마트항만 인프라, 하역 장비 등에 대한 **국내 기술 확보** 추진

* (R&D) 자율협력주행기반 화물운송시스템 개발(91억), 타이어형 항만크레인 자동화 안전모듈 개발(44억), 스마트 자동화항만 상용화 기술(5억)

** (용역) 스마트항만 이송장비 국산 제작방안 연구(5억), 항만분야 BIM 적용지침(7억), 스마트 블록개발 및 적용(9.6억), 스마트 지반정보 관리(4.3억)

-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국산 항만 자동화·지능화 기술을 실증하기 위한 테스트베드 공사 및 장비제작 적기 발주('23.9)

○ 스마트항만 **시장 확보** 및 **제도적 지원**

- **(시장확보)** 우리나라의 안정적인 스마트항만 기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부산항 신항 **2-6단계 발주** 추진('23.下) 등

- **(제도기반)** 스마트항만 기술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항만기술산업 육성 및 지원관련 법률(안)」 마련('23.下)

◈ **'제2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19~'40)'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신항만 예정지역 지원계획과 민관협의체 운영 등 사업추진체계 마련**

○ **(제2차 신항만 기본계획 재검토)** 기본계획 추진현황 점검, 건설 및 예정지역 지원을 위한 제도 정비 등 기본계획 타당성 재검토('23~'24)

○ **(제도개선) 민간사업시행자 선정 절차 도입**, 인허가 의제 범위 확대, **스마트항만 도입** 활성화 **근거 마련 검토**

○ (**지역지원**) 신항만 예정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지역 업체·주민 우대** 방안 등 신항만건설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계획(안) 수립

* 대규모 신규사업이 추진되는 부산항 진해신항 예정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 수립('21~'22)하고 추진체계, 사례 분석 등을 통해 국내 주요 신항만으로 확대

○ (**보상체계 확립**) **국내 주요** 신항만 개발에 따른 **어업보상** 체계 및 어업피해조사 방법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공론화 지속 추진

○ (**소통강화**) **신규 항만개발사업**(부산항 진해신항 등)의 **원활한 추진** 및 **지역 요구사항 논의**를 위한 **민관협의체 지속 운영**

< '2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스마트항만 기술산업 육성전략 마련	'23.1월	국정 40-3
	새만금 신항만 기반구축 및 특성화 계획 수립(새만금위원회)	'23.3월	
2/4분기	새만금신항 진입도로 개설공사 발주	'23.4월	
	광양항 묘도수도 직선화사업 기초자료조사용역 발주	'23.5월	국정 40-3
	부산항 진해신항 남방파제 축조공사 발주	'23.6월	국정 40-3
3/4분기	인천신항 항로연장(준설) 착공	'23.7월	국정 40-3
	광양항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 발주	'23.9월	국정 40-3
	울산신항 남방파제 2-2공구 준공	'23.9월	
	동해신항 기타광석 및 잡화부두 축조공사 발주	'23.9월	
4/4분기	부산항 진해신항 방파호안 축조공사 발주	'23.10월	국정 40-3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부두(2-5단계) 준공	'23.12월	국정 40-3
	광양항 낙포부두 개축사업 착공	'23.12월	국정 40-3
	항만기술산업 육성 및 지원관련 법률(안) 마련	'23.12월	국정 40-3
	체계적인 어업보상을 위한 어업피해조사 표준화 방안 마련	'23.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정책·사업의 수혜자**) 수출·입 물류기업, 국내·외 선사, 항만 및 터미널 건설·운영사, 지자체, 일반 국민 등

○ (**이해관계자**) 선사, 화주, 터미널 운영사, 항만공사(PA), 지자체, 지역주민 등

□ **기대효과**

○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를 통해 **안정적인 자동화 항만 도입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기술·산업 경쟁력 확보**로 **스마트항만**으로 **도약**

○ 국내 항만 터미널의 **생산성 향상**을 통해 **항만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환적화물을 유치**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 항만인프라 적기 확충으로 **고부가가치 항만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항만 배후 **국가 핵심 기간산업 지원기능 강화**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2	'23
부산항 신항만 개발(Ⅰ-2-일반재정②)			
① 부산항 신항만 개발(5050)	교특회계	**1,207**	**1,942**
▪ 부산항 신항만(1단계)(303)	교특회계	694	257
▪ 부산항 제2신항(305)	교특회계	150	1,298
▪ 부산항 신항 남컨배후단지(308)	교특회계	283	280
▪ 부산항 신항 소형선부두(314)	교특회계	80	82
▪ 부산항 신항 수리조선단지(315)	교특회계		25
광양항 개발(Ⅰ-2-일반재정②)			
① 광양항 개발(5051)	교특회계	**1,203**	**1,653**
▪ 광양항(3단계)(302)	교특회계	1,203	1,653
인천신항 개발(Ⅰ-2-일반재정②)			
① 인천신항 개발(5054)	교특회계	**497**	**103**
▪ 인천신항(300)	교특회계	497	103
새만금신항 개발(Ⅰ-2-일반재정②)			
① 새만금 신항 개발(5057)	교특회계	**1,262**	**1,682**
▪ 새만금 신항(300)	교특회계	1,262	1,682
울산신항 개발(Ⅰ-2-일반재정②)			
① 울산신항 개발(5074)	교특회계	**1,898**	**1,194**
▪ 울산신항(300)	교특회계	1,898	1,194
동해신항개발(Ⅰ-2-일반재정②)			
① 동해신항 개발(5076)	교특회계	**314**	**366**
▪ 동해신항(302)	교특회계	314	366
항만 및 물류기술개발(R&D)(Ⅰ-2-R&D②)			
① 항만 및 물류기술개발(R&D)(4143)	교특회계	**42**	**49**
▪ 스마트 자동화항만 상용화 기술개발(R&D)(302)	교특회계	4	5
▪ 타이어형 항만크레인 적용 자동화 및 안전모듈 개발(315)	교특회계	38	44
② 항만물류기술개발(R&D)(4149)	일반회계	**21**	**91**
▪ 자율협력주행기반 화물운송시스템 개발 및 실증(R&D)(305)	일반회계	21	91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0	'21	'22	'23			
① 항만물류 인프라 적기 확충 및 스마트항만 도입 추진율(%)	신규	신규	신규	100	항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항만물류 인프라 적기 확충 및 스마트항만 도입 과정에 대한 달성 정도를 목표치 설정	ⓐ 신항만 인프라 확충률(50%) - (달성목표) 12개 신항만 인프라 확충률 4.4% 증가('22 : 18.2% → '23 : 22.6%) · 신항만인프라 확충률(%) = 신항만 인프라 투자(누적) / 신항만기본계획상 필요 투자(16.1조원)('19~'40) × 100 * '22년 인프라 확충 증가율(4.2%) 감안 4.4% 증가 설정 ⓑ 스마트항만 도입 및 산업 육성 추진율(50%) - 스마트항만 기술산업 육성전략 수립(30%),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발주(20%)	- 결산 자료 - 관련 문서

3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고부가가치 항만 실현(Ⅰ-2-③)

항만정책과 (044-200-5911 / 5912)

□ 추진배경 (목적)

○ 국내 **항만물동량**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KMI, '22.12)

- '총' 물동량은 최근 10년간('12~'22) 연평균 1.3%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컨'물동량의 연평균 증가율은 2.5%로 '총' 물동량 대비 높은 수준

* '총': ('21) 15.8억톤 → ('22) 15.4억톤 → ('23) 16.2억톤 → ('30) 19.1억톤
** '컨': ('21) 3,000만TEU → ('22) 2,885만TEU → ('23) 3,015만TEU → ('30) 3,921만TEU

○ **2050 국가 탄소중립, 수소경제 활성화 등**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항만**의 **역할**과 **기능**을 준비할 필요성 증대

* (**항만 여건**) ① LNG, 해양재생에너지 등 수소생산 원료 확보용이, ② `30년 이후 수소 수입 및 내륙유통 필요, ③ 물류 모빌리티, 배후산업단지 등 수소 소비 잠재력 高

○ 해운·항만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세계 주요 허브항만은 **인프라 확충** 및 **다양한 연관 산업 육성** 등 **항만부가가치 제고 추진**

- 선박 대형화, '컨' 물동량 증가 등에 대비한 **진해신항 개발**, 단순 물류 기능에서 벗어나 지역산업과 연계해 물동량을 창출할 수 있도록 **배후단지 공급** 등 **고부가가치 항만정책전략** 마련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탄소중립**) **친환경·저탄소 항만**으로 능동적 전환을 위해 **탄소중립 항만 구축 기본계획 수립**

-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선제적 대응을 위해 **에너지 최적화 항만별 특화전략 마련**

○ (**항만기본계획**) **선박 초대형화**, **글로벌 얼라이언스 강화** 등 해운·항만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다양한 서비스 지원 등을 위한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수립**

- 업체관계자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한 **항만별 특화발전방안 마련 추진**

○ (**항만배후단지**) **8개항 항만배후단지** 개발·운영 실적을 진단하고 수요분석방안 현실화 등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

- 항만배후단지 도입 **성과 분석**과 장래 체계적인 항만배후단지 공급을 위한 **원단위 재검토**, **소규모 항만배후단지 지정방안** 마련

○ (**제도개선**)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의 차질 없는 시행과 사업자 **편의 증진**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항만법령」 개정**

- 비관리청 사업자의 책임이 없거나, 관리청에서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착수시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사업자 부담 경감**

- 비관리청 **전용 목적**의 **토지·항만시설**을 임대할 경우 임대료 징수 기준이 미비함에 따라 **임대료 기준 마련**

○ (**개발 체계 고도화**) 항만개발계획 효율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

- 부두별 화물 혼재처리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품목 분류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항만운영 효율성 제고**

* 혼재 비중이 높은 품목을 통합하여 부두 기능을 단순화하는 등 품목 분류체계를 간소화(14개 → 7개 이내)

- 현행 **항만 분류체계**(국가관리항 ↔ 지방관리항)의 **타당성 검증**과 합리적인 **국가관리무역항 지정·해제 기준 마련**

○ (**국제협력**) 항만분야 국제협력을 통해 동북아(한·중·일) 국가 및 국제항만기구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상생 발전** 및 **국가위상 제고**

- **한·중·일 3국 간 항만 분야 정책** 및 **기술교류 협력**(탄소중립, 스마트항만 정보화 협력 등)을 통해 **동북아 국가의 항만 공동 번영 및 상생 발전** 방안 논의

* '23.6월 워킹그룹회의, `23.11월 한·중·일 3항만국장회의 개최 추진

- 전세계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PIANC(국제수상교통시설협회), IAPH(국제항만협회) 등 국제기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관련 **전문가와의 네트워크 확충** 및 **국가위상 제고**

* '23.5월 PIANC 총회, `23.10월 IAPH 컨퍼런스 및 총회

○ (**집행 관리**) **항만SOC사업 적기 준공**을 위한 **발주청별 재정집행점검**(월별) 및 현장점검(연1회 이상) 실시

- 재정집행 부진 사업에 대한 점검을 통해 **원인분석** 및 **집행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추가 집행 가능 사업발굴로 집행 제고

< '2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항만기술분야 국제역량강화 및 협력추진용역 발주	'23.1	
	항만법 하위법령 개정 방침	'23.2	국정 40-3
	탄소중립 항만 구축 관련 업단체 의견수렴(간담회 등)	'23.3	국정 40-3
2/4분기	탄소중립 항만 구축 관련 해외선진항만 견학	'23.5	국정 40-3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수립용역 착수	'23.6	국정 41-5
	부두분류체계 개편(안) 항만이용자 대상 설명회	'23.6	국정 40-3
3/4분기	전국 항만구역 정비 및 지형도면 심의 및 고시	'23.8	국정 40-3
	탄소중립 항만 구축 기본계획 수립관련 수요조사(2차)	'23.8	국정 40-3
	「항만법 시행령」 차관·국무회의 의결 및 시행	'23.9	국정 40-3
4/4분기	부두분류체계 개편 관련 공청회	'23.10	국정 40-3
	탄소중립 항만 구축 기본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회	'23.10	국정 40-3
	발주청별 재정집행 현장점검	'23.10	국정 40-3
	한·중·일 항만국장회의 개최	'23.11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수립관련 수요조사	'23.12	국정 41-5
	항만 배후단지 발전방안 개선방안 관계자 의견수렴(간담회 등)	'23.12	국정 40-3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정책·사업의 수혜자**) 국내외 선사, 터미널 운영사, 수출입 기업, 지자체 등

○ (**이해관계자**) 항만공사(PA), 터미널 운영사, 선사, 지자체, 주민 등

□ 기대효과

○ **대내외 여건 변화** 및 **전망**에 **대응**하여 부산항, 광양항 등을 비롯한 **국내 항만**의 **대외 경쟁력 제고**

○ 단순 화물처리에서 벗어나 **처리화물** 및 **항만기능**을 **전략적**으로 **다양화**하고, 항만입지와 지역별 산업 특성에 따라 **신산업을 육성**하여, **부가가치·일자리 창출**

○ **항만 내 미세먼지 저감**, **온실가스 배출 완화**, **全지구적 기후변화 대응** 등 항만과 인접 도시가 협력하여 **환경·안전 문제**에 **대비**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0	'21	'22	'23			
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고부가가치 항만 실현 추진율(%)	100	100	100	100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고부가가치 항만 실현을 위한 주요 과제별 달성 정도를 목표치로 설정	ⓐ 탄소중립 항만구축 기본계획 수요조사 및 중간보고(50%) ⓑ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수립 용역 착수(50%)	- 방침자료 및 보고자료 등 - 착수계, 방침자료 및 보고자료 등

4 해외 물류거점 확보 등 진출 지원 강화(Ⅰ-2-④)

항만물류기획과(044-200-5757 / 5758)

□ 추진배경 (목적)

○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해 생산거점 다변화, 소비시장 인근 생산(리·니어쇼어링) 대응을 위한 **정부·공공기관 주도**로 **해외 물류거점 다변화 필요**

○ 국내 **해운·물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존 해외 물류거점 운영활성화** 및 **해외물류 시장 개척·진출 지원 강화 등** 글로벌 물류네트워크 확충으로 우리 물류기업의 해외 진출 시 **안정적 공급망 확보**

* 근거 :「물류정책기본법」 제61조(국제물류사업의 촉진 및 지원)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해외** 주요 항만 내 **물류센터 추가 확보**를 통한 우리나라 **물류 플랫폼 지속 확대**
◈ 국내 해운·물류기업의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와 **화주-물류기업 동반진출 건설팅 지원**으로 국적 해운·물류기업 **해외 진출 기회 확대**

○ **우리 기업**의 안정적 **해외물류기반** 확보 및 **국제물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해외 주요 거점항만**에 **물류센터** 확보

○ 물류비 부담이 증가한 상황에서,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 차원의 **안정적 물류 서비스 지원** 필요

- (**물류센터 안정적 운영**) 우리 수출기업의 물량 지속 확보 노력을 통해 旣 확보한 해외 공동물류센터 3개소(유럽 2, 동남아 1)의 안정적 운영 도모

- (**물류센터 운영 활성화**) 물류기업 대상 집중 홍보 마케팅 활동(세미나, 해외사업 투자설명회, 한상 물류기업 설명회) 강화를 통해 해외 공동물류센터 이용 확대

- (**물류 네트워크 확장**) 국내 기업수요가 많은 美(LA/LB, 서배너)·베트남에 해외물류센터 합작법인 추진, 신규 시장(동유럽) 해외물류센터 진출 기반 마련

○ 코로나19 및 경기침체 등 영향으로 우리 해운·물류기업 해외사업 확대가 어려운 여건으로, 사업참여율 제고를 위해 **지원대상 확대, 사업구조 개편** 등으로 **해외진출 활성화** 도모

- (**협의체 운영**) 우리부 - 물류업계 - 해운물류 전문가·공공기관과의 정기적 간담회를 통한 업무 소통으로 해외진출 성과 제고

- (**타당성 조사 지원**) 국내해운·물류기업이 희망하거나 계획중인 해외물류사업을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분석 지원

* (사업유형) 인수합병형, 시설투자형 / (지원내용) 최대 8천만원 한도에서 조사비용 50%지원

- (**해외시장 조사·컨설팅 지원**) 해운물류기업이 다양한 해외시장 물류사업(해운, 3PL, 육상운송, 창고, 포워딩 등) 현지 법인 설립, 물류거점 확보 및 수출입 판로개척 등 조사 지원범위 확대

* 물류시장 단독 지원 가능(최대 3천만원), 화주기업 컨소시엄 구성시 지원한도 상향(3→4천만원)

- (**해외 물류시장 진출 지원정책 마련**) 우리 중소·중견 물류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 현지 물류기업 인수 및 물류시설 확보 시 금융지원 등 추가 지원정책 발굴 추진

* (현행) 신규 해외진출 시 사전조사·컨설팅을 지원하는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사업' 추진 중

○ 전담기관인 KMI 국제물류 투자·분석센터를 통해 **해외 유망시장 정보제공, 투자설명회 개최** 및 **해외 진출 우수사례 발표회** 등을 개최하고, 사업계획부터 진출 후 실적 관리까지 **全주기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우리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 및 **상생성장** 기여

- (**해외유망 물류시장 사전 분석**) 국가별·분야별로 구축된 전문가 인력풀(Pool)을 통해 글로벌 물류 현지 시장 동향 분석 기능 강화

- (**유망 물류시장 투자환경·유망사업 분석**) 동유럽의 관문 항만들을 중심으로, 현지 물류 인프라 여건 등 투자환경 집중 분석

- (**사업화 및 현지안착 지원**) 해외 진출 희망 기업의 전문가 매칭을 통한 현지 시장 조사 등 정보제공 및 애로사항 적극 수렴을 통한 사업 안정화

< '2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023년 해운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모집 대국민 홍보	'23. 1월	국정 40-2
	해외시장 개척 지원방안 추가발굴을 위한 기업간담회	'23. 2월	국정 40-2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사업 지원 대상기업 선정 추진	'23. 3월	국정 40-2
2/4분기	해외 공동 물류센터 신규 확보 여건 분석	'23. 5월	국정 40-2
	인도네시아 자바주 물류센터 확대운영 추진	'23. 6월	국정 40-2
	유럽진출 우리기업 대상 해외 물류센터 마케팅 추진	'23. 6월	국정 40-2
3/4분기	해외물류센터 이용기업 만족도 조사 실시	'23. 8월	국정 40-2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실적 모니터링	'23. 9월	국정 40-2
	해외 유망 물류시장 투자설명회 개최	'23. 9월	국정 40-2
4/4분기	해외 한상 물류기업 설명회 개최	'23. 10월	국정 40-2
	미주·베트남 등 해외물류센터 운영을 위한 합작법인 설립 추진	'23. 12월	국정 40-2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성과확산 우수사례 발표회	'23. 12월	국정 40-2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정책·사업의 수혜자**) 국제물류주선기업을 포함한 국적 해운·물류기업 및 해외 물류거점을 통해 수출 활동을 하는 수출기업

○ (**이해관계자**) 특별한 이해관계자 없음

□ 기대효과

○ 우리 기업에 ①**물량 우선 배정**, ②시장 대비 **낮은 가격**(10% 내외)에 서비스 제공, ③**현지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물류센터 확보

○ ①국적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확대**와 ②정부·공공기관 주도의 **물류거점 확보**로 포스트 코로나 시기 글로벌 공급망 변동에 선제적 대응

○ 물동량 창출 잠재력(해상교역량 전 세계 8.5%)과 글로벌 물류시장 성장에 비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과 글로벌 물류거점 확보는 미흡

- 우리 **중소·중견 해운물류기업**이 포화상태인 국내 물류시장을 벗어나, 수입원을 다변화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기회 제공

* 글로벌 거점(법인.지사) : 독일 DHL(220개국, 854개), 미국 UPS(200개국, 1,801개), LX판토스(37개국 360개 거점), CJ대한통운(40개국 279개 거점), 현대글로비스(해외 56개 거점)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2	'23
민자유치 및 글로벌 기업유치(Ⅲ-3-일반재정⑯)			
① 민자유치 및 글로벌기업유치(5066)			
▪ 해운물류기업 해외시장 개척 지원(302)	교특회계	22	21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또는 자료출처)
	'20	'21	'22	'23			
① 해외물류시장 신규 진출건수(건) (계획포함)	8	9	10	10	동 사업의 구조 상 기업이 신청하는 지원금액에 따라 연간 지원가능 기업이 최소 6개*에 그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 간 실적을 고려하여, '23년 목표치를 전년도 목표치(10건)와 동일하게 설정 * 편성된 예산 중 기업 지원금은 4.74억원이고, 기업 당 타당성 조사사업 지원한도는 8천만원이므로, 연간 지원가능 기업은 최소 6개에 그칠 수 있음	해외 물류시장 신규 진출건수 (계획포함)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사업성과 보고서

5 '컨' 항만 경쟁력 및 경제적 가치 제고(Ⅰ-2-⑤)

항만물류기획과 (044-200-5753, 5755, 5757)

□ 추진배경 (목적)

○ 국가 수출입의 99% 이상을 처리하는 항만의 물류 경쟁력을 지속 제고하고 이를 통해 항만을 통한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추진

- ('**컨' 터미널**) **국가 수출입 물류 지원, 환적 유치**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등을 위해 **운영체계 효율화** 등 **경쟁력 제고** 필요

- (**항만배후단지**) 항만의 물류 기능 고도화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항만배후단지**를 **고부가가치 물류 플랫폼**으로 **육성** 필요

- (**해양산업클러스터**) 활용도가 낮아진 유휴 항만시설에 고부가가치 **新해양산업 집적·융복합화** 등의 기능을 부여하여 입주기관·기업 유치를 통해 **유휴항만**에서 **새로운 경제적 가치 창출**

* 근거 :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컨' 항만 경쟁력**) '컨' 물류 효율 개선(ITT 등), 주요 항만별 터미널별 여건을 고려한 경쟁력 제고 전략 마련 및 이행 추진

○ (**항만지역 경제적 가치 제고**) 항만배후단지, 유휴 항만시설 등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여 **항만지역**의 **경제적 가치 제고**

- (**항만배후단지**) 배후단지 특화구역 확대·운영, 입주 자격 완화, 우수 기업유치를 위한 투자유치 마케팅, 우수물류기업 인증제 등 실시

- (**해양산업클러스터**)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관·기업 유치 지원 및 해양산업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방안 수립 추진

< ’2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2 전국 주요 항만 ‘컨’ 물동량 분석	’23.1월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 상시모집 대국민 홍보	’23.1월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부산항 항만물류 현장점검	’23.3월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계획	’23.3월	
2/4분기	’23.1분기 전국 주요 항만 ‘컨’ 물동량 분석	’23.4월	
	우수물류기업 인증 모집 공고	’23.5월	
	수출물류 지원을 위한 부산항 신항 인프라 확충 점검	’23.6월	
	부산항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식산업센터 운영 추진	’23.6월	
3/4분기	’23.2분기 전국 주요 항만 ‘컨’ 물동량 분석	’23.7월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 만족도 조사 실시	’23.9월	
	부산항 全구간 자동화항만 통합 시운전 실시	’23.9월	
	전국 주요 항만별 맞춤형 물동량 유치 추진(인센티브제, 마케팅 등)	’22.9월	
4/4분기	’23.3분기 전국 주요 항만 ‘컨’ 물동량 분석	’23.10월	
	부산항 신항 서 ‘컨’ 부두(2-5단계) 개장	’23.12월	
	우수물류기업 인증	’23.12월	
	부산항 해양산업클러스터 유치 대상기업 분석 및 수요조사 방안 수립	’23.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컨’ 항만 운영 관계기관(하역사, 선사 등), 해양산업클러스터 및 항만배후단지 입주(입주 예정포함) 기업 등 항만 관련 산업 종사자 등

○ (**이해관계자**) ‘컨’ 항만 운영 관계기관(하역사, 선사 등), 항운노조, 화물연대, 시민단체, 해양산업클러스터 및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 지자체, 항만공사, 지역주민 등

□ 기대효과

○ (**지역경제 활성화**) 글로벌 우수기업의 신규투자 유도, 지역 생산 유발 및 일자리 창출 등으로 항만 연관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항만 경쟁력 강화**) 물류(수출입 및 환적) 효율 제고를 통해 국가 컨테이너 항만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 성장 도모

○ (**신산업 육성**) 해양산업클러스터 신규기업 유치 및 입주기업 지원책 마련으로 항만별(부산항, 광양항) 특색이 반영된 클러스터 구축 및 해양 新산업(스마트 항만물류·해양레저·관광 등) 육성 기여 전망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2	'23
민자유치 및 글로벌기업유치(Ⅲ-3-일반재정⑯)			
① 민자유치 및 글로벌기업 유치(5066)	교특회계	2,957	3,845
▪ 물류기업유치지원(301)		2,957	3,845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0	'21	'22	'23			
① 주요 항만 '컨' 물동량(1~11월) (만TEU) (60%)	2,492	2,582	2,498	2,513	'23년 물동량은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19년 수치와 동일하게 설정 * 코로나19 이후 발생한 글로벌 물류적체에 더해,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및 중국 지역봉쇄, 세계경기 둔화 등 대외적 요건으로 인해 주요 국가간 교역량이 줄어 '22년의 물동량은 '21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며, 이에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19년 물동량 실적치와 동일하게 설정 ** 물동량은 다음 월 20일경 집계되며 성과관리 시행계획 평가서 제출시기를 고려하면 12월 물동량은 적용 불가(19, 20, 21 실적치 역시 1-11월 집계 결과)	항만 물동량 통계 시스템(port-mis) 확인	항만 물동량 통계 시스템(port-mis) 확인
② 민간투자유치 실적 (억원) (40%)	신규	6,158	3,850	4,000	최근 3년간 항만배후단지 공급면적 별 투자유치 평균 실적 및 글로벌 경기 침체, 건축비용 증가 등 악화된 투자여건을 고려, 평균치인 397천㎡/약 3,800억원 대비 5% 상향한 4,000억원 목표 설정 * 공급면적 및 투자유치 실적(평균 390천㎡/약 3,800억원) - ('20년)455천㎡/1,433억원 - ('21년)363천㎡/6,158억원 - ('22년)374천㎡/3,850억원 ** '23년 공급계획 : 약 500천㎡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 공모 시 제출한 기업의 투자계획 확인	내부문서(관리기관 보고자료)

6 민간참여를 통한 항만 고부가가치 창출 및 해외협력 기반마련(Ⅰ-2-⑥)

항만투자협력과 (044-200-5963 / 5964)

□ 추진배경 (목적)

○ (**민간개발**) 항만시설 확충·운영에 **민간의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민간투자**를 촉진하여 **항만 고부가가치 창출** 도모

- (**민자부두**) **수익성** 있는 부두를 **민자사업**으로 **개발**하여 항만 **물동량 처리**와 **항만서비스 다변화**(양곡, 피더·잡화, 수리조선소 등) 추진

- (**배후단지**) 정부PA 주도 배후단지 **임대*** **정책**에서 **민간**이 **참여**하는 **개발·분양 방식 도입**으로 배후단지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

* 임대의 경우 임대기업들의 소극성, 금융권의 대출 제한 등으로 배후단지 활성화 한계

- (**비관리청**) **항만시설**의 **적기 확충**을 위한 **비관리청사업 지속** 추진

○ (**해외항만개발**) **주요 협력국**을 대상으로 항만개발 관련 **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기반 마련** 및 **수주성과 창출**

- 항만개발 협력을 통해 **정부 간 협력관계 구축** 및 국제사회 기여, **항만·물류·운영** 관련 **국내기업**의 **해외 항만시장 진출 지원 추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민간개발**) 민간자본을 활용한 **부두** 및 **배후단지 개발**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비관리청사업**을 통한 **항만시설 적기 확충** 계속

- (**민자부두**) **17개 민자사업*** 관리·운영을 통해 **항만물동량**** **처리**, **비'컨'**(양곡, 잡화), **피더**, **수리조선**(3만톤급 이상)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투자 1조 975억원 투입 계획**(~'30년 이내)

* 총사업비 4조 3,215억원(총투자비 5조 9,901억원)을 투입해 부두 51선석 확충

** '22. 실적 : 컨테이너 810만TEU, 비컨테이너 1,487만톤

- **(배후단지)** 인천신항 1-1단계(2구역) 등 **6개** 사업에 **8,753억원**을 투입하여 **배후단지 463만㎡ 확보** 추진(~'30년 이내)

* (개발) ①부산신항 웅동(2단계), ②인천신항(1-1단계 2구역), ③평택·당진항(2-1단계), ④평택·당진항(2-3단계) / (신규) ⑤인천신항(1-1단계 3구역, 1-2단계), ⑥인천남항 2단계

- **(비관리청) 연간 1조 7,294억원**(최근 5년 평균)* **허가, 민간참여**(허가, 실시계획승인 등) **과정**에서 **청렴도 관리**와 **업무역량강화** 간담회 추진

* 연도별 허가 건수: '18년 10,564억원(168건) → '19년 12,997(236건) → '20년 20,420(191건) → '21년 17,069(202건) → '22년 25,420(171건)

○ **(해외항만개발)** 해외인프라 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맞춤형 지원전략 수립** 및 **전후방 사업 지원**(사업발굴~관리) 추진

* 단순도급 → 투자개발형(사업자가 건설뿐만 아니라 재원조달, 설비운영 등 사업 전 과정 참여)

- **(지원전략)** ① **기업** 수요조사, ② **수원국** 요청, ③ **사업화**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사업**을 **발굴·선정**하고 **차별화**된 **지원전략 마련**

- **(수주지원)** 국내기업의 해외항만사업 수주 활동 및 조사비용 **지원예산**(정부지원 70%) **확대***를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지원 강화**

* ('22년) 7억원(최대 3.5억원, 2개사업) → ('23년) 9억원(최대 3억원, 3개사업)

- **(컨소시엄) 실질적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만+물류+운영' 등 **항만 연관기업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해외 동반 진출 견인**

* 관심 기업의 투자 및 수주성과 창출을 위해 재외공관을 적극 활용하여 외교활동 지원

- **(중점국가)** 건설·물류 분야 국내기업의 **관심 지역**인 **동남아**와 **주요 발주지역**인 **중동***을 중심으로 **민관 협력·지원** 추진

* 이라크(알포항), 사우디(두바항) 항만개발사업 관련 국내기업 수주지원을 위한 이라크·사우디 방문 및 장관 면담 추진(3월)

○ **('22년도 미흡과제 개선계획)** 성과지표 개선·보완 및 정책 소통·확산방안 발굴 등 정책추진 노력 개선방안 제고

- (**성과지표**) 항만민자사업 추진율 관련 운영 중인 민자부두와 비관리청 항만개발 등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목표치 추가 설정**

- (**정책추진**)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사업 이해관계자 간담회, 해외협력개발사업 관련 국제포럼·협의회·초청연수·세미나 등 **국·내외 정책 소통**을 위한 다양한 자리 마련

< '2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사업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23.2월	
	해외항만개발 시장진출 지원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공모	'23.2월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업무담당자 역량강화 및 청렴도 제고 교육	'23.3월	
	국내기업 항만개발사업 수주 지원을 위한 중동지역 순방 추진	'23.3월	
2/4분기	부산항 신항 양곡부두 민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3.4월	국정40-3
	아태지역 해양연계성 강화를 위한 UNESCAP 협력 포럼 개최	'23.5월	
	부산항 신항 수리조선소 민자사업 심의 추진	'23.6월	국정40-3
	상반기 항만민자사업 현장점검	'23.6월	
3/4분기	해외항만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 개최	'23.7월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업무담당자 간담회	'23.9월	
	해외항만관계관 초청연수 시행	'23.9월	
4/4분기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사업 제도개선(안) 마련	'23.10월	
	UNESCAP과 국제세미나 공동 개최	'22.11월	
	인천남항 2단계 2종 항만배후단지 등 개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23.12월	
	하반기 항만민자사업 현장점검	'23.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물류·제조기업, 선사, 항만운영사, 건설사 및 항만개발 선진기술 전수 수원국 및 해외진출 관심 기업

○ (**이해관계집단**) 민간사업자, 항만구역 내 입주기업, 인근 주민, 지자체, 공공기관 및 해외건설 참여 업체 등

□ **기대효과**

○ (**민간개발**) 부두 6선석(양곡 1, 피더 2, 잡화 1, 도크 2) 확보, 항만배후단지 463만㎡ 공급과 연간 1조 7천억원 규모의 비관리청 사업을 통해 **일자리와 경제적 파급효과 기대**

- 또한, 민간개발을 위한 민간참여 과정에서 업무 담당자(본부, 지방청)의 청렴도와 공정한 업무능력 향상 유도

○ (**해외항만개발**) 국내기업의 **해외 항만개발시장 진출** 및 **수주성과 창출**로 국내 항만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 단순 항만개발뿐만 아니라, **물류·운영** 등 연관기업 **동반 진출**을 통한 **물류거점 확보** 및 **글로벌 물류 공급망 구축** 기여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2	'23
일반항 건설(Ⅲ-3-일반재정⑩)			
② 일반항(5059)	교특회계	95 (880)	95 (1,035)
▪ 마산항(1-1) 민자부두 비용보전(MCC)(320)		95	95
울산신항 개발(Ⅲ-3-일반재정㉑)			
③ 울산신항(5050)	교특회계	60 (1,696)	108 (1,194)
▪ 울산신항개발(1-1단계) 운영수입보장금(MRG)(320)		60	108
포항영일만신항 개발(Ⅲ-3-일반재정⑦)			
④ 포항영일만신항(5056)	교특회계	65 (205)	64 (268)
▪ 포항영일만신항 1-1단계 운영수입보장액(MCC)(320)		65	64
목포신항 개발(Ⅲ-3-일반재정⑥)			
⑤ 목포신항(5055)	교특회계	85 (369)	89 (210)
▪ 목포신항 민자사업운용수입보전금(MRG)(320)		85	89
인천북항 개발(Ⅲ-3-일반재정④)			
⑥ 인천북항(5053)	교특회계	300 (366)	300 (300)
▪ 인천북항 민간운영수입보장(MCC, MRG)(320)		300	300
항만 민자유치 및 글로벌 기업유치(Ⅲ-4-일반재정⑯)			
① 민자유치 및 글로벌기업유치(5066)	교특회계	73 (123)	74 (133)
▪ 항만민자유치 및 해외개발협력사업(300)		73	74

* 괄호안은 해당 단위사업 내의 전체 세부사업 금액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0	′21	′22	′23			
① 항만 민자사업 추진율(%) (가중치 50%)	100	100	100	100	- SOC 민간투자사업은 계획부터 운영까지 장기간 소요됨을 감안하여 사업추진 절차별*로 당해연도 목표를 설정 * 민간제안사업 절차 : 제안서 접수 → 적격성 조사 → 심의회 심의 → 제3자 제안공고 → 제안서 평가 → 협상 대상자 지정 및 협상 → 사업자 지정 및 실시협약 체결 → 실시설계 → 관계기관 협의 및 실시계획 승인 → 공사 → 운영 등 최소 5~10년 소요 - 아울러, 운영중인 민자부두와 비관리청 항만개발 및 운영에 대한 현장관리, 점검, 교육 등 관리체계 강화를 목표치로 설정	ⓐ 신규 민자사업 추진(50%) -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1건) - 사업시행자지정(1건) * 측정방법 : (실적건수/목표건수) × 100% ⓑ 운영중인 민자사업 관리 (50%) - 민자부두현장점검(2회) - 비관리청 청렴교육(1회), 간담회 개최(1회) * 측정방법 : (실적횟수/목표횟수) × 100%	ⓐ 협상대상자 선정 공문서, 사업시행자 지정 공문서 등 ⓑ 계획수립, 결과문서 등
② 해외항만개발 협력 지원체계 구축 추진율(%) (가중치 50%)	100	100	100	100	- 국내항만 인프라 경험을 국제사회(개도국)에 공유하기 위해 수원국과 MOU, LOI 등을 체결하여 타당성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기존 3건에서 ′22년부터 4건으로 목표를 상향하여 추진중 - 또한, 초청연수·세미나·지원협의체 회의 등 정책소통을 위한 다양한 자리 마련으로 적극적인 지원체계 구축 추진을 위한 목표치 설정	ⓐ 해외항만개발 협력사업 (타당성조사 등) 추진 (40%)(4건) * 측정방법 : (실적건수/목표건수) × 100% ⓑ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소통 추진 (60%)(4건) -항만관계관초청연수, ESCAP세미나, 지원협의체회의개최 등 * 측정방법 : (실적건수/목표건수) × 100%	ⓐ 추진(발주)보고서, 관련 용역계약서, 협약서 등 ⓑ 회의개최, 결과문서 등

7 항만 서비스의 품질제고 및 항만운영의 안정성 확보(Ⅰ-2-⑦)

항만운영과 (044-200-5771 / 5772)

□ 추진배경 (목적)

○ (**항만서비스**) 항만연관산업 역량 제고를 통해 스마트화·친환경화 등 **물류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능력**과 **항만서비스 수준 향상 도모**

○ (**항만안전**) **항만물류 분야**의 **안전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을 통해 **안전한 항만 근로환경 조성** 및 국가 수출입 물류 경쟁력 강화

○ (**항만보안**) 선사 및 수출입기업들이 무역항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무역항 보안사고 예방** 및 **항만 테러 방지 역량 제고**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국적선사·물류기업이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항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항만 연관 산업 역량 제고 및 항만안전·보안 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가. 항만연관 산업 역량 제고

○ (**스마트화·친환경화 대응**) 스마트항만 도입, LNG 등 친환경 연료 확산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 제고

- (**스마트항만 인력 양성**) 기존 항만근로자 대상 스마트항만 **직무 전환 교육** 실시, **신규 터미널 전환배치** 및 **교육과정 개발**

- (**LNG벙커링 활성화 지원**) **LNG벙커링** R&D로 **비동시·동시 작업 절차서 마련**을 통한 항만 안전관리 및 친환경연료산업 활성화

○ (**항만서비스 효율화**) 선사, 수출입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선박연료공급업 등 연관산업의 신뢰성 확보

- (**항만종합서비스업 신설**) 선사, 수출입기업들에 대한 **원스톱 항만서비스** 제공 지원을 위한 **항만종합서비스업 신설**

- (**표준계약서 도입**) **불공정한 계약 관행 타파, 작업분쟁 감소** 등 항만운송(관련)산업계 지원을 위한 **표준계약서 사용 권고 제도 도입**

- (**선박연료 정량공급제도 도입**) 국내 선박연료공급업자의 신뢰성 확보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정량공급 측정장비 설치** 등 **정량 공급제도 도입**

- (**항만물류 정보시스템 고도화**) 항만물류 업무 관련 정보*를 다양한 분야에서 쉽게 활용하기 위한 체계 및 정책 방안 마련 추진

* 선박운항 현황, 항만시설사용, 수출입 화물통계, 등록선박현황 등 물류 관련 정보

나. 항만안전 역량 제고 및 안전시설 지원을 통한 항만안전사고 예방

○ (**항만안전인프라 구축**) 중대산업재해 발생 우려가 큰 **항만하역장** 근로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전국 항만 **재해예방시설 지원**

- **항만안전점검관 추가 확충** 및 **안전감독 강화**를 통해 항만하역 작업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

○ (**항만안전 문화 확산**) 항만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대한민국 항만안전대상 신설**을 통해 항만안전 문화 확산

다. 선진형 항만보안시스템 구축 및 보안관리 내실화

○ (**인프라 확충**) 항만 **출입관리시스템 신규 구축** 및 **노후 장비 일괄 교체***, 항만보안 **리스크 평가 프로그램 개선**** 등 항만보안 인프라 고도화

* 신설 5개소(동해군산·대산), 노후 게이트 수리 31개소, 전산서버 교체 10식 등 / '23 / 국비 18.2억원

** 비대면 보안행정 지원, 보안심사·평가결과 DB 구축, 현장심사 지원 등 온라인 연계 및 기능 확대 추진

- **'국가중요시설 안티드론 보완대책***'('23.2, 테러대책위)에 따라 부산항에 대한 안티드론시스템 실시설계 등 구축 추진('23)

○ (**역량 강화**) 전국 항만 **합동보안훈련*** 및 항만보안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등 항만 보안인력 전문성 강화 지원

* 전국 항만시설 보안담당자, 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 보안 관계기관 등 참여

○ (**제도개선**) 항만 **출입증 일원화***, 항만 **출입관리시스템** 기반 기술 **스마트화(RFID→QR코드), 항만시설보안료**의 **단계적 현실화** 등 추진

* (기존) 인원+차량 출입증 → (개선) 인원 출입증 (차량은 LPR 시스템으로 관리)

○ (**장비**) 항만 **'컨' 위험화물 자동검색** 기술개발* 및 항만보안 **검색장비 성능 인증제**** 운영을 통해 관련 산업 발전을 지원

* '컨'위험화물 자동검색·복합탐지 시스템 개발, 검색정보 공유 플랫폼 개발 등 / '20~'24, 국비 283억

** 항만시설에서 보안 검색 시 해수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검색장비 사용 의무화

< '2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023년도 LNG벙커링 동시작업 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23.1월	
	2023년도 항만하역장 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지원 보조사업 수행기관 선정	'23.2월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신고) 기준 재정립 연구용역 공고	'23.3월	
2/4분기	「항만시설보안료 징수규정」 개정안 마련 및 기재부 협의	'23.4월	
	연안하역 자동화물비 요금체계 개편 등을 포함한 2023년도 항만하역요금 인상률 조정·알림	'23.4월	
	항만출입관리시스템 신규 구축사업 발주(총 5개소)	'23.4월	
	LNG벙커링(STS) 실증 항만사업장 공모	'23.6월	
3/4분기	2023년 집중안전점검 운영계획에 따른 위험물 하역시설 전수점검	'23.7월	
	「항만 출입관리규정」 개정안 마련(출입증 일원화 등)	'23.8월	
	「항만안전특별법」 시행 1주년 효과 분석	'23.8월	
	선박연료 정량공급 제도 도입 등을 위한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23.9월	
4/4분기	제1회 대한민국 항만 안전대상 개최	'23.12월	
	친환경 선박연료산업 활성화 제도개선을 위한 「선박입출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3.12월	
	전국 항만 합동보안훈련 실시	'23.12월	
	항만 '컨' 자동통합 검색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 자문위원회 개최	'23.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정책·사업의 수혜자**) 부두운영회사, 항만운송(하역) 종사자, 항만이용자 등

○ (**이해관계자**) 항만공사, 국가보안기관, 항만운송사업자(항만하역사), 항만운송(하역) 종사자, 한국항만물류협회, 항운노조 등

□ 기대효과

○ 항만연관산업 육성을 통해 **선사와 수출입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미래 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

○ **안전한 항만 작업 환경 조성**을 통한 항만 종사자 재해율* 저감 및 항만하역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손실 예방

* 사고재해율 : (전 산업) 0.48('18)→0.50('19)→0.49('20)/ (항만하역) 0.61→0.66→0.68

○ 항만보안 인프라 및 보안인력 역량 강화, 제도개선 등을 통해 **무역항 보안사고를 예방**하고 **안정적 항만 운영을 지원**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2	'23
항만운영 및 관리(Ⅲ-4-일반재정③)			
① 해운물류지원(6133)			
▪ 스마트항만전문인력양성지원(335)	일반	3.2	2.96
② 해운물류지원(6133)			
▪ 항만하역장 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지원(353)	일반	31.4	25.0
③ 항만운영 및 관리(5064)	교특		
▪ 항만보안시설 확충(303)	교특	74	75
④ 항만 및 물류기술개발(R&D)(4143)	교특		
▪ LNG벙커링동시작업기술개발(320)	교특	-	9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0	'21	'22	'23			
① (공통) 항만서비스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율 등 (가중치 40%)	-	-	-	100	항만서비스 효율화를 위해 친환경 선박연료산업 활성화 제도개선 법률 개정안 발의 실적 및 LNG벙커링 동시작업기술개발 R&D 1차년도 연구추진율을 목표치로 산출 * (제도개선율) 친환경 선박연료산업 활성화 제도개선을 위한 선박입출항법 개정안 발의 ** (연구추진율) LNG벙커링 동시작업 표준절차서는 R&D연구기간('23~'27) 종료 후 도출되므로, 1차년도에는 비동시작업 표준절차서부터 마련	① 친환경 선박연료산업 활성화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안 발의 실적(50%) ② R&D과제 연구추진율 (50%)	제도개선율은 규제완화법률 개정안 발의 실적으로 산정 연구추진율은 연구과제 수행기관 자료를 활용
② (공통) 항만안전 투자율 및 항만보안시설 확충률(%) (가중치 60%)	-	-	-	100	항만하역장 근로자 재해예방시설 민간사업자 투자율 및 항만보안시설 확충률	①민간사업자 안전투자율 (민간사업자 재해예방 시설투자액/ 목표액(23억원) ×100, 60%) ②항만보안시설 확충률(항만보안 강화 재정투자액/ 목표액(70억) ×100, 40%)	보조사업 수행기관 등의 자료를 활용

성과목표 Ⅰ-3 디지털 해상교통망을 구축하고 친환경 선박 시장을 주도한다.

(1) 주요 내용

□ 지능형 해상교통망 구축으로 해양사고 예방

○ **연안해역 이용 증대*** 및 **新 교통수단** 도입 등 **환경 다변화**에 따라 **공간중심 디지털 해상교통관리체계**(교통망) 구축으로 **해양사고 예방**

* ▲해상교량 32개('00)→113개('20), ▲해상풍력 9개소('22)→229개소(타당성 조사중)

○ 5cm 미만 위치 오차의 해양 PNT 시스템을 구축 및 전파 교란에도 정상 활용 가능한 **지상파 항법서비스** 제공

□ 디지털 해상교통정보 제공 및 신산업 육성

○ (**디지털 해상교통정보**) 바다내비 서비스 고도화* 및 신규 서비스 개발·제공으로 해양사고 저감, 육해상 정보·의료 복지 격차 해소

* △ 단말기 화면 확대 및 어탐기능 연계 , △ 알람 제공체계 개선, △ 여객선 원격모니터링 기능개선, △ 통합민원창구 운영, △ 내항선 원격의료 지원, △해상교통 음성정보 제공 등

○ (**디지털 산업육성**) 해상교통정보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기반* 마련, 동·서·남 3방향 국제 디지털 실증항로 구축·운영 추진

* 민간협의체 구성·운영, 산업육성 전략 수립 및「지능형해상교통정보법」개정

□ 글로벌 친환경선박시장 주도를 위한 기술개발 및 보급 확대

○ (**제도개선**) **국가 기본계획**('21~'30) 추진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이행**(매년), **재정지원 대상확대***를 위한 「**친환경선박법**」 **개정**('23.~)

* 기존(선박소유·사업면허 소지자) → 확대(친환경선박 건조 후 사업면허취득 예정자)

○ **(기술개발) 저탄소선박 기술 국산화** 및 **무탄소선박 기술 선제적 확보**

- LNG·하이브리드 등 **저탄소 연료 핵심부품**(화물창, 전기추진 시스템 등) 국산화* 및 수소·암모니아 등 **무탄소 연료 원천기술**(엔진, 연료전지 등) 확보**

* LNG탱크 설계 해외 의존(GTT社), 국내 전기추진시스템 선진국 최고기술 대비 약 20%

** 친환경선박 전주기 혁신기술 개발사업('22~'31, 2,540억원 ※해수부·산업부 공동) 등

- 선박용 **이동식 배터리** 및 **선박** 개발('20~'24), 친환경 추진기술 **실증용 선박**(2천톤급) 건조 및 **연구·실험동 건립** 추진

○ **(보급확산) 공공부문 선제적 전환** 및 **민간 보급확산**

- 소속기관 선박의 **선제적 전환** 및 타 부처·지자체 기술지원 강화, **친환경선박**(에너지효율 향상기술·LNG 등) **건조 보조금* 지원**

* (친환경 인증선박 보급지원) '21 ~ / 내항여객·화물선 등 / 선가 최대 30% 보조

○ **(상용화 지원) 국가 친환경인증 대상 확대, 해상실증선박**(Test-bed) 운영 등 **국산제품 상용화** 및 **시장진입** 지원

○ **(대응지원) 해운·조선·항만** 분야 탈탄소화의 **선제적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현장 **의견수렴** 등을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운영**

* 협의체(관리자급, 10월), 실무협의회(분기별) 운영 / 우리부(주관), 해운사·조선사·학계 및 연구기관·선박검사기관으로 구성(16개 기관·업단체)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0	'21	'22	'23			
①공공선박 친환경 선박 전환 실적	8	9	48	23	국정과제, 친환경선박 기본계획 등 국가 주요정책에 따라 목표치 산출	∑(공공선박 친환경 전환 척수) * 착수시점 기준	방침자료, 관련공문 등

(3) 외부환경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고품질 위치정보 제공을 위해 위성기반 서비스 연계 필요**

○ (**환경분석**) 우리부가 개발 중인 지상기반 고정밀 위치정보의 **해양 이용범위 확장**을 위해 **위성기반 서비스**와의 **연계 필요**

○ (**갈등관리**) 다부처 협력사업(과기정통부 주관)인 **KPS**[*]에 우리부 **연구성과**를 **연계**해 **위성기반 서비스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협의 추진**

* 한국형 지역위성항법시스템(KPS) 구축('22 ~ '34, 약 3.7조, 위성 8기로 구성)

(4) 기타

□ **친환경 선박 관련 국제 규제 동향**

○ '23년부터 현재 운항 중인 외항선박에 대한 IMO의 **온실가스 감축 규제**가 시행됨에 따라 해운선사는 규제 대응을 위한 준비 필요

- 미국, EU, 환태평양 국가 간 경제공동체, 포럼 등의 안건으로 **청정해운**(Green Shipping) 관련 다양한 기술협력 제안

* 한·미 정상회담('22.5.21) 청정해운 협력 강화, 에너지·기후 주요경제국포럼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1 디지털 해상교통정보(바다내비) 제공 및 신산업 육성(Ⅰ-3-①)

첨단해양교통관리팀 (044-200-6142 / 6143)

□ 추진배경(목적)

○ '21.1.30부터 **연안선박**을 대상으로 ①충돌·좌초 경보, ②전자해도, ③안전정보(기상정보 등) 제공 및 ④항로검증 등 **바다내비 서비스 시행**

○ 바다내비 **서비스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 및 바다내비 **시스템 연계기관**도 확대(2개→6개**)

* 단말기·앱 사용선박 1.6만여척으로 증가('21.1월 720척 → '22.11월 1.6만척)

** 2개 기관(해경, 수협) → 6개 기관(軍, 국정원, 관세청, KRISO 추가)

○ 사회 전반에서의 **안전강화**와 해상무선통신망 구축·운영에 따른 육·해상 **정보·의료 복지격차 해소**에 대한 **국민**의 **요구 증대**

○ **국제 해상디지털 기술선도** 및 **글로벌 해운시장 선점**을 위해 디지털 항해·통신장비 및 서비스에 대한 **기술개발** 및 국내 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제도** 마련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바다 내비게이션(서비스+통신체계) **고도화** 및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해상교통정보산업 진흥·육성**

○ **(바다내비 고도화)** 다양한 서비스 이용환경 조성, 이용자 관리 방안 마련, 기존 서비스 성능개선 및 신규 서비스 시범사업 시행 등

* △ 단말기 화면 확대 및 어탐기능 연계 , △ 알람 제공체계 개선, △ 여객선 원격모니터링 기능개선, △ 통합민원창구 운영, △ 내항선 원격의료 지원, △해상교통 음성정보 제공 등

○ (**이용 활성화**) 바다 내비게이션(서비스+통신 인프라)을 다양한 **해상 디지털 서비스**에 **활용**되도록 **범부처·유관 기관 협력 추진**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정책협의회 및 국가통합공공망 정책협의회 운영 등

○ (**시스템 고도화**)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 품질 고도화, △백업 서버 확충 등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고도화**

○ (**해상교통정보산업 육성**) 해상 디지털 산업육성을 위한 **민간 협의체** 구성·운영, **산업육성 전략 수립** 및 제도기반 마련

○ (**국제 디지털항로 구축**) 동·서·남 3방향 **국제 디지털 실증항로** 구축·운영을 위한 바다내비 기반 차세대 항해·통신 장비 및 서비스 개발

○ (**국제협력**) 국제기구(표준) 대응, 아태지역 **국제 콘퍼런스 개최**를 통한 해양 디지털 기술협력 및 국내 기업 홍보 추진

○ (**'22년도 부진과제 개선계획**) 추진계획을 충실히 하고 성과를 명확화하기 위해 **관리과제 명칭** 및 **성과지표**를 **보완·개선**

- 신규서비스 개발, 단말기 다변화, 해상교통정보산업 육성을 추진하여 **정책효과 증대** 도모

< '2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바다내비 서비스 고도화 방안 수립	'23.1월	국정40-4
	'23년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시행계획 수립	'23.2월	국정40-4
2/4분기	내항선 해상원격 의료지원 시범사업 추진	'23.4월	국정40-4
	해양디지털 항로 실증 기술개발(R&D) 추진(사업자 선정)	'23.4월	국정40-4
	해상교통정보산업 육성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23.5월	국정40-4
	통합공공망 정책 협의회 개최	'23.6월	국정40-4
3/4분기	해상교통정보산업 육성전략 수립	'23.7월	국정40-4
	바다내비 단말기 다각화 추진	'23.8월	국정40-4
	바다내비 전국 순회 홍보 추진	'23.9월	국정40-4
	아·태지역 국제해양디지털 국제콘퍼런스 개최	'23.9월	국정40-4
4/4분기	바다내비 긴급 구조신호(SOS) 대응체계 합동훈련	'23.11월	국정40-4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 통신품질 고도화	'23.12월	국정40-4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	'23.12월	국정40-4
	해상교통 음성정보 서비스 시범사업 추진	'23.12월	국정40-4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정책·사업의 수혜자**) 선원, 어업인 및 해운선사 등 해양수산 분야 종사자 및 바다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

○ (**이해관계자**) 해운·항만·조선·기자재, 육·해상 통신 인프라 산업 및 정보통신 서비스 업계 등 이해관계자

□ 기대효과

○ 바다내비 서비스 고도화 및 이용 활성화를 통해 **해양사고 저감**, 교육·해상 **정보·의료복지 격차 해소** 및 **해상안보 강화** 지원

○ 해상교통정보분야 **신산업 생태계 조성** 및 국내 기업의 차세대 항해·통신장비 및 디지털 서비스 **세계시장 진출 기대**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22	'23
해양안전관리시스템 구축・운영				
	① 해양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운영(6332)	일반회계	37.23	37.51
	▪ 스마트 해양안전교통망 구축·운영(308)		37.23	37.51
항해안전정보				
	① 항해안전정보(4275)	일반회계	292.25	248.48
	▪ 스마트 해양안전 교통정보(정보화)(504)		292.25	248.48
해양안전기술개발				
	① 해양안전기술개발(R&D)(4163)	교특회계	74.0	75.9
	▪ 해상디지털 통합활용연계 기술개발(R&D)(307)		61.0	51.0
	▪ 해양디지털 항로 실증 기술개발(R&D)(314)		-	11.9
	▪ 국제표준기반 지상파-위성 통합 VDES체계 기술개발(R&D)(313)		13.0	13.0
해양수산산업진흥				
	① 해양수산산업진흥(R&D)(2046)	일반회계	-	20.0
	▪ (다부처) 암호화 사이버 위협 대응기술 연구개발 및 실증(R&D)		-	20.0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0	'21	'22	'23			
① 디지털 해상교통정보 제공 및 저변확대(%) (가중치 50%)	신규	신규	신규	100%	ⓐ 신규 바다내비 이용자(척)수 3,000척 이상을 목표치로 산출(50%)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시범사업 추진율을 목표치로 산출(50%)	ⓐ '23년 단말기 보급 및 바다내비 앱 신규가입자 ⓑ 바다내비 신규 서비스 2건이상 개발	ⓐ 단말기 보급 현황 및 앱 가입자 현황 ⓑ 시범 서비스 추진 자료
② 디지털 해상교통정보신산업 육성 추진율(%) (가중치 50%)	신규	신규	신규	100%	ⓐ 해상교통정보 산업육성 지원책 마련을 목표치로 산출 (민·관 협의체 구성, 산업육성 추진 계획 수립, 60%) ⓑ 국제 디지털항로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을 목표치로 산출(차세대 선박항해장비, 통합 플랫폼, 테스트베드 구축 설계서 각 1건, 40%)	ⓐ 산업육성을 위한 해상교통정보산업 민관협의체 구성 및 산업육성 추진 계획 수립 ⓑ 차세대 선박항해장비, 통합 플랫폼, 테스트베드 구축 설계서 각 1건	ⓐ 협의체 구성 결과 및 계획 수립 자료 ⓑ 설계서 결과물

2 차세대 해양 위치정보(PNT) 및 디지털 안전정보 서비스 제공(Ⅰ-3-②)

항로표지과 (044-200-5871 / 5873)

□ 추진배경 (목적)

○ 주요 국가들은 PNT(위치·항법·시각) 인프라를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반시설**로 인식하고 **국가별 독자성 확보**를 위해 경쟁 중

- 차세대 **PNT** 정보제공을 통한 자율운항선박·스마트항만 조기 도입 및 위성항법시스템 전파교란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구축** 필요

○ 미래 해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항로표지 시설 정보의 디지털화·표준화된 자료 수집·제공 등 스마트 항로표지 기술개발 추진

- 항법장비를 갖추지 못한 소형선박의 사고 절감을 위한 해로드 앱 이용 활성화 및 스마트 항로표지 디지털 정보 연계 추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선박의 **안전항해 지원**과 **해양 4차 산업시장 선점**을 위해 차세대 PNT(위치·항법·시각) 및 항로표지 분야 디지털 전환 인프라 조성과 선도적인 기술개발 추진

○ **차세대 위성항법보강시스템 구축 추진**

- (**지상기반**) GPS 오차를 5cm 이하로 줄일 수 있는 **센티미터급 보강서비스**를 **개발·구축**('20~'24), **지상통신망**을 통해 **우선 활용***

* 자율운항선박/자동접안, 스마트항만 운영, 도선지원, 수로측량, 준설, 항만 및 해양 플랜트 건설, 해저케이블 부설, 해양드론 등

- (**위성기반**) 확보된 지상기반 인프라를 기반으로 **KPS*** 항법위성 서비스 기술을 **개발·구축****, 국가 **주요기반시설**에 활용(자율주행차 등)

*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22~'35, 다부처 사업/3조72백억원/우리부 69백억원)

** 우리부 전담분야: KPS 센티미터급 보강기술 개발('22~'32, 285억원)

○ **GPS 전파교란 대비 지상파항법시스템(eLoran) 상용화 추진**

- (**시범운영**) 지상파항법 정식 서비스('24.下~)를 위해 해역별 **오차보정지도** 및 **이용 범위도**를 **제작**하고 누리집을 통해 배포

- (**인프라 구축**) 서해안 전역에 안정적인 지상파항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로란-C 송신국을 eLoran **송신국으로 개량**(광주)

- (**활용확대**) 성능시연회 등을 통해 이동체 항법(관공선, 군함 등) 및 국가기반시설 시각동기(방송망, 전력망 등)에 활용되도록 협력강화

○ **스마트 항로표지** 기술개발을 위한 다목적 해양플랫폼 등 ① **시설고도화** 및 AI 기술을 도입한 新서비스 ②**연계기술 개발** 추진

- (**시설고도화**) 장비의 고장진단 알고리즘, 해양정보 수집·제공을 위한 다목적 중·대형부표 개발, 다중통신(AIS, **NB-IoT*** 등) 기술개발

* (협대역 사물인터넷) 항로표지 전용 주파수(NB-IoT) 확보('22.12. 여수·군산·창원)
** 연구개발 성능시험을 위한 테스트베드(KRISO) 구축('23.5.)

- (**연계기술**) 독립·분산된 항로표지 **정보의 연계**, 표준·디지털화된 **통합형 시스템**으로 정비 및 수집정보를 활용한 **新서비스 개발**

* 고장예측 등 관리, 해양 생태 등 해양환경, 가상항로표지 등 항해 지원

○ 나홀로 조업, 해양레저 이용객 등 안전 취약층의 해양사고 예방·대응 강화를 위한 **해로드 앱 기능개선*** 및 **홍보 추진**

- (**기능강화**) 편의·안전기능이 강화된 **신규 버전 해로드(6.0) 앱*** **출시** 및 **긴급구조 기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구조당국(해경·소방) 간 모의훈련** 추진

* 해상교각 접근 알람, 생활해양예보지수 연계, 해도 글자 크기 조절 기능 등

- (**기능개선**) 안전한 레저활동을 위해 수상레저 **허가·금지구역*** 정보(알람 등) 및 **고객센터 개설**, 개인 관심지점 **백업·전송 기능** 등

* 해양레저활동 허가구역,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해양경찰청 협업)

※ '항로표지를 통한 해양안전 강화 및 등대해양문화 관광 활성화('22년 2-3-4과제)'는 디지털 해양정보망 구축 정책의 일관성 제고와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위해 '차세대 해양 위치정보(PNT) 서비스 제공(1-3-2과제)' 관리과제와 통합·조정하여 추진

< '2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지상파항법시스템 UAM 적용을 위한 기술세미나 개최	'23.1월	국정 40-4
	해로드 앱 6.0버전 출시	'23.2월	
	GPS 전파교란 감시기능 강화 추진계획 보고	'23.3월	국정 40-4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관련 법제정 대응 보고	'23.3월	국정 40-4
2/4분기	해로드를 활용한 긴급구조 모의 훈련(해경청)	'23.4월	
	지상파항법시스템 고도화 기술개발 예산 확보 추진	'23.5월	국정 40-4
	스마트항로표지 성능시험 테스트베드(KRISO) 구축 및 연구내용(2과제) 통합시험	'23.5월	
	위성항법기준국 데이터 공동활용 업무협의(국토부)	'23.6월	국정 40-4
3/4분기	해양 PNT 고도화 기술개발 관계기관 업무협의	'23.8월	국정 40-4
	해로드를 활용한 긴급구조 모의 훈련(소방청)	'23.8월	
	eLoran 광주 송신국 개량 완료	'23.9월	국정 40-4
	지상파항법시스템(R-Mode) 개발성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공인 검증	'23.9월	국정 40-4
4/4분기	국제기구(UN ICG, IALA, FERNS 등) 회의 대응 및 의제 제출	'23.11월	국정 40-4
	스마트항로표지 연구개발 연동(1,2과제 통합) 시험 및 결과 공유, 보완사항 논의 워크숍	'23.11월	
	eLoran 오차보정지도 및 실해역 이용범위도 제공	'23.12월	국정 40-4
	KPS 센티미터급 서비스 임무제어국 선정	'23.12월	국정 40-4

○ **('22년도 부진과제 개선계획)** '해로드 앱'의 이용자 만족도 조사·분석을 통해 기능을 개선하고, 긴급 인명구조 모의훈련을 주기적으로(연2회) 실시하여 앱에 대한 국민 체감도 향상 추진

※ '항로표지를 통한 해양안전 강화 및 등대해양문화 관광 활성화('22년 2-3-4과제)'는 디지털 해양정보망 구축 정책의 일관성 제고와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위해 '차세대 해양 위치정보(PNT) 서비스 제공(1-3-2과제)' 관리과제와 통합·조정하여 추진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정책·사업의 수혜자**) 선박·차량 등의 **이동체 항법정보 이용자**, 시각동기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간 산업체**(에너지, 금융, 통신 등) 등

○ (**이해관계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산업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수협, 어촌계 등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22	'23
해양안전기술개발(Ⅲ-2-R&D⑧)			
① 해양안전기술개발(4163)	교특회계	265.31	475.77
▪ 해양 PNT 고도화 기술개발(305)		57.98	32.89
▪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309)		134.83	368.38
▪ 스마트 항로표지 및 연계기술 개발(308)		72.5	74.5
항로표지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Ⅱ-5-일반재정②)			
① 항로표지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6350)	교특회계	64.14	59.06
▪ 표지시설-측위원(304)		64.14	59.06

□ 기대효과

○ 안전한 **해양교통**과 **4차산업 혁명**에 **필수적인 PNT 제공시스템**을 **고도화**하여 **항행안전**을 **지원**하고 국가의 **스마트화 확산**을 **지원**

- 전파교란·간섭 등 **위성항법 중단 시**에도 **지상파항법**을 **사용**하여 **PNT 정보**를 **끊김 없이 제공**, 국가의 **공공안전 기능**을 **강화**

○ 항로표지 관리 효율화, 국민들의 해양활동 **편의성 향상**과 **안전성 확보**, 해양분야 **신산업 창출** 및 **국제표준 선점**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0	′21	′22	′23			
① 고품질 해상활동 지원 인프라 구축율(%) (가중치 70%)	100	100	100	100	전국에서 균일한 센티미터 수준의 위치정보 확보 달성율(60%)	ⓐ해양 PNT 위치 정확도(≤10cm) 전국망 실증 [(목표 정확도/실증값) ×100]×50%	완료보고서
					eLoran 송신국 개량 사업(40%)	ⓑeLoran 광주송신국 개량 완료	완료보고서
② 스마트 항로표지 기반시설 구축율 및 해로드 앱 활성화(%) (가중치 30%)	신규	신규	신규	100	다목적 해양 플랫폼 개발사항 성능시험 테스트베드 구축 (70%)	ⓐ연구개발 성능시험 테스트베드 구축(공정률 100%)	완료보고서
					해로드 앱 긴구구조신고 기능의 구조기관간 실증훈련(2회) 달성율 (30%)	ⓑ[구조기관간 실증훈련 횟수 / 실증훈련 목표 횟수]×100	훈련 결과보고서

3 '그린 쉬핑(Green Shipping) 생태계 기반 확충(Ⅰ-3-③)

해사산업기술과 (044-200-5838 / 5839 / 5843)

□ 추진배경 (목적)

○ 국제해사기구(IMO)의 온실가스 감축전략* 수립 등 친환경선박으로 패러다임 전환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상용화·보급 지원 필요

* 국제해운의 선박배출 온실가스를 2050년까지 2008년 대비 50% 감축

○ 또한,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20.10)과 「탄소중립기본법」 제정('21.9) 등에 따라 해운부문 온실가스 감축전략의 적극이행 요구

* 국내해운 배출 온실가스를 2050년까지 2018년 대비 70% 감축(101→71만톤)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국제규제에 따른 친환경 **기술개발**이 **상용화** 및 **보급·확산**으로 이어져 해운부문 **탄소중립** 실현이 가능한 **그린 쉬핑 생태계** 구현

* IMO 국제환경규제 → 신기술 확보 → 기준마련 → 해상실증(Track Record) → 상용화 → 규제 이행수단으로 국제 표준화 → 新시장 창출 → 시장선점

○ **친환경 新기술**이 **개발 및 상용화**되고, 실제 **공공·민간부문**으로 **보급 확산**되어 **시장창출**까지 연계되는 전주기 **지원** 추진

- (**기술개발**) **저탄소선박 기술**(LNG 등) **고도화** 및 **무탄소선박 기술**(수소·암모니아 등)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R&D) 추진

*「친환경선박 전주기 혁신기술개발('22~'31, 2,540억원, 해수부·산업부 공동)」 등

- (**상용화**) 국내 친환경선박 **유망기술**에 대한 국내**기준** 마련 및 **국제표준화** 지원, **국가 인증제도 운영*** 등 상용화 지원

* 기술 난이도·국산화율 등을 고려한 등급 부여 후, 자금 우선지원 등 혜택 부여

- (**공공전환**) 친환경선박 시장 활성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친환경 선박 대체·신규 건조** 및 운항 중 선박의 **친환경 개조** 추진

- (**기술지원**) 각 기관별 선박 건조·운영으로 인한 **비효율 해결***을 위해 **표준선형 설계** 및 **기술지원 플랫폼 운영**** 등 추진

* 표준설계 부재로 개별 설계, 개별 건조계약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확보 어려움 등
** 선박 운항특성에 최적화된 설계 자동제공, 선박별 주요장비 정보 수집·공유 등

- (**민간보급**) 영세한 내항선사의 **자발적인 친환경선박 도입**을 유인하기 위해 친환경선박 건조 시 **보조금 지원**

*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 '21 ~ / 내항 여객·화물선 등 / 선가 최대 30%

ㅇ 녹색해운항로(Green Shipping Corridor)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과 국적선의 온실가스 감축규제 이행을 **위한 보조금·기술 지원 추진**

- (**국제협력**) 한-미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 수행 및 **대외 결과 발표**(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23.11)

* 녹색해운항로 구축 선언('22.11) → 한·미 타당성 조사 수행(~'23.10) → 결과 발표('23.11)

- (**보조금·기술 지원**) 선박에너지효율규제(EEXI·CII, '23.1~) 이행 지원을 위한 **보조금** 및 **컨설팅 지원** 사업 추진

* 엔진출력제한장치 설치 보조금(10%) 지원('15.4억) / 온실가스 감축규제 이행 지원(9.1억)

< '2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친환경인증선박 민간보조금 지원 1차 사업공고	'23.1월	
	엔진출력제한장치 설치 지원 사업 1차 공고	'23.2월	
	'국제해운 탈탄소화 추진전략' 수립	'23.2월	
	한-미 녹색해운항로 구축 사전 타당성 조사 착수	'23.2월	
2/4분기	공공부문 친환경선박 개조사업 착수	'23.5월	
	친환경선박 상용화 지원 용역 착수	'23.5월	
3/4분기	'23년 친환경선박 보급 시행계획 중간점검	'23.8월	
	엔진출력제한장치 설치 지원 사업 2차 공고	'23.9월	
4/4분기	한-미 녹색해운항로 구축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	'23.11월	
	'24년 친환경선박 보급 시행계획 수립	'23.12월	
	공공·민간선박 총 37척 친환경 전환 착수	'23.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정책·사업의 수혜자**) 해운, 조선 및 기자재 업체, 항만 인근 주민, 선원, 환경 시험기관 등

○ (**이해관계자**) 해운, 조선, 기자재업체 및 선박검사기관 등

□ **기대효과**

○ 선박기인 온실가스·대기오염물질 감축을 통한 **국민 삶의 질 개선** 및 **2050 탄소중립 달성·기후변화 대응에 기여**

○ 친환경선박 기술개발 및 보급 촉진으로 **국제표준 선점**을 통한 조선·기자재 등 연관 **산업 활성화**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22	'23
해양수산산업진흥(Ⅰ-2-R&D⑩)			
① 해양수산산업진흥(R&D)(2046)		91.85 (641.72)	136.43 (646.44)
▪ 친환경선박 전주기 혁신기술개발(R&D)(314)		68.33	112.91
▪ 안전기반 소형 수소추진선박 기술개발 및 실증(R&D)(318)		23.52	23.52
해양안전관리시스템 구축・운영(Ⅱ-5-일반재정①)			
① 해양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운영(6332)	일반회계	85.46 (241.53)	185.1 (356.66)
▪ 친환경선박 보급촉진(315)		79.3	172.8
▪ 선박배출 오염예방(303)		6.16	12.3
해양안전기술개발(Ⅲ-3-R&D⑥)			
① 해양안전기술개발(R&D)(4151)	일반회계	81.27 (81.27)	66.08 (66.08)
해양안전기술개발(Ⅲ-3-R&D⑧)			
① 해양안전기술개발(R&D)(4163)	교특회계	51.1 (446.51)	51.1 (708.86)
▪ 수소선박 안전기준개발(R&D)(303)		51.1	51.1
해운물류지원(Ⅲ-4-재정(3))			
① 해운물류지원(6133)	일반회계	60 (1,137.04)	43.6 (732.67)
▪ 관공선 건조 및 운영(300)		60 (303.82)	43.6 (330.1)
- 친환경관공선 도입		60	43.6
유망기업인력육성(Ⅱ-5-재정(3))			
① 유망기업인력육성(6231)	기후대응기금	26 (26)	24 (24)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0	'21	'22	'23			
① 친환경선박 전환 및 신기술 상용화 기반 마련율(%) (가중치 50%)	100	100	100	100	친환경선박 보급확대를 위한 공공·민간부문의 친환경선박 전환 척수와 국내 신기술의 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해상실증용 선박 운영을 목표로 설정	공공·민간선박 친환경 전환 척수(37척)(50%), 해상실증용 선박(Test - bed)운영(1척)(50%)	방침문서, 관련 공문 등
② 국제협력 및 온실가스 감축규제 대응 추진율(%) (가중치 50%)	100	100	100	100	한·미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 수행과 IMO 에너지효율규제 대응을 위한 국적선사 컨설팅·보조금 지원 척수를 목표로 설정	한·미 녹색해운항로 구축 사전타당성 조사 수행 및 결과 발표(1회)(50%), 규제이행 컨설팅 및 보조금 지원 척수(100척)(50%)	방침문서, 관련 공문 등

성과목표 Ⅰ-4 해운강국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해상물류인력을 양성한다.

(1) 주요 내용

□ **청년 유입을 위해 국적선원으로 대체 및 일-삶 양립 지원**

○ (**대체 고용**) 외국인 대신 **국적 해기사**를 고용한 외항 선사에 **임금차액**을 지급하여 **신규 일자리 창출**

○ (**비전공자 취업**) **오션폴리텍** 운영 및 **일자리 박람회** 등을 통해 해운 **비전공 청년, 군 전역자** 등의 취업 지원

○ (**선원 교대주기 단축**) 현재 8개월 승선 후 휴가를 받는 **상선 선원**의 교대주기를 단계적으로 단축

□ **선원복지 제공을 위한 기반 구축**

○ 선원의 생애 전주기 관리를 위해 해양수산연수원 등 **선원 관련 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교육·취업·보건안전 등 지원 확대

○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권익침해 방지**를 위한 **근로감독관 충원**(13명) 및 전문화, **선원인권 보호** 교육프로그램 개발

○ **원양 선원**의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승선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해양 원격의료 지원** 확대

□ **스마트항만 일자리 안정화 및 자율운항선박 전문인력 양성**

○ (**기존 인력**) **원격조종·자동화 하역장비 등 직무교육 지원**으로 스마트항만으로의 원활한 전환배치 유도

○ (**신규 인력**)시스템 운용인력 및 육상 제어사 등 **자율운항선박 신**(新)**직업군**에 대한 **면허 및 근로기준** 마련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0	'21	'22	'23			
① 국적 해기사 양성 및 취업 연계(명)	265	257	527	370	과정지표인 해기사 양성 인원과 더불어, 결과지표인 실제 취업 인원을 포함하여 적극적인 성과 지표를 구성하였으며, 선원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실적 목표치를 최근 3년 실적 대비 5% 상향한 도전적인 목표 설정	대체고용 지원실적+ 미취업·비전공자 대상 교육양성 인원	내부 자료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선원 근로여건 개선 등에 대한 노사 이견 조율 필요**

○ **근로여건 개선** 등은 **선사의 비용부담**을 수반할 가능성이 높아 **노사 간 갈등** 발생 우려

○ 육상근로자 및 해외 사례, 국제협약 등을 감안하여 선원, 선사 등 **이해관계자 및 관계기간 간 충분한 사전협의** 진행

(4) 기타

□ (**취업현황**) 선원 임금의 상대적 하락,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국적선원**은 **감소추세이며, 50세 이상 선원**이 **전체 선원 약 67%**로 **선원인력**이 **심각**하게 **고령화**(**부원**의 경우 **50세 이상**이 전체 선원의 **약 75%**)

《 취업선원의 연령별 현황('21년말 기준) 》

(단위 : 명)

연령	합계	25세 미만	25세~29세	30세~39세	40세~49세	50세~59세	60세 이상
전체 선원	32,510	995	2,636	3,294	4,901	8,757	11,927
- 해기사	20,164	940	2,309	2,340	2,435	4,381	7,759
- 부원	12,346	55	327	954	2,466	4,376	4,168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1 양질의 국적선원 일자리 창출(Ⅰ-4-①)

선원정책과 (044-200-5741 / 5747)

□ 추진배경 (목적)

○ **선원**은 **경제안보 측면**에서 **필수인력**이자, 향후 다양한 해운 관련 산업에 종사하며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국가 핵심 인재 Pool**이나,

- 산업 현장에서 **국적 선원**이 **급격히 감소 중***인 반면, **외국인 선원 비중**은 지속 **증가 중****

* (국적선원 수) '07~'13년까지 증감을 반복하며 약 38,000명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14년부터 급격히 감소**하여 '21년 32,510명까지 도달

** (외국인선원 수) ('07) 9,916명 → ('14) 22,696명 → (21) 27,333명으로 현재 전체 선원 중 외국인선원 비중은 약 46% 수준

○ 높은 청년 해기사 이직률(5년 내 약 80%), 고령화 심화 등으로 인해 **선원 수급 불균형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대두될 전망으로,

- 해양수산업 경쟁력 확보 및 경제 안보를 위해 **국적 선원의 안정적 수급체계 구축** 및 **역량 강화**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선원인력 양성**) 구인을 희망하는 참여기업과 구직희망자를 연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국적 해기사·부원**의 **안정적 수급체계 구축**

- (**해기사**) **단기 집중교육**을 통해 해기사를 양성하고 **현장취업 연계**를 통한 해운산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

* 3급 외항 140명, 5급 내항 60명, 어선 5급 40명, 6급 20명

** 미취업 청년 해기사를 대상으로 선사에서 요구하는 수요 맞춤형 특화교육(공통 직무·현장실무)을 지원하여 취업 연계 지원

- (부원) **신규 구직희망자에게 맞춤형 교육** 및 **취업 연계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LNG, 컨테이너선 등 특수선박) 취업 기회 제공

○ (**승선실습 개선**) 승선실습 **확대** 및 **실습생 안전관리 체계화**를 통해 **해기역량 제고** 및 **안정적인 해기사 공급** 추진

- (**친환경 실습선 대체 건조**)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을 위해 노후 실습선(한우리호, 선령 31)* 대체 건조사업 추진

* 관공선 상태평가 결과('21.3) 즉시 대체 건조 필요, 국회 결산심사 지적('21)
** 예비타당성조사 신청('22.2월), 사업기간 4년, 총사업비 1,200억원

- (**교육기관 실습생 관리강화**) **선사 승선실습생**의 안전 확보와 체계적인 교육을 위한 선박직원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23下)

*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 개정 추진(~'23.下)

○ (**안정적 해기인력 공급**) **해기사 시험** 및 해기**교육 수요 충족**을 통해 **선원**의 **직업고용 안정**성 제고

- (**해기사 시험**) 철저한 방역수칙 이행을 통해 '23년도에 **정기** 시험(4회) 및 **상시**시험(30회) 등 실시로 **해기사 수요*** **해소**(연중)

* 연간 3만여명의 해기사 시험 수요에 차질 없도록 대응

- (**교육수요 충족**) 해양수산연수원 **목포분원 운영 등**('21.2~)을 통해 안전교육 수요 폭증에 대응하고, 서남해권 교육수요 편의 제공

○ (**해외취업 지원**) 국적 해기인력의 글로벌 역량 강화 및 해외취업 지원, IMO 해사영어 교재 보급 등

- 청년 해기사에 대한 **해외취업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36명)

- IMO 표준 **해사영어 자가학습용 교재 출간**('23.6) **및 동영상강좌 플랫폼 구축 및 업로드**('23.12)

* ('23.6) IMO 표준 해사영어교재(12권) 출간, ('23.12) 동영상 강좌(120강좌) 플랫폼 구축 및 업로드

< '2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국적부원 양성사업 사업설명회 실시	'23.1월	국정 40-5
	국적부원 양성사업 참여선사 채용수요조사 및 MOU 체결	'23.2월	국정 40-5
	오션폴리텍 어선 5급·6급 해기사 양성과정 교육 개시	'23.2월	국정 40-5
	제1회 정기 해기사시험 시행	'23.3월	국정 40-5
2/4분기	해운 비전공자 대상 국적부원 지원 사업 추진	'23.4월	국정 40-5
	해운 비전공자 대상 해기사 양성 교육 실시	'23.5월	국정 40-5
	해외취업 프로젝트 교육생 선발	'23.6월	국정 40-5
	IMO 표준 해사영어교재(12권) 출간	'23.6월	국정 40-5
3/4분기	해외취업 프로젝트 교육 개시	'23.7월	국정 40-5
	제3회 정기 해기사시험 시행	'23.9월	국정 40-5
	현장취업 연계를 통해 해운산업 지원 채용박람회	'23.9월	국정 40-5
4/4분기	청년해기인력 해기역량 교육훈련 과정 완료	'23.10월	국정 40-5
	제4회 정기 해기사시험 시행	'23.11월	국정 40-5
	부산·인천 해사고등학교 교육훈련 관련 관학 협의회	'23.11월	국정 40-5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정책·사업의 수혜자**) 해양대, 해사고, 오션 폴리텍 등 선원이 되고자 하는 **학생·일반국민**, 해기사, **해운산업계** 관련 업·단체 등

○ (**이해관계자**) 해운업·단체,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선주협회,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국적선사 등

□ 기대효과

○ 양질의 해기사를 적기에 공급하여 해운업계의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양성된 인력의 취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실습선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실습교육을 내실화하여 실무능력을 갖춘 우수한 해양 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으로 해양산업발전 도모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2	'23
해운인력양성 지원(Ⅲ-4-일반재정②)			
① 해운인력양성 지원(6132)	일반회계	539.6	486.1
▪ 해사고등학교 지원(300)		128.3	61.1
▪ 해양수산연수원 지원(302)		411.3	425.0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0	'21	'22	'23			
① 해기인력 양성 및 취업목표 달성률(%) (가중치 : 40%)	100	100	100	100	국적선대 감소 및 해운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취업 지원 통해 매년 기관별 목표취업률을 전부 달성 토록하는 도전적인 목표로 설정함	- ① 해사고 목표 취업률(80%) 대비 달성율(50%) ② 오션폴리텍 목표 취업률(80%) 대비 달성율(50%)	사업추진 실적 내부자료 등
② 해기사 글로벌 역량 강화 및 승선실습 제도개선 추진율(%) (가중치 : 60%)	100	100	100	100	국적해기사의 안정적인 공급 및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해사영어 교육 플랫폼의 안정적인 구축 및 미래 해기사의 승선실습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도전적인 목표로 설정함	- ① IMO 표준해사영어 온라인 강의 플랫폼 구축 및 업로드(50%) ② 선사 승선실습생의 안전 확보와 체계적인 교육 제공(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 개정(50%)	사업추진 실적 내부자료 등

2 두터운 선원복지 제공(Ⅰ-4-②)

선원정책과 (044-200-5745 / 5743 / 5747)

□ 추진배경 (목적)

○ 육상 근로여건은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반면, 선원 근로여건은 정체 중으로, **선원직 매력 저하**에 따라 **기피 현상 심화**

- **취업 후 5년 내 이직**을 선택하는 청년해기사가 **약 80%**에 이름에 따라 **급속한 고령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 60세 이상 선원 비중은 약 37%로 사회 일반 고령화율(약 26%)보다 높은 수준, 업종별로는 근해어선(54%) → 내항상선(53%) → 원양어선(29%) → 외항상선(19%) 순

○ 선원의 양성부터 취업·안전·복지까지 **원스톱 관리·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선원직 매력 증진 → 안정적 선원수급에 기여할 필요

○ 아울러, **외국인 선원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시행 필요

* (외국인선원 수) ('07) 9,916명 → ('14) 22,696명 → (21) 27,333명으로 현재 전체 선원 중 외국인선원 비중은 약 46% 수준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선원생애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 선원 양성·교육에서부터 취업, 복지·안전, 재해관리까지 원스톱 관리·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로드맵 구상**을 위해 **노·사·정 협의 추진**

* **교대주기 단축** 및 **선원채움 공제 도입** 등 전주기 복지정책에 대한 노·사·정 협의

○ (**선원정책 수립**) 선원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체계적인 **선원복지, 양성, 교육훈련**의 **시행**을 위한 '23년 **선원정책 시행계획 수립**

* 3대 전략: 안정적 선원 수급체계 구축, 선원 근로여건 개선·복지 확대, 해기인력 역량 강화

○ (**근로여건 개선**) 선원직 매력도 제고를 위한 근로제도 개선 및 외국인 어선원의 근로환경 개선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 추진

- 선원의 급여수준을 육상직 급여수준 대비 **해상근로의 어려움 등을 반영**하여 노·사 협의를 통한 **'24년 선원최저임금 고시**('23.12)

- 임신한 여성선원의 모자보건 권리 확대를 위해 태아 검진시간 도입, 선원의 재해보상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압류방지 통장 도입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선원법**」 **개정** 추진

- **노·사·정 합동**으로 외국인 어선원의 근로실태 확인 및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외국인 어선원 근로실태 점검**(2회) 실시

- **원양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개선방안**('20.12.)의 정착과 이행여부 확인을 위해 **노·사·정 합동 이행점검**을 계속 실시(분기 1회)

- 선원의 선내 노동인권 보장을 위해 선주·노조단체, 정부, 학교 등 유관기관 간 **선원인권침해 예방 네트워크 운영**(연 3회)

- **선원근로감독관**의 **전문적인 근로감독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지방청 선원근로감독관에 대한 **직무교육**(2회) 시행

○ (**체감형 복지**) 선원 직업을 매력화하고, 안정적인 선원인력 공급 지원을 위해 **수혜자인 선원 중심**의 **보편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선원 복지증진 사업** 지속 추진

- 무료법률구조, 교통 편의시설 운영, 장해선원 재활지원, 선원 가족 장학지원 등 **체감할 수 있는 선원복지 사업**의 **지속 추진**

* (무료법률구조) 선원들에게 법률상담, 노무상담 지원 및 무료 법무업무 지원

** (교통 편의시설) 전국 10개 항만의 항만구역 내 셔틀버스 운영하여 선원들의 이동편의 제공

- 해상근로에 종사하는 선원들에게 **자기개발 기회 부여, 여가시간 활용** 등 **문화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선원전자도서관** 운영

* 국적 선원들에게 전자 단말기(스마트폰, PC 등)를 통한 전자책 대여

- 충남지역 선원의 근로복지 향상을 위한 충남지역사무소 신규 운영 개시('22.5~)

* 선원복지회관: ('22) 3개소(포항, 제주, 목포) → ('23) 4개소(충남 신규 운영)

○ (**의료 복지**) 사회와 단절되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선원들에게 **주기적·체계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복지 수준** 향상

- **원양선박 승선 선원**에게 **원격진료 서비스**(육상 의료인↔선상 선원) 제공을 위한 해양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 확대**(140척→160척) 추진

* 원양선박에 위성통신 등 ICT 기술을 활용, 원격의료장비를 설치하여 ①건강상담 서비스, ②의료지도 및 응급처치 지도 서비스 등 원격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

- 고립된 근로환경에서 **가족·사회와 단절된 선원**들의 정신적·심리적 안정을 위한 **선원마음건강센터*** **운영**

* 정신건강 전문요원의 원격 상담(상담톡, 메일 등), 검진 및 힐링프로그램 제공

< '2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명절 대비 특별 선원 근로 감독 실시	'23.1월	국정 40-5
	원양 외국인선원 근로조건 개선 이행방안 4차 노사정 합동 이행 점검	'23.1월	국정 40-5
	해양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 설명회 개최	'23.2월	국정 40-5
	선원채움공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23.3월	국정 40-5
2/4분기	원양 외국인선원 근로조건 개선 이행방안 1차 노사정 합동 이행 점검	'23.4월	국정 40-5
	선내 인권침해 예방 네트워크 1차 회의	'23.4월	국정 40-5
	상반기 외국인 어선원 근로실태조사	'23.5월	국정 40-5
	선원근로감독관 직무 교육	'23.5월	국정 40-5
3/4분기	원양 외국인선원 근로조건 개선 이행방안 2차 노사정 합동 이행 점검	'23.7월	국정 40-5
	명절 대비 특별 선원근로감독	'23.8월	국정 40-5
	선원 교대주기 단축을 위한 노사정 협의	'23.9월	국정 40-5
	선내 인권침해 예방 네트워크 2차 회의	'23.9월	국정 40-5
4/4분기	하반기 외국인 어선원 근로실태조사	'23.10월	국정 40-5
	원양 외국인선원 근로조건 개선 이행방안 3차 노사정 합동 이행 점검	'23.10월	국정 40-5
	선내 인권침해 예방 네트워크 3차 회의	'23.11월	국정 40-5
	선원지원기관의 통합 및 역할 강화방안 마련	'23.12월	국정 40-5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정책·사업의 수혜자**) 내·외국인 선원 및 선원 가족

○ (**이해관계자**) 선주, 선주단체,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선박관리 등록업체 및 선원노동조합 등

□ **기대효과**

○ 선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젊은 **신규 인력의 유입을 촉진**하고 **장기 승선을 유도**

○ **선원복지 증진**을 통한 **선원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선원 수급 안정화**로 **해운수산산업의 지속적 성장기반 마련**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2	'23
선원근로 복지 향상 (Ⅲ-4-일반재정①)			
① 선원근로 복지 향상(6131)	일반회계	82.1	80.4
▪ 선원복지고용센터 운영(301)		66	65.5
▪ 선원정책 및 선원인력 역량강화(305)		11.5	13.1
▪ 해기사 글로벌 역량강화 사업(310)		4.6	1.8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0	'21	'22	'23			
① 선원근로여건 개선 추진율(%) (가중치 : 40%)	100	100	100	100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해소를 위해 체불임금이 있는 선사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명절 전 시행하고 외국인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개선계획('20.6)에 따라 노사정 합동 근해 외국인선원 근로실태 조사(반기), 원양 외국인선원 근로개선 이행점검(매분기)을 실시하는 도전적인 성과지표를 설정함	① 임금체불 예방 특별근로감독(40%, 2회) ② 외국인 선원 근로실태조사 및 이행 점검(60%, 6회)	사업추진 실적 내부자료
② 선원복지 증진사업 추진율(%) (가중치 : 60%)	100	100	100	100	보편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선원복지 증진을 위해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충남 지역사무소 운영,, 원양선박 선원대상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 완료 여부 등을 성과지표의 목표치로 설정	① 해양원격의료 지원 시범사업 대상선박 확대 달성율(50%, 160척) ② 선원복지고용센터 충남지역사무소 운영 개시(50%)	사업추진 실적 내부자료

전략목표 Ⅱ.

안전하고 국민 친화적인 해양·항만을 조성한다.

1. 연안·항만 재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한다.
2. 재해·기후위기에 안전한 연안·항만을 조성한다.
3. 해상사고 사전 예방을 통해 국민안전을 확보한다.

전략목표 Ⅱ 안전하고 국민 친화적인 해양·항만을 조성한다.

기 본 방 향

◇ 배경·필요성(중요성)

○ 노후·유휴항만 재개발 및 어항 개발 추진을 통해 지역주민이 살고 싶고, 국민들이 방문·체험할 수 있는 인프라를 조성하여 연안경제 활력 제고

○ 연안침식 등 재해에 취약한 연안공간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해 재해에 선제적 대응으로 전환하고, 해양사고 대처능력 향상 등 국민의 안전한 해양 이용을 도모

◇ 그간의 성과

○ 기후변화, 자연재해로부터 연안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5년간 총 90개소 연안에 대한 정비사업 실시

○ 안전관리 강화로 최근 5년 인명피해('17~'21, 591명)는 종전대비('12~'16, 908명) 34.9%(317명) 감소

○ 해양안전체험관(경기 안산) 운영 활성화, 해양레저안전체험관(부산 용호동), 국민해양안전관(전남 진도) 건립 지원(~'26), 어선 안전 강화를 위해 표준어선형 개발('21) 등 해양안전문화 확산 기반 조성

◇ 주요 내용

○ 연안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어항 개발 및 항만 재개발로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 활력을 도모하고, 부산 북항 재개발사업의 적기 시행으로,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지원

○ 연안침식에 대응하여 연안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재해안전항만 구축 등을 통해 기후변화·자연재해로부터 연안 안전망을 확보

○ 해양사고 발생 저감을 위해 중대 사고 및 취약선박 집중 안전관리, 민간 주도의 자율적 안전관리 역량 강화

◇ 임무와의 상관관계

○ 국정과제 40번(세계를 선도하는 해상교통물류체계 구축), 41번(해양영토 수호 및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 102번(2030 세계박람회 유치 및 차질 없는 개최 추진) 등 이행을 위해 성과관리 체계와 연계 추진 필요

<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관리과제 · 성과지표 체계 >

(단위 : 개)

전략목표	전략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1	1	3	3	6	9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전략목표 Ⅱ. 안전하고 국민 친화적인 해양·항만을 조성한다.		①해양사고 인명 피해(사망·실종, 명)
1. 연안·항만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한다.		①신규 재개발사업 추진(건)
	①항만 및 연안공간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기반 조성	①항만재개발 추진율(%) ②연안침식관리강화 추진율(%)
	②부산항 북항 글로벌 경쟁력 강화	①북항재개발 추진율(%)
2. 재해·기후위기에 안전한 연안·항만을 조성한다.		①재해대응 안전항만 구축 추진율(%)
	①기후변화 대비 등을 위한 안전항만 구축 추진	①기후변화 대비 재해안전항만 강화 추진율(%)
3. 해상사고 사전 예방을 통해 국민안전을 확보한다.		①해양사고 발생 건수(건)
	①국가 해양수산 재난관리체계 선진화	①국가 해양수산 재난관리체계 선진화 추진율(%) ②해양수산분야 중대재해 예방활동 이행율(%)
	②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범정부 해사안전대책 시행	①국적선 1천척당 해양사고 피해 지수 저감(점)
	③연근해어선 안전관리 체계화	①어선 위치 확인 안전설비 보급율(%) ②연근해어선 중대사고 사고율(%)

전략목표 II 안전하고 국민 친화적인 해양·항만을 조성한다.

(1) 주요내용

□ 항만 재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 도모

○ **항만재개발** 추진(6개소) 및 **소규모 항만재생 활성화** 기반 마련

* 광양항 3단계, 부산북항 2단계, 인천내항 1·8부두, 목포남항, 구룡포항, 군산항 금란도·장항항

□ 부산항 북항 통합개발 추진 및 2030 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 **BIE 실사**('23.4월)와 **박람회 개최시기**('30.5~10월)에 **맞추어 부지 마련**

- 2단계 북항 재개발 사업의 사업계획 수립 착수, 박람회부지 내 **자성대, 양곡, 관공선 부두 및** 부산진역 **컨테이너 야적장** 등 **이전 추진**

○ 박람회 유치 활동 적극 전개

- **BIE 회원국 고위급 대상 외교** 계기 시 부산 유치 교섭 적극 전개

□ 재해·기후위기에 안전한 연안·항만 조성

○ **「연안관리법」 개정**('24)으로 연안관리 근거, 통합관리방안 등을 마련하고, 고위험 연안에 친환경 완충구역 조성 추진

○ 강화된 안전기준(기존 50년→100년 빈도)을 갖춘 **재해안전항만** 및 재해 대응기술 개발 지원을 위한 **연안·항만 방재연구 인프라 구축**

□ 해양사고 사전 예방을 통해 국민안전 확보

○ **(법제정비)** 해사안전정책 기반 강화를 위해 「해사안전법」을 **분법*** 하고, 해상풍력단지 등 **대규모 해양시설**의 **안전관리 법제화 검토**

* 「해사안전법」을 해사안전정책의 기본원칙을 규정한 「해사안전기본법」과 안전규제를 다루는 「해상교통안전법」으로 분법

○ (**자문단 운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운영으로 어선 등 취약선박 **종사자 안전교육 내실화 방안 마련**·시행

* 조업안전·선박안전·해상안전·인적과실 등 해양수산 안전분야 전문가 8인으로 구성

(2) 성과지표

< 전략목표 성과지표 >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7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8	'19	'20	'21	'22	'27			
해양사고 인명피해 (사망·실종, 명)	102	98	126	120	99	93	5년간('18~'22년) 평균 해양사고 인명피해 발생건수(109명)를 기준으로 매년 3%씩 감축 - 23년도 목표 : 109. x 0.97 = 106명 - 24년도 목표 : 109 x 0.94 = 102명 - 25년도 목표 : 109 x 0.91= 99명 - 26년도 목표 : 109 x 0.88 = 96명 - 27년도 목표 : 109 x 0.85 = 93명	해양안전심판원 통계	해양안전심판원 통계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해양에서의 **대형 인명피해 사고**에 대한 **우려 지속**

○ 국민의 **해양이용 다변화** 및 **증가추이**에 따라, 안전관리 대상을 낚시어선·레저선박 등 **소형선종**과 **일반국민**까지 **확대·강화** 필요

□ 해양자원·에너지 개발 등 연안이용 수요는 증가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등으로 연안침식이 심화되고 연안재해 피해도 증가

*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해수면 상승률은 지난 30년간 평균 2.90㎜/년

** 연안침식 우심률의 비율 증가 : 43.6%('14)→58%('16)→61.2%('19)

*** 자연재해 피해액 중 연안지역 비율(%): ('11)45%→('12)87%→('13)9%→('14)74%→('15)98%

○ 해양 신산업 개발수요 증가에 따른 연안이용 및 보전수요의 합리적 조정, 연안재해에 대비한 **종합적인 대응체계** 마련 필요

□ **안전활동**에 대한 선사의 **자발적 투자 확대**를 통한 **해양사고 저감** 및 안전중심의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 자발적 안전투자 확대를 위해 **여객선사** 및 **위험물운송선사**를 대상*으로 **공시제도 시범운영****, 성과분석 등을 거쳐 단계적 적용 확대

* 정기기업공시 대상 해상여객운송사업자 19개社 및 해상위험화물운송사업자 51개社

** 「해사안전법」 전부개정안(「해사안전기본법」 제정안, 상임위 소위계류)에 도입근거 및 업계의 준비기간 확보를 위해 시행 유예기간(2년) 중 시범사업 추진근거(부칙) 마련

□ **해양안전문화**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교육 뿐만 아니라 **해양안전**에 대한 **폭넓은 체험**과 **이해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

* 안전교육, 레저체험, 직업체험, 해양역사·문화의 이해 등 다양한 경험을 통해 해양안전지식 등을 습득하고, 공유하면서 하나의 문화로 정착시킬 필요

○ 이에, 단순 체험·교육에 그치지 않고, **해양안전문화**를 **현장에 자연스럽게 정착시키기 위해 '해양안전문화 클러스터' 조성** 필요

(4) 기타 : 해당없음

성과목표 Ⅱ-1 연안·항만 재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한다.

(1) 주요 내용

□ 항만재개발을 통한 **지역 문화·경제 거점 조성**

○ 노후·유휴 항만공간을 활용하여 원도심의 활력을 제고하고, 지역특성과 주민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항만재개발 추진**

* 노후·유휴화된 항만도시공간을 지역 경제·산업·문화 거점으로 개조

□ **항만재개발 활성화** 및 **체계적 항만 관리**

○ **(부산) 북항 1단계**는 **박람회 지원시설 단계적 확충***, **2단계**는 **실시협약** 및 **사업계획 수립**을 **착수**('23.下)하고, 2030부산세계박람회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유치지원

* 1단계 사업은 지하차도('24.), 오페라하우스('24.), 마리나 및 공공콘텐츠('24.), 복합환승센터('26.), 박람회 내부교통수단인 트램('27.) 등을 단계적으로 조성

○ **(인천·광양·거제) 영종도** 종합관광레저단지 1-2단계 연내 준공, **인천내항 1·8부두는 사업계획** 수립, **광양항·고현항** 등 사업 추진 가속화

* (광양항) 3단계 항만재개발 착공, 묘도 사업계획 변경 / (고현) 3단계 준공 및 4단계 착수

□ **연안재해로부터 안전한 연안 공간조성**

○ 해양의 직접 작용으로 연안침식 등 재해에 취약한 연안공간의 통합·체계적 관리와 재해예방 추진

- **74개 연안 취약지구***를 **지속 정비**하고, 재해위험이 높은 해안에 재해완충공간을 확보하는 국민안심해안사업** 추진

* 국가 19개소(신규 3개소, 계속 16개소) / 지자체 55개소(신규 17개소, 계속 38개소)

* 실행방안수립 및 동해·서해권(강릉시, 고창군) 시범사업 2개소 착수('23.상)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0	'21	'22	'23			
① 신규 재개발사업 추진(건)	-	1	1	1	항만재개발 신규 사업 확대를 위해 매년 1개소 이상 항만에 대한 사업화방안 마련 또는 공모(제3자 제안 공모 포함)하여 사업시행자 모집 추진 - ('21) 인천항 내항 1·8부두 제3자 제안 공모 - ('22) 구룡포항 사업계획 공모 - ('23) 금란도·장항항 기본구상 마련	항만재개발 사업 직접 공모 또는 제3자 제안 공모 공고문, 기본구상안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등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항만재개발 추진과 관련된 지역사회와의 갈등 발생

○ 계획 수립시 지자체, 항만공사,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반영**하여 갈등 발생을 사전 예방

○ 관계자 간 갈등이 높은 사업은 지역주민, 전문가 등 **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사업 추진 전 **적극 소통 및 공감대 형성**

□ 박람회 개최 지원을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 필요

○ (**절차 간소화**) 부지 적기 제공('27.上)을 위해 38개월 소요되는 재개발 2단계 관련 계획 수립·승인 절차를 20개월로 단축 필요

○ (**해결방안**) 기존 부두(관공선, 곡물, 컨테이너), 부산진역 '컨' 야적장 이전을 위해 총사업비 협의, 타 계획 변경, **관계기관 협의** 등 신속 추진

□ 연안 침식 대응 및 적응력 확보 시급

○ 연안침식 가속화에 따른 우려심각비율 증가('21 43.1%→'22 44.7%) 연안재해 완충공간 감소*로 인한 연안재해 피해** 발생

* 최근 5년간('18~'22) 축구장 면적 390배 백사장 감소
** 최근 7년간('12~'18) 연안재해복구비로 4.2조 투입

(4) 기타 : 해당없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1 항만 및 연안공간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기반 조성(Ⅱ-1-①)

항만연안재생과 (044-200-5983 / 5984 / 5985 / 5987 / 5988)

□ 추진배경 (목적)

○ 노후·유휴화된 항만과 주변 지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정비하여 항만의 성장잠재력과 주변 지역의 도시경쟁력 증진

- 지역 특성과 주민 요구를 반영한 특화개발을 통해 항만 공간이 항만도시의 '경제·산업·문화 거점'이 되는 항만재개발 추진

> <제3차('21~'30)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 ○ 전국 14개 항만 19개 사업지를 대상으로 항만재개발 사업 추진
>
> <국정과제41-5>
> 41. 해양영토 수호 및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
> 5 안전하고 시민 친화적인 연안·항만 조성
> ○ 항만재개발 신규 추진(6개소, ~'27) 및 소규모 항만재생 활성화 기반 마련

○ 국민이 안심하면서 쾌적한 해안공간을 즐길 수 있고 삶의 터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연안침식 예방 및 대응 강화 추진

- 연안침식 관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침식원인 조사 및 주민 참여 확대, 제도정비, 기술개발 등의 침식관리대응 역량 강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항만재개발**) 현재 진행 중인 **재개발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재개발 사업방향, 사업방식 등 **제도개선**으로 **민간투자 활성화**

- (**인천항 영종도**) 영종·청라지구와 연계한 종합 관광레저단지 부지조성 1-2단계 사업 준공('23.7) 및 상부 시설 유치 확대

-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재정지원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23.6) 및 사업계획(안) 마련('23.12)

- (**광양항**) 3단계 투기장 재개발 착공('23.7) 및 묘도 투기장을 항만·에너지 허브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계획 변경('23.12)

- (**고현항**) 문화공원 · 지하주차장 등 주민편의시설 공급을 위한 4단계 사업 착공('23.3) 및 3단계 부지조성 공사 준공('23.9)

- (**금란도·장항항**) 재개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지역상생협의체* 워크숍 개최('23.6) 및 항만재개발 기본구상 마련('23.12)

* 금란도·장항항 재개발에 대한 지역 의견수렴 및 자문 기능('22.3~'24.3)

- (**제도개선**) 항만재개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사업방향, 사업방식 등 제도개선 연구용역 추진

○ (**연안침식 관리강화**) 연안재해 방지를 위한 **사업**을 **지속 추진**하며, 관리체계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한 **효율적인 연안관리**

- (**연안정비**) 양양 정암지구 등 74개 지구(신규 3개 포함)의 연안정비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시행상황도 점검(상·하반기 2회)

- (**국민안심해안**) 연안재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재해완충공간을 확보하는 실행방안 수립 및 시범사업(2개소) 착수('23.5)

- (**제도개선**) 연안침식 판단기준이 되는 관리해안선 도입, 연안개발사업 시 침식영향검토 의무화 등 연안관리법 개정 추진('23.6 발의)

- (**실태조사**) 연안침식 실태조사(360개소), 연안정비를 위한 정밀조사(9개소) 및 연안정비 시설물(2개소)에 대한 효과평가 실시

- (**협의회**) 연안침식관리구역 침식피해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지역주민, 전문가, 지자체 참여 관리협의회 개최(상·하반기 2회)

- (**시스템 구축**) 연안보전을 위해 감시·관리·예측·대응·평가 등 全 주기적 통합 연안관리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구축 착수('23.6)

○ (**'22년도 부진과제 개선계획**) 성과지표 재검토('23.6) 및 연안정비 사업효과 분석 등을 통해 정책효과 개선노력 추진('23.12)

< '2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제3차연안정비기본계획 타당성 추진계획 수립	'23.1월	
	국민안심해안 실행방안 추진계획 마련	'23.1월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3차 추진협의회 구성	'23.3월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4단계 착공	'23.3월	
2/4분기	연안정비사업 신규 3개소 실시계획 수립 착수	'23.4월	
	광양항 3단계 투기장 항만재개발 실시계획 승인	'23.5월	
	상반기 민·관·학·연구계 참석 침식관리협의회 개최	'23.5월	
	인천항 내항 1 · 8부두 항만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23.6월	
3/4분기	광양항 3단계 투기장 항만재개발 사업 착공	'23.7월	국정 41-5
	인천항 영종도 항만재개발 1-2단계 준공	'23.7월	
	고현항 항만재개발 3단계 사업 준공	'23.9월	
	하반기 민·관·학·연구계 참석 연안침식관리협의회 개최	'23.9월	
4/4분기	국민안심해안 시범사업(2개소) 현장점검 시행	'23.10월	
	광양항 묘도 항만재개발 사업계획 변경	'23.12월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계획(안) 마련	'23.12월	국정 41-5
	금란도·장항항 항만재개발 기본구상 마련	'23.12월	국정 41-5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지역주민, 지자체, 전 국민 등

○ (**이해관계자**) 부두 운영사 및 항만근로자, 지자체, 시민단체, 연안 토지소유자, 연안개발사업 시행자 등

□ 기대효과

○ (**항만재개발**) 항만 공간을 배후도심과 연계한 새로운 도심 공간으로 개발하여 원도심 활력 제고 및 지역 생활·문화거점 조성

- 산업시설, 해양관광·문화시설 등 지역의 신성장 동력 시설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연안침식 관리강화**) 연안침식 및 연안재해 예방·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연안침식 관리기술 개발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연안침식 및 연안재해 예방·관리·대응 가능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2	'23
항만 재개발(Ⅲ-1-일반재정⑬)			
① 항만 재개발(5061)	교특회계	128	80
▪ 기타항만 재개발(301)		128	80
연안환경관리(Ⅰ-1-일반재정③)			
① 연안환경관리(1034)	일반회계	609 (653)	539 (653)
▪ 연안정비(302)		609	609
해양 및 수자원 관리(Ⅰ-1-일반재정⑥)			
① 해양 및 수자원 관리(1062)	균특회계	401 (537)	384 (545)
▪ 해양 및 수자원관리(301)		401 (537)	384 (545)
- 연안정비		401	384
해양 및 수자원 관리(제주)			
① 해양 및 수자원 관리(제주)(1063)	균특회계	8 (15)	8 (22)
▪ 해양 및 수자원 관리(제주)(301)		8 (15)	8 (22)
- 연안정비		8	8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0	'21	'22	'23			
① 항만 재개발 추진율 (%) (가중치 50%)	100	100	98.3	100	'23년 항만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투자 유치 및 재정지원 등을 위한 일련의 과정을 목표치로 설정	ⓐ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계획(안) 마련(50%) ⓑ 광양항 3단계 항만재개발 사업계획 변경 수립 및 공사 착공(50%)	-관련문서 -관련문서
② 연안침식 관리강화 추진율 (%) (가중치 50%)	100	100	100	100	①연안정비사업 추진률(18% 달성)과 ②국민안심해안사업 후보지선정(20개소) 정도를 목표로 설정	ⓐ 연안정비사업 추진율(50%) $= \frac{(\text{집행누계금액}/\text{총사업비}) \times 100}{\text{'23년목표치}(18\%)}$ ⓑ 국민안심해안 후보지 선정(50%) $= \frac{\text{후보지선정개소}}{\text{목표개소}(20\text{개소})} \times 100$	내부 보고자료

② 부산항 북항 글로벌 경쟁력 강화(Ⅱ-1-②)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 (051-604-3111/ 3112)

□ 추진배경 (목적)

○ 노후·유휴화된 부산항 북항과 부산역 일원 철도시설 재배치 및 배후지역 연계개발을 통해 원도심과 조화로운 개발을 유도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발전의 성장 축으로 육성

- 국제적인 해양레저·관광 및 비즈니스 산업 등 재창출을 위한 랜드마크 조성 및 민간자본 유치 추진

⇒ 부산의 경제, 문화, 역사 등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북항통합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부산항 북항 글로벌 경쟁력 강화**

○ **부산 북항 재개발*** 등 **물류 인프라를 확충**해 동남권이 **동북아 무역·물류 중심지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기반 조성 지원**

* 부산북항은 세계박람회 개최 후 재개발 사업에 따라 국제해양복합도시로 개발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국정과제인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기반 조성 지원(102-3번)'** 추진을 위하여 재개발 1단계 지원시설 단계적 확충 및 2단계 사전 행정절차 단축함으로써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활동 지원** 및 **북항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22년말 **부지조성**이 **완료***된 **북항 1단계** 구역에, 교통, 문화·관광 등 **박람회 유치계획**('22.9)**과 연계하여 각종 지원시설 확충**

* ①면적 155만㎡, ②사업비 2**조 8,545억원**, ③사업기간 '08~'22, ④사업자 부산항만공사

- 트램, 공공콘텐츠 등 지원시설 조성계획 등을 마련하고 **사업계획 변경**(10차) **수립 추진**('23.2)

- 북항 1단계 부지 내 **주요간선도로*** 및 **부산역**과 **국제여객터미널**을 연결하는 **보행데크**를 **전면 개방·운영**('23.3)

* 지하차도 공사 중인 충장대로의 우회도로(중앙역-국제여객터미널 구간)

- **마리나 개장, 랜드마크** 등 **문화·관광시설 지속 확충**

○ 2030부산세계박람회 **BIE 현지실사**('23.4) **준비** 및 최종유치를 기원하는 **각종 홍보, 행사 등 추진**

- **북항재개발 현장**(1단계)에서 **박람회 유치**를 **기원**하는 **시민 참여형 행사 개최**('23.3) 및 각종 **홍보물 설치**('23.3)

- **박람회 예정지**(북항재개발 사업지) BIE 실사단 방문('23.4) 시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내 **국제컨퍼런스, 홍보관 시설 활용** 및 **현장시찰 등 적극 지원**

- **국민 관심 증대** 및 확산 유도를 위해 **사진공모전 시행**('23.10.)

○ **박람회 일정**('30.5~10월)을 **고려**하여 북항 2단계 사업의 실시협약, 사업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추진**하여 **'24년 상반기까지 착공**될 수 있도록 **준비**

- **'24년 조기착공**을 위해 부산시 등 관계기관과 **T/F팀**을 **구성·운영**하여 **행정절차 기간 단축**(38개월→20개월) 추진

* 사업계획 수립 용역 등 사전작업(`23.2분기~) → 실시협약 협의(`23.3분기)

○ 박람회 부지 조성방안 확정을 위해 **기존 시설**에 대해 실현 가능한 **이전 및 재배치 계획 수립 추진**

- 자성대부두 운영종료 및 재배치('23.12), 소형선 이전·재배치 계획 수립('23.3), 부산진CY 이전 실시계획 승인('23.말) 추진

< '2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북항 1단계 사업계획 변경(10차) 고시	'23.2월	국정102-3
	북항 1단계 부지 주요간선도로 및 보행데크 개방·운영	'23.3월	국정102-3
2/4분기	BIE 실사단 방문 시 현장시찰 등 지원	'23.4월	국정102-3
	1단계 기반시설 준공 및 유치기원 시민행사, 홍보	'23.4월	국정102-3
3/4분기	박람회 개최 예정지 및 주변지역 관광지도 제작	'23.8월	국정102-3
	부산진역CY 이전사업 실시계획 관계기관 협의	'23.9월	국정102-3
4/4분기	박람회 관심 증대를 위한 사진 공모전 개최	'23.10월	
	총사업비(1단계) 정산용역 준공 업무처리	'23.12월	국정102-3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부산시, 부산시민 및 전 국민 등

○ (**이해관계자**) 부두 운영사 및 항만근로자, 지자체, 시민단체 등

□ 기대효과

○ 노후·유휴항만 재개발 및 세계박람회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신규 일자리 창출 제고

- 부산북항 항만재개발을 통해 약 20만명의 고용창출과 약 36조원의 생산유발효과, 약 15조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기대

* (북항1단계) 생산유발효과 17조 9,374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7조 5,929억원, 고용유발효과 약 12만명

* (북항2단계) 생산유발효과 18조 2,318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7조 3,632억원, 고용유발효과 약 9만명

- 세계박람회 유치를 통해 생산유발효과 약 43조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약 18조원과 고용유발효과 약 50만명 기대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2	'23
항만재개발(Ⅲ-1-13(항만개발 및 관리))			
① 항만재개발(5061)		819	332
▪ 부산북항 항만재개발(300)	교특	819	332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0	'21	'22	'23			
① 북항재개발 추진율 (%)	100	100	100	100	북항재개발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박람회 유치 활동 지원을 위해 '23년 추진이 필요한 사업 및 추진 과정을 목표치로 설정	ⓐ 부산북항 1단계 사업계획 변경(10차), 기반시설 준공 및 시민행사, 총사업비(1단계) 정산용역 준공 업무처리(40%) ⓑ 부산북항 2단계 조기착공 T/F 운영, BIE 실사 지원, 관광지도 제작 및 사진공모전 개최(60%)	관련문서 관련문서

성과목표 II-2 재해·기후위기에 안전한 연안·항만을 조성한다.

(1) 주요 내용

□ 기후변화 대비 등을 위한 안전항만 구축 추진

○ 해수면 상승, 태풍 강도 증가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시설보강, 기준개선, 안전환경 조성, 인프라 구축** 등 **안전항만 강화방안** 추진

- (**시설보강**) **100년 재현빈도 폭풍해일** 등에도 견딜 수 있도록 방파제 등 **항만 외곽시설 보강** 및 **침수취약지구 정비 추진**

* 외곽시설 보강 43개소, 취약지구 정비 22개소 우선순위에 따른 순차 추진('23~'37)

- (**기준개선**) 국내 해양환경 및 설계 여건 등을 고려한 **최신 설계기술 확보** 및 **안전 성능 강화**를 목표로 한 **항만설계기준 확립**

- (**안전환경 조성**) 항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항만 시설물 점검·정비** 및 대국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추진**

- (**기반 확충**) 기반 시설물 등에 대한 **실규모급 실증 실험**이 가능하도록 **국내 최대규모 실험시설**을 갖춘 **방재연구센터*** **조성**

* 대규모 실증 시설(270mx10mx5m), 연구동 등 / 강원도 강릉시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0	'21	'22	'23			
①재해대응 안전항만 구축 추진율(%)	96.1	96.7	92.8	95	'항내 정온수역 및 시설물 안전 확보' 및 '외곽시설 및 재해예방시설 축조'의 목표 달성을 측정하고 사업의 적기 완공을 위한 사업 추진현황 확인 지표	(실적공정률 / 계획공정률) X 100	내부 자료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해양 기후위기 대응 및 적응력 확보 시급

○ 해양 기후변화 가속화*에 따라 태풍·집중호우 등이 빈번해짐에 따라 연안침수, 재해쓰레기 발생, 생태계 교란 등 기후재난이 빈번한 발생하게 발생하고, 악화 우려

* (표층수온) '68~'20 1.27℃↑(세계 평균 0.53℃) (해수면) '71~'06 2.56mm/yr↑(세계 평균 2.36mm/yr)

□ 정책 수요자의 의견 반영으로 현안대응 및 갈등예방

○ 새로운 기술기준 마련 등 대외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항만기술기준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쌍방향 소통 강화

(4) 기타 : 해당없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2 기후변화 대비 등을 위한 안전항만 구축 추진(Ⅱ-2-①)

항만기술안전과 (044-200-5951 / 5972 / 5955)

□ 추진배경 (목적)

○ 심화되는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항만의 시설보강, 기준개선, 안전환경 조성, 기반 확충 등 강화방안 추진으로 선제적 해양 재해 대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국정과제41-5>
41. 해양영토 수호 및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
5 안전하고 시민 친화적인 연안·항만 조성
○ 강화된 안전기준(기존 50년→100년 빈도)을 갖춘 재해안전항만*(65개소) 및 재해 대응기술 개발 지원을 위한 연안·항만 방재연구 인프라 구축('27)

○ 해수면 상승, 태풍 강도 증가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시설보강, 기준개선, 안전환경 조성, 기반 확충** 등 **안전항만 강화방안 추진**

- (**시설보강**) **100년 재현빈도 폭풍해일** 등에도 견딜 수 있도록 방파제 등 **항만 외곽시설 보강** 및 **침수취약지구 정비 추진**

* 외곽시설 보강 43개소, 취약지구 정비 22개소 우선순위에 따른 순차 추진('23~'37)

- (**기준개선**) 국내 해양환경 및 설계 여건 등을 고려한 **최신 설계기술 확보** 및 **안전 성능 강화**를 목표로 한 **항만설계기준 확립**

- (**안전환경 조성**) 항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항만 시설물 점검·정비*** 및 대국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컨설팅*** **추진**

* 공사비/사업기간/사업범위 : 313억원 / '23년~'24년 / 국가관리항(24개항) 안전시설 정비
* 사업비/사업기간 : 50억원 / '23년~'25년('23년 15억원 / '23.2~'23.12)

- (**기반 확충**) 기반 시설물 등에 대한 **실규모급 실증 실험**이 가능하도록 **국내 최대규모 실험시설**을 갖춘 **방재연구센터*** **조성**

* 대규모 실증 시설(270mx10mx5m), 연구동 등 / 강원도 강릉시

< '2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항만 및 배후권역 기후변화대응 강화방안 마련	'23.2월	국정41-5 업무6-2
	울산신항 동방파제 보강공사 착공	'23.2월	국정41-5 업무6-2
	대국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영상 게시 * 방파제 안전이용수칙 홍보영상 게시(KTX 등, '23.221~12.31)	'23.2월	
2/4분기	연안·항만 방재연구센터 운영방안 수립 용역 추진	'23.6월	국정41-5
	연안·항만지역 기후변화적응추진 로드맵 수립용역 추진	'23.6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항만시설 및 건설현장 상반기 점검	'23.6월	
3/4분기	안전항만 사업의 항만기본계획 반영 추진	'23.9월	국정41-5 업무6-2
	국가관리항만 안전시설물 정비공사 추진	'23.9월	
4/4분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항만시설 및 건설현장 하반기 점검	'23.11월	
	전국 파랑 통합관측망 고도화를 위한 추진 로드맵 마련	'23.12월	
	외곽시설 보강, 취약지구 정비 매뉴얼 배포	'23.12월	국정41-5 업무6-2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정책·사업의 수혜자**) 국민, 지역주민, 설계사, 시공사, 국내외 선사, 터미널 운영사, 수출입 기업, 지자체, 지방청, 항만공사 등

○ (**이해관계자**) 설계사, 시공사, 국내외 선사, 터미널 운영사, 수출입 기업, 지자체, 지방청, 항만공사 등

□ 기대효과

○ 상습적인 침수피해 지역 및 태풍피해에 대한 저감을 위한 계획 수립 후 시설공사를 추진하여 국민의 생명·재산의 보호 목표 달성

○ 우리나라 해역의 기후변화 양상을 반영한 설계기준을 수립

○ 항만구역 내 안전시설 점검 및 정비를 통한 안전성능 향상 및 대국민 교육·홍보를 통한 안전인식 확립

○ 신뢰도 높은 연안·항만 방재연구 및 기술개발 추진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2	'23
주요항 건설(Ⅲ-3-일반재정⑩)			
① 주요항 건설(5058)			
▪ 항만건설관련 연구용역(316)	교특회계		
- 방재연구센터 운영방안 검토		-	2
일반항 건설(Ⅲ-3-일반재정⑩)			
② 일반항 건설(5059)			
▪ 일반항(302)	교특회계		
- IoT기술을 활용한 파력계측 시스템 구축		10	6
- 한국형 설계기준 확보를 위한 개정용역		20	17
항만시설유지보수(Ⅲ-3-일반재정⑩)			
① 항만시설 유지보수(5060)			
▪ 항만시설 유지보수(비총액)(300)	교특회계		
- 중대재해 예방 안전컨설팅		15	17.5
그린포트 구축(Ⅲ-3-일반재정⑩)			
① 그린포트 구축(5063)			
▪ 재해안전항만 구축(302)	교특회계		
- 항만시설물 안전시설 정비		139	162
▪ 연안·항만 방재연구인프라 구축(304)	교특회계		
- 연안·항만 방재연구센터 건립		10	57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0	'21	'22	'23			
① 기후변화 대비 등 안전항만 강화 추진율(%)	신규	신규	100	100	기후변화 대비 등을 위한 안전항만 강화 주요 과정의 달성 정도를 목표치 설정(ⓐ~ⓑ)	ⓐ 재해안전항만 중장기 보강계획 수립 및 항만기본계획 변경(70%) ⓐ 항만분야 중대재해 예방 추진 (30%)	-내부문서 등 -내부문서 등

성과목표 II-3 해상사고 사전 예방을 통해 국민안전을 확보한다.

(1) 주요 내용

□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촘촘한 재난대응체계 확립

○ 범정부 해사안전대책 시행 및 **맞춤형 재난대응계획** 수립·시행, 재난안전 **취약계층 현장체험** 추진

○ 위기관리**매뉴얼 종합개편**, **집중안전점검** 실시, **범정부** 재난대응 **합동훈련**, 재난안전 **협의체 구성** 등 추진

○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고용부, '22.11)'에 따른 위험성 평가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 고도화

□ 안전한 해양이용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법제정비**) 「해사안전법」을 **제도·정책**을 **규정**한 「**해사안전기본법**」과 **안전규제**를 다루는 「**해상교통안전법**」으로 분법*(소위 계류중)

* 이양수 의원실 대표 발의(22.9.22) → 국회통과(23.상) → 하위법령 마련('23.~)

○ (**선박안전관리사**) 안전관리책임자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국가전문자격증인 **선박안전관리사 제도 도입**('23.하 제1회 자격시험 실시예정)

○ (**사이버보안**) **선박 운항**과 관련된 **사이버 위협·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 및 **종합대책 마련**('23.上), **전문가**** **포럼 개최**('23.下)

* 「해사안전법」 개정(「해사안전기본법」 조문신설), 「해사사이버안전 관리지침(안)」

** 해운협회, 해양대, 정보보호학회, KMI, KRISO, 한국선급,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등

□ 해상교통환경 변화에 대응한 공간중심 안전관리체계 구축

○ (해역관리) 디지털 해상교통 플랫폼 구축(타당성조사, '23), 안전진단 제도 강화* 및 대규모 해양시설(해상풍력단지 등) 관리체계 마련 추진

*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여객선 통항수역에서의 해양개발행위 등 진단대상 포함

○ (정보고도화) 차세대 해양 PNT(위치·항법·시각) 기술개발* 추진

* 위치정보 오차감소(10m급→5cm급, '22~'32, 2,540억원) 초정밀 위성항법기술

□ 실생활 중심 해양안전 교육·문화 정착

○ (안전경영) 선박소유자의 안전관리체제 유지·감독의무 부과*, 안전사고 사망 발생 시 선박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수시인증심사 의무화** 추진

*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해사안전법」 개정·시행)

** (현행)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로서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 (현행) +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 발생 시 수시인증심사 전수 실시

○ (교육내실화) 이론중심에서 사례·실습중심*으로 개편, 자문단**을 구성해 취약선박(어선·낚시어선 등) 안전교육 내실화 방안 마련

* 어로작업 기본수칙, 사고사례, 시뮬레이터·VR장비 활용, 구명뗏목 작동·탑승 등

** 조업안전·선박안전·인적과실 등 해양수산분야 안전 전문가 8인으로 구성

○ (문화확산) 구명조끼 무상보급*·착용 캠페인 중점추진 및 '해양안전의 날'·'어선안전의 날'(매월 1일) 계기 안전문화 진흥운동** 전개

* 1인 조업어선(706척, ~'23)→1·2인 일반선박(313척, ~'24)→2인 조업어선(14,167척, '25~)

** 해양안전실천본부(전국 12개) 중심, 해수부·해경·지자체·수협·해양수산업단체 등 참여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0	'21	'22	'23			
① 해양사고 발생 건수(건)	3,156	2,720	2,863	2,855	3년간('20~'22년) 평균 해양사고 발생건수(2,913건)를 기준으로 매년 2%씩 감축 - 23년도 목표 : 2,913 x 0.98 = 2,855건	해양안전심판원 통계	해양안전심판원 통계

(3) 외부환경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선박안전·환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

○ **안전할 권리**에 대한 **국민요구 증대, 안전관리 패러다임**이 **정부·규제중심**에서 **참여·맞춤·지원형**으로 전환 중

○ **국민 스스로** 안전관리의 주체가 되고 **고위험선박**, 빈발하는 해양사고 등에 대한 **맞춤형 집중관리** 및 각종 **규제** 이행을 위한 **지원** 강화 필요

○ **바다**에서도 국민의 **안전할 권리**에 대한 **요구**가 **지속 증대**, 특히 선내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

* 사업장 안전·보건 조치 의무강화 등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

○ 종사자와 바다를 이용하는 국민의 구명조끼 착용에 대한 **인식 부족, 위험불감증** 등으로 **단순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지속 발생***

* (**어선**) 최근 5년간 **안전사고 인명피해**(사망·실종) 245명 중 **86명**(35%)이 **해상추락** 으로 발생, **사망자**(59명) **97%**가 **구명조끼 미착용**

(**비어선**) 최근 5년간 **안전사고 인명피해**(사망·실종) 74명 중 **17명**(23%)이 **해상추락**으로 발생, **사망자**(14명) **전원 구명조끼 미착용**

□ **재난 및 중대재해에 대한 관심과 정책수요의 증대**

○ 코로나-19, **이태원사고** 등 연이은 **대형사건**·사고로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 지속 증가 및 **국가**의 **책무**강화 **요구 증대**

○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24)되는 상시근로자 **5~49인 사업장**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 **법 이행 필요**

* ('22.1)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적용 → ('24.1~) 5~49인 사업까지 확대

□ **정책 수요자의 의견 반영으로 현안대응 및 갈등예방**

ㅇ 새로운 기술기준 마련 등 대외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대국민 홍보 강화 등을 통해 갈등 해소 필요

ㅇ 대국민 **캠페인·홍보**[*], **무상보급**, **연구개발**, **의무화** 등을 **중점·지속** 추진하여 **구명조끼 착용**을 **해양안전문화**로 정착

* 도로교통분야 자동차 안전띠의 경우, 단계적 착용 의무화('81~'18) 추진 및 30년 이상 다각적 교육·캠페인·홍보·단속 등을 통해 착용률(앞좌석) 90% 수준 달성

(4) 기타 : 해당없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1 국가 해양수산 재난관리체계 선진화(Ⅱ-3-①)

해사안전관리과 (044-200-5853 / 5857 / 6074)

□ 추진배경

○ 해양수산 **재난**의 **복잡화** 및 정부의 재난대응 역량에 대한 **국민 기대치 증가** 등으로 신속하고 **전문적**인 **재난관리 역량 요구**

○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관리**를 위해 우리부 안전보건 **관리체계 이행** 및 **고도화 추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10조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가. 해양수산분야 재난대응체계 확립

○ (**재난관리계획**) 각종 재난으로부터 인명·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해 **해양수산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계절별·분야별 계획 수립**

- 안전점검의 날 추진계획('23.4), 국가핵심기반 보호계획('23.4) 여름철·겨울철 재난대응계획('23.5·11), 안전관리 집행계획('23.9) 등

○ (**재난매뉴얼**) 현장 활용도 강화 및 운영상 미비점 보완을 위해 **해양 선박사고** 및 **풍수해** 재난**매뉴얼 전면개정** 추진

- (**해양 선박사고**) 위기관리단계 개선, 조치사항 코드화 등 매뉴얼 종합개편·**표준안 마련**('23.3), 협의체 운영을 통해 **기관별 개정**('23.6)

- (**풍수해**) 표준매뉴얼(행안부) 개정안('23년 初 예상)을 반영한 **실무매뉴얼**(본부, '23.上) 및 **19개 행동매뉴얼 개정**(소속·산하, '23.下) 추진

○ (**점검·훈련 등**) 재난관리 역량강화 및 재난발생 시 초기 상황보고 등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매뉴얼 실태점검** 및 **재난대응 훈련** 등

- (**매뉴얼 실태점검**) 재난매뉴얼 관리현황, 상위 매뉴얼 개정사항 반영여부 및 기관 간 연계성 등 **정기**(연1회)·**수시점검**(연1회)

- (**재난대응 훈련**) 신속한 상황보고·전파 및 재난대응 강화를 위해 **불시 상황전파**(분기1회) 및 **범정부 재난대응 훈련**(연1회)

- (**재난관리 교육**) 국가재난관리체계, 매뉴얼 작성·관리방법, 재난 초기대응 방안 등 **권역별 워크숍**('23.3) 및 **지역별 세부교육**('23.6)

나. 중대재해 예방업무 고도화

○ (**안전보건 관리체계 정착**) 자기규율 예방체계 및 이행점검 등 **예방중심**의 **안전보건 관리 추진**

- (**자기규율*** **예방체계**) **위험성 평가기법**** 고도화 및 사업장(23개) 정기 위험성 평가 및 **위험성 감소대책** 시행('23.5)

* (고용부-감축 로드맵) 규제·처벌 위주 →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 해양수산분야 위험성 평가 교육·기법 개발,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활용 등

- (**이행점검**)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정기**(반기 1회)·**수시점검**

- (**법률자문**) **학계, 산업계**(수산·선박·항만 등) **안전분야 전문가**를 **추가**하여 **법률자문위원회 기능 강화**(5명→10명 내외, '23.3)

○ (**취약분야 집중지원**) **공공선박** 및 **영세 민간사업장** 등에 맞춤형 컨설팅, 교육 및 홍보 등 **지원**

- (**공공선박 컨설팅**) 유해·위험요인 식별, 안전수칙 적절성 검토 등 **공공선박** 안전보건 **컨설팅**('23.6~8)

- **(민간지원)** 민간 영세사업장* 지원을 위한 **중대재해 매뉴얼 마련, 안전보건 컨설팅****('23.下) 및 **현장교육**(8회/연중)

* ('22년) 50인 이상 사업장 → ('24년) 5~49인 사업장 28개분야 6,000여개소(잠정)

** 안전사고 발생률이 높은 안전취약분야 매뉴얼(7종) 마련 및 사업장 적용(2개소)

○ **(실무자 역량강화)** 우리부·관계기관 중대재해 실무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23.4, 본부·소속·산하) 및 워크숍('23.11, 본부·소속) 개최

< '23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3년 재난매뉴얼 관리계획 수립	'23.1월	
	봄철 농무기 대비 상황전파 훈련 시행	'23.3월	
	재난안전인문학 강좌	'23.3월	
	중대재해 자문위원회 기능 강화 등 확대 운영	'23.3월	
2/4분기	태풍 대비 재난대응계획 수립	'23.5월	
	태풍 대비 상황전파 훈련 시행	'23.6월	
	해양 선박사고 매뉴얼 전면개정	'23.6월	
	중대재해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현황 점검(상반기)	'23.6월	
3/4분기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 수립	'23.9월	
	재난안전 취약계층 해양안전 체험	'23.9월	
	추석 연휴 대비 상황전파 훈련 시행	'23.9월	
	위험성 감소대책(유해·위험요인 개선대책) 이행현황 점검	'23.9월	
4/4분기	범정부 합동훈련 실시(행안부 일정 고려)	'23.10월	
	겨울철 재난대응계획 수립	'23.11월	
	겨울철 대비 상황전파 훈련 시행	'23.11월	
	중대재해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현황 점검(하반기)	'23.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해양수산 全분야 관련 종사자, 시설 등 이용자

○ (**이해관계자**) 국가안보실, 행안부, 해경청, 지자체 등 유관기관, 해수부 소속 재난관리책임기관(지방청, 어업단, 항만공사 등) 등

□ 기대효과

○ 전문가 참여 확대 및 취약분야 지원을 통한 해양수산 재난·중대재해 관리정책 실효성 제고 및 선진화 기대

○ 재난매뉴얼의 체계적 관리 및 실효적인 훈련·교육을 통한 철저한 대비·대응태세 유지, 역량향상 및 편차해소 기대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2	'23
해양안전관리시스템 구축・운영(Ⅱ-5-일반재정①)			
① 해양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운영(6332)	일반회계	15	17
▪ 해양수산 재난관리 지원(307)		15 (15)	17 (17)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0	′21	′22	′23			
①국가 해양수산 재난 관리체계 선진화 추진율(%) (가중치 70%)	100	100	100	100	○ 재난 예방·대비 추진(50%) - 재난 예방·대비 추진과제 이행 여부 정도를 목표치로 설정	○(산출식) 실적/계획(16) X 100% * 계획 8건, 대응훈련 1회, 상황전파 훈련 4회, 합동점검 3회 ○(목표값) 100%	내부자료
					○ 재난매뉴얼 현장 작동성 강화(50%) - 비상연락망 등 매뉴얼 개정 및 현행화 달성도를 목표치로 설정	○(산출식) 실적/계획(41) X 100% * 해양 선박사고 표준·실무·행동 25개, 풍수해 실무·행동 매뉴얼 16개 ○(목표값) 100%	
②해양수산분야 중대재해 예방활동 이행율(%) (가중치 30%)	신규	신규	신규	100	○ 유해·위험요인 개선(50%) - 위험성 평가결과에 기반하여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실적을 목표치로 설정 * 대책수립 건수는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라 ′23.6말 확정 예정(′22년은 1,670개 대책 수립)	○(산출식) 대책이행 건수 / 대책수립 건수 X 100% ○(목표값) 95%	내부자료
					○ 안전보건확보 추진 및 민간지원(50%) - 안전보건 추진과제 이행여부 및 민간지원 실적 결과를 목표치로 설정 * 추진과제 41개(산업재해 13개, 시민재해 11개,컨설팅 2개소, 매뉴얼 배포 7개, 교육 8회)	○(산출식) 이행건수/추진과제건수(41) X100% ○ (목표값) 100%	

2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범정부 해사안전대책 시행(Ⅱ-3-②)

해사안전정책과 (044-200-5846 / 5817)

□ 추진배경 (목적)

○ 해양에서의 대형 인명피해* 사고 발생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 지속, 사고예방을 위한 범정부차원의 해양안전관리 혁신요구 증대

* 화물선 침몰('17, 22명), 낚시어선 충돌·침몰('17, 15명), 어선 화재('19, 12명), 어선 전복('21, 7명, '23, 9명)

○ 선진국형 민간자율관리 안전문화가 정착된 사회로 성숙되기 전까지 지속적인 정부주도의 안전관리 불가피

- 체계적인 대책수립·이행과 현장중심의 안전관리 강화 필요

○ 해사안전·해양환경 분야의 국제기준을 선도하기 위해 국제협약 제·개정을 담당하는 국제해사기구(IMO) 대응 강화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범정부 안전계획**) 해사안전증진을 위해 제3차 국가해사안전 기본계획('22~'26)에 따른 '23년 해사안전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법제 체계개편**) 「해사안전법」의 기본법적 지위 강화 및 항법 등 해상교통법령 접근성 제고를 위해 해사안전법 체계 개편*

* 「해사안전법」을 ①해사안전 제도·정책의 기본 사항을 규정한 「해사안전기본법」과 ②선박의 항법 등 안전규제를 규정한 「해상교통안전법」으로 분법

○ (**협업강화**) 안전대책의 이행력 제고를 위한 유관부처·단체, 지자체 등 합동 해양안전 점검회의 개최

○ (**취약분야 안전대책**) 기상특성 및 선종별 취약요인을 고려한 계절별 해양사고 예방대책 등 수립·시행 및 현장이행 점검 추진

○ (**현장이행력 강화**) 해사안전감독관 지도·감독계획, 취약선종 점검계획 수립·시행 및 업무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 실시 등

○ (**안전문화 확산**) 대국민 체험형 안전교육을 위한 해양안전체험관(안산) 운영, '찾아가는 해양안전체험시설' 구축·운영 등

○ (**제도개선**) 해상교통관리체계 구축, 안전투자 공시제도 도입 등 해사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신규 제도 도입 및 세부기준* 마련

*「해사안전기본법」 법률안 하위법령 마련을 통해 적용 범위·대상 등 구체화

○ (**국제해사분야 영향력 강화**) IMO 주요회의 대응, IMO 회원국 감사 수감('22.11.)에 따른 후속조치 및 개도국 대상 기술협력사업 추진 등

※ '국제해사분야 영향력 확대('21년 6-3-2과제)'는 해양안전 정책의 일관성 제고 및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성과관리를 위해 '범정부 해사안전대책 시행'과 관리과제 통합·추진('22.~)

< '2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3년 해사안전 시행계획 수립·시행	'23.2월	국정 40
	'23년 선박 안전관리체제 제도 운영계획 수립·시행	'23.2월	국정 40
	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 수립·시행	'23.3월	국정 40
	2023년 세계해사대학(WMU) 재학생 방한연수 개최	'23.3월	국정 40
2/4분기	해양사고 인명피해 저감 TF 회의 개최	'23.4월	국정 40
	해양사고 예방대책 이행실태 현장점검	'23.6월	국정 40
	여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 수립·시행	'23.6월	국정 40
	2023년 한국해사주간 및 장관급 콘퍼런스 개최	'23.6월	국정 40
3/4분기	세계해사대학(WMU) 장학생 소식지(제5호) 발간	'23.7월	국정 40
	해양안전 공모전 개최	'23.8월	국정 40
	찾아가는 해양안전체험시설 구축·운영	'23.8월	국정 40
	가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 수립·시행	'23.9월	국정 40
4/4분기	2023년 모의 IMO 총회 개최	'23.11월	국정 40
	해양사고 예방대책 이행실태 현장점검	'23.12월	국정 40
	IMO 제33차 총회 참석 및 대응	'23.12월	국정 40
	해양안전 점검회의 개최	'23.12월	국정 40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내·외항 해운선사, 선박 종사자 및 이용자, 국제해사분야 관련 종사자 및 일반국민 등

○ (**이해관계자**) 해운협회, 해운선사 등 해운업·단체와 정부기관 및 선박검사기관 등 공공기관, IMO 및 회원국(175개국) 등

□ 기대효과

○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범정부 안전관리 강화·혁신으로 인명피해를 동반한 대형해양사고 발생 최소화

○ 국민 참여형 해양안전 교육 및 홍보 추진으로 해양안전문화 내재화를 통한 국민의 안전한 해양이용 도모

○ IMO A그룹 이사국(11연임)으로서의 국격 제고, 주요 해운·항만국가와 협력체계 강화 등을 통해 국제 해사안전 분야 영향력 확대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2	'23
해양안전관리시스템 구축·운영(Ⅱ-5-일반재정①)			
① 해양안전관리시스템 구축·운영(6332)	일반회계		
▪ 해상안전 국제협력(301)		64	71
▪ 해양사고 예방활동 지원(302)		84	96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0	'21	'22	'23			
①국적선 1천척당 해양사고 피해 지수 저감(점)	43.2	41.0	35.2	37.8	국적선 1천척당 3년간('20~'22년) 평균 사고피해 지수(39.8)의 5% 감축	해양안전심판원 통계 [3년평균 1천척당 사망·실종자 + 3년평균 1천척당 주요사고* 건수] x 0.90 * 안전·운항저해, 기타사고 제외	해양안전심판원 통계

3 연근해어선 안전관리 체계화(Ⅱ-3-③)

어선안전정책과 (044-200-5526 / 5527)

□ 추진배경 (목적)

○ (현황) **전체 해양사고**(최근 5년('18~'22) 연평균 2,844건 발생) 중 **어선 사고***가 **66%**를 차지하고, **인명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

* 어선사고 발생건수: ('18)1,846 → ('19)1,951 → ('20)2,100 → ('21)1,786 → ('22) 1,623

** 어선사고 인명피해(명): ('18) 89 → ('19) 79 → ('20) 99 → ('21) 89 → ('22) 78

- **대규모 인명피해**를 동반한 충돌·화재사고 역시 **매년 발생*** 하며, 사고시 **수색자원 총동원**으로 **국가적 부담**** 증가

* 3명 이상 인명피해를 동반한 중대형 어선사고 : ('20) 3건→('21) 3건→('22)3건

** 중대형 어선사고 발생 시 약 10일 이상 수색을 지속, 일일 최대 약 25억원(추산) 소요 / 25억원 = 동원선박 유류비(23.4억원) + 항공기유류비(0.4) + 조명탄(0.5)

○ (사고원인) 해상의 **열악한 조업환경, 안전장비 미착용,** 조업 중심의 어선 건조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

- 어선사고는 투양망·어획물 적재 등 선상 작업과 연관되며, **선박구조 및 작업환경 전반**의 **근본적 문제**로 인해 발생

■ 연근해 **어선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수습**할 수 있도록 **위기대응 체계**를 **개선**하고, 선제적으로 **어선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관리 기반**을 **구축**할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① **(안전제도)** 안전한 조업환경 조성을 위한 **행정처분 강화** 및 **어선사고 대응 매뉴얼** 등 개정 추진

- **선주 고의·과실**에 의한 **인명사고** 발생 시, **어업허가·면허**에 대하여 어업정지·취소가 가능하도록 **강력한 제재** 도입 추진

  * 현재 ①출입항신고 위반, ②출항제한 위반, ③조업구역 이탈 시에만 행정처분 중

- **연근해 어선사고 대응체계**를 **개선**하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확대*** 등을 위해 **실무매뉴얼** 및 **관련 법령 개정** 추진

  * (현행) 태풍·풍랑특보, 예비특보 발효 시 외부 노출 갑판에 있는 승선원 의무착용 → (개정) 현행 + 승선인원 소규모(2인 이하 예정) 어선 상시 착용(어선안전조업법 개정)

- **'제1차 어선안전조업기본계획'**의 **체계적 이행** 및 기본계획 정책을 구체화한 **'23년도 어선안전조업 시행계획 수립**

② **(건조기반)** 어선의 **건조단계부터** 안전성이 우선되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추진

- **안전·복지형 어선** 건조 시, **건조자금**에 대한 **재정적 지원*** 및 검사절차 간소화 등 **제도적 지원**을 통해 **어업환경 개선**

  * 어선건조금 90% 융자, 이자 보전(고정 2~3%, 15년 상환)

- 기존 조업 중심의 어선에서 **안전성 중심의 어선 건조**를 위해 **어선건조업 자격요건** 마련 등 제도적 기반 마련

③ **(안전설비)** **어선·어선원**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기술개발 및 보급을 추진하고,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보급 확대

-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가 큰 **근해어선**에 **장거리 위치발신장치** (D-MF/HF) **보급*** 및 음영구역 해소 등 **통신 환경 개선**** 추진

  * '23. 450대 / '20~'23. 1,950대 / ** 어업관리단 지도선에 전용수신기 추가 설치

- 화재발생 저감을 위한 **소화장비** 및 어선원 조난자의 신속한 구조를 위한 **어선원 조난위치발신시스템*** 등 **기술개발** 추진

* 성능개선 용역('23.1~12) → 실해역 검증 및 시범운영('23.12~'24.3)

- **양망기** 끼임사고 예방을 위해 **무선원격조정장치** 시범사업 추진

* 연근해 자망·통발 어선 50여척 대상으로 추진

④ **(안전 문화) 어업인**의 **사고대응력** 강화를 위한 실무적 **교육**을 **내실화**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안전문화 홍보 활성화**

- 선주·간부선원·일반선원·외국인선원 등 **대상별 특화 교육**을 실시하고, **체험형 교육*** 및 **온라인 안전교육** 추진

* ①(VR교육)사고유형별 모의체험, ②(체험교육)구명조끼·소화기 사용, 무선통신 작동 등

- **사고 빈발 시기**에 **중요 안전규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전국 **주요 항·포구**에서 **안전 캠페인** 활성화

* 구명·소방 설비 비치, 어선 위치발신장치 및 무선설비 설치 등

< '2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어선건조 진흥단지 조성을 위한 업무협의회	2월	국정 41-7
	'23년도 어선안전조업시행계획 수립	3월	-
	어선청년임대사업 청년어업인 및 임대용 어선 모집	3월	국정 73-4
2/4분기	어선안전모니터링시스템 연계 강화 고도화	5월	-
	어선청년임대사업 안전교육 실시	6월	국정 73-4
	어선건조지원센터 구축 추진계획 마련	6월	국정 41-7
3/4분기	연근해어선사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개정	7월	-
	외국인 어선원 안전조업교육 실시	8월	-
	어선건조 지원센터(고흥) 구축 추진	9월	국정 41-7
4/4분기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 현장점검	11월	국정 41-7
	어선원 조난위치발신시스템 성능개선 용역 최종보고회	12월	-
	양망기 무선원격조정장치 시범사업 완료	12월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선주 및 어선원, 일반국민

○ (**이해관계자**) 행정안전부, 국방부,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수협,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연구기관, 중소조선소 등

□ **기대효과**

○ (**안전성 측면**) **연근해 어선사고**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화**로 **어선 사고율**을 감소시키고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 보호**

○ (**지속성 측면**) **어선어업 청년 인구 유입**으로 인한 **국내 어업**의 **지속적인 성장 동력 확보** 및 **어촌 사회·경제 활성화**

○ (**환경적 측면**) **노후어선 대체** 마련으로 **온실가스 저감효과** 등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 구축

○ (**국가경제 측면**) **어선 신조**에 대한 **투자증대**로 국민경제의 생산과 고용 창출을 통한 **중소조선 산업 활성화**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2	'23
어업안전지도강화(Ⅱ-3-일반재정①)			
① 어업안전지도강화(3132)	일반회계	240	248
▪ 어선안전조업지원(302)		184	197
▪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304)		20	18
▪ 연근해 위치확인시스템 구축(306)		36	33
연근해어업구조조정(Ⅱ-3-일반재정⑦)			
① 연근해어업구조조정(3145)	농특회계	22	23
▪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301)		17	18
▪ 어선청년임대(303)		5	5
기술개발(Ⅱ-3-일반재정⑩)			
① 기술개발(6431)	기후대응기금	102	86
▪ 에너지 절감형 친환경 어선개발 연구(R&D)(753)		102	86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0	'21	'22	'23			
① 어선 위치 확인 안전설비 보급율(%) (가중치 50%)	신규	신규	신규	75.6	근해어선을 대상으로 보급하는 장거리 위치발신장치(D-MF/HF)의 '22년 보급률 72(%)보다 5% 상향하여 적극적으로 목표치를 설정	안전설비 설치 완료 척수/ 안전설비 보급 대상 척수×100	내부보고
② 연근해어선 중대사고 사고율(%) (가중치 50%)	신규	신규	신규	1.27	최근 3년 어선 중대 사고(충돌, 전복, 침몰, 화재, 안전사고)에 대한 사고율 1.34(%)보다 5%를 낮춰 적극적으로 목표치를 설정	당해연도 주요 어선사고 건수/국내 등록 연근해어선 수 ×100	해상사고 통계 및 등록어선통계

전략목표 Ⅲ.

경제활력을 높이고, 국민행복을 키우는 해양공간을 구축한다.

1. 해양 신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여 해양선도경제를 조성한다.

2. 국민 행복을 위해 해양레저관광·해양문화 강국으로 도약한다.

3.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해양 경제영토 확장 및 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4. 해양환경 위해요소에 대한 안전망 구축 및 해양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여 지속가능한 해양이용기반을 마련한다.

전략목표 Ⅲ 경제활력을 높이고, 국민행복을 키우는 해양공간을 구축한다.

기본방향

◇ 배경 · 필요성(중요성)

○ 해양바이오 산업, 신재생 에너지 등 신산업 육성을 통해 바다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극지, 대양진출 및 심해저 개발 등 경제영토 확장 필요

○ 기후변화, 해양쓰레기, 바다의 무분별한 선점식 이용 등 국민 안전과 삶을 위협하는 요소에 대한 통합적 · 체계적 관리 필요

◇ 그간의 성과

○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대책('19.5), 해양수산 신산업 혁신전략('19.10), 해양바이오 산업 신성장 전략('22.7) 등을 수립하여, 유망 해양 신산업 육성 기반 마련

○ '극지활동 진흥기본계획' 수립('22.11)등 극지 과학영토 확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무인도서의 체계적 관리 및 독도해양주권 관리능력 강화

○ 「해양폐기물법」 제정('19.12), 제1차 해양폐기물관리 기본계획('21.5), 해양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대책('22.12), 2050 탄소중립 로드맵('21.12) 수립

○ 「갯벌법」 제정('19.1), 제1차 갯벌 기본계획 수립('21.6) 등 갯벌 관리기반 구축, 해양보호구역 확대(32개소, 1,798.7㎢) 및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21.7)

○ 상생·공존의 해양공간을 위한 해상풍력 발전방안('20.7) 발표, 공유수면 관리체계 개편방안('22.1) 발표, 全해역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22.6)

◇ 주요 내용

○ 해양 바이오, 마리나, 레저관광, 창업투자 등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하고, 무인도서와 영해기점 영구시설물 설치 등 해양영토 관리 강화

○ 해양환경 위해요소 대응체계 구축, 깨끗한 해양수질 확보 및 해양쓰레기 전주기 관리를 통해 청청 해양환경 조성

○ 지자체간 해상경계 획정, 공유수면 불법행위 감축 등 해양공간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갯벌 복원 및 해양보호구역 확대 등 해양생태계 건강성 회복

◇ 임무와의 상관관계

○ 국정과제 41번 "해양영토 수호 및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 73번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 이행을 위해 성과관리 체계와 연계 추진 필요

<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관리과제 · 성과지표 체계 >

(단위 : 개)

전략목표	전략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1	2	4	4	16	31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전략목표 Ⅲ. 경제활력을 높이고, 국민행복을 키우는 해양공간을 구축한다.		①극지 및 대양탐사 진척도(%) ②극지 및 대양연구 분야 논문 발행 수(건)
1. 해양선도경제를 조성하고 해양영토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①해양신산업 상용화 기반 구축율(%)
	①해양에너지, 해양플랜트 등 해양과학 新산업 육성	①해양에너지 실증시설 추진율(%) ②차세대 선박과 해양플랜트 산업 육성기반 구축율(%)
	②해양신산업 전략적 육성을 위한 해양바이오산업 기반 구축	①해양수산생명 자원 주권강화율(%) ②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노력도(%)
	③해양산업 창업·투자 생태계 조성	①해양수산 분야 창업·투자지원 업체 수(개소) ②투자유치액(억원)
2. 국민 행복을 위해 해양레저관광·해양문화 강국으로 도약한다.		①국민 해양레저 관광 체험률(%)
	①권역별 해양관광명소 조성 및 해양관광 콘텐츠 확산	①해양레저관광 수요창출 노력도(가중치 40%) ②해양레저관광 기반조성 추진율(%)(가중치 60%))
	②해양교육문화 콘텐츠 확충 및 향유기회 확대	①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제도 강화율(%) ②해양문화시설 인프라구축 및 운영 효율화(%)
3.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해양 경제영토 확장 및 관리역량을 강화한다.		①해양영토 관련 학술연구 성과(건)
	①무인도서의 체계적·효율적 관리 강화	①무인도서 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율(%) ②무인도서 관리기반 구축 추진율(%)
	②해양영토의 과학적 관리기반 확충	①해양조사 인프라 구축률(%) ②독도탐방사업 만족도(점)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③극지진출 및 대양연구 기반 구축	①극지 및 대양 진출 역량 강화율(%)
	④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산분야 통상협상 대응	①규범 협상 대응 전략 마련 및 협상 대응 ②주요 FTA 상대국의 수산물 개방요구에 대한 우리나라의 불수용률(%)
	⑤해양수산 ODA 확대 및 양자협력 증진	①해양수산 신규 ODA 추진건수(건) ②한-미 국제어업 정례협의회 활성화
	⑥해외 수산자원 확보를 위한 국제협상력 강화	① 주요 국제수산기구 회의 대응 및 제안서 제출 비율(%) ②국제협상 전문가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실무참여(%)
4. 해양환경 위해요소에 대한 안전망 구축 및 해양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여 지속가능한 해양이용기반을 마련한다.		①해양수질 개선율(%)
	①해양쓰레기 전(全)주기 대응 및 보전·개발이 조화로운 해양관리 강화	①해양쓰레기 수거량(톤) ②해양환경성 검토제도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②지속 가능한 해양환경관리체계 마련	①지속가능한 해양환경을 위한 인식 증진 노력 ②해양수산 온실가스 감축 기반 강화 노력
	③개발과 보전의 상생 및 공존을 위한 해양공간관리 체계화	①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관리기반 구축을 위한 제도 정비 및 공간정보체계 고도화 ②해양공간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국민 등 이해관계자 소통 및 협업 활성화
	④해양자산 관리 강화 및 해양생태계 보전	① 해양생태계 보전사업 달성도(%) ② 해양보호구역 지정 개소수(개소)
	⑤국민이 행복한 청정·안심 해양환경 안전망 구축	①해양방사성물질 감시망 강화 ②해양오염 위기 대응을 위한 훈련 및 교육 확대

전략목표III 경제활력을 높이고, 국민행복을 키우는 해양공간을 구축한다.

(1) 주요내용

□ **해양에너지, 해양플랜트 등 해양과학 新산업 육성**

○ 조류, 파력 등 해양에너지원별 핵심기술 개발로 조기 상용화를 추진하고 해저체류 기술개발 및 해양 무인이동체 활성화 기반 마련

○ 해양플랜트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역량강화 지원을 추진하며, 해외 정부와의 협력 기반 구축

○ 전기·암모니아 혼소 등 친환경 대체연료 선박을 개발하고, 해상 테스트베드를 통한 기술검증 지원으로 상용화 촉진

□ **해양 창업 생태계 조성 및 투자활성화 기반 마련**

○ 해양수산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스타트업 기업의 성장 디딤돌 마련,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 발굴 및 지원 추진

□ **해양영토 확대를 위한 극지 진출 및 대양연구 기반 구축**

○ (**극지 진출**) 과학연구, 국제협력, 경제활동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체계적·종합적 극지 활동 지원

○ (**대양연구**) 해양에서 비롯된 우리나라 이상기후 현상에 대한 원인 파악, 심해 환경 및 생태계 탐사 등을 위해 대양연구 수행

□ **「해양교육문화법」 시행('21.2)에 따라 체계적인 해양교육을 실시하고, 해양문화 권역별 인프라 구축 및 여수세계박람회장 활성화 추진**

○ 체계적인 해양교육 실시와 해양문화산업 지원을 위한 **해양교육·문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해양문화 대중화·산업화 추진**

○ **권역별 대규모 해양문화 인프라 확대**(국립인천해양박물관, 미래 해양과학관 조성) 및 해양교육·문화 관련 제도적 기반 마련

○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계획 수립**(공공개발 검토 등)을 통해 해양복합관광 클러스터 구축 등 새로운 성장 동력 마련

□ **해양레저·관광 저변확대를 위한 콘텐츠 강화로 국민레저수요 창출**

○ 국내 해양관광 수요에 맞춰 해수욕장 이용 활성화를 위한 편의·안전성 확보, 우수해양관광 콘텐츠 신규 발굴 추진

○ 외국적선 크루즈 입항재개 지원 등 크루즈 수요 확대와 지원 지역별 해양레저스포츠 체험프로그램 및 대회 운영

□ **해양치유·마리나·수중레저 등 해양레저관광 新산업을 육성하고 해양레저·관광 저변확대를 위한 관광·해양문화 콘텐츠 강화**

○ **국민**의 **여가 편의시설 확충**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연안·어촌지역에는 **새로운 성장엔진**을 제공하기 위해 권역별 관광인프라 조성

○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마리나 인프라**(거점, 바다역 등) 조성 및 **남해안권 해양레저관광벨트** 조성 기반 마련 추진

□ **무인도서의 체계적 관리** 및 **독도 해양영토주권 관리능력 강화**

○ '제2차 무인도서 종합관리계획('20~'29)'에 따라 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의 보전 및 이용·개발에 관한 정책 추진

○ **독도 중장기계획 수립*** 등 독도 정책의 기본방향 정립 및 독도가 우리나라 고유 영토임을 증명하는 과학적 근거를 지속적으로 확보

* '제4차('21 ~ '25)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21.3.5, 국무총리 주재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 및 기본계획 이행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이행

- 독도 관련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대국민 교육·홍보 정책 강화

□ **WTO 수산보조금 규범, FTA, CPTPP 등** 수산 관련 **통상협상**에 **적극 대응**하여 우리 수산물의 경쟁력 강화

□ **기후 위기 적극 대응 및 해양쓰레기 전주기 관리 추진**

○ 탄소중립 로드맵 체계적 이행 및 해양의 기후변화 적응력 강화를 위해서는 해양환경관리체계도 기후변화 대응형으로 전환

○ 수산자원 보호, 선박 안전운항 확보, 해양환경 보전 등을 위해 해양쓰레기의 발생 예방부터 수거·처리까지의 전주기 과정 관리 추진

□ **해양공간 관리 체계화, 갯벌 등 해양자산 관리 강화**

○ 바다의 혜택을 공정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해양공간계획 및 공유수면의 체계적 관리·운영과 해양수산정보 공유·활용체계 구축

○ 다양한 갯벌의 생태적 특성과 개발·이용 수요 등을 체계적·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갯벌법」 및 「해양생태계법」 개정 등 추진

○ 해양 이용·개발 행위의 양적 증가 및 다양화·대형화에 따라 사전 환경성 검토 및 사후 관리 강화 추진

(2) 성과지표

< 전략목표 성과지표 >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7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8	'19	'20	'21	'22	'27			
① 극지 및 대양 탐사 진척도(%) (가중치 50%)	신규	신규	신규	113.6	100.3	100	극지 및 대양과학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남·북극해, 아북극-서태평양 등 연차별 탐사 계획 최종목표('27년까지 조사 목표 정점 수 총 1,281점) 반영 * ('23년) 90.0%, ('24년) 92.7%, ('25년) 95%, ('26년) 97.5%, ('27년) 100%	실제 조사 정점 수/조사 목표 정점 수(%) * 최종 목표('27년, 1,281점) 대비 정점 조사율 누적 집계	연구과제 연차보고서, 탐사보고서, 관측DB 등 확인
② 극지 및 대양 연구 분야 논문 발행 수 (가중치 50%)	신규	신규	신규	신규	62	60	최근 3년 평균(58.7건) 극지 및 대양과학 연구 사업 논문 발행 건수를 고려하여 목표치 설정 * ('20년) 53건 ('21년) 61건 ('22년) 62건	극지 및 대양분야 연구 논문 발행 건수 집계	증빙자료 국가과학기술 지식정보서비스 (NTIS) 등 확인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코로나 19 등 **외부환경**의 **불확실성 증대**로 **기업활동**이 **위축**되는 등 **다양한 지원 확대**를 바라는 **현장 목소리 다수 발생**

○ **유망 기업**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지원사항**을 **지속 발굴**하고, 사업계획 변경, 비대면 행사 개최 등 **적극적 대응 실시**

□ **코로나19 상황 호전으로 해양레저·관광 산업 회복 및 재도약 전략 수립**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내외 관광시장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으나, 백신접종 이후 일상 회복의 주된 수단으로 **'여행'**에 대한 **관심** 증가

* 세계관광객(만명): ('19) 145,900 → ('20) 40,000 / 방한객(만명): ('19) 1,750 → ('20) 252

- **국내 관광**에 대한 **수요***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각국의 **해외 관광 재개**에 따라 해외관광 수요도 증가 추세

* 국내 일반인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7.2%가 국내여행 의향이 있으며, 절반 이상이 '21년 대비 여행 횟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21.12., 한국관광공사)

○ **관광트렌드 변화**를 적극 **수용**하고 **기회 요인**을 **포착**하여 해양레저관광 정책 방향을 재정립하고 시장의 회복을 지원 추진

□ **다양한 新기술 개발**에도 국내기준 또는 실선탑재 이력(Track Record) 부재 등으로 **상용화 · 상업화 제약 요인**으로 작용

○ 국내 유망기술 발굴, 기준마련, 국가인증 획득 연계 및 관공선 우선 도입 등 국가주도로 **신기술 상용화 및 시장진입 지원**

□ **무인도서 관련 이해관계집단(토지소유자·지자체·환경단체 등)이 다양하여 무인도서 관리유형 지정(변경) 등 이해관계자별 설득·대응 필요**

○ 관련 전문가·지자체·소유자 등과의 무인도서 현장점검 및 이의신청을 통한 절차적 공정성 확보

□ **독도 관련 사업 추진시 안전·환경·문화재경관 보존 및 외교관계 등과 상충될 우려**

○ 일본의 독도영유권 도발에 대응하고, 독도 해양영토주권 관리능력 강화를 위하여 독도시행계획 수립 등 독도 범정부 통합관리체계 구축·협의를 통해 사업 추진

□ **전략적 양자협력 추진을 통한 해양수산기업 해외진출 지원**

○ 코로나19 영향 지속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교류·이동 제한 및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22.2)으로 촉발된 국제사회 긴장 고조

- (**대응전략**) 서면 또는 화상방식을 활용하여 입장 유사국과의 양자협력 및 고위급 접촉 확대 추진

□ **해양환경 개선 효과**는 강우량, 기온 등 기상조건과 육상 오염물질 유입 등 **외부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음**

○ 또한, 해양환경 개선 효과는 각종 정책의 시행 이후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 장기적 분석이 요구

(4) 기타 : 해당없음

성과목표 Ⅲ-1 해양 신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여 해양선도 경제를 조성한다.

(1) 주요내용

□ 해양에너지, 해양플랜트 등 해양과학 新산업 육성

○ 조류, 파력 등 해양에너지원별 핵심기술 개발로 조기 상용화를 추진하고 수중건설로봇 등 해양 新장비 개발과 사업화 지원

○ 해양플랜트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역량강화 지원을 추진하며, 해외 정부와의 협력 기반 구축

□ 해양 창업 생태계 조성 및 투자활성화 기반 마련

○ 해양수산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기획자, 사업화 자금, 투자유치 컨설팅 등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및 유망기업 발굴

○ 해양모태펀드 규모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투자기반 마련 및 투자협의회, 기업설명회(IR) 등 투자 활성화 촉진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0	'21	'22	'23			
① 해양신산업 상용화 기반 구축율(%)	-	100	100	100	해양수산 신산업 상용화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율을 목표로 설정	(차세대 선박해양플랜트 산업 인프라 구축율 +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노력도 + 친환경선박 보급 기반 마련율) ÷ 3 × 100	방침문서, 관련공문 등 내부자료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코로나 19 등 **외부환경**의 **불확실성 증대**로 **기업활동**이 **위축**되는 등 **다양한 지원 확대**를 바라는 **현장 목소리 다수 발생**

○ **유망 기업**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지원사항**을 **지속 발굴**하고, 사업계획 변경, 비대면 행사 개최 등 **적극적 대응 필요**

(4) 기타 : 해당없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1 해양에너지, 해양플랜트 등 해양과학 新산업 육성(Ⅲ-1-①)

해양개발과 (044-200-5241/5244/5248/5664)

□ 추진배경 (목적)

○ (**해양에너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부합하는 **해양재생에너지 기술개발·산업 육성** 필요

◦ 제9차 전력수급계획('20~'34)	⇒ '34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5.8%(재생 22.2)
◦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20~'34)	⇒ '34년 신재생에너지 주력 에너지원, 저탄소 이행 가속화
◦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 우리부, '30년 21.1만톤(해운 19.1, 어업 2)
◦ 재생에너지 2030 이행계획('17)	⇒ '30년 발전설비 용량 63.6GW 확충
◦ 해양e 2030 계획('18)	⇒ '30년 발전설비 용량 1.5GW(≒신고리원전 1기≒75만가구분)

- 풍부한 국내 **해양에너지 부존량**(총 147GW)과 **기술 수준**(최고 기술국 대비 81.5%) 고려 시 **지속적인 기술개발** 지원 필요

○ (**해양장비**) 해양장비 연구성과를 활용하여 해양수산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 기반 마련

- (**수중글라이더**) 핵심부품·장비 국산화를 통한 운용비용 절감과 장기 운용기술 개발을 통한 전문 해양관측 서비스 기반마련

- (**해양그리드**) 해양연구의 기초가 되는 고해상도 3차원 해양 정보를 확보하고 준실시간 정보 제공 서비스 체계 구축

- (**해양무인시스템**) ROV, AUV, USV 등 국산 해양무인시스템 성능평가를 위한 체계를 구축하여 해양장비 활성화 지원.

○ (**차세대 선박**) 탄소중립 사회 실현과 황산화물 배출 규제 등 IMO의 규제 대응을 위해 **선박**의 **친환경 연료 사용**은 필수적

- (**전기추진선**) **무탄소 연료**인 **전기**(現 보조전원수단으로 상용화)를 **주전원**으로 사용하기 위한 전기추진차도선 개발·실증 추진

- (**친환경선박**) 선박연료의 탄소 저감을 위한 LNG-암모니아 **혼소 기관 개발**과 다양한 **친환경 추진기술**의 **실증**을 위한 **해상 테스트베드**(2천톤급) 및 연구·실험시설 구축

○ (**해양플랜트**) 해양플랜트 산업 분야의 신시장 창출을 위하여 유지·관리, 해체 등 고부가가치의 서비스산업*으로 진출지원 추진

* 해양플랜트의 운송, 설치·시운전, 유지·관리, 해체 및 인력·물자 조달 등 부대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일련의 산업(산업 전체 부가가치의 50%↑)

- 해양플랜트 해체 실증을 통한 국내기업의 실적확보 및 국제인증 교육 등 해외진출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

○ (**해양심층수**) 해양심층수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기업 지원체계 구축, 홍보 등을 통해 미래 해양심층수 산업 육성 필요

○ (**해저공간**) 수심 50m에 5인이 30일 거주할 수 있는 해저 체류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하기 위한 실증 추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해양에너지**) 조류, 파력, 그린수소 등 **에너지원별 기술고도화** 및 **상용화** 추진으로 **해양에너지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 (**조류**) **1MW급 조류발전기 시운전** 및 **Track Record 확보**(12월)

- (**파력**) **다수모듈**을 활용한 **방파제 연계 파력발전** 실증플랜트 성능고도화 **신규사업 착수**(4월), 개념설계 및 설치후보지 조사

- (**그린수소**) 수전해, 해수담수화, 설비, 배터리 등 **실증시스템을 제작**하고 **육상성능평가**를 실시하여 **안전성 검증**(10월)

- (**SMR**) 해양용 SMR 개발 신규사업 착수(4월)

○ (**해양장비**) 핵심부품 국산화, 운용기술 개발 및 활용을 통한 관측 고도화, 성능 평가 체계개발 등 해양장비 활성화 기반 마련

- (**수중글라이더**) 기계학습 격자화 모형 프로토타입 개발 완료(3월), 부력엔진 현장시험모듈 개발 완료(6월)

- (**해양그리드**) 염분 채수자료 처리분석체계 설계 완료(9월)

- (**해양무인시스템**) 실해역 시험장(내해 및 외해 조건) 개념설계(12월)

○ (**차세대 선박**) 암모니아·전기 등 친환경 연료 기반 선박 개발 및 다양한 추진체계를 시험할 수 있는 해상테스트베드 구축

- (**전기추진선**) 이동식 전원의 선박 접속 시험(3월), 전기추진 차도선 실증 운항 및 중간 보고회(9월), 충전인프라 완공(11월)

- (**테스트베드**) 친환경 연료 추진기술 실증을 위한 만능 실증선박 용골 거치식(KEEL Laying, 11월), 육상시험설비 시운전(12월)

○ (**해양플랜트 서비스**) 국내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정보제공 및 인력양성, 해외 협력기반 구축 등 지원

- **해외시장 정보제공**(월간)과 **시장설명회**(11월), 고가장비 등의 **공동활용** 및 **타당성 조사 지원** 등을 통해 민간기업의 초기 기술개발 부담을 줄이고 해외진출 지원('23.4~)

- 인니 해양플랜트 해체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인니 및 동남아 시장진출**을 위한 **수출상담회 개최**(11월)

○ (**해양심층수**) 해양심층수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업 지원체계 구축 및 해양심층수 대국민 인지도 제고

- 해양심층수 시행계획 수립(5월), 「해양심층수법」 하위법령 개정(9월), 업계 간담회 개최(10월)

○ (**해저공간**) 해저 공간설계, 시공, 운영, 유지관리 기술을 개발하고, Test Bed를 구축하여 실증

- Test Bed Site 시추 조사 결과 분석 완료(3월), 해저공간 플랫폼 시공단계 3D 시각화 장치 제작(4월), 해수이용 무동력 냉각 수중 데이터센터 하우징 구조 도출(8월), 해저공간 플랫폼 기본설계 완료(12월)

○ (**현장 의견 정책반영**) 해양과학기술 전문 연구기관과의 정책협의회 및 업·단체 의견 수렴 등을 통한 정책개선 환류체계 구축

< '2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차세대 선박) 이동식 전원공급시스템 선박 접속시험	'23.3월	
	(해양장비) 수중글라이더 기계학습 격자화 모형 프로토타입 개발 완료	'23.3월	
	(해저공간) TEST Bed site 시추 조사 결과 분석 완료	'23.3월	국정 41-1
	(해양에너지) 방파제연계형 다수모듈 파력발전 추진기관 선정	'23.3월	국정 73-6
2/4분기	(해양플랜트) 해외시장 정보제공, 공동활용, 인니 해외진출 사업 착수	'23.4월	
	(해저공간) 해저공간 플랫폼 시공단계 3D 시각화 장치 제작	'23.4월	국정 41-1
	(해양심층수) 해양심층수 시행계획 수립	'23.5월	
	(차세대 선박) 전기추진차도선 실증 운항	'23.6월	
3/4분기	(해양에너지) 해양그린수소 실증시스템 육상성능평가	'23.9월	국정 73-6
	(해양심층수) 해양심층수법 하위법령 개정	'23.9월	
	(해양장비) 염분 채수자료 처리분석체계 설계 완료	'23.9월	
	(차세대선박) 해상테스트베드 선박 용골거치식	'23.9월	
4/4분기	(해양플랜트)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시장설명회, 수출상담회	'23.11월	
	(해저공간) 해저공간 플랫폼 기본설계 완료	'23.12월	국정 41-1
	(차세대선박) 해상테스트베드 육상 시험평가시설 시운전	'23.12월	
	(해양에너지) 1MW급 조류발전기 실해역 시운전	'23.12월	국정 73-6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정책·사업의 수혜자**) 일반국민, 해양에너지·해양플랜트·차세대선박·해양장비 등 연관 업체·근로자·구직자, 관련 연구기관 등

○ (**이해관계자**) 국내외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 및 유관기업 등

□ 기대효과

○ (**에너지·장비**) 해양에너지 기술개발·고도화를 통해 보급 기반 마련하고 해양장비 기술을 활용하여 해양수산 현장지원

○ (**차세대선박**) LNG 등 저탄소 연료와 전기 등 무탄소 연료 기반 선박 개발로 온실가스 감축 및 친환경선박 보급·확산에 기여

- (**LNG**) LNG추진선은 기존 연료 대비 황산화물 최대 99%, 질소산화물 85% 감축, 선제적 기술개발로 관련산업* 수주 확대

* (조선) LNG 연료추진선 관련 신·개조시장 약150조원 예상('13~'25, 노르웨이 선급)
(항만) LNG 연료공급(벙커링)량은 31.3만톤('16) → 2,600만톤('25) 증가 전망(노르웨이 선급)

- (**전기추진선**) 미세먼지 저감 등 연안 환경 개선*, 신산업(선박용 배터리 공급업) 창출, 기존 선박 대비 연료비 절감 효과**

* 연안 전기추진선박 전환에 따른 환경편익 연간 최대 19억원/척 발생

** 기존 선박 연료(중유·선박경유)에 비해 전기충전 비용(배터리 도입, 유지보수 비용 포함)은 약 2억원/척('28~'47 평균) 규모의 연간 연료비 절감 효과 발생

○ (**해양플랜트**) 국내 해양플랜트 서비스 산업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와 기술수준 향상**

*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시장 규모는 약 300조원 규모(동남아 수리·해체 분야 시장규모 : 32조원 추정) / ** 선진국대비 기술수준 '21년 30% → '30년 85% 수준

○ (**해저공간**) IT기업 수중데이터센터, 잠수사·우주인 훈련장, 의료·생명과학 연구 공간, 해양레저·관광 등의 분야에서 활용

○ (**해양심층수**) 해양심층수 산업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이해당사자 간 협업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산업 활성화에 기여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2	'23
해양자원이용기술개발(Ⅰ-2-R&D①)			
① 해양자원이용기술개발(2041)	일반회계	71 (132)	85 (164)
▪ 해양청정에너지기술개발(R&D)(301)	일반회계	40	-
▪ 조류발전 청정재생에너지 시스템 개발(R&D)(304)	일반회계	-	-
▪ 해양재생에너지 연계 그린수소 생산기술개발(R&D)(306)	일반회계	31	65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파력발전 상용화 기술개발(R&D)(307)	일반회계	-	20
연구장비개발 및 인프라구축(Ⅰ-2-R&D②)			
① 연구장비개발 및 인프라구축 (2042)	일반회계	105 (507)	103 (702)
▪ 해양장비연구성과활용촉진사업(R&D)(313)	일반회계	72	45
▪ 해저공간 창출 및 활용 기술개발(R&D)(318)	일반회계	33	41
▪ 고품질 준실시간 해양그리드 데이터 서비스 체계 개발(R&D)(329)	일반회계	-	17
해양수산산업진흥(R&D)(Ⅰ-2-R&D(3))			
① 해양수산산업진흥(2046)		424 (642)	173 (646)
▪ LNG벙커링 핵심기술개발 및 체계구축(300)	일반회계	39	31
▪ 전기추진차도선 및 이동식전원공급시스템개발(302)	일반회계	127	22
▪ 해양플랜트 친환경 해체 실용화 기술개발(306)	일반회계	186	9
▪ 해양 무인시스템 실증 시험·평가기술개발(322)	일반회계	-	20
② 탄소중립기반구축 기술개발(6431)			
▪ 친환경선박 혼합연료 기술개발 및 실증(752)	기후대응기금	91	79
해양정책 및 문화기반 조성 (Ⅰ-2-일반재정①)			
① 해양문화 활성화(2031)		38 (1,074)	38 (1,126)
▪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및 기업투자유치 지원(312)	일반회계	38	38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0	'21	'22	'23			
① 해양에너지 실증 시설 추진율(%) (가중치 50%)	신규	신규	100	100	① 파력발전 실해역 시험장 이용건수(2건, 가중치 30%) ② 해양그린수소 실증시스템 육상성능평가 (가중치 40%) ③ 1MW급 조류발전기 시운전(가중치 30%)	①*30%+②*40% +③*30%	과제 연차보고서 내부자료
② 차세대 선박과 해양플랜트산업 육성기반 구축율(%) (가중치 50%)	신규	신규	100	100	① 차세대선박구축공정율 (가중치 50%) (ⓐ 해상테스트베드 용골 거치식(KEEL Laying)실시(50%), ⓑ전기추진차도선 실증운항 완료(50%)) ②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발전기반 구축율(가중치 50%) (ⓐ 해외진출타당성조사지원 (4개기업, 30%) ⓑ 한-인니 수출상담회(1회, 40%), ⓒ 시장설명회(1회, 30%)	차세대 선박 구축 공정율*0.5+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발전기반*0.5	과제 연차보고서 내부자료

2 해양신산업 전략적 육성을 위한 해양바이오산업 기반 구축(Ⅲ-1-②)

해양수산생명자원과 (044-200-5670 / 5671 / 5672)

□ 추진배경(목적)

○ (**성장 잠재력**) 국내 해양바이오 시장은 **연간 7.6%**의 성장률을 보이며 **잠재력**이 커 **유용자원**의 전략적 **확보**를 통한 글로벌 시장 선점 필요

* EU는 해양바이오 산업이 **청색 경제(Blue Economy)**의 **핵심이 될 것이며,** OECD (Marine biotechnology, '17)는 **글로벌 문제 해결**과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

○ (**중장기 전략**) **해양바이오산업 신성장 전략**('22.7)*에 따라, 해양바이오 핵심기술 개발, 산업생태계 조성, 기업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중장기 정책의 체계적 · 단계별 추진 필요

*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총리주재, '22.7.28) 상정, 5년 단위('22~'27) 중장기 계획

○ (**자원 주권 확보**) 나고야의정서*, BBNJ** 등 해양생물자원 이용 제한 강화에 대응하여 각국은 **자원 확보** 및 해양바이오 **인프라 구축 지원 확대** 추세

* 생명 자원에 접근 시 사전승인 및 상업적 이용에 따른 이익공유 의무화 규정('17.8)
** 공해상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문서

□ 주요 내용 및 추진계획

◈ 글로벌 생명자원 확보 경쟁 속에서 **자원주권**을 **강화**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해양바이오 산업 활성화 기반 강화**

❶ 체계적·효율적 해양수산생명자원 확보

○ (**자원확보**) **미탐사 해역**(동남해, 독도 등) 해양생명자원조사* 추진('23.12), 해외 거점** 확대('23.12)를 등을 통한 **체계적 자원확보**

* 2단계('22~'26) 법정 자원조사 계획('22.1)에 따라 '23년 2년 차(동남해) 조사 수행
** 현행 5개소(베트남, 러시아, 말레이시아, 동티모르, 코스타리카)→'23년 1개소 추가(세이셸공화국, 잠정)

○ (**자원관리**) 해양생명 **자원 주권 강화**를 위하여 국내 서식 자원의 **종 목록을 구축·공개**('23.4)하고 확보 자원의 **등급화***('23.12) 추진

* 경제·학술·생태적 가치 고려 1등급 : 우선확보 대상종 지정/ 1~2등급 : 국외반출승인대상 지정

-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 보존기관** 운영 관리방안 지침 제정('23.3.)* 및 **희소표본** 종합관리대책 마련('23.6)** 등 자원 **관리체계 강화**

* (기존)1인 연구책임별 → (개선)식물, 미생물, 소·중·대형 동물 등 5개 분류군별

** '대한제국 시기'(1900~1909), '일제강점기'(1910~1945) 수집 표본 및 '북한지역'(압록강, 대동강 등), '대마도' 등 다양한 지역의 생태·학술적 가치가 높은 희소자원 1,325점 보유(수산과학원)

○ (**국제규범 대응**) **BBNJ 협정 정부간회의 현장대응**('23.2~3) 및 전문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한 **대응전략 마련**('23.2~12)

* Bio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유엔해양법협약하의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문서

○ (**기본계획 수립**) 자원의 **전략적 확보·효율적 관리·지속 가능 이용**을 위한 '**제2차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리기본계획**'('24~'28) **수립 추진**('23.12)

* 해양생명자원법 제8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따른 법정 기본계획

❷ 해양바이오 산업화 기반 강화

○ (**바이오뱅크 활성화**)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기업 공동연구**를 추진('23.3~)하고, 산업 활용도가 높은 **항생제* 소재 뱅크 신규 구축**('23.12)

* 항생제 소재 확보 및 활성 분석(~'23.10)→효능 등급화('23.11)→서비스 제공('23.12)

○ (**산업소재 고도화**) 해양생물의 항암·항염 등 **산업적 효능을 탐색*** (950종,'23.12) 하고 수입 의존도가 높은 **유망 소재**** **국산화** 기술개발(협약, '23.4)

* 국가생명연구자원선진화(다부처)사업 ('21~'26 483.01억원, '23년 90.04억원)

** 콜라겐, 피코시아닌, 포르피린, 잔토필, 알긴산, 베타-글루칸

○ (**상용화 기술확대**) 그린·화이트 바이오 분야 등 해양바이오 상용화 기술개발을 위해 **융·복합 R&D 지속 추진**

- 現 해양바이오수소 실증플랜트의 고도화 및 해양폐기물 가스화 기술과 연계한 청정 **해양바이오수소 상용화** 추진(기획연구,'23.5)

- 해조류 기반 생분해성 **바이오 플라스틱** 소재 개발 및 해양수산부산물로부터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에 쓰이는 해양바이오 **소재 개발**(연중)

○ (**산업 거점화**) 지역별 산업생태를 고려한 **기업지원 인프라 확충**

- **해조류 활성소재 인증생산시설** 착공('23.11), **해양바이오 인증지원센터** 및 **해양바이오 메디컬 실증연구센터** 건립 추진('23.12)

중부권	산업화 지원센터('20~'23, 347억원, 서천), 인증지원센터('23~'26, 250억원, 서천)
서남해권	해조류 활성소재 인증 생산 시설('21~'24, 250억원, 완도)
동해권	해양바이오 메디컬 실증연구센터('23~'27, 300억원, 포항)

○ (**인증 지원**) 해양생물 유래 **기능성 소재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등 **연구개발 수행** 및 인증제도 개선* 추진

* 기능성 소재 인증을 위한 안전성 평가 등 관련 규정에 대한 과학적 분석 및 국내·외 사례 조사를 통해 개선이 필요한 과제 발굴('23.12)

❸ 기업지원체계 마련

○ (**법령 개정**) 산업육성 **정책 추진의 구체적·체계적 근거 마련**을 위해 해양바이오산업 정의 조항 등 법 개정안* 마련('23.12)

* 現 「해양생명자원법」에는 해양수산 생명자원, 해양수산생명공학 등에 대한 정의는 있으나, 산업에 대한 정의 부재

○ (**인력 양성**) 해양바이오기업 재직자의 핵심역량 배양을 위해 해양소재 특화 장비 활용, 분리·정제 등 **현장 맞춤형 교육실시**('23.6, 12)

○ (**협력 강화**) 산업계·지자체 등과 공동으로 '**해양바이오 박람회**'를 개최하여 우수기술, 제품 전시·홍보('23.6)

○ (**플랫폼 구축**) 해양바이오 기업의 기술마케팅, 창업, 투자, 연구 장비 제공 등 **기업 성장지원을 위한 스마트 해양바이오 플랫폼** 구축('23.12)

❹ 해양수산생명자원 가치 및 중요성 인식 제고

○ (**체험형 서비스 제공**) 해양생물 주제 온·오프라인 교육 운영 및 **찾아가는 전시·교육*** 서비스 제공

* 초중고 학교로 찾아가는 해양수산생명자원학교('23.5.~11.) 및 찾아가는 씨큐리움('23.8.~11.) 운영

○ (**전시관 리뉴얼**) 첨단 디지털기술을 결합한 LED 미디어아트 신규조성 등 해양생물자원관 **씨큐리움**(전시관) **리뉴얼** 실시

* LED 전광판, 운영시스템 설치 및 영상 제작('23.4.~12.)

○ (**사회적 가치실현**)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기부 프로그램 운영**으로 양질의 **교육 기회 확대**

* 해양생물자원 체험 제공(바다나눔), 해양생물 분야 진로 탐색 지원(바다드림) 등('23.4~11.)

< '23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제2차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리 기본계획 수립 추진	'23.1월	
	해양바이오 산업화 거점(중부권) 조성 관련 관계기관 협의	'23.1월	국정 73-6
	BBNJ 5차 속개 정부간회의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현장대응	'23.2월	
	기탁등록 보존기관 지침 제정 및 등급부여 종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23.3월	
2/4분기	해양수산생명자원 목록 작성 및 목록집 발간	'23.4월	
	해양생물 특화 안전성 평가기준(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23.5월	국정 73-6
	독도 해양생물자원조사 및 울릉도 공동발굴 조사	'23.5월	
	해양바이오 박람회 개최	'23.6월	국정 73-6
3/4분기	해양생물 특화 안전성 평가 기준(안)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23.8월	
	전시관 리뉴얼 공사 착수	'23.9월	
	해양바이오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	'23.9월	
	해양바이오분야 현장 소통 추진	'23.9월	
4/4분기	해조류 활성소재 인증생산시설 착공	'23.11월	국정 73-6
	해양바이오뱅크 관련 해양소재 효능 탐색 및 항생제 소재뱅크 구축	'23.12월	국정 73-6
	스마트 해양바이오 플랫폼 구축	'23.12월	
	「해양생명자원법」 개정(안) 마련	'23.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해양바이오 관련 업계(직접 수혜자), 학생(해양생명자원 관련 교육 직접 수혜), 바이오 업계를 통해 개발된 식품, 의약품을 사용하는 국민(간접 수혜자)

○ (**이해관계집단**) 나고야의정서 해양유전자원에 대한 이익공유 확대, 공해 및 심해저 해양활동을 규제하는 국제규범 신설 시 국내 산업 및 해양과학조사 연구기관 등

□ **기대효과**

○ **기업 수요를 바탕으로 한 산업 생태계 조성 본격화**

- '**해양바이오산업 신성장전략**('22.7.)'에 따라 해양바이오 산업지원 강화 및 체계적인 육성기반 마련

- 산업계 **수요기반 유용 소재** 발굴, 바이오뱅크 활성화를 통해 기초기술 및 원료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업계 지원강화**

- 인증지원센터, 메디컬 실증연구센터 설계 착수 등 권역별 **산업화지원 인프라 조성 본격화**

○ **해양바이오 산업 원천소재 확대 및 자원이용 활성화**

- 과학적·체계적인 자원조사 확대, 유용자원에 대한 신속한 분양을 위한 규제개선 등을 통해 **전략적 자원확보** 및 **관리 체계화**

- 해외 해양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용 등을 규제하는 국제규범 신설 등에 체계적 대응을 통해 **국내 영향 최소화** 도모

○ 온·오프라인 전시·교육 프로그램 운영, **소외계층 청소년** 참여 기회 확대, 국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해양생명자원 가치 및 중요성 **대국민 인식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22	'23
해양수산생명공학기술개발(Ⅰ-2-R&D④)[2]			
① 해양수산생명공학기술개발(R&D)(2044)[3]	일반회계	394.54	358.04
		(394.54)	(358.04)
▪ 해양수산생명공학기술개발(R&D)(300)	일반회계	14.4	-
▪ 해양바이오 전략소재 개발 및 상용화 지원(R&D)(303)	일반회계	84.6	46
▪ 국가생명연구자원선진화(해수부)(R&D)(305)	일반회계	96	90
▪ 빅데이터 기반 해양 바이러스 제어 및 마린바이오틱스 개발(R&D)(308)	일반회계	80	75
▪ 해양바이오수소 생산 상용화 기술개발(R&D)(309)	일반회계	2,2	19
▪ 해양바이오 산업소재 국산화 기술개발(R&D)(311)	일반회계	42.5	55
▪ 해양수산부산물 바이오 소재화 기술개발(R&D)(312)	일반회계	50	50
▪ 해양바이오원료·제형화기술개발(R&D)(314)	일반회계	0	18
▪ 해양수산바이오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R&D)(406)	일반회계	5	5
해양생명자원조사	* 성과관리번호는 없음(10억미만 소액사업으로 성과관리 비대상)		
① 해양생명자원조사(일반)(1032)		10.5	10.5
		(10.5)	(10.5)
▪ 해양생명자원조사(301)	일반회계	6	8
▪ 해양바이오산업화지원(302)	일반회계	4.5	6
해양산업육성및영토관리			
① 해양문화 활성화(1031)			
▪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및 기업투자유치 지원(일반)(312)			
· 해양바이오 산업화 지원센터	일반회계	43.2	58.7
· 해조류 활성소재 인증생산시설	일반회계	50	10
· 해양바이오 메디컬 실증연구센터	일반회계	2	3.1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0	'21	'22	'23			
① 해양수산생명 자원주권 강화율 (%) (가중치 50%)	100	100	100	100	2단계('22~'26) 법정 자원조사 계획상 확보목표 설정 ·확증표본(750종), 미확보종(35종) 해양바이오뱅크 소재 효능 정도 등급화(950종,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사업 '23년 성과목표)	① 확증표본 750종 +미확보종 35종 확보(50%) ② 소재 효능 950종 등급화(50%)	결과보고
②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노력도(%) (가중치 50%)	100	100	100	100	해양바이오뱅크 분양 건수 290건(최근 3년 평균 241건 대비 20%↑) 해양바이오 전문인력 양성 30명(전년대비 20%↑)	① 해양바이오뱅크 분양 건수 290건(50%) ② 해양바이오 전문인력 양성 30명(50%)	결과보고

3 해양산업 창업·투자 생태계 조성(Ⅲ-1-③)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 (044-200-6225/6229)

□ 추진배경 (목적)

○ 창업부터 사업화, 투자유치 등 **전주기 성장 사다리**를 구축하여 해양수산 **신산업 활성화** 및 **기업·민간 주도** 경제성장 실현 도모

- 해양수산 분야의 **창업 활동**은 상대적으로 저조*하므로 유망 해양수산기업 발굴 및 성장단계별 체계적 지원 필요

* 해양수산 창업사업체와 벤처기업 비중은 각 전체의 4.3%, 3.1% 수준

○ 해양 신산업*의 안정적인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해양모태펀드 조성·운영**을 통해 투자기관의 위험 분담 및 해양 분야 민간투자 확대

* 세계 해양수산 신산업 시장은 연평균 8.5% 성장해 2030년 4,749억 달러 전망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창업·사업화 지원**) 유망기업 보육,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해양수산 창업 활성화 유도 및 스타트업의 성장 디딤돌 마련

-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해양수산기업을 '예비 오션스타'로 선정하여 집중지원*을 통해 우수사례 창출 및 후속 성장 유도

* 사업화 자금·컨설팅 우대 지원(가점, 우선배정 등) 및 투자유치 지원(기업설명회) 등

- '창업설명회' 개최를 통해 멘토링을 지원하고, 유망 스타트업을 직접 발굴하여 보육·투자까지 지원하는 창업기획자(4개사) 운영('23년, 12억원)

- 시제품 제작, 홍보 등을 위한 사업화 자금 지원* 및 컨설팅 제공**을 통해 사업화 역량 및 투자유치 역량 강화, 기업 자생력 제고

* (사업화 자금 지원 사업) '23년 30개社, 최대 3천만원 지원
** (사업화 컨설팅 사업) '23년 15개社 지원 / (투자유치 컨설팅 사업) '23년 12개社 지원

- 기술개발, 창업기업의 유망기술 발굴 및 기술 고도화, 국내외 인증 확보 지원을 통해 유망기술의 사업화 및 국내외 시장진출 지원

* 해양수산 신산업 기술사업지원 사업(105억원), 해양수산 기술창업 Scale-up사업(98억원)

- 해양수산 일자리 홍보 및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해양수산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 구인기관-구직자 간 매칭 지원

○ (**투자 활성화**) 정책펀드 확대, 투자기관의 해양수산 분야 관심·이해도 제고 등을 통해 민간투자 활성화 기반 마련

- 해양모태펀드 지속 출자를 통해 해양분야 중소 · 벤처기업에 중점 투자하는 자펀드를 확대*하여 민간투자 촉진

* ('19) 2개 자펀드, 295억원 → ('20) 4개 자편드, 593억원 → ('21) 5개 자편드, 736억원 → ('22) 6개 1,036억원 → ('23) 7개, 1,222억원 조성 추진

- 벤처캐피탈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43개사) 운영*, 투자 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투자기관 간, 기업-투자사간 네트워크 구축 지원

* 투자기관 대상 기업 IR(연 4회), 팸투어(연 3회), 투자심사역 양성과정(연 2회) 등 진행

○ (**'22년도 미흡과제 개선계획**) 정책추진 노력 및 효과 제고를 위해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 개최 및 사업화 R&D 신규과제 확대 추진

- 한국벤처투자(해양모태펀드 관리기관) 및 해양자펀드 운용사 등 투자 관계기관와 유망기업과의 간담회를 통해 창업·투자 개선사항 모색

- 전년 대비 증액된 '23년 Scale-up 연구개발 지원 예산으로 신규과제 규모를 확대*하여 더 많은 기업에 사업화 연구개발 기회 제공

* 해양수산 기술창업 Scale-up : (22년) 신규과제 12개 → (23년) 신규과제 31개

< '2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해양모태펀드 출자계획 수립	'23.1월	국정 73-6
	창업·투자 지원사업 통합 공고	'23.2월	
	해양수산 창업기획자 선정	'23.3월	국정 73-6
	해양펀드 투자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23.3월	
2/4분기	해양모태펀드 출자사업 계획 공고	'23.4월	국정 73-6
	해양수산 사업화 자금 지원사업 지원기업 선정	'23.5월	
	해양수산 신산업 기술사업화 지원기업 선정	'23.5월	
	해양수산 기술창업 Scale-up 지원 신규과제 선정	'23.5월	
	해양수산 투자기관 협의회 개최	'23.6월	국정 73-6
3/4분기	투자기관 대상 해양수산 유망기업 팸투어 실시	'22.8월	
	해양수산 창업설명회 개최	'23.9월	
4/4분기	예비오션스타 기업 간담회	'23.10월	
	투자심사역 양성과정 운영	'23.11월	
	해양수산과학기술주간 개최	'23.12월	
	해양수산 취업박람회 최종보고회	'23.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정책·사업의 수혜자**) 해양수산 분야 예비 창업자 및 관련 유망 기술을 보유한 기업·기관 등

○ (**이해관계집단**) 수혜기업과 경쟁 관계에 있는 해양수산 기업

□ 기대효과

○ 해양 분야의 우수한 창업 아이템과 예비창업자를 발굴하여, 창업 붐(boom)을 조성하고, 해양수산 분야 일자리 창출 확대

○ 창업 초기부터 성장, 성숙 등 성장주기별 창업기업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투자유치 지원을 통해 오션스타 기업 발굴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2	'23
해양문화활성화(Ⅰ-2-일반재정②)			
① 해양문화활성화(2031)		446.19	332.68
		(1,211.11)	(1,126.4)
▪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및 기업투자유치(312)	일반	246.19	202.68
▪ 해양모태펀드(313)	일반	200	130
해양기술역량강화(Ⅰ-2-R&D⑨)			
② 해양수산기술역량강화(2045)		173.85	204.25
		(193.85)	(228)
▪ 해양산업 수요기술 개발사업(R&D)(302)	일반	55.35	-
▪ 해양수산 기술창업 Scale-up사업(R&D)(304)	일반	69.75	98.75
▪ 해양수산 신산업 기술사업화 지원(R&D)(306)	일반	48.75	105.5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0	'21	'22	'23			
① 해양수산 분야 창업·투자지원 업체 수(개소) (가중치 70%) (공통)	124	197	231	254	해양수산 분야 창업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10% 상향(과거 3개년 평균(184) 기준 38%↑)하여 도전적 목표 설정	지원업체 수	내부자료 KIMST 보고서 등
② 투자유치액(억원) (가중치 30%) (공통)	144	482	346	372	민간 투자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안정적 목표의 도출을 위해 최근 3년간('20~'22) 평균 투자유치액(324) 대비 15% 상향된 도전적 목표치 설정	지원업체의 투자 유치금액 합계	내부자료 KIMST 보고서 등

성과목표 Ⅲ-2 국민 행복을 위해 해양레저관광·해양문화 강국으로 도약한다.

(1) 주요 내용

□ **해양레저·관광 저변확대를 위한 콘텐츠 강화로 국민레저수요 창출**

○ (**관광 콘텐츠 개발**) 해수욕장·해안누리길 등 해양관광 콘텐츠 개선, 우수 관광상품 개발, 섬 관광 활성화 대책 마련

○ (**연안크루즈**) 크루즈 터미널 운영 활성화 및 연안크루즈 육성 및 지원

○ (**레저스포츠 활성화**) 해양레저스포츠 저변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해양레저스포츠 체험프로그램 및 대회 운영

□ **해양치유·마리나·수중레저 등 해양레저관광 핵심 新산업 육성**

○ (**마리나**) 수도권, 동남·서남해안권 등 권역별 입지 특성, 도시·어촌, 내륙·해수면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마리나 인프라 기능 확충

- 마리나정비업 신설을 통한 마리나 안전성 확보 및 일자리 창출, 레저선박 제조 및 연관 산업 육성을 통한 마리나산업 고도화

○ (**수중레저**) 수중레저 활동 안전 기반 조성과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해양경관이 뛰어나고 생태계가 보전된 해중경관지구 조성

○ (**해양치유**) 해양치유 시범지구(센터) 조성과 해양치유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관계부처 협업, 제도적 기반 마련

□ **해양문화 진흥을 통해 바다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

○ 권역별 해양문화 인프라를 확대하고, 해양교육·문화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추진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0	'21	'22	'23			
① 국민 해양레저관광 체험율(%) (공통)	9.8	7.7	10.1	17	해양레저관광 수요와 관련 산업 활성화 정도를 간접 확인할 수 있는 전국민 해양레저관광 체험*율 목표치를 코로나 19 펜데믹 이전인 '19년도까지 실적과 코로나19 이후 대폭감소된 실적('20~'21년도)을 고려하여, '22년에 '21년도 당초 목표인 17%를 달성할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나, '22년도에도 미달성(10.1%)하여 '23년도에도 17%로 재설정 * 최근 3년간 이용객률의 추세선(1.4546xln(x)+13.798=15.814)을 토대로 추세를 반영할 수 있으나 추세대비 약 1.2%p 향상된 적극적 목표치 산정	5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약3천여명)으로 해양레저관광(지역축제, 해양레저스포츠, 마리나, 해안가 캠핑) 체험율을 측정	표본통계조사 (통계조사용역)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내외 관광시장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으나, 백신접종 이후 일상 회복의 주된 수단으로 **'여행'에 대한 관심** 증가

* 세계관광객(만명): ('19) 145,900 → ('20) 40,000 / 방한객(만명): ('19) 1,750 → ('20) 252

- **국내 관광**에 대한 **수요***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각국의 **해외 관광 재개**에 따라 해외 관광 수요도 증가 추세

* 국내 일반인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7.2%가 국내여행 의향이 있으며, 절반 이상이 '21년 대비 여행 횟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21.12., 한국관광공사)

○ 단체관광의 퇴조 속 **소규모·개별화 성향** 증가, **안전**과 **위생**을 **중시**하는 경향 강화 등으로 **웰니스·휴식·치유** 수요 증가

* 해양·섬·산림·공원 등 **저밀도 청정지역** 중심의 **실외관광지** 선호도 증가

○ 관광 환경 및 국민 수요 변화에 따라 **휴식·휴양 목적**의 **관광 콘텐츠 개발** 및 **관련 산업 육성** 기반 조성 필요

○ 마리나산업 중 서비스업은 컨텐츠 제약 확대, 수요층과의 매칭, 장비산업은 제약된 브랜드·판로 개선을 위한 정부지원 필요

○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한 컨텐츠 발굴, 해양레저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민·관 전문가 협의체 운영 추진

(4) 기타

□ (마리나) **제2차 마리나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해양수산부 홈페이지 www.mof.go.kr), 마리나산업 전략적 육성 대책('15.5/경제관계장관회의), 조선밀집지역 경제활성화 방안('16.10/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 (해양치유)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계획**(해양수산부 홈페이지 www.mof.go.kr),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대책**('19.5/경제관계장관회의)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1 권역별 해양관광명소 조성 및 해양관광 콘텐츠 확산(Ⅲ-2-①)

해양레저관광과 (044-200-5251 / 5252)

□ 추진배경 (목적)

○ **국정과제 73-7**(마리나 육성 등 해양레저관광 강국 도약) 관련 연안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권역별 해양관광인프라 조성** 및 **해양관광 콘텐츠 확산** 추진

- 마리나, 수중레저, 크루즈, 해양치유 등 해양관광 **분야별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해양치유**) '해양치유 기본계획('22~'26)' 수립('21.12.)에 따라 고시 제정,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해양치유지구 조성 기반마련

- 해양치유 연구개발, 해양치유자원 정기 조사, 해양치유센터 조성, 해양치유 체험 프로그램 운영 관계기관 협의체 구축 추진

○ (**레저산업**) 장비산업 판로확대 지원, 신기술 발굴·표준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및 서비스업 제도개선 분야 전략 마련

- 보트쇼 등 전시·홍보 확대, 해외 전시회 참가지원 재개, 마리나 제도 점검·관리, 산업 집적화 및 규제개선 전략연구 추진

○ (**콘텐츠 다양화**) 코로나19로 장기간 위기를 겪은 신생·소규모 업체 대상 경영 컨설팅 지원 및 대형여행사와 연계 협업 촉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

- 대규모 인프라 구축 외에도 국민들이 부담없이 해양관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된 특색있는 콘텐츠 지속 개발

- 또한 해양레저관광을 즐길 수 있는 대표 휴양공간인 해수욕장의 안전관리 강화 및 테마 해수욕장 운영 활성화 추진

○ (**레저스포츠 활성화**) 소비자-사업자 간 연계 가능한 행사*, 국민의 선호도가 높은 체험·대회, 지자체 협업 및 생존수영 교육 등을 추진하여 해양레저스포츠 대중화와 저변확대 도모

* 아시아컵 국제요트대회 개최, 해양소년단 리갓타대회 등

○ (**크루즈 활성화**) 크루즈 운항 정상화, 외국적 크루즈선 유치 및 국내 저변확대 등을 위한 활성화 대책 시행

- 국내 입항 예정 주요 크루즈선의 방역실태, 주변국 CIQ 운영 상황 등 확인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합동점검 시행(1분기)

- 외국적 크루즈선 기항 확대를 위한 관계기관 공동 현지 포트 세일즈(2분기) 및 권역별 선사 미팅(3분기) 등 추진

- 국내 크루즈 저변 확대를 위한 매체 홍보 진행 및 크루즈 체험단 운영(2분기) 등

○ (**해양레저 인프라 조성**) 해양관광 수요 증대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연안 지역에 해양레저관광거점* 확대 및 바다역(소규모 계류시설) 조성** 추진

* (기추진 중, 5개소) 군산, 강원고성, 제주, 보성, 시흥 (신규, 2개소) '23. 대상지 선정 예정

** (국정과제 73-7) 제2차 마리나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수립('25.)을 통해 바다역 도입환경 분석 등 검토 예정

○ (**'22년도 미흡과제 개선계획**) 성과지표 개선·보완 및 인프라 조성률 제고, 해양치유 활성화방안 마련 등 정책추진 노력 개선방안 제고

- (**성과지표**) '해양레저관광 수요창출 노력도' 성과지표에 대해 크루즈선 입항 항차 달성률과 해양관광 중대 행사 추진실적 중심으로 측정산식을 수정(6월)

- (**정책추진**) 해양관광인프라 조성률 제고 및 해양치유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 등 추진('23.11월)

< '2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마리나정보시스템 개선 추진	'23.1월	국정 73-7
	남해안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23.2월	업무보고
	거점 마리나항만 1개소 공모 추진	'23.3월	국정 73-7
	국내입항 예정 주요 크루즈선 승선점검	'23.3월	
	해양치유 활성화 협의체 회의 개최	'23.3월	
	해양관광 SOC 사업 협의회 개최	'23.3월	
2/4분기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 착수	'23.4월	국정 73-7 대통령 지시사항
	제2차 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 수립	'23.5월	
	신규 해양레저관광거점 선정 추진	'23.6월	
	우수 해양관광상품·아이디어 공모 및 선정 추진	'23.6월	
	해양치유 활성화 협의체 회의 개최	'23.6월	
	해양관광 SOC 사업 협의회 개최	'23.6월	
3/4분기	전국해양스포츠제전 개최	'23.8월	
	해외 크루즈 포트세일즈 추진	'23.9월	
	보급형 요트제조 기술개발연구 진도관리 현장 점검	'23.9월	국정 73-7
	제2차 마리나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용역 착수	'23.9월	국정 73-7
	해양치유 활성화 협의체 회의 개최	'23.9월	
	해양관광 SOC 사업 협의회 개최	'23.9월	
4/4분기	해수부장관배 서핑대회 개최	'23.10월	
	완도 해양치유센터 준공	'23.10월	
	2023년 국제마리나컨퍼런스 개최	'23.12월	국정 73-7
	해양치유 활성화 협의체 회의 개최	'23.12월	
	해양관광 SOC 사업 협의회 개최	'23.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해양레저관광 이용자, 레저관광 운영 및 관련 사업자, 관광지 상가 등 지역경제 소상공인, 지역주민 등

○ (**이해관계자**) 지역주민, 여행사, 여행상품 관련 업체, 일본, 대만 등 크루즈 유치경쟁 주변국, 크루즈 선사, 대리점 등

* 정책·사업의 수혜자와 이해관계자를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제시

□ **기대효과**

○ 권역별 해양레저관광 **인프라 조성**을 통해 지역별 **해양레저관광 활성화**의 **기반** 역할 수행

○ **해양치유 산업화**를 통한 해양 휴양관광, 치유제품, 서비스 등 관련 산업의 융합·발전 및 **연안지역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 **국민 건강증진 도모**

○ 마리나 등 레저장비 산업분야 전시·판로확대 및 기술지원을 통한 기업활력 제고, **해양레저관광 컨텐츠**에 대한 **국민관심 증대**

○ 관광 욕구를 충족시키는 콘텐츠 발굴과 소비자-사업자 연계지원을 통한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성과가 나도록 **선순환 생태계** 구축

○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관광 수요에 대응, 콘텐츠 발굴과 해양관광업계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으로 **해양레저관광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2	'23
해양관광육성(Ⅰ-2-일반재정④)			
① 해양관광육성(2034)	일반회계	588	579
▪ 해양관광육성(310)		588	579
- (해양관광인프라 조성)		519	503
- (해양관광 콘텐츠 개발 지원)		21	30
-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 지원)		37	33
- (해양레저관광 정보 기반구축)		3	3
-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지원)		5	7
해양수산업진흥(R&D)(Ⅰ-2-일반재정⑩)			
① 해양수산업진흥(R&D)(2046)		661	661
▪ 농림해양기반 스마트 헬스케어 기술개발 및 확산(해수부)(R&D)(307)		12	14
▪ 해양레저장비 및 안전기술 개발(R&D)(308)		20	40
▪ 해양치유자원 효능 검증 및 활용 기술개발(R&D)(313)		24	28
해운물류지원(Ⅲ-4-일반재정③)			
① 해운물류지원(6133)		8	8
▪ 크루즈산업활성화지원(310)		8	8
마리나 항만개발(Ⅲ-3-일반재정⑬)			
① 마리나 항만개발(5062)	교특회계	153	88
▪ 마리나 항만(301)		153	88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0	'21	'22	'23			
① 해양레저관광 수요창출 노력도 (가중치 40%)	신규	신규	100	100	콘텐츠 개발, 소비자-사업자 연계지원 등 해양레저관광 수요 창출을 통한 해양관광산업 활성화 달성을 위한 크루즈 입항 및 행사추진 실적을 목표로 설정 ① 크루즈선 입항 항차 달성률(50%) * 코로나19 이전 최근 2년간 평균 입항 항차수의 80%인 119항차로 설정('18년 131항차, '19년 165) ** '23년 크루즈선 입항 항차/119 * 100 ② 전시회, 대회 등 해양관광 증대 행사 추진실적(50%)	① 국내항에 입항한 크루즈 입항 목표 항차(119항차) 달성률(%)(50%) + ② 해양관광 증대 행사실적(연 2회 개최)(50%)	① 항만공사, 지자체 자료 ② 결과 보고 및 추진실적
② 해양레저관광 기반 조성 추진율(%) (가중치 60%)	신규	신규	51.4	60	해양관광 인프라 총사업비 집행률(%) * 총사업비 누계 집행실적: '16~(당해년도-1년) 집행금액 합계 + 당해연도 집행실적 ** 총사업비 대상사업('16~): 해양레저관광 거점(5개소), 마리나비즈센터(2개소), 해양치유센터(4개소), 해양 교육원(2개소), 연안체험공원(1개소)	① 인프라 사업비 누계 집행실적	dBrain

2 해양교육문화 콘텐츠 확충 및 향유기회 확대(Ⅲ-2-②)

해양정책과 (044-200-5226/5231/5294)

□ 추진배경 (목적)

○ 해양교육과 해양문화 향유기회의 확산으로 바다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해양강국 도약 기반 조성

- 학교 및 사회에서의 해양교육 콘텐츠 보급으로 국민의 해양교육 접근성을 높여 국민의 해양적 소양*을 확산

* (Ocean Literacy) 해양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과 내가 해양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

- **계층·지역**에 따른 **해양문화** 향유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기반을 확대하여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할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해양교육·문화 **콘텐츠**의 **보급 확산**과 해양문화 **인프라**의 체계적 **조성·운영**으로 **해양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하고 국민 삶의 질 개선

< 1. 해양교육문화 콘텐츠 개발 및 보급 확산 >

○ **해양교육·문화 정책 이행기반 확충**

- **(전담기구 지정)** 해양교육 콘트롤타워인 **해양교육센터**의 **신규 지정 및 운영**으로 체계적 해양교육 실시를 위한 체계 조성

- **(확산 기반) 지역해양교육센터**(지역특화교육) 및 **해양교육전문기관**(부문특화, 인력양성) 등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체계·기준 마련

○ **학교·사회 해양교육 확산 및 교육콘텐츠 질적 강화**

- **(교과 개발**학교**)** 고교학점제('25) 도입 시 선택과목으로 활용 가능한 해양수산업 전 분야를 포괄하는 **'통합해양' 교과서 개발**

- (**전주기 해양교육**사회) 생애주기에 맞는 세대별·계층별 해양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체계화된 해양교육프로그램 확대 실시**

* (초·중·고) 해양체험프로그램, 해양동아리 지원, (대학생) 차세대 해양정책리더양성 아카데미, (전 국민) 해양강좌, 해양교육포털, (교원) 교원연수 등

- (**디지털교육 강화**) **해양교육 온라인 공개강좌**(오션MOOC)의 기능 다변화 및 **신규 콘텐츠 확충**을 통해 플랫폼 이용저변 확대

* Massive Open Online Course, 초기 저명인사 위주의 마스터클라스 강좌 제작·제공

○ **해양교육문화 향유 사각지대 해소**

- (**협업강화**) **해양교육문화네트워크*** **공동개발 해양교구****를 활용한 소외·도서지역 대상 '찾아가는 해양교실'로 **교육 사각지대 완화**

* 해양교육문화 부문 상호 정보공유와 협력 강화를 위해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과학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립등대박물관, 수산과학관, 해양재단 등으로 구성

** 바다 관련 기초상식을 학습할 수 있는 코딩로봇 기반 보드게임, 학습교재 제공

- (**소외계층**) 학교·가정 밖 청소년,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해양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해양문화나눔' 확대로 해양문화 향유권 제공**

< 2. 해양교육문화 인프라 조성 >

○ **여수세계박람회장 공공개발 추진**

- (**기반조성**) 법 시행('23.5.16) 전 박람회재단의 자산·권리·의무를 YGPA에 **포괄승계**하고, 공사에 **공공개발 전담부서 설치**

- (**추진체계**) **사후활용위원회** 구성('23.7) 및 공공개발 **마스터플랜 용역** 추진 등 박람회장 공공개발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

* 사후활용계획은 마스터플랜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24년 중 수립

○ **수도권/내륙 해양문화시설 조성**

- (**인천해양박물관**수도권) 건축, 유물확보, 전시물 제작·설치 등 인프라를 조성하고 「국립해양박물관법」 개정으로 운영근거 마련

- (**미래해양과학관**내륙권) 해양어드벤처, 바이오, 환경, 로봇 등을 주요 콘텐츠로 과학관 건축공사 및 전시기획, 전시물 전시 추진

○ **지역 해양문화 인프라 신규조성 확대**

- (**선부역사교육원**경북) 최초의 해양 행정기관인 선부(船部) 등 해양사 관련 해양문화체험을 위한 전시·교육시설 조성('23. 설계)

- (**해양수산박물관**전남) 해양수산 부문을 포괄하는 서남해권 해양문화시설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예타 추진

- (**해양생명과학관**전북) 해양문화시설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 등 추진

〈 해양문화시설 조성 사업현황 〉

국립인천해양박물관	○ (**위치/규모**) 인천 중구 북성동 / 부지 27,601㎡, 건축연면적 17,318㎡ ○ (**사업기간 / 총사업비**) '19 ~ '24 / 996억원(국비 899, 지방비 97) ○ (**추진일정**) '19~'21(설계) → ~'24.1(공사) → '24.1(법인출범) → '24.下(개관예정)
미래해양과학관	○ (**위치/규모**) 충북 청주시 청원구 / 부지 15,406㎡, 건축연면적 14,980㎡ ○ (**사업기간/총사업**비) '20~'25/ 937억원(국비 862, 지방비75) ○ (**추진일정**) ~'22(설계) → ~'25.1(공사) → '25.1(법인출범) → '25.下(개관예정)
국립해양수산박물관	○ (**위치/규모**) 전남 완도군 / 부지 42,500㎡, 연면적 22,464㎡(잠정) ○ (**총사업비/기간**) 1,245억원(전액국비) / '22 ~ '29(8년) ○ (**추진일정**) 타당성 조사(~'23.4) → 설립타당성 사전평가('23.5,문체부) → 예타('23.下~'24.上) → 설계('24 ~ '25) → 공사('26 ~ '28) → 개관('29)
선부역사교육원	○ (**위치/규모**)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 용당리일원 / 연면적 2,700㎡ ○ (**사업비/기간**) 200억원(전액 국비) / '22 ~ '26(5년) ○ (**추진일정**) 설계('23) → 공사('24 ~ '25) → 개관('26 예정)
국립해양생명과학관	○ (**위치/규모(안)**) 전북 김제시(부지미정) / 부지35,915㎡, 연면적15,524㎡ ○ (**총사업비/기간**) 1,161억원(전액국비) / '22 ~ '30(9년) ○ (**추진일정**) 타당성조사(~'23) → 설립협의('24.1,과기부) → 예타('24) → 설계('25 ~ '26) → 공사('27 ~ '29) → 개관('30 예정)

< 3. 해양교육문화시설 운영 효율화 >

○ 국립해양박물관 관리·운영

- (**전시환경 개선**) 박물관 전시환경 대규모 개편 사업 추진

  * 리뉴얼 공사를 추진하여 '23.2월 부분 재개관하고, 7월 전체 재개관 예정

  ** 전시기획 : 바다 별별신(3월~8월, 전통 해양신앙 재조명), 바다미술(10월~12월, 해양 회화 작품 전시)테마전시 : 피싱(10월~12월, 어로 기술의 변천사 및 어로 활동 소개)

- (**네트워크 강화**) 한·중 국제협력 위해 **중국항해박물관과 교류전시*** **추진**, '세계해양박물관 네트워크 구축사업' 기획 등

  * 2017년 기획전<해양명품 100선, 바다를 품다>에 출품된 박물관 소장품 소개(전시협의 및 자료 전달(2월~3월), 전시개막 및 운영(4월~8월))

- (**성장동력 마련**) '조선통신사의 길' 재현 프로젝트 운영계획 마련, 메타버스 기반 해양문화유산 플랫폼 구축, 디지털 오션관 건립 등

  * 조선통신사의길('21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연구 용역), 디지털 오션관 건립('23년 BTL방식을 포함한 기본계획 및 검토 용역 진행예정)

○ 국립해양과학관 관리·운영

- (**위상 강화**) 해양과학 진로교육 확대, 해양과학교원연수 활성화 등

  * 해양과학교사연구회(10명 규모, 약 9개월 시범운영 예정) 중심으로 학교 해양과학교육 활성화 추진 및 전문 교수역량 강화 추진

- (**관심 제고**) '보이는 연구실*' 등 특화 콘텐츠 강화,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기획전시 개최 등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 강화

  * 심해로봇 실험(포스텍극한환경로봇연구소), 블루카본 증대 친환경 신소재 인공구조물 R&D(포항산업과학연구원, ~'25) 협업 리빙랩 구축

- (**문화 확산**) 지역 유관기관 협력 해양 홍보행사 개최*, 해양교육문화 향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해양과학관 운영 등

  * 경북해양과학연구단지 등 지역 유관기관 협력(과학관, KIOST동해연구소, 환동해산업연구원 등)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환동해권 해양 특화 벨트 홍보(7~8월)

< '2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미래해양과학관 전시계획(안) 지역설명회 개최	'23.1월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유물기증운동 '이달의 해양유물' 추진	'23.1월~12월	
	2023년도 해양수산부 과학관 육성 시행계획 수립	'23.2월	
	국립해양생명과학관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추진	'23.3월	
2/4분기	디지털오션관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23.4~12월	
	해양교육센터 신규 지정 및 운영지침 제정	'23.5월	
	해양교육문화 네트워크 정례회의 개최	'23.6월	
	제28회 바다의 날 해양문화행사 개최	'23.6월	
3/4분기	국립해양박물관 리뉴얼(개관 10주년 기념) 재개관	'23.7월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위원회 구성	'23.7월	
	차세대 해양정책리더 양성 아카데미 개설 및 운영	'23.9월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위한 문화재 지표조사 추진('23.9~12월)	'23.9월	
4/4분기	'해양문명과 해양성2' 국제학술대회	'23.10월	
	제17회 장보고대상 시상식 개최	'23.12월	
	고등학교 해양교육 교과서 "인간과 해양" 개발	'23.12월	
	해양교육 온라인 공개강좌(K오션MOOC) 콘텐츠 확충	'23.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전 국민, 특히 해양교육문화시설을 이용·활용하는 초·중·고 청소년, 관련 기관, 업계 종사자, 지역 주민 등

○ (**이해관계집단**) 지자체, 관련 기관, 시민 단체 등

□ 기대효과

○ 해양교육문화 정책 본격 시행으로 **해양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해양문화 **향유 사각지대를 완화**하여 해양적 소양 확산

○ 해양교육문화 인프라 개선·확충을 통해 **지역 거점으로 활용,** 관광객·방문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균형발전 도모**

*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생산유발효과 909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393억원, 고용유발효과 842명, 취업유발효과 879명 발생

** (청주미래해양과학관) 생산유발효과 995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434억원, 고용유발효과 915명, 취업유발효과 955명 발생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2	′23
해양문화 활성화(Ⅰ-2-일반재정①)			
① 해양문화 활성화(2031)	일반회계	610.6	780.7
▪해양정책 및 문화육성(300)		50.5	57.2
▪해양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308)		560.1	723.5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0	′21	′22	′23			
①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제도 강화율(%) (가중치 50%)	신설	신설	신설	100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기반 강화를 위한 중점 정책 추진 Ⓐ 신규 추진과제 이행 여부 : {(해양교육센터 지정)×0.5+(고교 해양교육 교과서 개발)×0.5}×100 (40%) Ⓑ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체험 참가자수(만명) : 8.8만명 이상 (30%) (′22년 8만명) Ⓒ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체험 참여자 만족도(%) : 90.0% 이상 (30%) (′22년도 88.0%)	Ⓐ×40% + Ⓑ×30% + Ⓒ×30%	관련 문서, 각 행사별 집계자료, 만족도 설문 조사 등
③ 해양문화시설 인프라구축 및 운영 효율화(%) (가중치 50%)	신설	신설	신설	100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른 공정률 및 운영효율화에 따른 관람객수·만족도 측정 Ⓐ 해양문화시설 건립사업 예산 대비 공정률 (50%) *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 목표 공정률 : 68% (′22년 33.5%, ′24년 100%) * 미래해양과학관 건립 목표 공정률 : 25% (′22년 0.2%, ′24년 86.9%) Ⓑ 해양문화시설 관람객수 : 59만명 (25%) (′22년 관람객수 53.2만명 / 국립해양박물관 재개장에 따라 ′22년 관람객수는 6개월분 반영) Ⓒ 해양문화시설 관람객 만족도(%) : 90% (25%) (′22년 88%)	Ⓐ×50% + Ⓑ×25% + Ⓒ×25%	건설사업관리 보고서 시설별 집계자료, 만족도 설문 조사 등

성과목표 Ⅲ-3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해양 경제영토 확장 및 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1) 주요내용

□ 무인도서의 체계적 관리 및 대국민 인식 제고

○ 영해기점 도서(유·무인도)에 대한 통합관리 법적 근거 마련 및 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의 보전 및 이용·개발에 관한 정책의 차질없는 이행

* 영해기점 도서 특별관리계획 수립 연구 / 제2차 무인도서 실태조사(6차년도) / 무인도서 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 절대보전·준보전 무인도서 10개소 해양쓰레기 관리 등

□ 관할해역 해양과학조사 및 인프라 활용 극대화

○ 신규 해양과학기지 구축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국가해양관측망(139개소)의 안정적 유지관리를 통해 이어도 등 해양과학기지를 활용한 체류형 연구 지속 및 이안류 감시체계 운영

* 해양과학기지 구축 및 융합연구(R&D) 및 이안류 감시체계 운영(10개 해수욕장)

□ 독도 해양영토주권 관리능력 강화

○ 독도가 우리 고유 영토임을 증명하는 **과학적 성과 확보**

○ 독도 시행계획 수립 등 **독도 범정부 통합관리체계 구축** 및 독도 관련 민·관 협력체계 구축, 교육·홍보 지원사업 추진

□ **해양 과학영토 개척**을 위한 **극지진출** 및 **대양연구 기반** 구축

○ (**극지 진출**)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 기본설계 추진, 남극 내륙탐사, ‘23년 극지 홍보 집중 추진 등 극지연구 선도국가 진입 노력

○ (**심해저 광물탐사**) 미래 개발에 대비하여 기확보된 심해저 독점탐사광구에 대한 탐사 수행

○ (대양연구) 해양에서 비롯된 우리나라 이상기후 현상에 대한 원인 파악, 심해 환경 및 생태계 탐사 등을 위한 대양연구 수행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0	'21	'22	'23			
① 해양영토 관련 학술연구 성과(건)	7	4	12	9	독도·이어도 등 해양영토에 대한 학술연구 활동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목표로 설정 - '20~'22년('20년 7건,'21년 4건, '22년 12건) 3년간 발표한 국제학술논문(SCI급) 평균 실적 대비 20% 상향	'23년 지원 사업을 통해 발표한 해양영토 관련 국제학술논문 건수	해양영토 관련 국제학술논문 발행 실적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무인도서의 체계적 관리 및 대국민 인식 제고

○ 이해관계집단(토지소유자·지자체·환경단체 등)이 다양하고 복잡하여 관리유형 지정(변경)시 등 이해관계자별 설득·대응 필요

- 관련 전문가·지자체·소유자 등과의 무인도서 현장점검 및 이의신청을 통한 절차적 공정성 확보

□ 독도 해양영토주권 관리능력 강화

○ 독도영유권 수호 관련 독도 정책 시행 시 대외정책 및 안전·환경·문화재경관 보존 등과 상충될 우려

- 정부합동 독도영토관리대책단 회의 등 관계기관 간 사전 협의·조율을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여건 조성

(4) 기타 : 해당없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1 무인도서의 체계적·효율적 관리 강화(Ⅲ-3-①)

해양영토과 (044-200-5355 / 5356)

□ 추진배경(목적)

○ 해양영토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관심, 해양레저에 대한 수요 증가 등으로 무인도서의 체계적 관리체계 구축 및 정보공개 필요성 증대

- 무인도서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기반을 구축하고,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필요성에 대하여 대국민 인식 제고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제2차('20~'29) 무인도서 종합관리계획' 수립('20.7)에 따라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개발에 관한 정책의 차질없는 이행**

○ 무인도서 지정 유형별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전 위주의 경직된 규제(행위제한)를 완화하기 위한 법령개정 추진('23.12)

○ 제2차 종합관리계획('20.7) 및 세부 지침에 따라 무인도서 및 미등록 도서*를 대상으로 연차별(6차년도) 종합실태조사 실시('23.12)

* 전남 신안군 및 여수 소재 무인도서 352개소

○ 사용자 맞춤형 무인도서 정보 항목(관광·어장 정보, 사고·선박 통행량·쓰레기 현황 등) 및 콘텐츠 확대('23.12)

○ 관리유형이 지정된 무인도서와 주변해역 지형도면(30개소) 제작('23.12)

○ 무인도서 실태조사 결과 현행화 및 정보관리시스템 유지보수('23.12)

○ 오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국·공유지 절대보전·준보전 약 100여 개 무인도서 중 10개 도서를 대상으로 해양쓰레기 정밀조사 및 처리('23.12)

< '2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제2차 무인도서 실태조사(6차년도) 추진계획 수립	'23.1월	
	무인도서 해양쓰레기 관리업무(위탁) 추진계획 수립	'23.1월	
	무인도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관리유형 도면제작 추진계획 수립	'23.1월	
	주요 영해기점 무인도서 수심측량 추진	'22.3월	국정 41-1
2/4분기	영해기점 관리 제도개선 방안 마련 연구 추진계획 수립	'23.4월	국정 41-1
	무인도서 실태조사 착수보고 및 전문가 워크숍 개최	'23.4월	
	무인도서 해양쓰레기 분포 및 실태조사	'23.5월	
	무인도서 실태조사 NGO 공동 현장 점검	'23.6월	
3/4분기	무인도서 관리유형 지정 및 변경	'23.7월	
	해양영토 '올해의 섬' 관련 홍보 다큐 방송	'23.8월	
	무인도서 실태조사 및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중간점검	'23.9월	
	영해기점 관리 제도개선 방안 마련 연구 중간점검	'23.9월	국정 41-1
4/4분기	무인도서 실태조사 관련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23.10월	
	무인도서 해양쓰레기 관리업무 최종보고	'23.11월	
	무인도서 실태조사 및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최종보고	'23.11월	
	영해기점 관리 특별관리계획 초안 마련	'23.12월	국정 41-1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정책·사업의 수혜자**) 일반 국민

○ (**이해관계자**) 무인도서 토지소유자, 환경단체, 지자체

□ 기대효과

○ 해양영토에 대한 국가의 관리역량을 무인도서까지 대폭 확대하고, 도서의 체계적 보전·관리 기반 구축을 통한 영토주권 강화

○ 무인도서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리유형 지정·관리를 통해 도서에 대한 보전 및 개발정책의 조화 도모

○ 무인도서 정보 구축 및 대국민 정보제공을 통해 무인도서를 경제활동의 새로운 거점화와 국민의 해양레저·관광수요 충족에 기여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2	'23
해양산업육성및영토관리(Ⅰ-2-일반재정①)			
① 해양영토관리기반구축(2032)			
▪ 해양영토관리역량강화(311)	일반회계	30	30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0	'21	'22	'23			
① 무인도서 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율(%) (가중치 40%)	신규	100	100	100	무인도서 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기능개선 결과를 목표로 설정	종합정보시스템의 기능개선 등 계획수립(30%) + 기능개선 3건(40%) + 무인도서관련 홍보 12건(30%)	내부 공문 및 관련 자료
② 무인도서 관리기반 구축 추진율(%) (가중치 60%)	신규	100	100	100	무인도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및 무인도서 실태조사(6차년도) 결과를 목표로 설정	무인도서법 개정안 국회 추진(25%) +무인도서법 하위법령안 마련(25%) + 영해기점 도서에 대한 통합	내부 공문 및 관련 자료

2 해양영토의 과학적 관리기반 확충(Ⅲ-3-②)

해양영토과 (044-200-5357)

□ 추진배경(목적)

○ 국가해양관측망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해양 예·경보 서비스를 강화하여 국민의 해양활동 시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지원

- 해수욕장 이안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시간 이안류 감시체계를 운영(10개 해수욕장)하고, 웹·문자·앱을 통한 대국민 정보제공

○ 신규 해양과학기지 구축을 위한 설계 및 기존 기지체류형 연구 지속 추진을 위한 해양과학기지 등 유지보수

- 해양과학기지 등 시설물의 안정적 운영과 체류자 안전사고 예방 등 해양시설물 이용안전을 위해 해양과학기지 안전상태 점검

○ 독도관련 영토주권 행사를 위한 과학적 논리근거 확보를 위하여 독도와 주변해역 생태·환경 등 과학적 조사활동 지속

○ '제4차('21~'25)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 이행을 위해 '24년 범정부 시행계획 수립, '23년 연차보고서 작성 등으로 독도 관련 정책 통합관리 추진

○ 독도관련 민간단체 지원을 통해 민간영역의 전문성을 활용·육성하고 독도 접근 기회가 낮은 사회적 배려층 대상 독도탐방 기회 제공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해양사고 발생 시 수색구조 등 재난대응 정보 정확도 향상 및 국민의 안전한 해양활동 지원을 위한 해양예보(생활해양예보·선박운항지수) 서비스

*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한 해수유동예측시스템 정확도 향상 및 해양관측인프라 구축 확대, 해양활동 등 여가 증진을 위한 국민생활 밀착형 해양예보정보 서비스

- 신규 해양과학기지 기본설계('23.4.)와 실시설계('23.11.)를 완료하고,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정밀안전진단 실시('23.6.)

- 주요 해수욕장(10개소) 실시간 이안류 감시체계 운영('23.6~8)

○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증명하는 과학적 연구자료 확보·축적하고, 독도 정책통합 관리·공유를 위한 범정부 독도 시행계획 수립, 독도 관련 교육·홍보 사업 지원 등을 통한 독도 영토주권 수호

- '23년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연구 계획 수립 및 연구 수행('23.3~11), '23년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23.3)

- 독도 관련 민간단체 재정지원 공모사업 수행단체 선정 및 지원('23.4) 범정부 독도관련 정책인 '23년 독도연차보고서 작성 및 국회보고('23.8)

< '2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해양조사정보법」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협의	'23.2월	
	독도 탐방사업 수행단체 선정	'23.3월	
	'23년도 법정부 독도 시행계획 수립	'23.3월	
	상반기 해양과학기지 활용 및 분석협의체 회의	'23.3월	
2/4분기	신규 해양과학기지 기본설계 완료	'23.4월	국정 41-1
	독도 민간단체 공모사업 재정지원	'23.4월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정밀안전진단 실시	'23.6월	
	주요 해수욕장(10개소) 실시간 이안류 감시체계 운영	'23.6～8월	
3/4분기	독도 탐방사업 실시	'23.8월	
	'22년도 범정부 독도 연차보고서 국회 제출	'23.8월	
	해양과학기지 시설보수공사 발주	'23.8월	
	하반기 해양과학기지 활용 및 분석협의체 회의	'23.9월	
4/4분기	신규 해양과학기지 실시설계 완료	'23.11월	국정 41-1
	「해양조사정보법」 국회 제출	'23.11월	
	독도 탐방사업 실적보고	'23.12월	
	해양과학기지 시설보수공사 준공	'23.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정책·사업의 수혜자**) 일반 국민

○ (**이해관계자**) 독도 관련 연구·시민 단체, 독도 관련 정책 합동 수립·협의 기관(국조실, 교육부, 환경부, 외교부, 문화재청 등)

□ **기대효과**

○ 관할해역에 대한 과학적 연구성과 축적 및 국가해양관측망 안정적 관리를 통하여 해양영토 관리·주권수호 기반 강화

○ 이안류 감시체계 운영 등 맞춤형 해양안전 예측정보 생산·제공으로 해양사고 예방과 국민의 안전한 해양활동 지원

○ 독도영토주권 수호를 위한 과학적 논리근거 지속적 확보 및 독도 탐방, 민간단체 지원을 통한 대국민 관심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2	'23
해양산업육성및영토관리(Ⅰ-2-일반재정①)			
① 해양영토관리기반구축(2032) ▪ 독도 지속가능 이용 및 관리(300)	일반회계	93	93
② 해양지형조사 및 정보제공(2033) ▪ 국가해양관측망 구축 및 운영(307)	일반회계	369	366
③ 연구장비개발 및 인프라구축(R&D)(2042) ▪ 관할해역 첨단 해양과학기지 구축 및 융합연구(R&D)(317)	일반회계	53	41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0	'21	'22	'23			
① 해양조사 인프라 구축률(%) (가중치 60%)	신규	신규	신규	100	동해 해양과학기지의 적기 완공 및 이안류 감시체계 운영에 대한 '23년 목표치 설정	동해해양과학기지 설계(기본(30%)+실시(30%))+이안류 감시체계 10개소 운영(40%)	자체자료
② 독도탐방 사업 만족도(점) (가중치 40%)	신규	신규	신규	90.5	최근 3년 만족도(88.2, 90.2, 93) 평균 수준으로 설정	독도탐방사업 만족도 - 참여자 대상 만족도 조사 * 리커트 5점 척도(0, 25, 50, 75, 100)를 사용하여 100점(매우 만족)을 만점으로 환산	결과보고서 등

3 극지 진출 및 대양연구 기반 구축(Ⅲ-3-③)

해양개발과 (044-200-5241/5664 /6182)

□ 추진배경 (목적)

○ (극지 진출) 극지는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핵심적인 연구 지역***이며, **과학연구**를 통해 **극지 거버넌스**에서 **영향력 확대** 가능

* 기후변화의 영향을 가장 빠르게 받아들이면서, 전 지구 및 한반도 이상기후 초래

- 각국은 **극지 진출 확대**를 위한 **전략 및 투자**를 **강화**

⇒ **남극 내륙 핵심 연구거점** 및 **북극 고위도 탐사**를 위한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 등 극지 진출을 통한 **글로벌 과학영토 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

○ (**심해저 광물탐사**) 육상광물 공급부족, 가격상승 등 미래 위기 상황에 대비하여 심해저 광물탐사를 통한 독점광구 확보 추진

* 해저열수광상(통가 EEZ, 피지 EEZ, 인도양), 망간단괴(태평양), 망간각(서태평양) 등 5개 독점탐사광구(11.5만㎢) 확보

⇒ 광물가격 하락에 따라 심해저 광물의 상업화 시기 불확실성을 감안, 기 확보한 독점탐사광구의 효율적인 유지와 국제협력 필요

○ (**대양연구 확대**) 한반도 주변 해수온도의 빠른 상승*과 이상기후 현상 발생에 대응, 심해 환경특성 파악 등을 위해 대양연구 필요

* '68~'19년 간 우리나라 표층수온은 1.26℃ 상승(전 지구 평균(0.51℃)의 약 2.5배)

⇒ 대양이 태풍, 고수온 등 한반도 주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심해 생태계 연구 추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범정부 협력**) 극지 과학·산업·정책·국제협력 등과 관련된 **정부부처 간 현안 협의 조정·공동 대응**을 위한 '**극지정책 협의체**' 구축(12월)

○ (**인프라 확대**)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 **기본설계 추진**(9월), **극지 환경 재현 실용화 센터** 건립(12월)

○ (**홍보 강화**) ’23년 **극지 홍보 집중 추진**, 우수 연구성과 홍보, 국민 참여 확대, 북극협력주간 확대개편 등 추진

○ (**연구개발 지원**) 기후변화 대응, 해저자원 탐사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연구개발 사업 지원을 통해 극지 및 대양 연구 역량 강화

- (**기후변화**) 인도양 수온약층 융기해역(6월)과 북서태평양 온난화 소용돌이 해역 탐사(9월), **남극 빙상**의 급격한 **용융**에 따른 **전 지구 해수면 상승**과 우리 연안 침수 피해 예측을 위한 신규사업(’23~‘31) 착수(4월)

- (**해저자원 탐사**) 북극해 해저지질 조사 및 해저환경 탐사, 서태평양 망간각・인도양 열수광상 심해저광물 자원 탐사

- (**해양생태 연구**) 로스해 해양보호구역의 보존조치 이행에 따른 생태계 변화 연구, 인도양 중앙해령 열수생태계 연구

○ (**연구생태 개방**) 산·학·연의 북극해 연구·탐사 지원(5월), 쇄빙연구선・대양조사선 등 연구인프라 공동활용(4월) 등 다양한 연구자의 극지·대양 연구 참여 활성화

○ (**국제협력 확대**) 북극협력주간 개최(12월) 등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국제해저기구 총회・이사회 대응(3,7,11월)

○ (**인력 양성**) 극지연구 전문인력장학사업(12월/2명), 북극 원주민 교육지원(6명/3월), 사회·과학(산업, 정책, 외교 등) 분야 인력(15명/8월)

< '2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극지 집중홍보 추진을 위한 전문가 회의 개최	'23.1월	국정 41-1
	북극 원주민 교육지원 사업 착수	'23.3월	
	북극협력주간 확대 개편 관계기관 회의 개최	'23.3월	
	급격한 남극 빙상 용융에 따른 전지구 해수면 해수면 상승 예측기술개발 사업 공고	'23.3월	
2/4분기	2023 대국민 극지 홍보 용역 추진	'23.4월	
	남극 로스해 해양보호구역 생태변화 연구 착수	'23.4월	
	극지 인프라 공동활용 지원사업 선정	'23.4월	
	인도양 수온약층 융기해역 관측	'23.6월	
3/4분기	KoNAC(한국 북극협력네트워크) 전문가 회의 개최	'23.8월	
	북극아카데미 참가자 모집 공고	'23.8월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사업 기본설계 착수	'23.9월	국정 41-1
	북서태평양 온난화 소용돌이 해역 조사	'23.9월	
4/4분기	남극 내륙진출로 개척(K-루트) 추진	'23.12월	국정 41-1
	극지환경 재현 실용화센터 준공	'23.12월	
	북극협력주간(Arctic Partnership Week) 개최	'23.12월	
	극지정책 협의체 구축	'23.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극지연구소, 산·학·연 및 극지 활동에 관심이 있는 민간 법인, 일반국민 등

○ (**이해관계자**) 북극권 국가 및 극지 진출을 추진하는 경쟁국 및 관련 연구기관

□ 기대효과

○ 제도·인프라·과학 연구 등 극지 및 대양 진출을 위한 체계적·종합적 지원을 통해 거버넌스 선도국 도약을 위한 발판 마련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2	'23
해양영토관리기반구축(Ⅰ-2-일반재정①)			
① 해양영토관리 기반구축(2032)	일반회계	15.7	15
▪ 극지정책 및 극지활동 역량 강화(302)		15.7	15
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운영지원(1110)	일반회계	894.4	941.6
▪ 극지연구소 운영지원(R&D)(301)		894.4	941.6
① 연구장비개발 및 인프라구축(2042)		33.5	421.9
▪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R&D)(325)		33.5	421.9
극지및대양과학연구(R&D)(Ⅰ-2-R&D①)			
① 극지 및 대양과학연구(2043)	일반회계	213.5	254.1
▪ 극지 및 대양과학연구(305)		101.7	59.6
▪ 극지 유전자원 활용 기술개발(306)		55	48.8
▪ 극한지개발 및 탐사용 협동이동체 시스템 기술개발(307)		27.1	22.1
▪ 극지 해양환경 및 해저조사 연구사업(308)		86	83
▪ 급격한 남극빙상 용융에 따른 근미래 전지구 해수면 상승 예측기술 개발(322)		-	40.6
▪ 기후변화 예측력 향상을 위한 대양 연구(325)		55.3	55.3
해양자원이용기술개발(Ⅰ-2-R&D②)			
① 해양자원이용 기술개발(R&D)(2041)	일반회계	38.5	38.6
▪ 심해저 광물자원 기술개발(R&D)(305)		38.5	38.6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0	'21	'22	'23			
① 극지 및 대양 진출 역량 강화율(%)	신설	100	100	100	- 극지 및 대양 진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기반구축, 연구역량 강화, 국제협력확대를 균형 있게 고려하여 설정 - 정책 기반으로서 대형 극지 인프라인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설계·건조사를 선정하고 기본설계에 착수하는 목표를 설정 - 연구역량 강화를 판단하는 지표로서 최근 3개년 평균 극지 및 대양 연구 논문 발행 실적(59건) 대비 상향 설정 * ('20년) 61건 ('21) 55건 ('22) 62건 - 국제협력 확대를 위해 극지 및 대양거버넌스에서 우리나라 지지 기반과 국제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판단 기준으로 국제인력교류 20명을 목표치로 설정 * 기존 북극대학교류 프로그램 국내 참여 인원(20명 내외)을 고려하여 설정	(정책기반구축율+연구역량강화율+국제협력 확대율)/3 - 정책 기반 구축(차세대 쇄빙연구선 기본설계 착수, 100%) - 연구 역량 강화 (극지 및 대양연구 논문 발행(60건, 100%)) - 국제협력 확대 (극지 및 대양거버넌스(국제해저기구, 북극이사회 등) 참여 및 대응을 위한 국제인력교류 추진(20명, 100%)	내부 공문, 보도자료 등 관련 자료

④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산분야 통상협상 대응(Ⅲ-3-④)

통상무역협력과 (044-200-5387)

□ 추진배경 (목적)

○ IPEF, WTO, CPTPP, FTA 대응시 해양친화적 통상 협상을 기반으로 식량주권 수호 및 해양산업 해외 진출 확대 지원

- 어업인 및 정책담당자와의 소통을 통해 국내 갈등을 완화하고 정책 수용성 제고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시장개방 협상**) FTA 협상시 **민감품목 보호수단***을 마련하고 잠재력 있는 품목은 상대국 시장을 개방하여 **수출확대 기반** 마련

* ①양허제외, ②관세의 장기적 철폐, ③저율관세할당(TRQ) 등

** (진행중) 에콰도르, GCC, PA, 메르코수르 / (신규) 조지아, 몽골 / (개선) 인도

○ (**신통상규범 협상**) 우리 법·제도·산업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해양수산업계의 **해외 진출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협상

- (**WTO**) **면세유, 원양보조금** 등 「WTO 수산보조금 협정*」의 미합의 쟁점에 관한 협상 대응을 통해 **국내 수산업 피해 최소화** 도모

*IUU어업에 관여한 선박·운영자에 대한 보조금, 과잉어획된 어종의 어획에 대한 보조금, 자원관리가 없는 수역에서의 어업에 대한 보조금 등 금지

- (**IPEF**) **4대 협력 분과**(필러)*의 **해양수산 관련 주제**** 관련 유사입장국과의 공조를 통해 **국내 충격 완화** 및 **협력 이익 극대화**

* ①무역, ②공급망, ③청정경제, ④공정경제

** 수산보조금, 수산물 위생검역, 선원인권, 해양기반 기후대책 등

· 친환경 선박 등 우리나라 **해양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관련분야 제안문** 제출 및 **협력사업** 제안

○ (**소통강화**) 어업인에게는 통상정책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통상 당국에는 어업인 우려사항을 전달하여 **갈등 완화** 및 **지원 정책 강화**

- 관계 부서 및 기관 대상 통상업무 동향 공유, 주기적 설명회 개최를 통해 협상 결과의 국내정책 수용성 제고

○ (**수출입제도 안정적 운영**) 탄력관세 등 수출입제도의 안정적 운영으로 수산업 경쟁력 강화, 민생경제 및 물가 안정 도모

- (**조정관세***) 냉동꽁치 중 갈치어업의 미끼로 쓰이는 비식용에 대해서는 조정관세 적용을 제외하여 갈치업계 경영난 완화

* 수산물 수입증가에 따른 산업기반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부과(냉동꽁치: 10% → 24%)

- (**김 IQ***) 업계의견을 수렴하여 품목별* 쿼터 배분안을 마련하고 수산물 무역과장회의를 통해 관철하여 **김 수출 증대**에 기여

* 일본이 자국 김 생산자 보호를 위해 수입량을 직접 규제하는 제도로, 한국산 김에 대해서는 매년 수산물 무역과장회의를 통해 품목별 배분안 확정

** 마른김, 무당조미김, 김조제품(김스낵, 부각 등)

< '2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한-뉴 수산협력사업 추진계획 수립	'23.3월	
	FTA 협상 대응	'23.3월	
	WTO SPS 정례회의 대응	'23.3월	
	IPEF 협상 대응	'23.3월	
2/4분기	김 입찰·상담회 개최	'23.6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코드집 발간	'23.6월	
	FTA 협상 대응	'23.6월	
	IPEF 협상 대응	'23.6월	
3/4분기	FTA 협상 대응	'23.9월	
	WTO SPS 정례회의 대응	'23.9월	
	IPEF 협상 대응	'23.9월	
4/4분기	한·일 수산물무역과장회의	'23.11월	
	FTA 협상 대응	'23.12월	
	IPEF 협상 대응	'23.12월	
	WTO 협상 대응	'23.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및 이해관계자**) FTA 및 WTO에 따른 수산물 수출입 증가로 경제활동에 영향을 받게 되는 어업인 및 수산물 가공업체

□ 기대효과

○ 상대국 이해를 파악한 체계적 대응으로 WTO 및 CPTPP 등 양자·다자 협상력 강화, 우리 수산업 피해 최소화 및 수출 확대기반 마련

○ 정부의 통상정책에 대한 어업인 공감대 형성 및 신뢰 확보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2	'23
원양어업기반 구축(Ⅰ-4-일반재정①)			
① 원양어업기반구축(3542)	농특회계	247	388
▪ 국제수산기구 협상 및 대응(301)	농특회계	44	48
기금운영비(기금) * 성과관리번호는 없음(기본경비, 기본경비성 비용으로 성과관리 비대상)			
① 기금운영비(기금)(7140)	수발기금	9 (20)	4 (14)
▪ 수산물공매납입금부과징수비용(254)	수발기금	9	4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0	′21	′22	′23			
①규범 협상 대응 (가중치 50%)	신규	신규	신규	100%	규범 협상(WTO 수산보조금, IPEF) 참여 및 대응 - 주요쟁점에 대해 우리 입장 관철을 위한 제안서 제출 또는 발언 실시 * WTO 총회 및 IPEF 수석대표급 회의에서 제안서 제출 또는 발언한 실적	주요 쟁점에 대한 제안서 제출 또는 발언 건수 /WTO 및 IPEF 회의 참석건수* * 단, 회의 1회당 실적은 1건까지만 인정	전문 확인
②주요 FTA 상대국의 수산물 개방요구에 대한 우리나라의 불수용률(%) (가중치 50%)	14.7	24.7	67.0	35.5	기존 3년간 실적 평균치를 목표치로 설정 - 수산업 피해 최소화 등 우리부 FTA 협상 전략에 따라 불수용률이 높을수록 통상협상에 잘 대응한 것임	(우리측 미개방 품목수 / 우리측 시장개방 대상 품목수)×100	FTA 협상 대응 결과 내부 요약 보고서

5 해양수산 ODA 확대 및 양자협력 증진(Ⅲ-3-⑤)

국제협력총괄과 (044-200-5331/5342)

□ 추진배경 (목적)

○ 해양수산 ODA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양자협력을 통해 **수산자원의 안정적 확보** 및 **우리기업의 해외진출**과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추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ODA 확대) 국제 사회 기여,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및 안정적 해외수산자원 확보** 등을 위해 **해양수산 ODA 규모 지속 확대**

- **기후변화 대응, 수산업 발전, 해양생태계 보전, 해운해사 역량 강화** 등 **20여 개 국가***를 대상으로 **협력사업 추진**

* 아시아(53.3%), 태도국(19.7%), 아프리카(12.9%) 순으로 중점 추진 중

- **태평양 도서국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마셜제도** 해수온도차 발전*, **투발루** 어촌특화개발사업** **신규 착수**

* 사업기간: '23~'26('23년 8억원) / ** 사업기간: '23~'26('23년 20억원)

- 박람회 유치 지원과 연계하여 **한-태도국 정상회의 부대행사**로 **해양수산 국제협력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협력사업 논의

○ **(협력기반 구축·강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활동과 연계하여 태평양도서국 등 교류협력 확대 및 협력사업 발굴 추진

- 태평양도서국 중 BIE 회원국을 중심으로 **양자·다자 교류협력 확대*** 및 태도국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협력사업 발굴**

* 해양실장 피지·투발루 방문('23.1), 수과원장 사모아 방문('23.3), 차관 Our Ocean Conference(파나마) 계기 태도국 대표 면담('23.3), 장관 뉴질랜드 방문('23.4), 제1차 한-태도국 정상회의 계기 해양수산 국제협력 콘퍼런스 개최('23.5, 서울) 등

○ **해양수산분야 국제협력 강화로 국제규범 선제적 대응 및 이슈선도**

- **한·미 국제어업관리 정례협의회**를 통한 IUU 어업 등 국제 어업 관리이슈 및 **MMPA**(해양포유류보호법), **MPA**(해양보호구역) 등 **주요현안**에 대한 **소통·협력 강화**

- **IUU 어업근절, 해양포유류보호, 해양쓰레기** 등 해양수산정책 협력 및 선제적 이슈대응을 위한 **국제 환경 NGO** 등과 **협력채널 활성화**

- 핵심 조업어장 국가 등에 대한 지원 확대 및 해양수산 **ODA 전문기관**을 통해 **사업간 연계** 및 **사후관리 강화**

○ (**현장의견 정책 반영**) ODA, IUU 어업근절, 해양포유류보호, 해양쓰레기 NGO 관계기관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견 수렴

- 수산양식, 항만개발, 해양과학기술, 해양환경분야 업계·학계 및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 추진

< '2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3년 해양수산 ODA 추진계획 수립	'23.1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태평양도서국 방문	'23.2월	
	OUR OCEAN 컨퍼런스 참석	'23.3월	
	2024년도 무상원조 시행계획 제출	'23.3월	
2/4분기	한·미 국제어업관리 정례협의회 재개	'23.4월	
	한-태도국 리더스 서밋 개최	'23.5월	
	해양수산 국제협력 컨퍼런스 개최	'23.5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장관님 뉴질랜드 방문	'23.6월	
3/4분기	'22년 해양수산 ODA 평가계획 수립	'23.7월	
	마셜제도 해수온도차 발전 사업 착수	'23.8월	
	투발루 어촌특화개발사업 착수	'23.8월	
	해양수산 ODA 전문기관 운영 개선(안) 마련	'23.9월	
4/4분기	해수부-WMU IUU 어업 대응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23.10월	
	해양수산 ODA 관계기관 워크숍 개최	'23.11월	
	민관해양환경정책협의회 개최	'23.11월	
	해양수산 ODA 전문기관 운영예산 확보	'23.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직접적인 수혜자는 ODA 수원국, 수원국에 입어하는 원양어업자 등이며

- 안정적인 원양어업에 따른 수산물의 원활한 국내 공급과 가격 안정에도 기여하므로 수산물을 소비하는 일반국민도 수혜대상

○ (**이해관계자**) 원양어업자(관련 종사자 포함), 수산자원 보유 연안국 등

□ 기대효과

○ 연안개도국의 자립기반 조성 및 경제발전 지원을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 국격 제고 및 **안정적인 해외수산자원 확보** 도모

○ 양자협력 강화로 수산양식, 항만개발 등 해양수산 관련기업의 **해외진출**을 **확대**하고, **정부 외교정책**과 **연계**한 **성과사업** 발굴

○ 박람회 유치 성공시, **우리나라 최초의 세계엑스포**(등록박람회) 유치가 되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위상제고** 및 **이미지 제고**에 따른 **관광객 증가**, **수출 증대**

○ 국제기구와 각국 전문가들의 IUU 어업 근절을 위한 경험과 지식 공유를 통해 불법어업 근절에 기여하고, 우리나라의 위상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2	'23
원양어업기반구축(Ⅰ-4-일반재정①)			
① 원양어업기반구축(3542)	농특		
▪ 연안국과의 협력(ODA)(302)		148	287
▪ 국제수산기구 협상(301)	농특	43	42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0	'21	'22	'23			
① 해양수산 신규 ODA 추진건수(건) (가중치: 70%)	8	4	14	17	해양수산 ODA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매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전년도 해양수산 ODA 신규사업 건수(14건) 대비 약 20% 증가한 17건으로 목표치 설정	다음해 예산안에 신규로 포함된 ODA 추진 건수	ODA 사업 추진에 대한 보고자료
② 한-미 국제어업 정례협의회 활성화 (가중치: 30%)	1 (화상)	0	0	1 (대면)	'20년도에 1차례 화상으로 개최되고 다시 개최되지 못한 한-미 국제어업 정례협의회를 활성화 하기 위한 현지 대면회의 1회 개최를 목표로 산정	협의회 대면회의 개최 건수	보도자료 또는 회의결과 보고서

⑥ 해외 수산자원 확보를 위한 국제협상력 강화(Ⅲ-3-⑥)

국제협력총괄과 (044-200-5334/5341)

□ 추진배경(목적)

○ **원양어업**을 통한 해외 수산자원확보는 국내 수산물 공급 및 소비자 물가의 안정성에 기여하는 바가 큼

- 특히, **명태, 꽁치, 오징어** 등 **대중성 어종**과 **참치, 이빨고기** 등 **고가 어종**은 대부분* **원양어업**을 통해 **어획**

* 명태, 참치, 이빨고기 100%, 꽁치 92%, 오징어 52%('22년 기준)

○ **원양어업**은 별도 협정을 통한 외국 EEZ입어 이외에는 모두 **자원보존조치**와 **쿼터***를 설정하는 **국제수산기구 관할 수역**에서 **조업**

* 자원량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해역은 조업방식 등 **규범논의**만 진행되고, 자원관리가 요구되는 해역은 **규범논의**와 함께 **별도 조업 쿼터**를 설정

** 우리나라 전체 원양어획물(약 40만톤, '22년 기준) 가운데 **3/4 이상**이 국제수산기구 관할수역에서 어획되고 있음

○ 따라서, **국제수산기구 회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논의를 주도**하고, **장기적**으로는 관련 **전문가 양성** 및 **역량 강화**도 **필요**

- 주요 국제수산기구 **회의 참여**를 **넘어, 주도적인 의제 제안서 제출**을 통해 관련 **논의**를 **주도**하고

- 장기적인 **협상력 제고**를 위해서 관련 **협상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며 **역량 강화**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회의대응)** 국제수산기구 **총회** 및 **하부위원회*** 회의에 대한 적극적·연속적 대응을 통한 **협상력 증진** 및 **어획할당량 확보**

* 작업반 회의, 과학위원회, 이행위원회, 재정위원회 등

○ **(논의주도)** 보존관리조치 제·개정 **제안서 제출** 및 **의장단 진출**을 통해 주요 **기여·주도국**으로서 우리나라 **영향력 제고**

○ (**회의 개최 및 양자협의**) 국제수산기구 **총회 국내 개최*** 및 **주요국**(일본, EU 등)과 **양자협의**(상시) 등을 통한 협상 밀도 강화

*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NPAFC, 5월),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10월)

< '2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인도양참치위원회(IOTC) 회의 대응	'23.2월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SPRFMO) 총회 대응	'23.2월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 총회 대응	'23.3월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회의 대응	'23.3월	
2/4분기	인도양참치위원회(IOTC) 총회 대응	'23.5월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NPAFC) 총회 국내 개최	'23.5월	
	남인도양수산협정(SIOFA) 당사국회의 대응	'23.6월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통합감시조치회의 대응	'23.6월	
3/4분기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북방위원회 회의 대응	'23.9월	
	전미열대다랑어보존위원회(IATTC) 총회 대응	'23.9월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기술이행위 회의 대응	'23.9월	
4/4분기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연례회의 대응	'23.10월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총회 국내 개최	'23.10월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연례회의 대응	'23.11월	
	국제수산기구 협상 전문가 필수교육 실시	'23.12월	

○ (**'22년도 부진과제 개선계획**) 정책 목표와 성과지표의 부합도 제고 및 정책효과 개선·보완, 정책 소통 확대 추진

- "해외 수산자원 확보를 위한 국제협상력 강화"라는 목표에 부합하도록 주요 국제수산기구 협상 활동 및 국제협상 전문가 역량 강화와 관련된 성과지표로 변경
- 보다 적극적인 정책 추진 및 홍보 강화로 정책효과 개선 및 정책 소통 확대 추진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국제수산기구 회의를 통해 확보한 쿼터를 할당받아 조업하는 원양업계 및 원양어획물을 소비하는 일반국민

○ (**이해관계자**) 원양어업 종사자, 한국원양산업협회, IUU 어업 관련 NGO 단체, EU, 미국 등 연안 조업국, 정부

□ **기대효과**

○ **국제수산기구 회의 대응** 및 **양·다자간 협상**으로 **어획할당량 확보**, 우리나라 원양어업 여건 안정화 및 **수산물 공급기반 확충**에 기여

○ 국제수산기구 보존관리조치 관련 **우리나라 여건**과 **입장**을 **반영**한 제안서 제출로 **안정적 조업**에 **기여**

○ **역량있는 협상 전문가 양성**을 통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국제협상력 강화**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2	'23
원양어업기반구축(Ⅰ-4-일반재정①)			
① 원양어업기반구축(3542)	농특회계	246	388
▪ 원양어업활성화(300)	농특회계	44	48
▪ 국제수산기구 협상 및 대응(301)	농특회계	43	42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0	'21	'22	'23			
① 주요 국제수산기구* 제안서 제출 비율(%) (가중치 70%)	신규 0%	신규 18%	신규 77%	100%	우리나라 조업규범 논의 또는 어획할당량 산정이 이루어지는 국제수산기구가 11개임을 감안 11개 제안서 제출 목표	제안서 제출건수 / 11 × 100 * 단, 우리부 단독/주도 제안은 1건, 타국 주도 공동제안 참여는 0.5건으로 산정	내부 보고자료, 국제수산기구 회의자료 및 회의결과 보고서
② 국제협상 전문가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실무 참여(%) (가중치 30%)	신규	신규	신규	100	협상 전문가에 대한 이론/실제 필수교육 100% 이수와 11개 주요 국제수산기구의 회의 100% 참여를 목표(100)로 설정	① 협상 전문가 대상 필수교육** 실시(50%) * 교육이수 인원 / 전체인원 × 100 ② 협상 전문가의 주요 국제수산기구 회의 참여 (50%) * 협상 전문가 참여 회의 / 11개 주요 국제수산기구 회의 ×100	내부 보고자료

* 주요 국제수산기구(11개) : **조업규범**을 논의하거나 **어획할당량**을 산정하는 국제수산기구 - 북서대서양수산위(**NAFO**), 남동대서양수산기구(**SEAFO**), 남인도양수산협정(**SIOFA**),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전미열대참치위원회(**IATTC**),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인도양참치위원회(**IOTC**),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SPRFMO**),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 남극해양생물보존위(**CCAMLR**)

** 국제협상 전문가 필수교육(4개) : ①국제법, ②수산 자원관리, ③수산 어구공학, ④국제협상 실무

성과목표 Ⅲ-4 해양환경 위해요소에 대한 안전망 구축 및 해양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여 지속가능한 해양이용 기반을 마련한다.

(1) 주요 내용

□ **해양환경 위해요소 관리체계 마련**

○ 국민불안 해소를 위해 **방사능 오염물질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해양 방사능 모니터링 결과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

○ 육상기인 오염물질 유입 제어를 위한 연안오염총량관리 및 환경관리해역별 관리계획 이행 등을 통한 **해역수질 개선**

○ 침몰선박으로 인한 항행안전사고 및 2차 해양오염사고 방지를 위해 잔존유 제거 등 잠재적 위험관리 강화

□ **해양 기후변화 대응 관리체계 구축**

○ 해양수산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 로드맵**을 수립하고 국제감축사업 발굴,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이행 등 **기후변화 대응 추진**

○ 해운·수산·염습지 온실가스 **통계 생산** 및 온실가스 배출·흡수원 추가 발굴 및 국가 **통계 반영**(해초대 등)을 통해 **기반 강화**

○ 한반도 연근해 기후변화를 예측하는 **시나리오를 생산**하고, **대국민 해양기후 정보제공 체계 강화**

□ **2050 해양플라스틱 제로화 추진**

○ 해양플라스틱 발생량을 '30년 60% 저감, '50년 제로화 목표로 발생예방-수거-재활용-기반구축 등 **전방위적 관리 강화**

○ **해양미세플라스틱**의 유입·발생 등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모니터링(매년) 결과를 정보공개 및 공유 추진

○ 반려해변, 범국민 '알줍(알려주세요!+주워주세요!)' 캠페인 등 민간 참여 촉진을 통한 해양폐기물 **관리 거버넌스 구축**

□ **개발과 보전의 상생 및 공존을 위한 해양공간관리 체계화**

○ 공유수면 등 해양공간을 둘러싼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합리적 조정을 위해 **해양공간관리체계 정비** 및 **과학적 정보체계 구축**

○ **해상풍력단지** 조성 등 해양공간 **이용·개발행위 증가**에 따라 지자체 간 **관할구역 설정** 및 **합리적 공간관리**를 위한 **법·제도 정비**

□ **해양생태계 보전 및 건강성 회복**

○ **세계자연유산** 등재 **한국의 갯벌** 통합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갯벌 복원을 확대함과 동시에 갯벌의 가치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

○ 해양생태계의 체계적인 보전을 위해 **해양보호구역을 확대**하고,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등을 통해 생태관광 활성화

○ **해양동물 복지 개선**을 위해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및 서식환경 개선, 수족관 관리체계 개선 등 **제도적 기반 강화**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0	'21	'22	'23			
① 해양수질 개선율(%)	40	51	46	47	최근 3년 평균 실적(45%)보다 약 2% 상향한 47%로 설정 * 해양수질은 유입 부하량이 감소하더라도 강우량, 강우빈도, 해수온도 등과 같은 외부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으므로 목표치를 과도하게 높게 설정하는 것이 곤란	(WQI 1등급 정점 수) ÷ (전체 연안 해역 조사정점 수) × 100%	내부보고자료

(3) 외부환경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해양환경 개선 효과는 강우량, 기온 등 기상 조건과 육상 오염물질 유입 등 외부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음

○ 또한, **해양환경 개선 효과**는 각종 정책의 시행 이후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 장기적 분석이 요구

* 연도별 실적보다는 중장기적인 수질개선 추세치 분석값이 중요

□ **개발과 보전의 상생 및 공존을 위한 해양공간관리 체계화**

○ 공유수면 등 해양공간을 둘러싼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합리적 조정을 위해 **해양공간관리체계 정비** 및 **과학적 정보체계 구축**

○ **해상풍력단지** 조성 등 해양공간 **이용·개발행위 증가**에 따라 지자체 간 **관할구역 설정** 및 **합리적 공간관리**를 위한 **법·제도 정비**

○ 해상풍력·해사채취 등 해양환경 영향이 큰 개발행위에 대응하여 객관적 평가기준 수립 등 **사전 환경성 검토** 및 사후 관리체계 **강화**

□ **해양동물 복지 개선 및 다양성 보전**

○ **해양동물 복지 개선**을 위해 동물보호단체, 수족관 업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협의채널 구축·운영 확대**

(4) 기타

□ (**참고자료**) 해양환경종합계획, 해양공간기본·관리계획,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해양생태계 보전관리기본계획 등 해양환경 분야 법정계획 및 법령 제·개정 사항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1 해양쓰레기 전(全)주기 대응 및 보전·개발이 조화로운 해양 관리 강화(Ⅲ-4-①)

해양보전과 (044-200-5307/5847)

□ 추진배경

○ (**해양쓰레기 문제**) 해양쓰레기는 수산자원 감소, 항행 방해, 해양 환경 오염 등 해양·수산 분야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주며

- 특히 해양 미세플라스틱이 먹이사슬을 통해 생물체 체내에 축적되고 해양 환경을 오염시키면서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

- UN 등 국제사회에서도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양환경 및 생태계 보호를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제적 현안*으로 인식

* G20 정상회의('19.6)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대응 이행체계 채택, 유엔환경총회('22.3) '플라스틱오염 국제협약 결의안' 채택 등 해양쓰레기 문제를 기후변화에 준하는 전 지구적인 현안으로 인식

○ (**해양이용 증가**) 해양 이용·개발 수요가 대규모·다양화되고 사회 갈등 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사전 환경성 검토 중요성 증대

-「해양환경관리법」 상 해역이용협의·해역이용영향평가 제도를 분법하고 공탁제 도입, 평가절차·사후관리 강화 등 제도 선진화 추진 필요

○ (**기후 변화**) 2030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2050 탄소중립시나리오에서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이 주요 탄소 감축 수단으로 제시

- 동해가스전을 활용한 실증 사업 추진 및 서해 군산 분지에서 대규모 저장소 발굴을 위한 저장용량 평가 시행 필요

○ (**해저퇴적물 오염**) 오염퇴적물은 해양생태계 및 수산자원 보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악취 등으로 인근 주민 삶의 질을 저해

- 조선소, 해양시설, 산업폐수 등으로부터 유입된 오염퇴적물은 확산·재부유 등에 의해 용출되어 수질 악화, 생태계 교란 등 야기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해양쓰레기 전(全)주기 대응** 및 해양이용에 대한 **사전 환경성 검토 고도화 등**으로 보전·개발이 조화로운 해양 관리 강화

○ (예방·수거) 해양쓰레기 발생원 관리 및 신속·효과적인 수거

- **해양폐기물 정화 추진계획**에 따른 사업 실시, **해양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대책**('22.12.) 이행, **괭생이모자반** 비상대응체제 운영 등

- **바다환경지킴이**의 업무 범위를 예방, 분리배출 등 해양쓰레기 전주기 관리로 확대하고, 운영실태 점검 및 인력 증원 검토

- **해양쓰레기 One-stop 해상처리**(동결파쇄, 유해성분 제거 등) 시스템 개발 및 실증을 위한 **친환경선박 개발**(450억, '22~'26)

- 해양쓰레기 일제수거를 통한 현존량 저감, 범국민 연안정화 참여 강화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해양쓰레기 수거혁신 대책**' 수립

○ (미세플라스틱) 해양 미세플라스틱 관리 강화

- 해양 유입·발생 평가, 환경거동 기작 규명 및 생태계 보호기준 마련을 위한 **위해성 평가** 추진('22~'26)

  * ①해양 미세플라스틱 유입·발생 및 환경거동 연구, ②해양 생태계 보호기준 마련을 위한 위해성 평가, ③해양 미세플라스틱 현안해결(차세대 친환경부표) 기술개발

- 매년 실시하는 모니터링 결과(90개 정점, 2회)를 공개하고, 관련 **정책 및 연구 공유·개발** 체계 마련

○ (재활용) 해양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기반 강화

- **업사이클링 글로벌 마켓*** 겨냥한 전문 업체 육성 등 **ESG 경영**과 연계하여 해양플라스틱 재활용율 20%까지 증대(現 10%↓)

  * 삼성(갤럭시S22), 아디다스(Parley운동화), MS(마우스) 등 해양플라스틱 재활용 제품 상용화 中

○ (**민간참여**) 반려해변 확대, 방치쓰레기를 **알**리고(안전신문고), 작은 쓰레기는 직접 **줍**는(줍깅 등)'**알줍**(알려주세요+주워주세요)' **범국민 캠페인** 추진*

* 안전신문고 內 해양쓰레기 신고제 운영('22.5.~, 월평균 200여건), 접수 시 지자체 수거·환류

○ (**협력강화**) **기관 간 협업 및 국제기구 협력 강화**

- **플라스틱 국제협약** 정부간협상위원회 적극 참여

- 신남방지역 국가 등을 대상으로 해양쓰레기 저감성과를 체감하고 자체적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폐기물 협력사업**(ODA) 추진

- 범부처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및 관련 **분위위원회*** 운영

* 국립공원 해양쓰레기 관계기관 협의회, 하천폐기물 해양유입 저감 관계기관 협의회, 해양폐기물 저감을 위한 제2차 범부처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회의 등

○ (**해양 환경성 평가**) 해양 이용·개발행위 증가, 대규모화 등에 대비하여 **사전 환경성 검토**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관련 연구개발 및 제도 개선*

* 유형별(바다골재) 해역이용영향평가서 작성 가이드라인 마련, 관련 연구개발 특허 출원 등

○ (**오염퇴적물 정화**) 반폐쇄성 해역의 **오염퇴적물 정화**를 위한 **실태조사**(1개소), **실시설계**(2개소), **수거·처리**(1개소), **사후관리**(7개소) 등 추진

○ (**CCS**) 해양지중 퇴적층에 산업 활동 등에서 포집된 **CO_2 저장**이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파악** 및 **관리 지침**(안) 마련

<'23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해양쓰레기 통계 확정	'23.2월	국정 41-7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R&D 분과위원회 개최	'23.2월	국정 41-7
	2023년 해양폐기물 인식증진 홍보사업 추진계획 수립	'23.3월	국정 41-7
	오염퇴적물 분포 현황조사 등 착수	'23.3월	국정 41-6
2/4분기	도서지역 쓰레기 정화운반선 운영	'23.4월	국정 41-7
	해양쓰레기 저감 혁신 대책 수립	'23.4월	국정 41-7
	오염퇴적물 수거작업 추진	'23.5월	국정 41-7
	대국민 해양폐기물 인식증진을 위한 알줍캠페인 실시	'23.5월	국정 41-7
3/4분기	해양폐기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민관연 세미나 개최	'23.7월	국정 41-7
	오염퇴적물 수거작업 실시	'23.8월	국정 41-6
	해양쓰레기 수거 장비 시제품 개발 추진	'23.8월	국정 41-7
	제23회 국제 연안정화의 날 기념식 개최	'23.9월	국정 41-7
4/4분기	괭생이모자반 유입 대비 모의 도상훈련 실시	'23.11월	국정 41-7
	바닷모래 해역이용영향평가서 작성 가이드라인, 해역이용영향평가 등(협의기관) 검토 가이드라인 마련	'23.12.월	국정 41-6
	'23년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회의 개최	'23.12월	국정 41-7
	CO2 해양지중저장을 위한 지침(안) 마련	'23.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해양쓰레기 수거지역 인근 주민·어업인·관광객, 항행 장애물 제거로 안전한 항해가 가능한 선박운항 관계자·승객 등

○ (**이해관계자**) 사업대상지를 통항·이용하는 해운업계 및 어업인, 사전 환경성 평가 대상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 등

□ 기대효과

○ 해양쓰레기 및 오염퇴적물 수거·처리로 해양생태계 보전, 해양환경 개선 및 항행 안전 위해요인 제거

○ 쾌적한 경관 조성으로 지역주민 정주 여건 개선 및 해양관광 수요 증가

○ 선진화된 사전 환경 영향성 평가 체계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해양 이용 가능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2	'23
해양환경개선(기금)(Ⅰ-1-일반재정⑦)			
① 해양환경개선(1065)	수발기금	357	363
▪ 해양폐기물 정화사업(301)	수발기금	357	363
해양수산환경기술개발(일반회계)(Ⅲ-3-R&D①)			
① 해양수산환경기술개발(4132)	일반회계	65.4	58
▪ 과학기술기반 해양환경영향평가기술개발(304)	일반회계	65.4	58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0	'21	'22	'23			
①해양쓰레기 수거량(톤) (가중치 : 70%)	138,362	120,736	126,035	117,881	태풍발생횟수와 장마기간 등에 영향을 받는 지표로, 과거 데이터에 기반한 목표치 상향은 한계가 있으므로, 최근 5년간 실적 평균 수준으로 설정	당해 연도 해양쓰레기 수거량	해양환경정보포털 입력 실적
②해양환경성 검토 제도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가중치 : 30%)	신규	신규	신규	100	해양이용 개발행위 증가에 따른 환경성 검토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 반영을 위한 도전적인 목표치 설정(신규)		
					① '과학기술기반 해양환경영향평가 기술개발(R&D)' 성과물 * 연구개발 진행상황을 고려하여 도전적 목표 설정	특허 출원·등록 건수/목표건수(8건) ×70%	특허출원·등록건수 (결과보고 등)
					② 제도개선, 영향평가 객관성 제고 등을 위한 협의기관, 이해관계자 대상 간담회 개최	간담회 건수/목표 건수(3건) ×30%	내부문서(결과보고 등)

2 지속가능한 해양환경관리체계 마련(Ⅲ-4-②)

해양환경정책과 (044-200-5285, 5284)

□ 추진배경 (목적)

○ 우리나라 바다는 해수온·해수면 상승 등이 **전 지구 평균치를 상회***하여 **빠른 속도로 진행**, 시급한 대응 필요

* (표층수온) '68~'20 1.27℃↑(세계 평균 0.53℃) (해수면) '71~'06 2.56mm/yr↑(세계 평균 2.36mm/yr)

- 이에, 2030 **해양수산 온실가스 배출량 70% 감축**('18년 比)을 목표로 제4차 기후변화대응 해양수산부문 종합계획 수립('22.9)

○ 탄소중립의 체계적 이행 및 해양의 기후변화 적응력 강화를 위해 **해양환경 관리체계**도 **기후위기 대응형**으로 전환 필요

- 해양 기후변화, 플라스틱 폐기물 저감 등 의제를 중심으로 국제협력 전문적·종합적 대응 강화

- 주요 탄소흡수원인 해양의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깨끗한 해양수질 및 연안 마을단위 탄소중립 역량 확보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해양 기후변화대응 관리체계 강화**

- 제4차 기후변화대응 해양수산부문 종합계획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정부 합동 **2030 NDC 이행로드맵 수립**

- 기후변화·해양환경 등 국제사회 주요 의제에 적극적·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해양환경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역할 강화

- 해양수산 **온실가스 통계** 산정 및 **해초대** 등 **신규 부문 반영**

- 연안 마을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저감하고, 재생에너지를 자체 생산·소비하는 **탄소중립 해양마을 조성**

- **청정한 해양 수질 확보**를 위해 '제4차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수립하고, 연안오염총량관리 및 환경관리해역별 관리 이행

- 4대강 환경·생태계 모니터링을 통해 변화를 연구하고 이를 기반으로 변화 예측기술 고도화, 관리정책 연구 등 추진

- 해양환경교육 온·오프라인 콘텐츠(온라인플랫폼, 이동교실 등)를 활용하여 수요자 맞춤형 해양환경교육 실시

○ **'22년도 미흡과제*** **개선계획**

* ①정책이행 노력도의 개선·보완 필요, ②성과지표 부합도 및 목표달성도 개선·보완 필요

- **해양방사능, 기후변화** 등 해양환경 핵심 업무와 관련된 **정책소통***을 **강화**하여 **정책이행 노력**을 개선하고,

* 해양방사능·기후변화 관련 전문가 간담회, 정책설명회, 주요 정책현장 취재지원 등 추진

- 단순 정량지표에서 벗어나, 주요 **정책내용**에 **부합**하고 **정책효과** 및 **성과달성도**를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성과지표 도입**

* ① 지속가능한 해양환경을 위한 인식 증진 노력 : 교육 이수인원 확대와 함께 교육 전·후의 해양환경 인식변화 정도를 지표화하여 정책효과성 반영

* ② 해양수산 온실가스 감축 : 해양수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공공부문의 제도 기반 마련 노력과 민간부문의 감축사업 참여 유도를 위한 노력을 지표화

< '2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승인대상 분야 해양 흡수원 신규 반영	'23.1월	국정 41-7
	'23년도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추진계획 마련	'23.1월	국정 41-7
	항만 대기질 개선을 위한 「항만대기질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	'23.2월	국정 41-6
	해양환경·기후변화 국제협력 전문가 간담회 개최	'23.2월	국정 41-6
2/4분기	제4차 기후변화대응 해양수산부문 종합계획 이행점검 추진	'23.4월	국정 41-6
	연안하구역 환경·생태계 모니터링 추진	'23.5월	국정 41-6
	해양환경·기후변화 국제협력 수행체계 개편방안 마련	'23..6월	국정 41-6
	해양 기후변화대응 컨퍼런스 개최	'23.6월	국정 41-7
3/4분기	찾아가는 강사단 해양환경 방문 교육 실시	'23.7월	국정 41-6
	해양환경 분야 ESG 업·단체 간담회 개최	23.7월	국정 41-6
	해양환경·기후변화 국제협력센터 설립방안 마련	'23.9월	국정 41-7
	탄소중립 해양마을 전문가 자문회의	'23.9월	국정 41-7
4/4분기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23.10월	국정 41-6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부대행사 개최	'23.12월	국정 41-7
	해양수산 온실가스 통계 신규 항목(해초대) 반영	'23.12월	국정 41-7
	제4차('24~'28)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안) 마련	'23.12월	국정 41-6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특별관리해역 인근 지역 및 연안지역 거주 주민, 학생, 환경단체 등 전 국민

ㅇ (**이해관계자**) 연안 지자체 및 주민, 어업인, 환경단체 등

□ **기대효과**

ㅇ 환경관리해역의 환경보전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해양의 건강성 회복 및 지속가능한 해양이용 기반 조성

ㅇ 해양 기후변화대응 기반을 강화하여 2030 NDC 이행에 기여하고, 범국가적 연안지역·수산업 기후변화 역량 강화

ㅇ 국제협력 업무 수행체계 개선하여 의제 및 협력사업 발굴 등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국내정책과 연계

ㅇ 하굿둑 개방 등 물길 복원 추진 시 시나리오별 연안하구역 환경, 생태계 변화 예측을 통한 최적화된 관리정책 수립 가능

ㅇ 해양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해양환경 관련 지식·기능 및 태도·가치관 함양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2	'23
해양환경 개선 및 관리(Ⅰ-1-일반재정②)			
① 해양환경 개선 및 관리(1033)	일반회계	172	185
▪ 환경관리해역 관리 및 시스템 구축(300)	일반회계	45	45
▪ 해양환경감시체계 구축운영(320)	일반회계	98	110
- 기후변화대응체계 구축(260-01)	일반회계	2	3
▪ 해양환경국제협력(302)	일반회계	27	27
해양산업시설 배출 위험유해물질 관리기술 개발(Ⅲ-2-R&D①)			
① 해양수산환경기술개발(4132)	일반회계	40	90
▪ 4대강 물길복원에 따른 연안하구역 환경, 생태계 모니터링 및 활용기술 개발	일반회계	-	14
해양오염피해복구(Ⅰ-1-일반재정⑤)			
① 해양오염피해복구(1036)	일반회계	370	142
▪ 해양환경교육 운영(301)	일반회계	36	38
지역밀착형 오션뉴딜			
① 어촌뉴딜300(3345)	농특회계	20	20
▪ 탄소중립형(지역밀착형 탄소중립 오션뉴딜)(310)	농특회계	20	20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20	'21	'22	목표치 '23	'23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① 지속가능한 해양환경을 위한 인식 증진 노력 (가중치 : 50%)				50 (신규)	① 해양환경교육 이수인원 달성률 $\text{달성률}(\%) = \frac{\text{교육이수인원}}{\text{목표인원}} \times 100$ * 최근 3년간 해양환경교육 이수 증가 인원 평균치 기준으로 '23년도 목표인원 산출 '20: 43,336 / '21: 66,671 / '22: 71,411 / '23: 80,769 (+9,358)	해양환경교육 이수 인원 달성률(이수인원/목표인원(80,769명)) ×50%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 통계
				50 (신규)	② 해양환경교육 전·후 인식변화율 $\frac{(\text{사후인식점수} - \text{사전인식점수})}{\text{사전인식점수}} \times 100$ * 신규 도입 지표이나, 도전적으로 5%를 목표로 설정	(해양환경교육 전·후 인식변화율/목표 변화율(5%)) ×50%	수강자 설문조사 결과
② 해양수산 온실가스 감축 기반 강화 노력 (가중치 : 50%)				70 (신규)	① 연안습지 부문 온실가스 산정 항목 확대 '21: 0 / '22: 1 / '23: 2 (항목수(누적))	산정 항목 확충 목표 달성도×70% * $\frac{\text{반영항목수}}{\text{목표항목수}} \times 100$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산정 근거 자료 및 내부자료
				30 (신규)	② 민간부문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국내·외 설명회·행사 등 개최 횟수	(설명회 개최 건수(4건)/목표 건수(4건)) ×30%	내부보고·보도자료 및 결과보고서 등

3 개발과 보전의 상생 및 공존을 위한 해양공간관리 체계화(Ⅲ-4-③)

해양공간정책과 (044-200-5261 / 5263 / 5297 / 5266 / 5267)

□ 추진배경(목적)

○ 해양공간 **활용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해상경계**가 명시적으로 획정되지 않아 **지자체·주민 간 갈등**이 **장기화·극대**화된 상황

* 옹진·태안('05~'09), 홍성·태안('10~'15), 고창·부안('16~'19), 경남·전남('15~'21) 등 헌재 권한쟁의심판을 통한 해상경계 분쟁해결 시도 급증

- **해상경계에 관한 법제 마련**을 통해 해양공간·환경 관련 지자체 간 **권한·책임 범위**를 **분명히** 하고 **사회적 비용 저감** 필요

○ 해상풍력 등 **새로운 해양공간 활용 형태**가 확산되고 있으나, 공유재로서의 **해양공간 보전·관리**에 대한 **제도적·인식적 한계** 존재

- 바다의 무분별한 이용을 **엄격히 관리하여** 공유자원으로서의 **가치를 보전**하고 국민의 **실수요** 및 **정책여건**에 맞게 제도를 **합리화·체계화**할 필요

○ '해상풍력 상생·발전방안'('20.7) 등을 통해 **수산업 상생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어업인들의 요구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

- 지역별 여건을 감안, 관계기관 및 전문집단과의 **소통과 협의**를 통해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상생·공존 방안** 마련·필요

○ **국민들의 수요**가 높은 **해양수산정보** 제공 및 **해양공간정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서는 **공간정보 활용 기반** 구축이 필수적

- 해양수산정보의 **통합·연계·공동활용**을 위한 **플랫폼 고도화**와 **디지_털트윈** 구축 및 **정책시뮬레이터** 기술 개발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지자체 간 해양관할구역 갈등**의 **근원적 해소**를 위한 **법률 제정**

- 해양경계 부재로 인한 지자체 간, 이웃주민 간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예방하기 위한 「**해양관할구역 설정법**」 **제정안 국회 제출·발의**('23.2월)

- 해양 관할구역 설정 법률안 주요내용 논의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한 **정책토론회***('23.2월), **설명회**('23.8월) **개최**

* 국회의원, 관련 학계 및 연구계 전문가,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 등 참석 추진

○ **해양공간 및 연안관리 법제 개편을 통한 공공성 강화**

- 해안선을 중심으로 한 주변해역·육역의 체계적 관리 및 연안재해에 효과적 대응을 위한 「**연안관리법**」 **개정안 마련**('23.5월)

- 공유수면의 지속가능한 보전·관리를 도모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공유수면법**」**개정안 국회 제출**('23.6월)

○ **공유수면 관리·감독 강화 등 이용질서 확립 추진**

- 전국 공유수면의 **불법 매립·점용·사용** 등 **실태조사계획**을 마련('23.4월)하고, **경기·인천·충청권역 조사 완료**('23.12월)

※ 공유수면 불법이용 실태조사('23~'25, 연10억) : 전국 공유수면을 권역별로 구분하여 이용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확인된 불법이용 의심지역은 추후 해당 지역 공유수면관리청과 면허청에 원상회복 등 조치 추진

- 사업이 중단되거나 실시계획 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된 미준공 **공유수면 매립지***의 생태계 복원을 위한 **재자연화 계획 수립**('23.12월)

* 장기미준공 매립지 현황('21.9) : 총 27개 사업지구, 756㎢

※ 갯벌, 산림, 하천 등 기존 생태복원 사업 및 해외 사례 등을 확인하고 민·관·연

전문가 자문을 통해 주변 환경, 위치, 매립지 특성 등을 고려한 추진 방향 제시

○ **공유수면 이용기준 명확화 및 관리청 역량 제고 지원**

- 공유수면관리청 대상 **정기 업무협의회**(분기 1회)를 통해 공유수면 허가제도 운용 관련 사례를 공유하고, 법령 교육 등 실시

- 공유수면 비대면 민원처리 서비스 활용지원 및 사용자 편의성 개선, 점·사용료 부과 통지 연계* 등 **공유수면정보 통합관리 체계 고도화**('23.12월)

* 모바일 공무원증 로그인, 온-나라 전자결재 연계, 지방세·디브레인(세입)시스템 연계 등

○ **해상풍력 추진 관련, 어업인 의견수렴 강화 및 권익보호 방안 마련**

- 지역별 해상풍력 민관협의회에 수협 등 실질적 이해당사자의 참여 지원 및 **민·관·연 간 소통**을 위한 **협의회** 개최(반기 1회)

* 사업예정 해역 어업활동에 대한 분석(수협중앙회, 해양환경공단 협조)을 통해 해상풍력으로 실제 영향을 받은 어업인들이 민관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 해상풍력대책위 등 어업인단체 간담회를 통해 어업인 요구 지속 파악

○ **해양수산 빅데이터 정보제공·활용 및 지원체계 강화**

- 해양수산 관련 **산·학·연 정기협의체**를 **구성**('23.3월)하여 데이터 수요, 제공형태 및 시기, 공간정보 활용 교육 등 **지원사항 발굴 및 협의**(반기 1회)

* ('23년) 주기적 데이터 신청·제공 시스템 시범운영(한국해양대학교) → ('24) 참여기관 확대

- 민감·보안정보* 비식별화 가공 및 데이터셋 개방·제공 범위 확대

* 선박 통항정보, 어선 V-Pass 정보, 어선 조업정보, 수심 등

- 해양수산정보의 자료검색·요청·다운로드 및 행정절차협의·제공검토를 지원하는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제공관리 통합창구 구축**('23.12월)

* 단순 메타정보 중심의 검색·조회 화면을 연관데이터 검색·데이터셋 가공 등 맞춤형으로 지원·제공하는 데이터 큐레이팅 서비스로 전환

○ **디지털트윈을 활용한 과학적인 해양공간정책 지원 기술개발**

- 해양 디지털트윈 개방형 플랫폼 설계, 테스트베드 구축·검증 및 표준화 연구

- 골재·광물채취, 해상풍력 입지 등의 해양개발에 따른 지형·항로·어획량 변화 등 **해양활동 영향 프로토타입·시뮬레이션 예측 기술 개발**('23.12월)

< '2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해상풍력과 해양수산분야 간 상생 기반 조성을 위한 이해관계자 등 협의회	'23.1월	국정41-6
	「지자체 해양 관할구역 설정법」 제정안 국회 제출· 발의 및 정책토론회 개최	'23.2월	국정41-6
	해수부- 현장 관리청간 공유수면 정책소통· 확산을 위한 정기 협의회	'23.3월	국정41-6
	해양수산 빅데이터 활용 관련 산·학·연 전문가 협의체 구성	'23.3월	-
2/4분기	'23년 공유수면 불법 이용 일제 실태조사(경기·인천·충청권역)계획 수립	'23.4월	국정41-6
	「연안관리법」 개정안 마련	'23.5월	-
	해양수산 빅데이터 활용 관련 산·학·연 전문가 협의회(상반기)	'23.6월	-
	「공유수면법」 전부개정안 국회 제출 및 해수부- 현장 관리청 간 공유수면 정책소통· 확산을 위한 정기 협의회	'23.6월	국정41-6
3/4분기	장기 미준공·방치 매립지 재자연화 민·관·연 전문가 자문회 및 해수부- 현장 관리청간 공유수면 정책소통· 확산을 위한 정기 협의회	'23.7월	국정41-6
	해상풍력과 해양수산분야간 상생 기반 조성을 위한 이해관계자 등 협의회	'23.9월	국정41-6
	해양수산 빅데이터 활용 관련 산·학·연 전문가 협의회(하반기)	'23.9월	-
4/4분기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 대상 「해양 관할구역 설정법 」제정 관련 설명회	'23.11월	국정41-6
	전국 공유수면 불법 이용 일제 실태조사(경기·인천·충청권역) 완료 및 장기 미준공·방치 매립지 재자연화 계획 수립	'23.12월	국정41-6
	해양수산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제공·관리 통합창구 구축 및 공유수면정보 통합관리를 위한 맞춤형 업무처리서비스 개발	'23.12월	-
	정책의사결정의 해양활동영향 시뮬레이션 예측 기술 분석보고서 마련	'23.12월	-
	해수부- 현장 관리청간 공유수면 정책소통· 확산을 위한 정기 협의회	'23.12월	국정41-6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정책·사업의 수혜자**) 해양공간 및 공유수면을 이용하는 일반국민, 해양수산 전문 연구기관 및 대학, 해양수산 특성화 학교, 민간 기업 등

○ (**이해관계자**) 해양공간·공유수면 인접 지자체, 주민, 어업인, 사업자, 관련 단체 등

□ **기대효과**

○ 해양 관할구역 갈등 해결의 법제화를 통해 **지자체 및 주민 간 관할구역 분쟁을 예방**하고, 행정력 낭비 및 **사회적 비용 저감**

- 국민의 안정적 해양공간 이용 지원과 함께 지자체의 책임감 있는 해양영토 관리, 지자체간 합의 유도를 통한 상생협력 기대

* 현재까지 약 30여건에 달하는 지자체간 해상경계 분쟁이 해상경계 법제 마련 및 운영을 통해 근원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전망

○ 국가가 적극적으로 공유수면에서의 불법행위를 조사·원상회복하고 향후 불법행위 발생 가능성을 예방하는 등 **질서있는 해양공간 구축**

- 공유수면 보전·재자연화·이용 등을 아우르는 종합 정책계획과 법령을 바탕으로 국민 모두를 위한 공유재로서 바다의 가치 회복

○ 해양수산정보의 통합·개방으로 타 분야 정보와의 융합기반을 제공하여 해양수산 분야 **정책 지원** 및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 창출

- (해양산업 활성화) 해양공간정보를 민간에 개방하고, 이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여 **해양산업 활성화** 전망

* 해양정보(수심, 조석, 해상날씨 등)를 이용한 모바일 낚시앱 개발(내바다지도), 해안선 정보를 이용한 가상현실 해양레저 영상 자전거길 개발(비텔리) 등

- (해양수산 행정 과학화) 해양공간의 변화 분석 및 해양사고 예측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예측가능한 과학적 해양수산행정** 구현

- (해양공간 분석·예측) 3D 기반 해양 디지털트윈 기술 개발(~'26)로 재해예방, 어업생산성 확보, 해양에너지 개발을 촉진하여 **'28년까지 총 5.3조원의 부가가치 창출** 전망('21.4, 한국수로학회)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2	'23
해양생태계 보전 및 복원(Ⅰ-1-일반재정①)			
① 해양생태계 보전 및 복원(1031)	일반	26	24
		(26)	(24)
▪ 해양공간 통합관리(305)		26	24
해양수산정보 공동활용체계 구축(정보화)(Ⅰ-5-정보화⑨)			
① 해양수산정보 공동활용체계 구축(4280)	일반	24	21
		(24)	(21)
▪ 해양수산정보 공동활용 플랫폼 구축(500)		24	21
해양공간 디지털트윈 적용 및 활용 기술개발(Ⅲ-3-R&D⑦)			
① 해양공간 디지털트윈 적용 및 활용 기술개발(4132)	일반	32	63
		(32)	(63)
▪ 디지털트윈 기반 해양공간 입체적 통합관리 및 서비스 개발(312)		32	63
연안관리(Ⅰ-1-해양환경보전④)			
① 연안환경관리(일반)(1034)	일반	3	14
		(3)	(14)
▪ 연안관리(300)		3	14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2개 이하)	실적	목표치	'23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3개 이하)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0 '21 '22	'23			
①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관리기반 구축을 위한 제도 정비 및 공간정보 체계 고도화 (가중치 50%)		100	개발과 보전이 공존하는 해양공간 관리체계 구현을 위한 계획 수립, 조사 및 정보체계 고도화 건수를 목표로 설정		
			①전국 공유수면 불법이용 일제 실태조사(경기·인천·충청권역) 완료, 장기 미준공·방치 매립지 재자연화 계획 수립, 공유수면정보 통합관리를 위한 맞춤형 업무처리 서비스 개발	①(실태조사완료(1건)+재자연화 계획 수립(1건)+맞춤형 업무서비스 개발(1건))/목표건수(3건)×50%	내부문서·메모보고 및 결과보고서, 정보시스템 등
			②해양수산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제공관리 통합창구 구축, 정책의사결정의 해양활동영향 시뮬레이션 예측 기술 분석 보고서 마련	②(빅데이터 통합창구 구축(1건)+예측기술분석보고서 마련(1건))/목표건수(2건)×50%	내부문서·메모보고 및 결과보고서, 정보시스템 등
②해양공간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국민 등 이해관계자 소통 및 협업 활성화(가중치 50%)		100	정책 수요자인 국민들과 민간분야 등과의 원활한 소통 및 긴밀한 협업을 위해 관계자 협의체 구성 및 각종 토론회,협의회,설명회 등의 개최·운영 건수를 목표로 설정		
			①해상풍력과 해양수산분야간 상생 기반 조성을 위한 관계 협의회(2회), 해수부-공유수면 관리청간 정책소통·확산 정기 협의회(4회), 장기 미준공·방치 매립지 재자연화 민·관·연 전문가 자문회(1회)	①(협의회·자문회 개최건수(7건)/목표건수(7건))×50%	내부문서·메모보고 및 결과보고서 등
			②지자체 해양 관할구역 설정법 관련 정책토론회 및 이해관계자 설명회 개최(2회)	②(토론회·설명회 개최건수(2건)/목표건수(2건))×25%	내부문서·메모보고 및 결과보고서 등
			③해양수산 빅데이터 활용 관련 산·학·연 협의체 구성 및 개최(2회)	③(협의체 구성(1건)+개최건수(2건))/목표건수(3건)×25%	내부문서·메모보고 및 결과보고서 등

④ 해양자산 관리 강화 및 해양생태계 보전(Ⅲ-4-④)

해양생태과 (044-200-5311~8 / 5327)

□ 추진배경 (목적)

○ 해양보호구역 · 갯벌의 생태적 특성과 개발 · 이용 수요 등을 체계적 ·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책관리 수단 확보 및 시행

○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21.7)된 '한국의 갯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생태적 가치가 높은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해양생태자원을 활용한 부가가치 제고 및 지속가능한 이용 실현

* 서천, 고창, 신안, 보성·순천 갯벌(1,284km^2)

○ 기후변화, 연안개발 등 자연적 · 인위적 요인에 따른 해양생물 다양성 감소는 국제사회의 주요 · 핵심 환경 현안

- 5대 해양생태축 관리, 해양보호생물 및 유해 · 교란 해양생물 등 위협요인의 체계적인 관리로 생태계 건강성 및 지속가능한 이용 제고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폐염전 등 훼손된 갯벌을 자연갯벌로 복원하고 유휴 갯벌에 식생 복원을 통한 생태계 건강성 확보 및 탄소 흡수능력 증진

◈ 갯벌세계유산의 통합관리 이행기반을 마련하고, 해양생태자원의 효율적인 보전을 위한 지속적인 해양보호구역 지정·확대

◈ 해양생물 종 다양성 보전 및 해양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해양보호생물 지정·관리, 유해·교란 해양생물 제거·관리사업 등 추진

① 정책(제도) 기반 마련

○ 갯벌세계유산 관리 근거 마련을 위한 「갯벌법」 개정(안) 마련 및 국가해양정원 지정기준 구체화를 위한 「해양생태계법 시행령」 개정완료('23.上)

○ 갯벌 세계유산 통합관리계획 및 권역별 국가해양정원 조성을 위한 국가해양정원 종합계획 수립('23.下.)

○ 갯벌유산 보전본부 건립, 유산지역 바닷새 서식실태 모니터링, 지역협의체 구성 · 운영 등 갯벌유산 통합관리 이행기반 마련

○ 관찰·관광 세부기준 설정을 위한 「해양생태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4월), 수족관 허가기준 및 체험활동 기준 설정 등을 반영한 「동물원·수족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12월), '제4차('23~'27) LMO 안전관리 계획' 수립(6월)

② 해양자산 관리 강화

○ 생물다양성이 뛰어나고, 보호가치가 있는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습지보호지역)으로 지속적으로 지정 · 확대

* 해양보호구역 지정(누적) 계획 : ('21) 32개소 → ('22) 34개소 → ('23) 36개소

○ 갯벌 등 우수 해양자산 · 자원 보전 관련 대국민 인식 증진

- 해양보호구역 시민모니터링 운영, 해양보호구역대회를 개최하고, 갯벌유산지역 지역별 특화사업을 추진하여 세계유산 홍보 및 대국민 인식증진에 기여

○ 갯벌의 온실가스 흡수능력 증진과 함께 해양생물 서식지 제공 등을 위해 '24년 신규 갯벌복원(2개소) 및 식생복원(1개소) 추진

- 갯벌복원사업의 생태계 복원 효과성 및 성과 증진을 위해 갯벌복원 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연 2회), 사업별 자문회의(필요시) 등 실시

③ 해양생물 다양성 및 해양생태계 보전

○ 국가해양생태계 종합조사 추진계획 수립, 5대 해양생태축별 세부관리방안 마련 및 해양보호생물 신규 지정

○ 해양동물 구조·치료기관 및 서식지외보전기관 신규 지정(1월), 해양동물 구조·치료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8월), 수족관 동물관리 위원회 개최(9월)를 통해 민간협력 강화

○ 해양수산용 LMO 국경검사 및 유통관리를 위한 정밀진단 키트 보급(6월), 연구자·국경감시자 교육(10월)을 통한 해양생태계 위협요인 관리 강화

○ 해양보호생물 기념우표 발행(6월), 해양생물 콘텐츠 공모전(10월) 및 해양보호생물 방류 홍보 이벤트 개최(8월), 독도 해양생물 다양성 회복사업 시행

④ 국제협력 강화

○ 황해 광역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 중국 등 관련국가와 협력기반을 마련하고, 와덴해 3국(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협력강화*

* 갯벌 중 세계자연유산으로 최초 등재(`09년) / 갯벌 보전·관리사업 벤치마킹

○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지침 개정을 위해 블루카본 국제포럼 등 국제행사 개최 및 연구개발 등을 통해 국제협력 추진

* 국제협력을 통해 IPCC 지침 개정(現 염습지·잘피·해초류만 인정) 및 온실가스 흡수원으로 비식생갯벌·해조류 등 반영, 해양의 온실가스 흡수원 국가통계 반영 확대 추진

- 기후변화 대응 및 갯벌의 탄소흡수원 인증을 위한 블루카본 국제포럼, 국내 협력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등 개최

○ 황해 상괭이 보전을 위한 한·중 워킹그룹 운영 확대 및 국제 워크숍 개최(9월), 생물다양성협약(CBD) 대응(연중)

< '2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3년 해양생태계 서식처 기능개선·복원사업 추진 계획 수립	'23.1월	국정 41-7
	해양보호구역 중앙관리위원회 개최	'23.2월	
	해양생태계 기후변화 관련 전문가 간단회 실시	'23.2월	
	갯벌(2개소) 및 식생(1개소) 복원사업 신규사업 확대	'23.2월	
2/4분기	해양보호구역 관리 전문가 워크숍 개최	'23.4월	
	관찰·관광활동 제한기준 반영「해양생태계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	'23.4월	
	5대 해양생태축별 세부관리방안 마련	'23.6월	
	블루카본 추진전략 수립	'23.6월	
3/4분기	갯벌세계유산 지역 대상 바닷새 조사 추진	'23.7월	
	해양보호구역 확대(신규) 주민간담회 개최	'23.8월	
	갯벌복원 관련 하위고시 마련	'23.9월	
	구조·치료·인공증식 해양생물 방류 행사 개최	'23.9월	
4/4분기	해양생물 콘텐츠 공모전 개최	'23.10월	
	해양보호구역 시민모니터링 성과보고	'23.12월	
	갯벌유산지역 바닷새 모니터링 성과보고	'23.12월	
	수족관 허가기준 및 환경기준 등 반영「동물원·수족관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	'23.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정책 또는 사업의 수혜자) 해양생태계 서비스를 제공받는 전 국민

○ (이해관계자) 어업인, 해양보호구역 및 갯벌지역 인접지역 주민, 연안지자체, 해양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자, 환경(동물)보호단체, 해양생물 서식지외 보전기관(16개소), 해양동물 전문구조·치료기관(11개소) 등

□ 기대효과

○ 갯벌 생태관광 활성화 등 갯벌의 이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해양보호구역 지정, 갯벌복원사업을 통해 해양생태자원의 가치를 제고함으로써 다양한 해양생태계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

○ 과학적·체계적 관리를 통해 보전된 해양생물(또는 자원)이 제공하는 다양한 생태계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2	'23
해양생태계 보전 및 복원(Ⅰ-1-일반재정①)			
① 해양생태계 보전 및 복원(1031)	일반	331 (393)	493 (538)
▪ 해양보호구역(301)		114	151
▪ 해양생태계 조사 및 관리(303)		89	90
▪ 갯벌생태계복원(304)		128	252
해양환경개선(기금)(Ⅰ-1-일반재정⑦)			
① 해양환경개선(1065)	기금	77 (474)	126 (519)
▪ 해양생태계 서식처 기능개선 복원사업(304)		77	126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0	'21	'22	'23			
①해양생물 다양성 보전사업 달성도(%) (가중치 40%)	100	100	100	100	해양생물 다양성 보전사업 중 법정관리종 지정 및 관리기관 등 지정·해제의 목표 달성도(100%)를 목표치로 설정	·법정관리종(해양보호생물, 유해종, 교란종) 및 법정관리기관(서식지외보전기관, 구조치료기관) 지정·해제 건수 - 법정관리종 지정 1건(50%) - 법정관리기관 지정 2건(50%)	내부자료
②해양보호구역 지정 개소수(개소) (가중치 60%)	30	32	34	36	최근 3개년('20-'22) 간 연평균 1~2개소씩 추가 지정(또는 확대)한 점을 고려하여 산출* * 전국 연안습지 58%(1,437.8㎢)를 보호지역으로 기지정, 추가(확대) 지정이 쉽지 않은 상황	∑(연도별 해양보호구역 지정 또는 확대 개소수)	고시문

5 국민이 행복한 청정·안심 해양환경 안전망 구축(Ⅲ-4-⑤)

해양환경정책과 (044-200-5281/5282)

□ 추진배경 (목적)

○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해양오염사고** 등 **해양환경 위해요소**에 대비한 **선제적 관리** 및 **대응역량** 강화 필요

-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가 가시화됨에 따라 해양방사능 감시체계 확충 및 예상 리스크의 선제적 관리 필요
- 선박의 초대형화 추세, 해상 화물의 다양화로 해양오염사고의 잠재적 위험성이 증대하여 효과적인 사고 대응체계 구축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해양방사능 유입 대비 빈틈없는 감시체계 확충**

- 해수·해양생물·해저퇴적물 대상 방사능 조사정점·횟수를 확대하여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응한 **촘촘한 모니터링**체계 구축
- 관문 해역 및 수산물 생산 해역을 중심으로 감시 정점(45→52개소) 및 격월 조사정점(22→29개소) 확대
- 분석기간 단축을 위해 정점 및 핵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국내 관문해역인 제주해역 우선 분석 등 신속분석* 도입

* 관문 해역인 **제주해역**(10개 정점) **우선 분석** / **삼중수소**는 **일반분석**으로 **1주일 이내 결과 도출**

- 선(船)상 분석기술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방사능 분석 결과 도출(세슘 기준) 및 신속 대응체계 구축

○ **해양오염사고 등 위해요소 관리체계 강화**

- 침몰선박으로 인한 항행안전사고 및 2차 해양오염사고 방지를 위해 잔존유 제거 등 **잠재적 위험관리 강화**

- 대형방제선 실해역 방제훈련 및 해양오염사고 대응훈련을 통한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대응태세 강화**

- 해양산업시설에서 배출되는 **HNS**(위험유해물질) 배출영향 평가 및 합리적 관리방안 마련 등 **관리체계** 구축

- 선박, 해양시설 및 해양환경관리업 등의 해양오염방지관리인에 대한 교육·훈련을 통하여 해양오염 방지 및 개선의 인식증진

< '2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해양방사능 조사정점 확대(해양환경측정망 구성·운영계획 고시)	'23.2월	국정 73-3
	해양수산분야 방사능 안전성 조사현장 언론 소통	'23.2월	국정 73-3
	해양오염 대형방제선 운영계획 수립	'23.3월	국정 41-6
	해양오염방지인 교육 연간 추진계획 수립	'23.3월	국정 41-6
2/4분기	침몰선박 위해도 저감을 위한 침몰선박 관리계획 수립	'23.4월	국정 41-6
	해양방사능 관련 정책 소통 및 정보공유	'23.5월	국정 73-3
	해양환경측정망 자료 활용 논문 공모전 추진	'23.6월	
	해양환경감시원 확대 등 제도개선 추진	'23.6월	국정 41-6
3/4분기	방사능누출 사고 위기대응 매뉴얼 정비	'23.9월	국정 41-6
	어업인 등 대상 전문방제교육 실시	'23.9월	국정 41-6
	해양오염 위기관리 대응훈련 실시(대형방제선 등)	'23.9월	국정 41-6
	해양방사능 정보공개 시스템 개편	'23.9월	국정 73-3
4/4분기	해양시설 안전점검 실시	'23.10월	국정 41-6
	침몰선박 현장조사 및 잔존유 제거 완료	'23.12월	국정 41-6
	해양오염사고 재난관리체계 개선방안 마련	'23.12월	국정 41-6
	선상 해양방사능 신속 모니터링 추진	'23.12월	국정 73-3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연안지역 거주 주민, 어업인 등 전 국민

○ (**이해관계자**) 연안 지자체 및 주민, 어업인단체, 유조선 등 위험물 운송사업자, 유류 저장 해양시설 관리자, 선원 등

□ 기대효과

○ 국내 해역의 방사능 농도에 대한 신속한 분석 및 투명한 정보 공개로 국민 '안전'과 '안심' 확보

○ 대규모 해양오염 사고 등 해양오염 위해요소에 신속·체계적으로 대응하여 해양오염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피해 최소화

○ 해양오염 물질이 바다로 유입되는 것을 사전 예방하고, 유사시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하여 해양환경 피해를 최소화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2	'23
해양환경 개선 및 관리(Ⅰ-1-일반재정②)			
① 해양환경 개선 및 관리(1033)	일반회계	172	185
▪ 환경관리해역 관리 및 시스템 구축(300)	일반회계	45	45
▪ 해양환경감시체계 구축운영(320)	일반회계	98	110
해양산업시설 배출 위험유해물질 관리기술 개발(Ⅲ-2-R&D①)			
① 해양수산환경기술개발(4132)	일반회계	40	90
▪ 해양산업시설 배출 위험유해물질 관리기술 개발(306)	일반회계	40	76
해양오염피해복구(Ⅰ-1-일반재정⑤)			
① 해양오염피해복구(1036)	일반회계	370	142
▪ 해양환경교육 운영(301)	일반회계	36	38
▪ 침몰선박 관리사업(304)	일반회계	66	55
▪ 다목적 대형방제선 건조사업(305)	일반회계	269	49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table>
<tr><th rowspan="2">성과지표</th><th colspan="3">실적</th><th>목표치</th><th rowspan="2">'23년 목표치 산출근거</th><th rowspan="2">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th><th rowspan="2">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th></tr>
<tr><th>'20</th><th>'21</th><th>'22</th><th>'23</th></tr>
<tr><td rowspan="2">① 해양방사성물질 감시망 강화
(가중치 : 60%)</td><td rowspan="2"></td><td rowspan="2"></td><td rowspan="2"></td><td>50
(신규)</td><td>① 최근 3년간 증가한 해양방사성물질 대상별·항목별 측정·분석결과 정보공개 건수 기준으로 '23년도 목표치 산출
<table><tr><th></th><th>'20</th><th>'21</th><th>'22</th><th>'23</th></tr><tr><td>건수</td><td>403</td><td>427</td><td>660</td><td>746</td></tr></table></td><td>(연간 해양방사성물질 측정정보 공개 실적) / (연간 해양방사성물질 측정정보 공개 목표(746건)) ×50%</td><td>해양환경공단 및 해양과학기술원 측정 자료</td></tr>
<tr><td>50
(신규)</td><td>② 해양방사능 관련 정책 소통 실적</td><td>(개최건수(3건)/ 목표건수(3건))× 50%</td><td>내부문서・메모보고
및 결과보고서 등</td></tr>
<tr><td rowspan="2">② 해양오염 위기 대응을 위한 훈련 및 교육 확대
(가중치 : 40%)</td><td rowspan="2"></td><td rowspan="2"></td><td rowspan="2"></td><td>50
(신규)</td><td>① 해양오염 위기관리 대응 훈련, 대형방제선 방제훈련, 해양시설 안전점검</td><td>(모의훈련 실시건수(3건)/ 훈련 목표건수(3건))× 50%</td><td>내부문서・메모보고
및 결과보고서 등</td></tr>
<tr><td>50
(신규)</td><td>② 최근 3년간 증가한 해양오염 방제교육 이수 인원 평균치 기준으로 '23년도 목표치 산출
<table><tr><th></th><th>'20</th><th>'21</th><th>'22</th><th>'23</th></tr><tr><td>건수</td><td>4,100</td><td>5,350</td><td>6,420</td><td>7,169</td></tr></table></td><td>(연간 해양오염 방제교육 이수 인원 / 목표인원)×50%</td><td>내부 통계</td></tr>
</table>

전략목표 Ⅳ.

경쟁력있는 수산업을 육성하고 활력넘치는 어촌을 조성한다.

1. 어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어업인의 경영여건을 개선한다.
2. 수산자원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어업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3. 친환경·스마트양식업으로 전환하여 지속가능한 양식생산 환경을 조성한다.
4. 신선수산물 유통·소비체계를 구축하고, 식품산업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한다.

전략목표 Ⅳ

경쟁력있는 수산업을 육성하고 활력넘치는 어촌을 조성한다.

기 본 방 향

◇ 배경 · 필요성(중요성)

○ 日 정부는 '23년 봄부터 여름사이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준비 중

○ 원전 사고 이후 日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가 높으며, 수산물 원산지 未표시·둔갑 사례 지속 발생 시 수산물 소비 위축 가능

○ 최근 우리나라는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발생하는 등 본격적인 인구 감소시대로 진입하였으며, 고령인구도 급속도로 증가**

* '20년 인구가 통계 작성 이후 최초로 자연 감소(△3만 3천명, 0.6%↓)
** 인구(만명) : ('20) 5,184 → ('30) 5,120 / 고령인구(만명) : ('20) 815 → ('30) 1,306

○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발생('22.2.) 이후 국제 유가 및 곡물가 등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여 현재까지도 높은 수준 유지

○ WTO 수산보조금 협정 비준, IPEF 협상 본격화, CPTPP 가입 추진 등으로 인해 우리 수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질서 개편 중

○ 우리 바다는 해수면 및 해수온 상승 등 기후변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기후위기 대응을 본격 실행할 시점

* (표층수온) '68~'20 1.27℃↑(세계 평균 0.53℃) (해수면) '71~'06 2.56mm/yr↑(세계 평균 2.36mm/yr)

◇ 그간의 성과

○ TAC 확대* 및 정부 직권 TAC 설정(「수산자원관리법」 개정, '19.2), 감척 확대·폐업지원금 상향** 등을 통해 자원관리형 어업 전환

* ('13) 11개 어종/13개 업종 → ('22) 15개 어종/17개 업종(멸치/권현망 시범 별도)
** 감척예산(억원) : (`12) 167 → (`22) 1,204 / 폐업지원금 지원율(%) : ('16~`19) 50 → (`22) 100

○ 바다숲·바다목장 조성* 및 금어기·금지체장 신설·강화**, 어구 全주기 관리(「수산업법」 전부개정, '22.1) 등 수산자원 회복 추진

* (바다숲) '09~'22년 누적 292㎢ 조성 / (바다목장) 누적 50개소 완료
** 10년 간 (금어기) 신설 12종(총 44종)·강화 4종 / (금지체장) 신설 11종(총 41종)·강화 4종

○ 동·서·남해 주요 거점에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신기술(디지털육종, 육상순환여과 등) 개발 등** 양식산업 혁신 본격화

* 부산('19~23), 경남 고성('19~'24), 전남 신안('20~'24), 강원 강릉양양('21~'24), 경북 포항('21~'25), 제주('22~'26)
** 내수면 스마트양식장 시범단지(2개소) : 충북 괴산('19~'22), 전남 화순('21~'23)

○ 인증부표 보급·확대*('15~) 및 스티로폼 부표 신규 설치 금지('22.11), 수산부산물 처리·재활용 등 친환경 양식 생산기반 조성

* 예산(억원): ('15) 4 → ('21) 200 → ('22) 400 / 누적 보급률: ('21) 38% → ('22) 48%

○ 온·오프라인, B2B·B2C 수출 지원 등으로 수출 31.6억불 달성('22), 김 수출은 '17년 5억불 최초 달성 후 식품 수출 1위 품목으로 성장

○ 조건불리 직불제의 최초 도입('14)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 수산공익직불제* 도입('21)을 통해 어업인 소득안정 기반 구축

* (기존 1종) 조건불리지역 + (신규 3종) 경영이양, 수산자원보호, 친환경수산물 / 수산직불제팀(정원 5명) 신설 및 이행점검을 위한 소속기관 인력 충원(총 11명)

○ 어촌뉴딜300 사업*('19~'24) 및 어촌지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18~'22, 46개소)** 추진을 통해 어촌의 정주여건 개선

* ('19) 70개소, ('20) 120개소, ('21) 60개소, ('22) 50개소
** ('18~'22) 어촌종합개발 34개소, 어촌테마마을 10개소, 漁울림마을 2개소

◇ 주요 내용

○ 자원관리형 어업관리 강화, 수산자원 회복 다양화, 어업질서 및 안전 확립을 통한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어업체계 구축

○ 스마트·친환경 양식으로 체질 개선, 건강하고 재해로부터 안전한 어장 형성, 양식산업 전략적 육성으로 첨단·친환경 양식산업으로 도약

○ 수산식품산업 육성, 유통구조 선전화 및 어선건조, 수산기자재 등 수산신산업 육성을 통한 수산업 성장 견인

○ 어업인 소득 안전망 구축, 어촌어항 인프라 개선 및 특화 컨텐츠 개발을 통한 어촌상회 새로운 활력 부여

○ 수산물 방사능 검사 확대, 수산물 안전 국민 소통 강화, 수산물 전주기 위생 관리 및 소비시장 안정화 등으로 국민 안심 수산물 소비체계 구축

◇ 임무와의 상관관계

○ 국정과제 41번(해양영토 수호 및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 73번(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 등 이행을 위해 성과관리 체계와 연계 추진 필요

<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관리과제 · 성과지표 체계 >

(단위 : 개)

전략목표	전략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1	1	4	4	17	31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전략목표 Ⅳ. 경쟁력있는 수산업을 육성하고 활력넘치는 어촌을 조성한다.		①수산물 수출액(억불)
1. 어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어업인의 경영여건을 개선한다.		①귀어귀촌 정책자금 수혜자 수(명)
	①어촌·어항 개발을 통한 어촌경제 활성화	①어촌 활력 추진율(%) ②어항개발 추진율(%)
	②어촌 활력증진을 위한 기반 확보	①어촌활력지역 변화율(%) ②어촌신활력증진 지원규모(개소)
	③어업인의 생활·복지 지원 강화 및 안정적 경영 여건 조성	①소득보장 및 경영 안정 지원 프로그램 수혜율(%)
	④수산업·어촌 공익증진과 연계한 어가소득 기반 강화	①소규모어가 어선원 직불금수급자수(호) ②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수급 척수(척)
	⑤연안해운 공공성 및 안전관리 강화	①연안여객선 수송실적(천명) ②연안여객선 안전관리 강화율(%)
2. 수산자원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어업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①수산자원 직접 조사 정점 수 목표 달성율(%)
	①수산자원 조성 및 자원관리체계 고도화	①수산자원조사 실적 지수 달성률(%) ②연안생태계 건강성 향상 실적
	②어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개선 추진	①근해어선 감척 이행율(%)
	③어업 안전 보장 및 조업질서 유지 역량 강화	①국내어선 불법 조업율(%) ②중국어선 불법대응 건수(건)
	④연근해어업 경쟁력 강화	①연근해어업 업종별 중대재해 표준매뉴얼 제작·보급(업종수) ②어업규제완화 시범 단체 수(개) ③유실·침적 폐어구 수거·처리 면적(㎢)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⑤해외 수산물 공급기반 확충	① 원양어선 노후화개선율(%) ② IUU어업 예방·근절 등 책임있는 조업기국 위상 제고를 위한 항만국 검색율(%)
3. 친환경·스마트양식업으로 전환하여 지속가능한 양식생산 환경을 조성한다.		①양식 생산량(천톤)
	①첨단 친환경 양식산업 육성	①친환경 수산물 인증건수(건) ②친환경첨단 양식 기술이전 교육자(수)
	②고부가 양식품목 전략적 개발 육성 및 연관산업의 동반성장	①양식 9대 전략품목 생산금액(백억원) ②배합사료 사용 어가(어가수)
	③지속가능한 양식산업 경쟁력 확충	①수산물 자조금 단체 내실화 및 신규 단체 확대(%) ②양식업 지속가능성 증대(%)
	④깨끗하고 안전한 양식수산물 생산기반 조성	①양식생산 청정환경 조성 추진율(%)
4. 신선수산물 유통·소비체계를 구축하고, 식품산업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한다.		①수산식품산업 인프라 구축률 (%)
	①수산물 수급·물가위기 관리체계 구축 및 안심 유통환경 조성	①할인혜택을 받은 소비자수(천명) ②이력정보시스템을 통한 생산정보 관리 물량 (톤)
	②수산식품 가공·수출 인프라 확대	①수산물 수출 활성화 추진율(%)
	③수산업 활성화를 위한 수산정책 지원 강화	①수산분야 규제혁신과제 발굴(건) ②수산분야 세제 및 금융 지원액(억원)

전략목표Ⅳ 경쟁력있는 수산업을 육성하고 활력넘치는 어촌을 조성한다.

(1) 주요내용

□ 자원관리형 어업관리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어업관리체계 구축

○ 미참여 어업인과 형평성 제고를 위해 **어획실적** 등 조업상황 **조사·분석**을 거쳐 적용 **대상해역**과 **업종 확대** 추진

- 건전한 레저문화 정착을 위해 **비어업인**의 **합리적인 포획·채취 기준**(방법·종류·수량 등) 마련(「수산자원관리법」 개정)

○ 어구 **생산·판매업 신고제** 시행 및 **관리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생산~수거 각 단계별 **어구 실태조사** 실시(5년 주기)

- 어구보증금제 시행을 위해 **세부운영계획을 마련**하고, **시범사업** 및 **어구보증금관리센터 설치** 추진

□ 구조개선 및 서식지 개선을 통한 수산자원 증대

○ 어획강도가 높은 **근해어선 중심**의 감척을 지속 추진(1,204 → 1,341억원)하고, **'제3차 중기 감척 기본계획**('24~'28)**' 수립**

○ 지역특화 어종의 **산란·서식장**을 **확대 조성**(계속 10, 신규 3개소)하고, **방류종자 인증제 확대**를 위한 **세부기준** 마련

□ 어업질서확립 및 어업주권확보로 안정적 조업환경 조성

○ **노후 지도선 대체**(8척 준공, '23) 및 대형 지도선 3척(~'24)을 건조하고, 어업지도선 임무 재편 등 **'어업질서 확립 종합대책' 수립**

○ **어선원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어선안전조업법」**을 **개정**하고,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에 맞춰 **안전매뉴얼 마련** 지원

□ **양식업 체질 개선을 통한 지속가능하고 경쟁력있는 양식산업 발전**

○ 스마트 기술 실증을 위한 **테스트베드**와 가공·유통, 육상 양식장 등 **배후부지로 구성된 클러스터 조성**

○ **개체굴 양식** 등 친환경·고부가 **생산체계 전환 지원**, 어가에 **순환여과식·바이오플락** 시설보급 확대 추진

□ **생산체계 전환 및 재해 대응으로 건강한 어장생태계 조성**

○ 어장청소 주기 완화 및 어장청소 의무관리제도 전환 시행하고, 청정어장 재생사업 확대 추진

○ 위기경보 발령 기준 개선, 재해대응 사업 통합관리 등 **'어업재해 대응 개선방안'** 및 **'수산분야 기후변화 적응대응 전략' 수립**

□ **우리 수산물 및 수산식품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여 수출을 확대하고, 수출전략형 수산식품산업 육성 기반 마련**

○ 중소·중견기업을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초보-성장-고도화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고, **전문 컨설팅 지원** 등 경쟁력 확보 지원

○ 'K-Seafood관' 입점기업을 확대하고, 온라인용 콘텐츠 제작, 쇼케이스 및 라이브 판매 등 지원으로 **비대면 소비시장 대응 강화**

○ 산업 육성을 위해 연구·가공·유통 시설을 복합적으로 구성한 **수산식품 클러스터 및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 조성** 추진

□ **직거래·온라인 등 신유통망 확대 등 유통구조 선진화 추진**

○ 위판장과 인접 가공공장을 연계하여 단순가공(절단·소분 포장 등) 후 유통기업을 통한 **수산물 직배송 지원**

○ 日 원전 오염수 방출에 대비하여 **안전성 검증 품목**(이력제 참여, 방사능 검사 등) **위주**로 **공급**하고 **지자체 참여**로 **특산물 판매 연계**

○ 어업인·중소유통업체 **온라인 시장진입**을 위하여 상품구성, 홍보전략·판로개척 등 맞춤형 **전자상거래 컨설팅 지원**

□ **어선 건조 및 수산기자재 등 수산업 다각화 추진**

○ **인적·물적 자격**을 갖추도록 하는 **어선건조업 등록제** 도입 및 설계·조선·검사·연구기능을 집적한 **진흥단지 구축 착수**

○ 수산기자재 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법률 제정, 산업 실태조사 인증체계 마련, 수산 기자재의 기계화·현대화 촉진 등 추진

□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및 인력공급을 통한 어업인 복지 향상**

○ 수산공익직불제 소외계층이었던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을 정책대상으로 포괄하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도입**

○ **고용허가제**(E9) **규모 확대**, 단기 인력인 **계절근로자**의 경우 지자체 수요를 반영하여 **도입 확대 추진**

□ **어촌어항 인프라 개선을 통한 어촌 신활력 창출**

○ **어촌** 규모·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지원을 통해 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하는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추진**('23~'27)

○ 방치 폐어구·쓰레기 수거, 위생·환경 상태 개선, 경관 정비 등에 중점을 둔 **CLEAN 국가어항 5개소 조성 추진**('23~'25)

□ 어촌의 생활경제여건 개선 등을 통한 어촌인구 유입

○ **지역수산물**을 **활용**한 간편식 등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특화상품 개발**(20종), **상품 판매·홍보** 온라인 유통채널 구축

○ **귀어학교**(6→8개소)와 **귀어인의 집**을 확대(6→12개소)하고, 귀어인 대상 창업·주택구입 융자 지원, 청년어촌정착지원금 확대 제공

□ 수산물 방사능안전 감시체계 강화를 통한 국민신뢰도 확보

○ **국내 생산단계 수산물**의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방사능 검사 장비** 등 인프라를 확충하여 검사 건수를 **지속 확대**

* 검사장비: ('21) 17대 → ('22) 32대(+15) → ('23년 계획) 47대(+15)

** 검사건수: ('21) 3,493건 → ('22) 5,441건 → ('23 목표) 연 **8,000건 이상**

○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을 **확대 시행**('23.7~)하고 전국적인 원산지 의무표시 **민·관 특별점검 등을** 통해 **믿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음식점 원산지표시: (현) 참돔·명태 등 15개 → (개선) 가리비·우렁쉥이·방어 등 20개

(2) 성과지표

< 전략목표 성과지표 >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7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8	'19	'20	'21	'22	'27			
수산물 수출액 (억불)	23.8	25.1	23.2	28.3	31.6	45.0	수산물 수출 5년('17~'21) 평균 성장률(7.6%) 적용	관세청 수출통계	관세청 수출통계

(3) 외부환경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원전 오염수 방류 前·後 국민 불안 증가 및 소비 충격 발생 우려**

○ 수산물 안전에 대한 불확실한 정보(가짜뉴스, 확증편향 등)가 빠르게 생산·전파되고, 방사능 등 위험요소 관리에 대한 국민 불신 우려

- 불확실한 정보의 철저한 관리, '감시-예방-대비-대응'까지 섬세 · 기민한 대국민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으로 정부 대응 신뢰도 확보

○ 오염수 방출로 인해 수산물 **소비 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얻도록 노력하는 한편,

- 소비위축, 가격하락 등 **수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정부 **비축**과 **민간수매 확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소비 모멘텀**을 **유지**할 계획

□ **인구감소·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어촌 소멸속도 가속화**

○ 급격한 인구 감소·고령화로 인해 '45년 어촌의 87%가 소멸 고위험 지역 진입 예상, 인구 감소시대를 맞아 소멸속도 가속화 우려

- 정주여건의 획기적 개선, 도시수준의 사회보장 · 문화서비스 제공, 소득수준 개선 등을 통해 도시만큼 살만한 생활환경 조성 필요

□ **생산원가 급등·인력난·경기침체 3중고로 수산업 붕괴 우려**

○ 러-우 사태 장기화에 따른 高 원자재가, 美·韓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은 지속될 전망이며, '23년에도 전기요금 추가 인상 예고

- 관계기관(기재부·산업부 등)에 적극 대응, 직·간접 지원(재정·세제·금융) 확대로 주요 생산원가(전기료, 유류비, 사료비, 이자 등) 상승 억제

ㅇ 청년 진입 부족, 現 종사자 고령화로 내국인 선원 인력난 가중, 높은 외국인 선원 의존도로 인해 비상 시 인력수급 리스크 증가

- 근로여건·복지 개선을 통해 전공/비전공 내국인 인력 유입 촉진, 외국인 인력 수급 관리로 어선원 수요-공급 미스매치 해소

□ **글로벌 환경변화 未 적응 시 국내 수산업 도태 위기**

ㅇ 세계 무역질서 재편으로 수산보조금 규범 강화, 시장 개방 등이 예상됨에 따라 위기(경쟁 심화)와 기회(시장 진출)를 동시에 직면

-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 스마트·친환경 전환으로 산업 기초 체력을 강화하고, 규모화·고부가화 등으로 시장 경쟁력 확보

□ **기후변화가 우리 수산업의 체질 개선 촉구**

ㅇ 기후변화 가속화에 따른 피해 확대 전망과 함께, 이에 대응한 탄소중립 추진 등 환경규제 강화 움직임 예상

- 기후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전대응 및 피해복구 등 효과적 재해관리체계 마련, 지속가능한 수산업으로 체질 개선 추진

(4) 기타

□ **어촌 정주 여건 개선 및 어촌관광 활성화**

ㅇ 어촌마을 홍보창구인 해양관광포털 바다여행(www.seantour.com)을 운영하고 국민에게 신뢰도 높은 다양한 어촌관광정보 제공

성과목표 Ⅳ-1 어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어업인의 경영 여건을 개선한다.

(1) 주요 내용

□ 어가소득 안정화로 안정적 어업경영 기반 조성

○ **수산공익직불제 시행**으로 수산자원 보호, 해양영토 수호 등 **수산업·어촌**의 공익가치를 제고하고, 어가소득 안정 도모

○ 어업인 **정책보험 보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현지조사 강화 등의 **제도개선**으로 **재해대응 능력 강화**

○ 어업인 **기초생활 보장, 노동여건 개선**을 위한 **건강·연금보험료**와 **어촌생활돌봄 지원** 등으로 어업인 **인력**을 **확보**하고, **복지체계 강화**

□ 어촌·어항재생을 통한 어촌 정주 여건 개선

○ (**정주 여건**) 낮은 소득·한정된 일자리·생활 서비스 접근성 부족 등 열악한 어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인구유출 방지 및 신규인력 유입 촉진

- 어촌 특성에 맞는 지역개발을 통해 어촌주민 정주 여건 개선 및 삶의 질을 제고하여 행복 어촌마을 조성

○ (**안전강화**) 여객선이 입·출항하는 소규모 항포구의 열악한 해상교통 안전 인프라 혁신으로 국민의 해상교통기본권 강화

□ 정주 여건 개선과 소득증대 실현을 위한 어촌개발사업* 추진

○ (**소득창출**) 어촌의 기초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소득원 발굴을 통해 **지속발전 가능한 어촌경제 조성**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0	'21	'22	'23			
①귀어귀촌 정책자금 수혜자 수(명)	511	600	706	727	최근 3년('20~'22) 실적 평균대비(606명) 대비 20% 증가한 727명을 목표로 설정	귀어 창업·주택 자금 지원대상 선정자 수	자체 행정자료

(3) 외부환경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신규인력 어촌 진입 시 높은 진입장벽 극복 필요

○ 어촌지역은 **어가인구 고령화**, 도·농지역보다 **낮은 수준의 삶의 질** 및 **열악한 노동 여건** 등으로 **신규인력 유입 정체**

○ **어업**은 사업 형태가 **노동집약적**이고 **영세**하며, 타 산업보다 **재해율도 높아** 어업종사자의 **안심 근로체계 마련 시급**

* 산업별 재해율('20기준, %): 어업(4.31) > 건설업(1.17) > 운수창고통신업(0.77) >제조업(0.72)

□ 가계·경영 기반이 없는 도시민 귀어귀촌 수요 증대 방안 마련

○ 기존 홍보(귀어귀촌 박람회, SNS 활용)를 강화하여 각 지역별 어촌 크리에이터 양성 및 지역별 소규모 박람회를 통해 귀어귀촌 관심 제고

○ 상담, 교육, 컨설팅, 현장실습 등 귀어 상황에 맞는 단계별 지원 정책을 통해 단순 관심 단계의 도시민이 추후 실질적인 어촌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연계

○ 귀어귀촌 관련 교육 개선(실습기간 연장) 및 어촌정착상담사 운영 강화(역량교육, 상담사 증원) 및 컨설팅 이용 확대(10→15회)를 통한 안정적 어촌정착 도모

□ 수산공익직불제의 행정수요 증가 및 다양한 직불제 도입 요구 증가

○ 어획노력량 감축을 위한 국제적 공감대 형성 시 보조금 제한 등에 따라 직불제가 대안이 될 수 있어 행정수요는 증가 추세

○ 또한, 지역소멸 등과 맞물려 농어촌 및 농어업인 복지 확대 요구에 따라 선택적 직불이 아닌 포괄적 직불 도입 요구

□ 어업인력 육성과 경영안정망 확충을 통한 어업생산 기반 확보

○ 어촌지역의 기초적인 생활 서비스(보건 등) 여건 개선, 저소득 주민들의 소득안전망 구축 등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도모

○ 후계·청년 어업인 육성, 어업 분야 외국인력 규모 확대 등을 통한 어촌 고령화 대응과 국내 어업인력 수급 부족 해소

(4) 기타 : 해당없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1 어촌·어항 개발을 통한 어촌경제 활성화(Ⅳ-1-①)

어촌어항과 (044-200-5651 / 5652)

□ 추진배경 (목적)

○ **어촌**의 **사회·경제적 여건변화** 및 어촌소멸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귀어·귀촌 지원 확대** 및 **안전한 어촌관광** 재개 필요

* 귀어가구(가구) : ('17) 906 → ('18) 917 → ('19) 904 → ('20) 897 → ('21) 1,135
** 귀어인(명) : ('17) 991 → ('18) 986 → ('19) 959 → ('20) 967 → ('21) 1,216
*** 어촌체험객(만명) : ('17) 131 → ('18) 145 → ('19) 150 → ('20) 96 → ('21) 114 → ('22) 130

○ 어항 환경·경관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어항시설을 조성하고 수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가어항 인프라 시설 지속 확충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어촌 활력 】

○ 어촌 활력 증진을 위한 도시민의 **귀어·창업** 및 **어촌정착 지원**

- **'23년 귀어·귀촌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23.3.)하고, 정보, 상담, 교육, 정책자금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해 **어촌 신규인력 유입** 활성화

* 귀어·귀촌 창업·주택구입 및 청년어업인 지원대상자 선정('23.3.), 귀어·귀촌 박람회 개최('23.6.), 귀어학교 개설지 조기선정('23.9.),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현장 점검('23.11.)

- 귀어·귀촌인 임시 주거시설, 기술교육 강화 등을 위한 신규사업인 **귀어인의 집 조성**(6개소), **귀어학교**(7개소) **교육비 전액 지원** 실시

* 이동식주택, 리모델링, 임차 등 개소당 최대 50백만원을 지원하여 6개소 조성(1.5억원, 국비 50%)

○ **어촌체험휴양마을을 활용한 어촌관광 활성화**

- 어촌체험휴양마을이 도시에 없는 **다양한 체험거리**가 가득한 관광지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어촌체험휴양마을 특화 조성**(4개소) 추진

* 어촌체험휴양마을 특화 대상지 선정('23.3) → 특화 시설 조성(연내)

- 어촌체험휴양마을 특산품을 활용한 **밀키트**와 **신규 체험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비용 모금을 위한 '어촌 크라우드 펀딩' 추진

  * 민간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업체와 협업을 통해 상품 개발에 관한 컨설팅 제공

- 어촌체험휴양마을에 대한 수시 현장점검을 통해 시설물 안전, 접객 서비스 수준 등을 확인하고 필요시 컨설팅 제공(매월)

○ **'어촌마을 자치연금' 추진**

- 해양수산부·지자체·공공단체가 **어촌에 수익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그 수익금으로 **고령 어민에게 연금을 지급**해 복지 증진

  * 충남 서산시 중리마을에서 시범사업 실시 후 전국으로 확대 검토

【 어항 개발 】

○ 국가어항 환경·경관 개선을 위한 **'CLEAN 국가어항'** 사업 추진

- 시범사업 대상 국가어항*에 대하여 제안서(사업계획) 재검토 및 지역주민 의견 수렴 등 개발계획을 확정하고 실시설계 추진

  * 안흥항(충남 태안), 격포항(전북 부안), 녹동항(전남 고흥), 남애항(강원 양양), 다대다포항(경남 거제)

○ 내수면 어항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 수행** 및 **개발방안** 마련

- 국가지원을 받지 못한 **내수면 어업의 인프라 개선**을 위해 **5대강 수계*** 어업현황 및 지형 등 **기초조사 시행** 후 **대상 후보지 검토**

  * 한강, 금강, 낙동항, 섬진강, 영산강 등 5대강 유역 하천, 댐, 하류지역 등 대상

○ 재해로부터 취약한 **어장의 보호시설 기본계획** 수립 추진

- **시설개발 및 투자가 미흡**하여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어장에 대한 어장분포 및 입지 특성을 고려하여 **후보지 선정**

  * 현황조사('23) → 사업후보지 선정('23.12) → 대상지 개발계획 등 기본계획 수립('24)

○ **지역 특성**을 **고려**한 **어항 특화개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 **수산·관광·레저** 기능과 **지역 특색**을 갖춘 **다기능어항** 개발, 어항 수산기능 재편·강화, **지역사업과 연계**한 기존 어항시설 정비

◈ 어항 특화개발 사업 유형
① 다가능어항 : 시범사업 13개항('04~'13), 확대사업 10개항('14~'26)
② 아름다운 어항 : 4개항('14~'22)
③ 어항 이용고도화 : 4개항('11~'21)
④ 어촌 마리나역 : 신규 10개항('15~'22), 다기능어항내 포함 5개항('17~26)

* (다기능어항 6개소) 위미항('23.9), 서망항·남당항·욕지항·저동항·안도항 지속 추진('23.1.~'23.12.)

** (어촌마리나역 3개소) 위미항, 남당항, 욕지항 다기능어항 포함 추진 중

○ 국가어항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투자여건 개선 및 유치 확대

- 어항 및 배후지역을 묶어 통합 개발하는 사업추진 방식검토 및 기반시설 등을 연계 지원하는 방안 마련 등 마스터플랜 수립

* 민간기업 및 지자체 대상 국가어항 민간투자 설명회 개최('23.상)

○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및 **정화 활동**을 통한 **안전하고 깨끗한** 어항 조성

- 어항 기본시설 **안전점검 지침** 및 **세부지침**(안), 안전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설치 및 관리지침**(안) 마련

*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 시범사업(1개항) 시행을 통해 편의성 향상 및 경관도 개선

- **선제적 시설물 관리**를 위해 노후 방파제 등에 **광학장비**(LiDAR) 및 계측센서 모니터링 체계를 시범 도입하여 **원격 유지관리체계 구축**

* 현포항, 우이도항, 능양항 스마트어항 운영 및 성과 검토('23)

- 국가어항 및 지방어항의 **어항 수역** 내 항행장애물과 부유·침적 폐기물 수거 및 준설 등 **정화 활동**을 통해 **쾌적한 어항 조성**

* 폐기물 실태조사(10개항) 실시('23),「깨끗한 항, 다시 찾고 싶은 항」캠페인 실시(연중)

< '2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대상자 선정 추진	'23.2.	국정 73-4
	귀어·귀촌 지원 시행계획 수립	'23.3.	국정 73-4
	어촌체험휴양마을 특화조성 대상지 선정	'23.3.	국정 73-4
	국가어항 정책홍보 용역 계획 수립	'23.3.	
2/4분기	어촌에서 살아보기(귀어인의 집) 사업 보조금 교부	'23.5.	국정 73-4
	차년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대상자 수요조사	'23.5.	국정 73-4
	어촌 크라우드 펀딩 실시	'23.6.	국정 73-4
	귀어귀촌 박람회 개최	'23.6.	국정 73-4
3/4분기	국가어항 사진전 개최	'23.7.	
	깨끗한 항, 다시 찾고 싶은 항 캠페인 실시(동해 권역)	'23.7.	
	귀어학교 추가 선정	'23.9.	국정 73-4
	차년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시행지침 개정	'23.9.	국정 73-4
4/4분기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현장점검	'23.11.	국정 73-4
	어항시설 안전관리 기준마련 용역 준공	'23.12.	
	국가어항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 시범사업 준공(1개항)	'23.12.	
	어장보호시설 기본계획 수립 대상 후보지 선정	'23.12.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일반 국민, 어업인 및 수산업협동조합 등

○ (**이해관계자**) 일반 국민, 이용 단체인 수협, 어촌계, 여객선사 등

□ 기대효과

○ 어촌의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 해소 및 청년·도시민의 어업 창업과 어촌 정착지원을 통해 **어촌사회의 활력 증진**

○ 어촌지역의 새로운 **잠재 소득원 개발**을 통한 부가가치 증대, 일자리 창출 등으로 **어가소득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수산물의 생산·유통, 해양관광 등 **어항의 복합기능수행**으로 주민 소득증대 및 경제 활력 제고

○ 어선 접안시설, 어업활동 지원 등 **수산업 기반시설 확충**으로 **어촌 정주 환경 조성** 및 어업인 편의 제공

○ 기상악화 대비 **스마트어항 관리시스템**으로 **어업인 생명**과 **재산 보호**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2	'23
어촌·어항관광기반조성(Ⅰ-3-일반재정①)			
① 어촌·어항관광기반조성(3340)	농특회계	103	100
▪ 어촌활력기반구축(301)		103	100
귀어귀촌지원(Ⅰ-3-일반재정④)			
② 귀어귀촌지원(3347)	농특회계	50	60
▪ 귀어귀촌활성화(303)		50	60
귀어귀촌지원(Ⅰ-3-일반재정⑤)			
③ 귀어귀촌지원(3347)	농특회계	17	19
▪ 청년어촌정착지원(363)		17	19
어항기반시설조성(Ⅰ-3-일반재정②)			
① 어항기반시설조성(3345)	농특회계	3,083	3,119
▪ 국가어항관리(302)		272	258
▪ 국가어항(303)		2,626	2,635
▪ 가거도항복구(306)		185	226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table>
<tr><th rowspan="2">성과지표</th><th colspan="3">실적</th><th>목표치</th><th rowspan="2">'23년 목표치 산출근거</th><th rowspan="2">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th><th rowspan="2">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th></tr>
<tr><th>'20</th><th>'21</th><th>'22</th><th>'23</th></tr>
<tr><td>①어촌 활력 추진율(%)
(가중치 70%)</td><td>신규</td><td>100</td><td>100</td><td>100</td><td>①x60 + ②x30 + ③x10

①. 어촌체험휴양마을의 직접소득액 추세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직전 2개년 평균 대비(200억원) 10% 상향한 220억원으로 설정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으로 인해 자연친화적인 여행지, 위로치유가 가능한 휴양관광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여 코로나 기간('20년, '21년) 실적치 대비 10% 증가한 220억원이라는 도전적인 목표치 설정
** 직접소득액(억원) ('18) 274 ('19) 254 ('20) 170 ('21) 184 ('22) 217

②. 신규인력에게 귀어귀촌 정책자금이 실질적인 지원책이 될 수 있도록 3년 평균 정책자금 지원자(606명)보다 20% 상향한 727명 목표
* 정책자금 수혜율
<table><tr><td>구분</td><td>'18</td><td>'19</td><td>'20</td><td>'21</td><td>'22</td></tr><tr><td>지원자(명)</td><td>403</td><td>431</td><td>511</td><td>600</td><td>706</td></tr></table>
③. 예산 인원 대비 선정 인원 100%를 목표로 설정
<table><tr><td>구분</td><td>'19</td><td>'20</td><td>'21</td><td>'22</td></tr><tr><td>예산 인원(명,a)</td><td>200</td><td>200</td><td>200</td><td>220</td></tr><tr><td>선정 인원(명,b)</td><td>169</td><td>208</td><td>206</td><td>225</td></tr><tr><td>비 율(a/b)</td><td>84.5</td><td>104</td><td>103</td><td>102</td></tr></table>* 지자체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 기준</td><td>①어촌관광·체험 직접소득액 (억원)

②정책자금 지원자수(명)
* 정책자금은 귀어창업·주택구입 지원자금기준

③청년 신규인력 정착률 100(%)
* 신규 청년어업인 정착률(%)
=(예산 대비 청년어업인 지원 인원 수/ 선정 지원 인원 수) ×100
**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결과 기준('23.12.31)</td><td>마을운영자가 어촌체험마을관리 홈페이지(바다여행누리집)에 입력한 실적

내부자료

지자체, 해수부 자료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자료)</td></tr>
<tr><td>②어항개발 추진율(%)
(가중치 30%)</td><td>신규</td><td>신규</td><td>100</td><td>100</td><td>①x60 + ②x40

① 수산업과 해양문화가 공존하는 국가어항 적기 확충을 위한 주요 과정의 달성 정도를 목표치로 설정
- 어항개발 착수 6건 및 준공 9건

② 국가어항 관광객 방문자 수 전년대비 3년 평균 증가율(2.1%) 보다 상향한 53,454,000명(증1,201,794)
* 방문자 수(천명): ('20) 49,126 ('21) 51,881 ('22) 52,252</td><td>①과정 달성도 (%)

②국가어항 관광 방문객조사(명)
* (측정방법) 국가어항 대상, 카드사 매출, 통신사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유동인구, 숙박인구 조사</td><td>내부자료

외부전문기관 의뢰조사 보고서</td></tr>
</table>

2 어촌 활력증진을 위한 기반 확보(Ⅳ-1-②)

어촌어항재생과 (044-200-6174 / 6171)

□ 추진배경 (목적)

○ (**정주 여건**) 낮은 소득·한정된 일자리·생활 서비스 접근성 부족 등 열악한 어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인구유출 방지 및 신규인력 유입 촉진

○ (**안전강화**) 여객선이 입·출항하는 소규모 항포구의 열악한 해상교통 안전 인프라 혁신으로 국민의 해상교통기본권 강화

○ (**관광자원**) 어촌이 보유한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를 발굴·육성하여 소득 창출 기반 마련

○ (**지속기반**)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한 주거기반 마련, 지역 맞춤형 생활 서비스 제공, 소외된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어촌사회 지속성 강화

< 근거 법령 >

○ **어촌·어항법 제47조의6(어촌·어항재생사업의 시행)**① 어촌·어항재생사업은 사업계획수립권자가 시행한다. 다만, 어촌·어항재생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 농어촌정비법 제54조(생활환경정비계획의 수립)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으면 5년마다 생활환경정비계획을 세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매년 국가의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특화어촌의 발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28조의2**(어촌특화지원센터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특화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어촌특화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상위계획인 국정과제 및 핵심과제와 연계를 통한 성과관리 내실화

주요과제명	관련 과제 번호	주요내용
국정과제	73-4 어촌신활력 증진으로 어촌생활수준 향상	어촌을 도시 수준의 생활공간으로 혁신하기 위해 국가 주도로 어촌 생활권 규모·유형별로 맞춤 지원하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추진

◈ 진행중인 어촌뉴딜300사업과 신규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 등 낙후된 어촌의 활력 제고

< 1 사업 관리 내실화 추진 >

○ (기본계획심의) 신활력증진사업의 적정 계획수립 유도 등 원활한 사업추진 관련 자문 및 수립된 기본계획의 심의·조정

* 기본계획 심의 전 사업의 목표 및 비전,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해 현장자문 지원(2회)

○ (성과체계) 사업 全 단계에 걸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어촌뉴딜 사업 및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사업 관리 강화

* 기존 성과지표인 어촌활력지역 변화율과 신규로 추진중인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성과지표(지표개발 중) 및 목표를 설정하고 모니터링 점검 실시

○ (자문단 운영) 신활력사업의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는 계획수립 유도 등을 위한 부분별 계획내용 검토 및 자문 추진하는 자문단 구성(49명)

* 유형별 위원 49명 선정(유형1 1개조, 5명 유형2 4개조, 24명 유형3 4개조, 20명)

○ (상시모니터링) 집행률 제고를 위한 부진 사업지 사전 인지 및 지자체 책임강화, 인센티브 강화, 제도개선 등 상시모니터링 체계 구축*

* 사업지침 개정('23.3), 갈등관리 자문단 운영('23.4), 지자체 평가안 마련('23.6)

○ (사후관리) 어촌어항재생사업 성과의 지속성 제고를 위해 소득사업 운영관리에 대한 관리체계 마련(단계별 맞춤형 지원*)

- 사업완료 후 시설 운영 실태점검 등을 통해 시설 유휴시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맞춤형 컨설팅 시범지원** 추진(시범 3개소)

- 소득시설 미활용 방지를 위한 관문심사제***, 사업 책임성 강화 등 추진

* ①사업기획(타당성 평가 강화, 맞춤형 역량강화 지원), ②사업정착(상시모니터링 운영), ③재평가 및 환류(희망 리턴 패키지 지원), ④제도개선(어촌특화발전법 개정)

** 예비대상지 선정 및 모니터링(~'23.5) → 대상지 확정('23.6) → 컨설팅 지원(~'23.12)

*** 소득사업 계획 수립 단계별 평가·심의위 운영을 통해 사업의 경제성·성공가능성 등 검증

< 2 성공사례 발굴 · 확산 >

○ (**사업관리**) 어촌뉴딜사업 준공연도 대상지('21년)의 철저한 공정관리 및 사업관리를 통해 대표 성과 발굴 지속

- 어촌·어항재생사업 상시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통한 촘촘한 사업관리 추진

* 절차별 표준 소요기간 선정 관리, 지자체 책임강화, 갈등관리 강화, 인센티브 강화 등

○ (**선도사업**) 어촌활력증진지원 시범사업* 및 어촌신활력증진 선도사업 대상지**에 대한 공간환경 마스터플랜 적용 및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성공 모델 도출

* (시범사업) 사업지별 여건 및 조사결과를 반영한 마스터플랜 수립 추진('23년)

** (선도사업) '23년도 3~4개소 선정 예정

○ (**성과홍보**) 현장 및 언론 소통 강화, 방송 프로그램·영상 콘텐츠 제작·홍보를 통해 어촌어항 재생사업 지속을 위한 동력 확보

- 어촌뉴딜사업 성공사례를 통해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의 중요도를 인지시키고, 사업성과 홍보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의 홍보전략 수립

< 3 어촌어항재생 지속 기반 마련 >

○ (어촌공간 재생계획) 사업 수요 발굴, 체계적 관리·지원을 위해 전국 어촌대상 생활권 분석, 지원과제 발굴 등 **계획 수립**(5년 단위) 추진

* 가이드라인 마련('23.3) → 지자체별 계획 수립(23.11) →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반영('24~)

○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지속추진) 어촌을 도시 수준의 생활공간으로 혁신하기 위한 어촌신활력증진 '23년도 신규 대상지 선정(65개소) '24년도 대상지 공모(~'23.9), 평가 및 선정(~'23.12) 추진

◈ 정주 여건 개선과 소득증대 실현을 위한 어촌개발사업 추진

○ (소득창출) 어촌의 기초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소득원 발굴을 통해 지속가능한 어촌경제 조성

* 전국 31개 시·군 124개 읍·면 대상으로 권역단위 거점개발(100억원 이하, 5년 이내), 시·군 역량강화(2억원 이하, 1년)

○ (특화센터) 어촌공동체 중심의 창업·컨설팅, 판매·유통·홍보 등 어촌특화사업 지원을 위한 어촌특화지원센터(10개소)* 운영

* 어촌특화지원센터 운영(10개소) : ('16) 전남, 경남 ('17) 강원, 충남, ('18) 경기, 전북, 경북, 제주, 인천, 부산

- 어촌특화지원센터의 교육 기능을 확대하여 지역기업, 어촌주민 등 소득사업 관계자 대상으로 사업 아이템 발굴, 운영 노하우 전수 등 지원

○ (빈집관리) 어촌 빈집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어촌특성을 고려한 빈집 활용 방안**등을 마련하여 어촌주거환경 개선

* 어촌빈집·유휴시설 통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도시·농촌지역 시스템과 연계

** 어촌지역 빈집 수요조사 및 활용방안 연구('23.4~12, 60백만원)

< '23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대상지 선정(65개소)	'23.1월	국정 73-4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기본계획 심의회 개최	'23.2월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기본계획 심의 및 조정위원회 구성	'23.2월	국정 73-4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시행지침 마련	'23.3월	국정 73-4
2/4분기	어촌신활력증진사업 1차 현장 자문 실시	'23.5월	국정 73-4
	'24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규지구 사업성 평가	'23.6월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 추진상황 현장점검	'23.6월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설명회	'23.6월	국정 73-4
3/4분기	'24년 어촌 유휴시설 리모델링 사업대상지 선정	'23.8월	
	어촌신활력증진사업 2차 현장 자문 실시	'23.8월	국정 73-4
	어촌활력증진지원 시범사업 기본계획 심의	'23.9월	국정 73-4
	'24년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	'23.9월	국정 73-4
4/4분기	하반기 어촌뉴딜사업 재정집행 점검 회의 개최	'23.10월	
	'23년 어촌특화지원센터 사업성과 평가	'23.12월	
	'23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대상지 기본계획 승인(유형3)	'23.12월	국정 73-4
	'24년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대상지 평가 및 선정	'23.12월	국정 73-4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정책·사업의 수혜자

- (**지역주민 및 어업인**) 사업대상지역 거주 주민 및 어업시설 이용 어업인
- (**일반국민**) 여객선이용객, 관광 목적 방문객 등 일반 국민

○ 이해관계자

- 지역의 지역주민, 어촌계, 여객선 선사, 수협, 사업위탁 공공기관

□ 기대효과

○ (**해상교통 편익 증진**) 소규모 항·포구의 접안시설 등 열악한 인프라를 개선하여 도서민 정주 여건 및 관광객의 교통편익 증진

○ (**어촌 활력증진**) 인구감소, 고령화 등으로 쇠퇴하는 어촌에 지역고유 자원을 활용한 특화사업을 발굴*하여 주민 소득을 증대에 기여

* 갯벌체험장, 낚시 특화센터, 수산자원 브랜드화, 해양레저·스포츠 체험 등

- 선착장, 방파제, 물양장 등 어업 필수 기반시설 개선을 통해 어업생산성 증대 및 작업효율을 제고

○ (**생활공간 혁신**) 취약한 섬·어촌 지역 보건·복지, 교육, 문화, 여가 등 생활서비스 전달체계 및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도시 수준으로 삶의 질 향상

○ (**국가 균형발전**) 낙후된 어촌지역 생활밀착형 SOC를 공급으로 국가균형발전 구현과 공도화(空島化) 및 어촌소멸 방지에 기여

○ (**어촌관광 활성화**) 어촌경관을 개선하고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를 발굴하여 일반국민들에게 해양레저·스포츠 등을 즐길 수 있게 함으로써 어촌관광 활성화에도 기여

* 바다, 섬, 해양레저, 어항, 수산자원, 자연경관 등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어촌지역에 어촌뉴딜을 통해 인프라를 보강하고 관광콘텐츠를 개발하여 국민들이 찾고 싶은 어촌 조성

○ (**일자리 창출**) 어촌 재생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2	'23
어항기반시설조성(농특)(Ⅰ-3-일반재정②)			
① 어항기반시설조성농특(3345)		5,236	-
▪ 어촌뉴딜300(310)	농특	5,236	-
어항기반시설조성(균특)(Ⅰ-3-일반재정②)			
① 어항기반시설조성균특(3301)			3,310
▪ 어촌신활력증진(303)	균특	-	444
▪ 어촌뉴딜300(304)	균특	-	2,866
어촌·어항관광기반조성(농특)(Ⅰ-3-일반재정①)			
① 어촌·어항관광기반조성농특(3340)		41	41
▪어촌활력기반구축(301)(특화지원센터 운영 등 내역사업 일부)	농특	35	35
▪ 어촌발전기반조성지원(305)	농특	3	6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0	'21	'22	'23			
①어촌활력지역 변화율(%) (가중치 : 60%) (어촌뉴딜 대상지)	신규	38.9	40	41.5	('23년) 41.5% → ('25년) 45.0% -측정산식 : 4·5등급 어촌* /300개소(전체대상지) * 인구사회(지역소멸지수), 산업경제(수산물 판매금액변화율), 물리환경(어항투자비율)의 종합 산정하여 4.5등급으로 2개 이상 해당되는 어촌	3개 부분 값*을 정규 분포화하여 등급을 구분하고, 4·5등급이 2개 이상 해당되는 어촌의 전체중 비율 *사업대상지의 인구사회(지역소멸지수), 산업경제(가구당 수산물 판매실적), 물리환경(척당 어항투자비용)	한국해양수산개발원
②어촌신활력증진 지원 규모(개소) (가중치 : 40%)	신규	신규	신규	60	중기재정계획 ('23~'27)에 따라 지원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연도별 지원개소	해양수산부 내부자료

3 어업인의 생활·복지 지원 강화 및 안정적 경영 여건 조성 (Ⅳ-1-③)

소득복지과 (044-200-5461/5462)

□ 추진배경 (목적)

○ 어촌지역은 **생활 여건**(보건·복지 등) 등 도시보다 **열악**하고 **삶의 질**이 **낮아 개선**을 통해 **살만한 생활환경 조성** 필요

* 삶의 질 만족도('20, KMI 조사) : 도시(6.1) > 농촌(5.7) > 어촌(4.9) > 섬 지역(3.8)

○ **어가인구 감소, 고령화**로 안정적 **인력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예고 없는 **재해**로부터의 **보장 능력 강화**로 **안정적 경영환경 마련**

* 어가인구(천명) : ('19) 113.9 → ('21) 93.8 / 어촌 고령화율(%) : ('10) 23.1 → ('21) 40.5

■ '**행복한 어업인, 살고 싶은 어촌**'을 위해 **보건·복지** 분야 지원을 **강화**하고, 신규 **어업인력 육성**과 **경영 안전망 확충**을 통한 **지속 가능한 어업생산 기반 확보**

□ 주요 내용 및 추진계획

○ (**복지 개선**) 어촌지역의 기초적인 **생활 서비스**(보건 등) 여건 개선, **소득안전망 구축** 등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도모

- 어업안전보건센터 운영과 '찾아가는 건강관리' 지원을 통한 어업인 **업무상 질환 사전 예방**과 어촌지역 **의료접근성 취약점 해소**

- 어촌생활 돌봄 **활동비 상향**(15→19천원)과 **지원 일수 확대**(12→ 30일) **연금보험료 현실화**(45,000→46,350원)로 **취약 가구 지원강화**

○ (**인력확보**) 후계·청년 어업인 육성, 어업 분야 외국인력 규모 확대 등을 통한 **어촌 고령화 대응**과 **국내 어업인력 수급 부족 해소**

- 수산계 고교 활성화, 생애 주기적 지원 마련 등 **제1차 후계·청년 어업인 육성 기본계획 수립**('23.3)으로 신규**인력 양성 체계** 마련

- **고용허가제(E9) 규모 확대**('22년 4,810 → '23년 7,000명), 계절 근로자와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 확보**를 통한 **어업인력 수급** 지원

○ (**재해보장**) 보험 가입률 제고, 수산 정책보험 제도개선 등으로 **재해보험 활성화**를 통한 **어업인 재해보장 능력 강화** 지원

- 중장기 정책 목표(품목수 확대 등), 개선방안 등 **제1차 양식재해보험 기본계획** 수립으로 보험 분야 **체계적 정책추진**

- 양식보험료 동결 수준 관리, 고수온 특약 국고지원 상향(50→60%) 등 **보험 가입 유도**로 재해 발생 **어업인의 경영안정 도모**

- 어선보험 잠수 비용 특약 시범사업, 어선 승선 현장 실습생의 보험 가입 등 어선원·어선보험 가입 **재해 대상 확대**를 통한 제도개선

○ (**여성어업인 육성**) 어촌인력 부족·소멸 대비 전체 어업인의 절반(49.8%)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어업인**의 **지위·건강 관리** 추진

- 여성 근골격계 유병률(여성 82.6%, 남성 69.4%)이 높아 **맞춤형 질환 관리**를 위한 **여성어업인** 대상 **특화건강검진** 실시

- 여성어업인 **위상 제고, 소통**을 통한 **정책 마련** 등 **여성어업인 날**(매년 10.10)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하여 매년 기념식 개최

○ (**어업환경개선**) **안전한 어업환경** 조성,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 체류 지원**, 기자재 수리 지원 등을 통한 **어업 근로 여건 개선**

- 재해 안전 개선 체감율(89%)이 높은 **안전쉼터 추가** 조성, **어업장비 이동수리소 운영**(53개소)을 통한 **안전사고 사전 예방**

- **외국인근로자** 복지회관 건립으로 근로자 **인권보장·생활 환경 개선**, 고용 활동 방식 완화*로 **국내 체류 유도**와 **안정적 소득보장**

* 고용허가를 받은 어선이 휴업(금어기, 휴어기)할 경우 동일 선주 어선에 한해 이동근무 가능

< '23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낙도 어업인 안전쉼터 조성계획 마련	'23.2월	국정 73-4
	외국인근로자(E-9) 어업인 안전보험 가입 홍보	2월	국정 73-5
	제1차 후계·청년 어업인 육성 기본계획 수립	3월	-
	양식어업재해보험 기본계획 수립	3월	국정 73-5
2/4분기	여성어업인 특화 건강검진 참여 지자체 공모	4월	국정 73-4
	낙도 어업인 안전쉼터 조성 추진현황 점검	5월	국정 73-4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시행	5월	국정 73-4
	어업인안전보험 상해·질병 치료금 지원 확대 추진	6월	국정 73-5
3/4분기	어업활동, 어촌생활 돌봄 지원사업 홍보	7월	국정 73-4
	여성어업인 특화건경검진 추진사항 중간점검	8월	국정 73-4
	수산계 고교 활성화를 위한 교육당국 간 협의회 개최	8월	-
	어선원보험 의무가입 관련 어업인 설명회 개최	9월	국정 73-5
4/4분기	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일제조사 실시	11월	-
	지역별 수산정책보험 발전협의회 개최	11월	국정 73-5
	어업안전보건센터 운영 결과 점검	12월	국정 73-4
	차세대농어업경영인대상 시상식 개최	12월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어업인, 외국인 근로자

○ (**이해관계집단**) 수협(정책보험 사업자) 및 지자체 등

□ 기대효과

○ 어업인의 생활·복지 지원강화 및 안정적 경영 여건 조성을 통한 어촌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어업 생산기반 확보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2	'23
재해대책			
① 재해대책(3443)	농특	1,559	1,702
▪ 양식어업재해보험(300)		253	230
▪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301)		1,163	1,338
▪ 어업인건강연금보험료지원(303)		143	134
수산경영안정			
① 수산경영안정(3440)	농특	115	180
▪ 어업인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300)		71	123
▪ 수산장비(임대)활용(지자체)(311)		17	28
▪ 어업인삶의질향상(312)		27	29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0	'21	'22	'23			
① 소득보장 및 경영안정지원 프로그램 수혜율 (%)	신규	신규	신규	100	①x33 + ②x33 + ③x34		
					① 어선원보험 임의가입 대상인 3톤 미만 가입률 3년 평균(10.4%) 대비 4% 상향한 목표(10.8%) 설정	① 3톤 미만 어선원 보험 가입률(%)	내부자료
					② 어업인 안전쉼터를 '19년 이후 매년 7개씩 조성(상승률 10%)했으나, 어업인의 높은 만족도 등을 고려하여 '22년 실적 대비(누적 82개소) **11% 상향한 91개소로 목표 설정(9개소 추가 조성)**	② 어업인 안전쉼터 조성(누적개수)	지자체 보고자료 내부자료
					③ 장기체류(5년 이상)가 가능한 외국인 근로자 규모를 3년 평균(80명) 대비 100% 상향한 목표 160명으로 목표 설정	③ 장기체류가 가능한 외국인 근로자 규모 확대	내부자료

④ 수산업·어촌 공익증진과 연계한 어가 소득 기반 강화(Ⅳ-1-④)

수산직불제팀 (044-200-5452 / 5453)

□ 추진배경 (목적)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20.5.)으로 **수산업·어촌분야의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 실현을 위해 **공익형 직불제** 도입('21.3.)

* 안전한 수산물 공급, 수산자원 및 해양환경 보전, 해양영토 수호, 어촌사회 유지
** (**국정과제 73-5**) 수산공익직불금제 개편 등 수산인 경영안전망 강화

-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제**) 어업경영이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규모 어가**와 **내국인 어선원**에게 직불금을 지급하여 **소득 안정 지원**

-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도서 및 접경지역**의 **어업인**에게 안정적 어업경영을 위한 직불금을 지급하여 **소득 보전** 및 **지역 활성화 도모**

-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TAC 등 **수산자원 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여 **수산자원 관리 강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어업으로의 전환을 가속화**

- (**경영이양 직불제**) 어업경영을 이양하고 은퇴하는 **고령 어업인**에게 **소득 안정**을 위한 직불금 지급 및 **후계 어업인의 유입 촉진을 통한 어촌사회 유지**

○ (**수산정보화**)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제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및 수산 ICT융합 사업 추진을 통한 수산업 현장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제 운영**) 어업형태, 일정 소득규모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어가와 내국인 어선원에게 직불금(120만원) 지급 추진

* (국정과제73) 소규모어가에까지 직불금 지급

- 「수산직불제법」 하위법령 개정 및 법률 시행('23.4)

○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운영**) ①**조건불리지역 거주** 의무 ②어촌마을 공동기금(개인 지급액의 20%) 조성·사용 등 요건으로 지급

* '23년부터 소규모어가 직불제로 통합하였으나, 기존 수혜자(조건불리지역 내 비 소규모어가) 불이익 방지를 위해 현 지급조건 유지(단, 소규모어가 직불 및 타분야 기본형 직불 중복수급 금지)

- 모든 **도서 및 해상 접경지역**이 지급대상이며, 세부 지역은 별도 고시

* 도서: 36개 시·군·구, 368개 도서 / 접경지역: 인천 강화·옹진, 경기 김포, 강원 고성

- ('23년 지급단가) 어가당 80만원(국고80%)

○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운영**) TAC 할당 준수를 기본의무로 하고 선택 의무*를 2개 이상 준수하는 등 **강도 높은 자원관리 의무**를 이행하여 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강화하는 어업인 지원

기본의무		선택의무			
TAC 할당 준수	자율적 어획량 제한*	일시적·자율적 조업중단	해양쓰레기 수거	어선감척 (근해어업)	그 밖의 의무**

* TAC 비참여 단체만 해당

** 생분해성 어구사용,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 사용, 휴무일 지정, 어구제한, 채포체장·체중 제한, 종자방류 및 기타 준수 의무(최대 3개까지 신청 가능)

- 어업인 신청 후 지급 대상을 선정하여 이행점검 및 직불금 지급

○ (**경영이양 직불제 운영**) 어촌계원 자격을 이양하고 은퇴하는 어업인에게 어촌계 결산 소득 구간에 따라 직불금 지급

- 신청연령 상향, 어촌계원 자격 유지기간 완화, 이양대상 연령 확대, 지급기간 조정 등 제도개선 추진

	기존	개선	비고
신청연령	만 65세이상 ~ 만 75세미만	만 65세 이상 → 만 80세 미만	'26년까지 한시적용
가입기간	10년	5년	
이양대상	만 55세 이하	만 60세 이하	
지급기간	10년 범위 내 (만75세까지)	최장 10년, 85세까지	

○ (**수산정보화**) 수산 공익직불제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기 위한 관리시스템 운영 및 지자체 수산 ICT융합 지원사업 추진

-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에 대한 직불금 신청·대상자 선정·이행점검·지급대상자 확정 등 직불제 업무처리를 위한 관리시스템 구축

- 양식장 등 수산업 현장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하는 지자체 대상 수산 ICT융합 지원사업의 과제 공모·선정 등 추진

< '2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부정수급 점검계획 수립	'23.1월	국정 73-5
	수산공익직접지불제도 교육 사업 추진	'23.3월	국정 73-5
	조건불리지역 사업 대상 지역 선정 및 고시	'23.3월	국정 73-5
	경영이양 직불제 관리 개선책 마련 추진	'23.3월	국정 73-5
2/4분기	「수산직불제법」 하위법령 개정	'23.4월	국정 73-5 업무계획5
	소규모어가, 어선원 직불제 시행 추진	'23.4월	국정 73-5 업무계획5
	선택형 직불제 확대, 개편방안 마련 연구용역 추진	'23.4월	국정 73-5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준수 의무 이행점검 추진	'23.5월	국정 73-5
3/4분기	수산공익직불제 현장교육 실시	'23.8월	국정 73-5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현장점검	'23.9월	국정 73-5
4/4분기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지급대상자 선정	'23.10월	국정 73-5
	소규모어가, 어선원 직불제 관리시스템 구축	'23.11월	국정 73-5 업무계획5
	소규모어가, 어선원 직불금 지급 추진	'23.12월	국정 73-5 업무계획5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정책·사업의 수혜자**) 어업인, 관계기관 수산업무 담당자, 대국민

○ (**이해관계자**) 수협(정책보험 사업자) 및 지자체 등

□ 기대효과

○ 어선원을 포함한 소규모어가 등에 대한 지원으로 지역간, 산업간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수산공익직불제 도입 및 지원 확대로 어가 소득 보전, 어업인 경영안정 및 과 어촌 사회 유지에 기여하고 수산업·어촌분야 공익기능 강화

- 안전한 수산물 공급, 수산자원보호, 해양환경보호 등 수산업과 어촌이 가지는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유지함으로써 어촌사회를 유지하고 어업인 경영안정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

○ 수산정보통합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관계기관 공동활용, 대국민 서비스 강화 등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양방향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산정보의 통합·공유·개방을 통한 新 부가가치 시장 창출 도모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22	'23
어가소득보전(Ⅱ-4-일반재정⑧)			
① 어가소득보전(3460)		558 (558)	933 (933)
▪ 수산 공익직불제(310)	농특회계	558	933
수산행정정보화(정보화)(Ⅱ-4-정보화①)			
① 수산행정정보화(정보화)(3462)		14 (14)	16 (16)
▪ 수산정보화(505)	농특회계	14	16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0	'21	'22	'23			
①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금 수급자수(호) (가중치 50%)	-	-	-	30,000	소규모어가 직불금 수급 어가수 ○ '23년부터 어업인 소득안정 지원 확대를 위해 소규모어가, 어선원 직불제가 신설·시행됨에 따라 신규지표로 설정 * 신설직불제: 소규모어가, 어선원 및 조건불리지역 내 비소규모어가 - 직불금 수급어가수는 사업효과를 나타내는 직접지표로, '23년 신규 시행 후 사업실적과 대내외 환경을 고려하여 목표치 설정 추진 * (과거지표) 조건불리직불금 수급어가: ('20)16,874→('21)16,775→('22)16,973	○당해연도 소규모어가직불금 수급자수 ▪ 측정방법 -측정대상기간: '23.1.1.~23.12.31. -측정수행기관: 해양수산부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각 지자체의 직불금 신청에 대한 지급 결과	○각 지자체의 직불금 신청에 대한 지급 결과
②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수급 척수(척) (가중치 50%)	-	628	705	750	수산자원보호 직불급 수급 척수 ○ 직불금 수급척수 사업효과를 나타내는 직접지표로 어선감척, 어가인구 감소 등 대내외적 환경을 반영하고 '21년, '22년 실적과 '23년 예산을 고려하여, '22년 실적 대비 약 19% 상향한 도전적인 목표치로 설정 * 직불금 수급척수: ('21) 628 → ('22) 705 예산: ('21)81 → ('22) 119억원 → ('23) 119억원	○당해연도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수급척수 측정방법 -측정대상기간: '23.1.1.~'23.12.31. -측정수행기관: 해양수산부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각 지자체의 직불금 신청에 대한 지급 결과	○각 지자체의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신청에 대한 지급 결과

5 연안해운 공공성 및 안전관리 강화(Ⅳ-1-⑤

연안해운과 (044-200-5731 / 5732)

□ 추진배경 (목적)

○ 섬 주민의 보편적 이동권 보장, 대중교통으로서 안정적이고 편리한 연안여객항로 운영 등 연안여객항로의 공공성 강화 필요

○ 여객선 사고를 통해 노출된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문제들을 개선하는 **안전관리 혁신대책**의 **지속적 추진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해상교통망 구축**) 섬 주민들의 교통권을 보장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섬과 육지를 왕래할 수 있는 해상교통망 구축

-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 1일 생활권 미구축, 적자 발생 등으로 섬 주민의 교통권을 저해하는 항로를 보조항로로 지정하여 운항결손액 지원

- (**소외도서 항로운영 지원**) 여객선과 도선 등이 다니지 않아 대체교통수단이 없는 소외도서에 선박을 투입하고 운영비를 지원하여 주민의 보편적 해상교통권 확보 및 정주 여건 개선

- (**국가보조항로 개편**) 여객 서비스·선박 안전 등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가보조항로(現 민간위탁)를 공공기관이 직접 운영토록 추진

○ (**소외지역·취약계층 지원**) 여객선 운임을 지원하여 섬 주민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섬 지역 택배화물 및 유류, 가스 등 기초 생활연료 해상운송비 지원으로 정주 여건 개선

○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강화**) 엔데믹 이후 여객선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어 대형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밀착관리 추진

- (**안전관리 강화**) 연안여객선 현장 밀착 안전관리 강화 방안 등 안전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안전개선도 향상

- (**국민안전감독관**) 국민이 직접 연안여객선 안전상태를 불시 확인하고 미비점을 정부에 알려 시정하게 하는 국민안전감독관 운영

- (**특별안전점검**)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설·추석·행락철·하계·겨울철 대비 항해·통신장비, 구명·소화설비 등에 대한 민관합동점검

* (개요) 연 5회 이상 / 164척 전수 / 지방청·운항관리자, 해경, 검사기관 등

○ (**연안여객선 현대화**) 여객선 선령제한 강화정책 및 안전하고 쾌적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후화된 여객선 신조 추진

< '2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섬 주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 개정 추진	'23.1월	국정41-4
	'23년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공모	'23.1월	국정41-4
	국가보조항로(군산-연도) 신규지정	'23.2월	국정41-4
	연안여객선 현장 밀착 안전관리 강화방안 마련	'23.3월	
2/4분기	국가보조항로 운영방식 개편 연구 완료	'23.4월	국정41-4
	2023 국민안전감독관 선발	'23.5월	
	소외도서 항로운영지원 시범사업 추진	'23.5월	국정41-4
	연안여객항로 혁신대책 마련	'23.6월	국정41-4
3/4분기	'23년 연안여객선 현대화펀드 공모 추진	'23.7월	국정41-4
	해양사고 고위험선박 집중관리를 위한 간담회 개최	'23.8월	
	국가보조항로(완도-덕우) 신조선 투입	'23.9월	국정41-4
4/4분기	'24년도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사업 공모 추진	'23.11월	국정41-4
	연안여객선 고객만족도 조사 완료	'23.12월	국정41-4
	국고여객선 이용객 만족도 제고를 위한 CI 개발	'23.12월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사업 만족도 조사	'23.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섬 주민, 일반 국민

○ (**이해관계집단**)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섬 주민, 일반 국민

□ 기대효과

○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해상교통망 구축**을 통해 연안여객선에 대한 신뢰 및 수송실적* 증대

* ('18) 1,471만명 → ('19) 1,455만명 → ('20) 1,060만명 → ('21) 1,146만명 → ('22) 1,399만명

○ 여객선 운임, 섬 지역 택배화물 및 유류, 가스 등 생활연료 해상 운송비 지원 등을 통해 **도서주민의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

○ 여객선 안전의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정부부터 전문기관, 선사, 시민까지 참여하는 **다중 안전관리 제도 운영**으로 **여객선 안전성 확보**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2	'23
도서지역 해상교통 지원(Ⅲ-4-일반재정④)			
① 도서지역 해상교통지원(6134)		370	416
▪ 국가보조항로 결손보상금(300)	일반	206	202
▪ 내항여객선 운임보조(301)	일반	146	198
▪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304)	일반	18	16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0	'21	'22	'23			
①(공통)연안여객선 수송실적(천명) (가중치40%)	10,603	11,464	13,991	14,673	코로나19가 '22년부터 안정화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23년부터는 '19년 수준의 여객수송 실적이 회복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며, '22년 실적치 대비 상향	연안여객선 이용객 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통계자료
②연안여객선 안전관리 강화율(%) (가중치60%)	신규	신규	100	100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목표 신규 설정		
					①여객선 안전관리 개선도(50%)	①(개선이행건수/특별점검지적건수)×0.5	내부보고 (메모보고 등)
					②여객선 안전제고방안 마련(50%)	②방안 마련 및 지침 개정×0.5	내부방침 (메모보고 등)

성과목표 Ⅳ-2 수산자원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어업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1) 주요내용

□ 자원관리형 어업구조 및 지원체계로 전환

○ 자원에 비해 과도한 어선세력 축소를 위해 향후 5년간('19~'23) **근해어선**은 **11.5%**(300척), **연안어선**은 **2.7%**(1,000척)* **감척**

* 어획강도 및 업종 간 갈등·분쟁 등을 고려하여 연근해어선 감척

** '23년 : 근해어선 75척 및 연안어선 205척 감척(1,341억원))

○ 기본적으로 **자율감척**을 **유도***하고, 필요시 **자원회복 등**을 **위해** 자원남획이나 상습적 불법어업에 대한 **직권감척**도 **병행** 추진

* 자율감척 폐업지원금 상향하고, 직권감척은 불법어업 정도에 따라 감액

□ TAC 중심 자원관리시스템 내실화

○ 체계적인 수산자원관리를 위해 TAC **대상 업종**(갈치/근해채낚기)을 추가하고, **적용 해역***(참홍어)의 **확대** 추진

* 참홍어 TAC : ('22) 흑산도 인근 해역만 적용 → ('23) 서해전역, 해역으로 확대

○ **현장의견**을 반영하여 TAC **관리체계**를 **고도화***하고, 촘촘한 운영관리를 위해 **수산자원조사원**(120명) **운영체계**** **개선**

* 현장발굴단의 개선권고안('22.12)을 반영하여 TAC 운영지침 등 개정

** 수산자원조사원 인력 확충, App등을 활용한 TAC 조사결과 전자취합 등 추진

□ 생태계 기반의 통합 자원관리 추진

○ **바이오로깅 시스템**의 고도화 추진*으로 조사 자료의 정밀도를 제고하고, 음향조사 확대로 회유성 부어류**의 현존량 추정

* 내만으로 산란회유하는 주요 수산자원의 산란기내 행동 특성 연속 모니터링

** 고등어 산란기(5월) 현존량 조사 확대, 어종식별을 위한 음향특성치 연구 병행(정어리, 전어, 도루묵)

○ **한국형 생태계 기반 자원평가 모델***을 통해 해역별 **평가****를 실시하고, 주요 자원**평가 대상종 확대('22. 60종 → '23. 65종)**

* 단일어종 중심이 아닌 생태계 전반으로 확대하여 어종·어업·생태계 위험도를 종합 평가

** ('22) 동해권역 → ('23) 남해·제주권역 → ('24) 서해권역 → ('25) 근해 전역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0	'21	'22	'23			
①수산자원 직접조사 정점수 목표 달성율 (%)	100.0	100.0	100.0	100.0	500개 정점수는 직접조사 가능한 최대 정점수로, '21년부터 자원조사 결과의 연속성을 위해 최대 직접조사 가능 정점수 유지 필요	'23년도 수산자원 직접조사 정점수 / 수산자원 직접조사 목표 정점수 500개] × 100%	연근해특정해역 수산자원정밀관리 결과보고서 (국립수산과학원)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연근해 어업생산량은 지속 감소 추세

○ 기후변화에 따른 어장환경 변화, 과도한 어획, 어린물고기 보호 미흡, 불법어업 등으로 수산자원 감소 추세 지속

* ('16) 91 → ('17) 93 → ('18) 101 → ('19) 91 → ('20) 93 → ('21) 94 → ('22) 89만톤

○ 오징어는 기후변화에 따른 전 세계적 자원 감소, 중국·북한 어선의 동해 북한수역 어획 증가, 공조조업 등 국내 불법어업 등으로 매년 어획량 급감

* 오징어 어획량(천톤) : ('14) 164 → ('16) 122 → (`18) 46 → (`20) 57 → (`21) 61 → (`22) 37

○ 어획강도가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전략적 어선감척* 추진하고, 감정평가체계 일원화, 업종간-지역간 어업인 의견 수렴을 거쳐 어업분쟁 갈등해소 추진

* 5년간('19~'23) 총 1,300척 감척 목표(근해어선 300척, 연안어선 1,000)

(4) 기타

□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체계 조성을 위한 TAC 운영 등 수산자원의 체계적인 관리**

○ 한국수산자원공단 홈페이지(www.fira.or.kr)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Ⅳ-2-1 수산자원 조성 및 자원관리체계 고도화

수산자원정책과 (044-200-5533 / 5534 / 5536 / 5540 / 5541)

□ 추진배경 (목적)

○ 우리나라 연근해 전해역 수산자원에 대한 **과학적 조사·분석 기반을 마련**하고, **생태계 기반의 자원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각종 수산자원관리 정책의 실효성 제고

* 추진근거 : 「수산자원관리법」제10조 수산자원의 조사·평가, 제11조 수산자원의 정밀조사·평가계획

○ 수산자원조성·관리로 연안 생태계를 복원하여 해양환경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공급거점을 구축하여 수산자원 회복에 기여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생태계 기반 자원관리를 위한 첨단 수산자원 조사·평가 고도화 및 자원관리 전주기 통합관리 기반 마련으로 실효적인 수산자원관리 추진

◈ 연안 생태계 복원 및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바다숲, 산란·서식장 조성으로 지속 가능한 수산물 생산 기반 마련

○ (**수산자원관리 강화**) 생태계 기반 자원관리를 위한 **첨단 조사기법 고도화**와 **선진국 수준의 평가체계 확립**으로 **통합 자원관리 기반 마련**

- **바이오로깅 시스템**의 고도화 추진*으로 조사 자료의 정밀도를 제고하고, 음향조사 확대로 회유성 부어류**의 현존량 추정

* 내만으로 산란회유하는 주요 수산자원의 산란기내 행동 특성 연속 모니터링

** 고등어 산란기(5월) 현존량 조사 확대, 어종식별을 위한 음향특성치 연구 병행(정어리, 전어, 도루묵)

- 연근해 수산자원의 **산란·서식·회유경로** 등 생태 특성 **조사·분석 밀도를 강화**하여 보다 정밀한 산란장 지도 작성.

- **한국형 생태계 기반 자원평가 모델***을 통해 **해역별 평가****를 실시하고, 주요 **자원평가 대상종 확대**('22. 60종→'23. 65종)

* 단일어종 중심이 아닌 생태계 전반으로 확대하여 어종·어업·생태계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
** ('22) 동해권역 → ('23) 남해·제주권역 → ('24) 서해권역 → ('25) 근해 전역

○ **(조사 인프라 확충) 수산자원연구센터** 및 **전용 조사선**(4척) **운영**으로 전문성을 제고하고, **친환경자원조사선 대체건조**(3척) **추진**

- 체계적 조사·평가 인프라 확충을 통해 **CPTPP 가입 등 당면 국제 현안 적극 대응**

* 조사선 건조(누적) : ('19) 3척 → ('22) 준공 4, 건조 중 3척 → **('23) 준공 6, 건조 중 1척.**

○ **(TAC 내실화)** 체계적인 수산자원관리를 위해 TAC **대상 업종**(갈치/근해채낚기)을 추가하고, **적용 해역***(참홍어)의 **확대** 추진

* 참홍어 TAC : ('22) 흑산도 인근 해역만 적용 → ('23) 서해전역, 해역으로 확대

- **현장의견**을 반영하여 TAC **관리체계**를 **고도화***하고, 촘촘한 운영관리를 위해 **수산자원조사원**(120명) **운영체계**** **개선**

* 현장발굴단의 개선권고안('22.12)을 반영하여 TAC 운영지침 등 개정
** 수산자원조사원 인력 확충, App등을 활용한 TAC 조사결과 전자취합 등 추진

○ **(바다숲 조성)** 갯녹음 해소, 연안생태계 복원 및 탄소저감*을 위한 바다숲 조성** 및 환경친화적 기법***을 활용한 조성 확대 추진

* 탄소저감: '09~'22년까지 바다숲 291.80㎢ 조성으로 연간 9.8만톤 이산화탄소 저감
** 조성면적(누적, ㎢): ('09~'20) 242.58 → ('21) 266.44 → ('22) 291.80 → ('23) 317.21
*** 환경친화적 조성: 인공어초 비율을 줄이고, 천연소재 기자재 활용 및 자연암반 활용 확대

○ **(수산자원증대)** 지역별 특화품종을 대상으로 산란·서식장* 조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공급거점 확대 추진

* 산란·서식장 조성: ('21) 6종, 14개소 → ('22) 9종, 20개소 → ('23) 11종, 23개소

○ (**대국민 홍보**) 수산자원 관리 공감대 형성을 위한 “바다식목일” 기념행사 및 민간 참여 확대

○ (**소통강화**) 효율적인 수산자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현안 청취 및 개선방안 모색 등 소통 강화

○ (**'22년도 미흡과제 개선계획**) 성과지표 재검토를 통한 지표 수정 및 홍보 확대,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등 소통강화

- (**성과지표**) 정책연관성이 높은 수산자원 회복 다양화·자원관리형 어업관리 강화를 위해 관리과제 통합 및 대표 성과지표 설정

- (**정책추진**) 학계 및 전문가 세미나, 지자체 등 유관기관 워크숍,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대상 정책현장설명회 등 정책 소통을 위한 다양한 자리 마련 및 보도자료 배포 등 정책 홍보 강화

< '2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수산자원 조사분야 정책사업 세부추진계획 수립	'23.1월	국정 73-1
	'23년 수산자원조성 세부사업 계획 수립	'23.2월	국정 73-1 국정 41-7
	친환경 수산자원조사선 대체건조 추진 점검	'23.3월	국정 73-1
2/4분기	'23년 제11회 바다식목일 기념행사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23.5월	국정 73-1 국정 41-7
	'23년 수산자원회복사업 상반기 광역과학위원회 개최	'23.6월	국정 73-1
3/4분기	총허용어획량(TAC)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23.7월	국정 73-1
	수산자원 정책과제 리뷰세미나 개최	'23.7월	국정 73-1
	산란서식장 조성사업 추진현황 점검	'23.7월	국정 73-1
	수산자원조사선 탐구7호 준공	'23.7월	국정 73-1
	'23년 수산자원조성사업 관계자 워크숍	'23.9월	국정 73-1 국정 41-7
4/4분기	수산자원평가 대상 어종에 대한 자원평가 추진	'23.11월	국정 73-1
	수산자원조사선 탐구8호 준공	'23.11월	국정 73-1
	수산자원회복 워크숍 및 하반기 광역 과학위원회 개최	'23.12월	국정 73-1
	'24년 수산자원조성사업(바다숲, 증대사업) 신규사업지 선정	'23.12월	국정 73-1 국정 41-7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정책·사업의 수혜자)** 연근해 어업인 및 일반 국민

* 연안생태계 복원 및 연안해역 생산력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수산자원 공급

○ **(이해관계집단)** 업종별 어업인 단체 및 협회, 지자체

□ 기대효과

○ 바다숲 조성을 통한 연안생태계 복원으로 우리바다 건강성을 회복하고, 탄소흡수원 확충을 통한 탄소 저감 기여

○ 어종별 맞춤형 자원조성을 통한 연안해역 생산량 향상으로 어업인 소득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수산자원 조성·관리 내실화로 연안생태환경 및 수산자원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수산물 생산·공급체계 구축

○ 배타적경제수역 내·외 수산자원의 체계적 조사·분석으로 과학적 수산자원관리 정책 수립 지원 및 대외 협상력 강화

○ 생태계 기반 자원평가 확립으로 자원관리정책 효율성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2	'23
수산자원회복(Ⅱ-3-일반재정①)			
① 수산자원회복(농특)(3131)	농특회계	71	72
▪ 연근해 특정해역수산자원 정밀관리(340)		50	50
▪ 수산자원회복프로그램운영(341)		21	22
수산자원조성(Ⅱ-3-일반재정⑧)			
① 수산자원조성(농특)(3150)	농특회계	895	776
▪ 수산자원조성사업지원(304)		659	665
▪ 수산자원조사선 건조(306)		236	111
어업경영자금(기금)(Ⅱ-4-일반재정⑨)			
① 어업경영자금(기금)(3465)	수발기금	105	105
		(105)	(105)
▪ TAC참여어업인경영개선자금(융자)(300)		105	105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0	'21	'22	'23			
① 수산자원조사 실적 지수 달성률(%) (공통) (가중치 50%)	신규	신규	100	100	○ 설정사유 수산자원 정밀조사 해역 수산자원에 대한 수평·수직 조사를 강화하여, 수산자원조사의 정밀도를 높여 정확한 자원상태를 파악 하고자 함 ○ 산출근거 자원정보는 연속성 유지와 정밀한 조사가 중요하므로, 기존의 정점 조사(수평조사) 수를 유지하면서, 음향조사를 통한 자원의 수직분포 조사를 강화하여 정밀도를 향상 하고자 함 * ('21) 1 →('22) 1.4 →('23) 1.8 로 적극적인 목표를 설정하였고, 정확한 성과 측정을 위해 목표 지수의 달성률을 최종 목표로 설정하여 추진	수산자원조사 실적 지수 달성률 =실적지수(a. 조사 기준 정점 정밀 조사 달성지수 + b.주요 자원 수직분포 누적 구명지수) 목표치의 달성률 <산출식> [[a.(당해 조사 정점수/최대 정밀조사 기준 정점수 500개)× 비중 0.6]+[b. (수직분포 누적 조사종수/ 수직분포 조사 대상종 3종)× 비중 0.4]]/목표 실적지수×100%	연근해 특정해역 수산자원 정밀관리 사업 결과 보고서 (국립수산과학원)
② 연안생태계 건강성 향상 실적 (가중치 50%)	2.29	2.44	2.64	2.77	- 직전년도 실적치에서 5%* 상향된 목표치 설정 * 지난 2년간('20, '21) 바다숲 조성 완료(4년차)해역의 생물학적 종 다양성 지수 평균 증가율 - 종 다양성 증가율(%): ('20) 2.5, ('21) 6.5	- 당해연도 조성완료 해역(4년차)의 해조류, 저서동물 등의 생물종 다양성 분석* * (생물종다양성 산식) $-\sum_{i=1}^{s} Pi \cdot \ln Pi$ Pi = i번째 종의 개체수/총 개체수	내부 보고자료

2 어선어업 구조개선 추진(Ⅳ-2-②)

어업정책과 (044-200-5516 / 5517)

□ 추진배경 (목적)

○ 어업 특성을 고려한 전략적 어선감척 사업으로 전환·확대하여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이용 및 어업경쟁력 강화

- (근해어선) 대형트롤, 기선권현망, 저인망, 안강망 등 어획강도가 높은 근해어선을 단기간내 집중 감척하여 수산자원 보호효과 최대화
- (연안어선) 어획강도가 높고 타 업종과 분쟁이 심한 업종 위주 감척

* 어종별·업종별 어획노력량 대비 연근해어선 세력 9.8% 과다('18.11, 부경대)

○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노후어선, 대형어선을 중심으로 감척을 추진하여 해양수산분야의 탄소중립 실현(국정과제 41-7)

* 해양수산 탄소중립 실현 및 해양쓰레기 전주기 관리 강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한-일어업협상 타결 지연, 연안-근해 어업분쟁 심화 및 어업생산량 감소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제2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 수립

* 5년간('19~'23) 근해어선 300척, 연안어선 1,000척 감척 추진

○ 수산자원 회복 및 연안-근해어업간 분쟁 해소를 위해 어획 강도가 높은 대형 근해어선과 분쟁이 많은 업종 위주의 감척 추진

- 특히 한-일 어업협정 타결 지연으로 영향을 받는 업종과 오징어 등 수산자원의 급격한 감소로 영향을 받는 업종 우선 감척('23. 1,341억원)

* '23년 : 근해어선 75척 및 연안어선 205척 감척 추진

○ 감척 폐업지원금은 어업인 참여 유도를 위해 자율감척은 상향 지원하고, 직권감척은 불법어업정도에 따라 감액 지원

* 폐업지원금은 개별감정평가에 의한 90%에서 100% 지원 확대하고, 직권감척은 불법정도에 따라 90%~60% 지급

< '2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3년도 근해어선감척 감척 시행계획 수립	'23.1월	국정 41-7
	'23년도 연근해어선감척 사업집행지침 수립	'23.1월	국정 41-7
	'23년도 근해어업 실태조사 추진계획 수립	'23.1월	국정 41-7
	'23년 근해어선 자율감척 대상자 선정 통보	'23.3월	국정 41-7
2/4분기	연근해어선 감척 사업 집행상황 실태점검	'23.5월	국정 41-7
	근해어선 감정평가 관리기관 위탁사업 중간보고	'23.6월	국정 41-7
3/4분기	'23년도 근해어업 실태조사 중간보고	'23.7월	국정 41-7
	근해어선 감척 사업비 교부 및 사업 추진	'23.9월	국정 41-7
4/4분기	근해어선 감정평가 관리기관 위탁사업 최종보고	'23.10월	국정 41-7
	제3차 연근해어업구조개선 기본계획 수립	'23.12월	국정 41-7
	근해어업 실태조사 최종 보고	'23.12월	국정 41-7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정책·사업의 수혜자**) 연근해어선 어업자, 소비자 등

○ (**이해관계자**) 어업인 단체, 지자체 등

□ 기대효과

○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 조성을 통한 어업경쟁력 강화

○ 수산자원량에 적합한 어선척수 유지로 어가소득 증대에 기여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2	'23
연근해어업 구조조정(Ⅱ-3-일반재정⑦)			
① 연근해어업구조조정(3145)	농특회계	1,204	1,341
		(1,204)	(1,341)
▪ 연근해어선감척(지자체)(300)		1,199	1,336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0	'21	'22	'23			
① 근해어선 감척 이행률(%)	103	114	1301	80	○ '22년도 근해어선 감척 추진계획 및 과거 감척 실적 등을 감안하여 '22년도 근해어선 감척 이행률 목표 설정 - 최근 5년간 어업인 감척 포기 및 불응 비율(20.6%) 등을 고려하여 추세치 반영 * 감척 포기 및 불응 비율(%) : ('18) 50 → ('19) 25 → ('20) 35.7 → ('21) 24.5→ ('22) 7.4	(근해어선 감척수 / 근해어선 감척 추진계획)×100	추진실적 자료(우리부)

3 어업안전 보장 및 조업질서 유지 역량 강화(Ⅳ-2-③)

지도교섭과 (044-200-5561/5563/5565/5571)

□ 추진배경 (목적)

○ 우리 관할 수역 내에서 수산자원의 보존과 합리적 이용을 위한 **한·중, 한·일간 어업협정**의 **운영** 및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근절** 추진

- 주변국과의 조업 경쟁 등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 예방을 위해 어업관리 역량강화 등 추진

○ **연근해 어선**의 고질적인 불법행위 등으로 인해 수산자원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어 **체계적인 지도·단속 체계** 확립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대한 자원조사,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불법어업시스템 개발 계속('22~'24, 2차 사업)
◇ 국가어업지도선 대체건조(9·19백톤급 5척) 준공 및 대형어업지도선(3천톤급 3척) 신규건조 계속, 어업지도선 교육훈련 강화방안 마련
◇ **한·중 어업협정의 안정적 운영, 한·일 어업협상 재개 노력** 등 추진

○ (**어업인 조업권 강화**) 대형어선(트롤 등)을 이용한 **서해 수산자원 조사**를 통해 **잠정조치수역**에 대한 **재출어 가능성** 타진 및 연평어장 안전조업 강화

* **'23년 서해 수산자원조사**(77억원) 반영

- **연평어장 봄어기**(4.1~6.30) 및 **가을어기**(9.1~11.30)에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여 **우리 어선**의 **안전조업**과 **조업질서 유지** 확보

○ (**어업관리 역량 강화**) 어업관리단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업무 역량 향상** 및 국가어업지도선 건조계획 등에 따른 **인프라 확충**

- 어업관리단 안전 관리를 위해 **어업지도선 신규 승선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방안 마련**('23.3)

- **국가어업지도선 대체·신규건조** 계획에 따라 어업지도 역량을 확보하고, 고속단정(4대) 적기 교체 등 **인프라 확충**

* 어업지도선 건조 예산 : ('21) 678억원 → ('22) 1,284억원 → ('23) 1,264억원
** 국가어업지도선 대체건조(5척, 하이브리드) 준공 및 신규건조(3척, LNG) 계속 추진('25)

○ (**중국어선 불법어업 근절**)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방안**을 **마련**하고, **중국 불법어구 철거사업**('23.下)을 통해 서해 우리 어선의 조업권 강화

- 관계기관간 유기적 정보 공유 및 불법어선 단속을 강화하고, 어구 전문 수거선을 이용 중국 범장망 어구를 철거

○ (**국내 어업질서 확립**) 연근해 불법어업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조업감시센터 구축 방안 마련

* **'23.5~8월 / 3천만원 / 연근해 조업감시센터 구축 운영 방안 연구**

- 지역별·업종별·시기별 테마 단속과 고질적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합동단속(5·10월)·특별단속(수시) 실시

○ (**한·중 어업협정**) 제22차 어공위('22.11.11) 합의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통한 어업협정의 안정적 운영 및 **'24년 어기 한중 어업협상* 대응**

- 어업공동위원회, 지도단속 실무회의 등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해 불법어업 방지를 위한 중국정부의 자구노력 등 협력 촉구

* 1차 국장급 준비회담(9월/한국, 잠정), 2차 준비회담 및 본회담 개최(10월/중국, 잠정)

○ (**한·일 어업협정**) 한일 어업협상 재개를 위해 실무협의 재개 등을 위해 **일본측**과 **협의**를 추진하고, **업계 의견수렴** 추진

- 주일 한국대사관 등을 통해 **日 정부동향 모니터**링 지속 실시하고, **양국 수산단체**(민간) 간 **소통**(협의회 개최) 지원

○ (**소통 강화**) 연평어장 등 **접경수역**에 대한 **어업인 안전 확보**를 위해 **관계 지자체** 및 **어업인 등**과의 **소통 강화**

< '2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 분기	(어업인 조업권 강화) '23년 서해 수산자원조사 추진	'23.3월	국정 41
	(어업관리 역량강화) 어업관리단 인력 확대를 위한 직제 요구(안) 마련	'23.3월	국정 41-1
	(한일 어업협정) 한일 양국 간 협의	'23.2월	
	(어업인 조업권 강화) 봄어기 연평어장 안전조업 대책 마련	'23.3월	
	(국내 어업질서 확립) 「책임어업법」 제정(안) 마련	'23.3월	국정73-1
2/4 분기	(어업관리 역량강화) 어업지도선 신규 승선직원 교육훈련 추진 * '23.3월 방안마련 ⇒ '23.4~6 교육훈련 실시	'23.4~6월	
	(국내 어업질서 확립) 봄철 불법어업 전국 합동단속 실시	'23.5월	
	(국내 어업질서 확립) 연근해 조업감시센터(FMC) 구축 연구용역 추진	'23.5월	
	(한중 어업협정) 제19차 생물자원전문분과위원회 개최	'23.5월	
	(국내 어업질서 확립) 「책임어업법」 제정(안) 설명회 개최	'23.6월	국정73-1
3/4 분기	(한중 어업협정) 한중 어업지도단속실무회의 개최	'23.8월	
	(어업인 안전조업 강화) 가을어기 연평어장 안전조업 대책 마련	'23.8월	
	(한·중 어업협정) 불법어구 강제 철거 추진	'23.8월	국정 41-1
4/4 분기	(국내 어업질서 확립) 가을철 불법어업 전국 합동단속 실시	'23.10월	
	(한중 어업협정)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개최	'23.11월	
	(국내 어업질서 확립) 연근해 불법어업 예방법 제정안 마련	'23.12월	국정 73-1
	(어업관리 역량강화) 하이브리드 국가어업지도선 대체(9·19백톤급 5척) 준공	'23.12월	국정 41-1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정책·사업의 수혜자**) 어업인과 수산자원을 이용하는 국민

○ (**이해관계자**) 어업인, 지자체, 정부(외교부, 해양 경찰), 수협 등

□ 기대효과

○ 우리 수역 내 어업질서 확립을 통한 어업인 안전·조업권을 강화하고, 미래 지속가능한 어업체계 마련

○ 한중 외교협력 강화, 합동단속 등을 통한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 국내 수산자원 보존을 통한 향후 한·일, 한·중 협상에서 우위 확보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22	'23
어업안전지도강화(Ⅱ-3-일반재정②)			
① 어업안전지도강화(3132)	일반	2,051 (2,068)	1,867
▪ 어업협정이행(300)		131	127
▪ 어업지도관리(303)		1,536	1,311
▪ 어업지도선관리및운영(305)		384	429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0	'21	'22	'23			
① 국내어선 불법 조업률(%)(공통) (가중치 50%)	18.0	17.5	12.6	15.1	최근 3년간 실적치 평균(16.0%)에서 3년간 실적 증감률의 평균치(0.9%)를 뺀 15.1%로 설정	국내어선 불법 어업 단속건수/ 승선조사건수 ×100	단속 및 승선조사 실적 본부 보고자료
② 중국어선 불법 대응건수(건) (가중치 50%)	231	262	819	1,100	중국어선 입어규모 감축 및 코로나19를 고려하여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직접승선 조사건수를 전년대비 34% 상향하는 도전적인 지표로 설정	우리수역내 입어하는 중국어선에 대한 직접승선 조사건수	한·중 불법조업 공동단속시스템상 중국어선 승선조사 등록된 건수 기준

④ 연근해어업 경쟁력 강화(Ⅳ-2-④)

어업정책과 (044-200-5518/5519)

□ 추진배경(목적)

○ 어업생산량은 '86년 약 172만톤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며, '22년 생산량은 약 89만 톤('86년 대비 51.7% 수준)

○ 생산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 어선 기술 발전 등에 따라 어구·어법 변화, 어획강도 상향 등 업계의 규개개선 요구는 증가

○ 경직된 어구·어법이나 어업현장의 과도한 규제를 줄이고, 총허용어획량 등 산출량 중심의 어업관리체계로 전환 추진

* 선복량, 어구·어법 등 Input control → TAC(총허용어획량) 등 Output control

○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24.1)에 대비하여 **연근해어업 각 사업장별 중대재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지원

* (現)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 (改)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 어선어업생산자단체의 품목별 규모화·조직화로 어업 경쟁력 강화, 자율적 소비촉진·수급조절, 유통구조 개선 등 자립역량 제고를 위한 자조금 조성 지원

○ 연근해어업 조업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수산자원의 합리적인 이용과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체계 구축

○ 연근해어장 내 **유실·침적된 폐어구를 수거·처리**하여 수산자원 **산란·서식지 보호**를 통해 지속가능한 어업 육성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TAC 기반 규제완화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자원관리현 어업시스템 전환
◇ 타 업종과 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안전과 편의 제고를 위한 규제 개선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확대시행에 맞춰, 각 어선별 중대재해 대응메뉴얼 마련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자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 수산자원 관리·회복정책 방향과 어구 생애주기 관리 정책에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해 단계별 관리 강화
◇ 조직화 지원단체를 선정하여 어선어업 생산자단체를 조직화하고 행정·재정적 관리를 지원하여 어선어업 품목별 단체의 자율적 수급안정 등 사업 제고

○ (**어업 규제완화 시범사업**) 엄격한 TAC 및 모니터링 체계를 수용하는 경우 어업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시범사업 추진

* (1차) 근해안강망, 연안개량안강망('20.5~) → (2차) 잠수기, 소형선망('21.9~), 근해형망('22.8~)

○ (**어업 규제개선**) 실뱀장어안강망어업 선형 개선, 구획어업 관리선 증톤, 마을어업 채취방법 개선 등 업계 요구를 신중히 검토하여 어업현장 불편 해소

○ (**중대재해 예방**) 연근해어업 **업종별 위험성평가**를 통한 표준매뉴얼 제작을 지원하고, 표준매뉴얼을 토대로 각 사업장별 안전관리체계 구축

○ (**어구 관리 강화**) 기존 어업인 수요조사 의존 방식에서 **과학적 데이터 기반** 순환식 사업대상지 **선정 방식으로 전환**

* 수산자원 산란서식지 등 주요 관리대상 해역에 대한 순환·관리식 수거 추진

○ (**연근해실태조사**) 근해형망, 서·남해안 낙지통발 사용실태 및 어획량 분석을 통해 어구어법의 규제개선 및 어구개량 등 **어업정책 제시**

- 연안조망 혼획저감장치의 효과 분석을 통해 **실효성을 검증**하고, 선자망어업(전통어업)이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분쟁*** **해소**

○ (법령제개정) 美해양포유류보호법(MMPA) 대응하여, 혼획저감 장치개발(5개업종*) 및 우리나라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통발, 자망, 정치망, 트롤류, 안강망

< '2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 분기	어선어업 생산자단체 지원 세부시행계획 수립	1월	
	연근해어업 선진화를 위한 경쟁력 강화 연구 선정	2월	
	연근해어장 생산성 개선 지원 사업 세부시행계획 수립	2월	
	'23년 어업 규제완화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2월	
	품목별 어선어업 생산자 단체 선정	2월	
	유령어업 피해 예방 교육·홍보 세부 계획 수립	3월	
	업계 규제개선 요구 검토	3월	
	연근해어업 중대재해 예방체계 지원 구축 사업 세부계획 수립	3월	
2/4 분기	수산업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	4월	
	어업인 참여형 어구수거사업 대상지 선정 및 간담회 실시	5월	
	'23년 어업 규제완화 시범사업 관련 어업인 교육	6월	
	업계 규제개선 요구 청취 및 검토	계속	
3/4 분기	근해어업인 휴어기 참여형 수거 사업 추진	8월	
	연근해어업 선진화를 위한 경쟁력 강화 연구 중간 점검	9월	
	업종별 위험성 평가 및 표준매뉴얼 제작	9월	
	신규 어선어업 생산자 단체 조직화	9월	
	업계 규제개선 요구 청취 및 검토	계속	
4/4 분기	'24년도 어구 수거사업 대상지 선정 협의회 개최	11월	
	'23년 어업 규제완화 시범사업 현장 점검	11월	
	유실침적어구 사업 현장 점검	11월	
	사업장별 안전·보건 컨설팅 추진	11월	
	연근해어업 선진화를 위한 경쟁력 강화 연구 결과 보고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어업인, 수산자원을 이용하는 국민

○ (**이해관계자**) 지자체, 수협, 어업인단체 등

□ **기대효과**

○ 정책 연계를 통해 연근해어업 **효율성 제고**와 수산자원 보호·관리에 대한 **대국민 관심** 및 **자원회복 정책 만족도 향상** 도모

○ 소규모 연근해어업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지원하여 **어선 안전사고 예방 및 어선원 재해율 감소** 기대

○ 수산물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어선어업 생산자단체의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생산 및 판매(홍보) 유지 등 어업생산체계 구축

○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와 선진 어업정책 추진을 통해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경쟁력있는 어업 실현

○ **연근해 어장내 주요 서식지 보호**하고 연근해어장의 수산자원의 생산성을 증대하여 **어가소득 향상 기여**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2	'23
연근해어장 환경개선으로 수산자원 증대 및 유령어업 예방(Ⅳ-2-일반재정④)			
①수산자원조성(3150) ▪ 지속가능한어업생산체계구축(343)	농특회계	18	40
②수산자원회복(3167) ▪ 연근해어장생산성개선지원(316)	수발기금	155	155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0	'21	'22	'23			
① 연근해어업 업종별 중대재해 표준매뉴얼 제작·보급(업종수) (가중치 40%)	-	-	신규	21	연근해어업 중 상시근로자 5인 업종을 기준으로 목표치 설정	표준매뉴얼이 개발된 업종의 갯수	연근해어업 중대재해 예방체계 지원 구축 사업보고서
② 어업 규제완화 시범사업 대상 수(개) (가중치 40%)			신규	2	「수산업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사업 대상자 요건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목표치 산출	당해연도 사업 참여단체 수 측정	'23년 시범사업 실시계획
③ 유실·침적 폐어구 수거·처리 면적(㎢) (가중치 20%)			신규	2,242	최근 3년간 예산 투입 대비 수거면적 평균치를 기준으로 당해연도 사업예산을 고려하여 목표량 산출	당해연도 사업예산 × 최근 3년간 예산 투입 대비 수거면적 평균치	유실·침적 폐어구 수거 사업보고서

⑤해외수산물 공급기반 확충(Ⅳ-2-⑤)

원양산업과 (044-200-5360 / 5361 / 5362)

□ 추진배경 (목적)

○ 원양어업에 대한 국제규제 강화, 어선 노후화, 입어료* 상승 등 어려운 여건으로 인해 국적어선의 원양 생산량**은 지속 감소

* (키리바시 입어료 추이) : ('10) 333 → ('15) 2,313 → ('20) 2,995만불

** 원양 생산량(만톤) : ('90) 92 → ('18) 46 → ('19) 51 → ('20) 44 → ('21) 44 → ('22) 40

○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 수립, 노후 원양어선 현대화, 해외어장 개발·확보 및 IUU어업* 예방을 통한 원양산업 경쟁력 강화 필요

* (IUU어업) 우리나라는 미국 2차례('13.1월, '19.9월), EU 1차례('13.11월) 예비 IUU어업 국가로 지정 및 해제된 사례가 있음

○ 신규 해외 원양어장 적극 발굴·확대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원양 수산물 생산량* 확보

* '21년 기준 원양어업 생산량은 연근해어업 생산량의 약 47%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노후 원양어선 현대화**) 국제 기준을 반영한 표준선형 개발, 안전펀드('23년, 90억원) 지원 및 EM 시스템 도입(시범사업 등)을 통한 노후 원양어선 현대화 추진

- (**표준선형 개발**) 케이프타운 협정* 비준 관련 취약 업종인 연승업종에 대해 국제기준 및 자동화를 반영한 표준선형** 개발(~'23.8)

* 케이프타운협정 : 선체구조, 복원성, 기관, 구명설비 등에 대한 요건을 규정한 국제어선안전 협정

** ① 연승어선 자동화 기획연구('21~'22), ② 연승어선 표준어선형 개발('22~'23)

- (**안전펀드**) 정부출자('23년 90억원)와 민간자본으로 구성된 원양어선 안전펀드* 지원을 통해 노후 원양어선 현대화 추진

* 안전펀드 운영을 통해 선박투자회사(SIC)와 선박대여회사(SPC)를 설립하고 선박 대체건조를 지원(SPC가 선주가 되어 장기 용선계약 15년)

- (**EM 시스템 도입**) EM 시범사업*('23년, 1척, 중서부태평양 해역 등) 등을 통해 지역수산관리기구(RFMOs)의 보존관리조치 이행 도모

* 다랑어연승어업에 적합한 전자모니터링(EM) 장비 설치 후 기초 자료(영상) 수집 등

○ (**해외어장 개발·확보**) 원양어업 해외 자원조사와 주요어장 국가에 대한 전략적 ODA 사업을 통해 해외어장 개발·확보

- (**전략적 ODA**) 어업쿼터 확보, 경비절감 등 원양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안국 수요를 반영한 생활연계형 ODA* 착수

* 현지 어업인의 실수요를 반영하여 어시장, 저온창고, 어촌개발 등 지원
** (투발루 어촌활력증진 ODA) 어업훈련센터어항 건설, 수산시장 리모델링 등(총 67억원, '23~'26)

- (**자원조사 및 신규어장**) 공해조업규제, 연안국 자원 자국화 등으로 조업 여건이 악화된 해외어장*의 대체 신규어장* 적극 발굴

* 예) 서부 아프리카는 과거 조기·민어 등 6만톤 조업했으며, '15년 철수 이후 조업선단 부재
** (북태평양 빨강오징어 어장) '22년도 시험조업(채낚기 2척) 후 어장확대 추진

○ (**원양어업 경쟁력 강화**) IUU어업 등 국제규제에 선제적 대응을 통한 원양어업의 지속성 확보 및 경쟁력 강화 추진

- (**IUU 어업 근절**) IUU어업국* 지정 대비, FMC 운영 및 항만국 검색 등 상시대응체계 운영을 통한 감시 · 감독 · 관리(MCS) 체계 강화

* IUU 어업 :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Fishing)
→ IUU 어업국으로 지정 시 미국, EU 등 수출 제한 우려

- (**발전계획 수립 · 시행**) 원양산업 관련 국제규제 등 여건변화를 분석, '제4차('24~'28)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 수립을 통한 선제적 대응

* 어선안전, 어장개척, 선원 복지, 산업구조 및 국제규제 분야에서 주요 추진과제 및 신규과제(원양산업의 미래산업화를 위한 중장기 R&D 투자방안 등) 발굴

○ (**'22년도 부진과제 개선계획**) 성과지표 재검토 및 정책효과 개선을 위한 홍보 확대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

- (**성과지표 재검토**) 관리과제에 부합하도록 성과지표(①노후원양어선 개선율, ②항만국 검색율, ③원양 핵심어장 공적개발원조 사업 준공율) 개선

- (**정책홍보 확대**) 보도자료 배포 확대 및 이해관계자 간담회 추진

< '2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원양어선 안전펀드 사업 수요조사	'23.2월	
	전자모니터링 도입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 참석	'23.3월	
	전자모니터링 추진을 위한 민관 협의회 개최	'23.3월	
	원양어선 안전관리 이행여부 합동점검	'23.3월	
2/4분기	항만국 검색관 훈련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용역 추진	'23.4월	
	제32차 한-러 어업위원회 개최 추진	'23.4월	
	해외어장 자원조사 선정위원회 개최	'23.4월	
	투발루 어촌뉴딜 공적개발원조(ODA) 프로젝트 사업 추진	'23.4월	
3/4분기	원양어선 전자모니터링(EM) 도입 · 운영 로드맵 수립	'23.7월	
	IUU어업 효과적인 예방을 위한 협업기관 워크숍	'23.7월	
	원양어업 통계조사 공표('22년말 기준)	'23.8월	
	원양연승어선 표준선형 설계안 발표	'23.8월	
4/4분기	'23년 IUU어업 근절을 위한 고위험군 선박의 특별관리계획 수립	'23.10월	
	'24년도 원양어선 안전펀드 사업계획 수립	'22.12월	
	투발루 어촌뉴딜 공적개발원조(ODA) 프로젝트 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안 수립	'22.12월	
	제4차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 발표	'22.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원양수산물을 소비하는 일반 국민, 원양 어업인

○ (**이해관계자**) 원양어업 종사자, 러시아, EU 등 연안 조업국 등

□ 기대효과

○ 노후어선 대체 신조 등을 통한 원양산업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 도모

○ 원양어장 ODA를 통한 쿼터 확보 및 어장복원, 신규원양어장 개발을 통한 어장확대 등 원양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2	'23
원양어업기반구축(기금)(Ⅰ-4-재정(2))			
① 원양어업기반구축(기금)(3541)	수발기금	150	90
▪ 원양어선 안전관리(301)	수발기금	150	90
원양어업기반구축(농특)(Ⅰ-4-재정(1))			
① 원양어업기반구축(3542)	농특	54	58
▪ 원양어업활성화(300)	농특	44	48
▪ 원양어선감독관리체계구축(303)	농특	10	10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0	'21	'22	'23			
① 원양어선 노후화 개선율(%) (가중치 50%)	1	1	1	4.2	○ 원양어선 노후화 개선을 위해 안전펀드 지원 업종을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노후화 개선에 대한 성과 목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측정산식을 수정하여 목표치를 설정 * 성과지표는 성과관리 시행계획과 동일하게 수정	안전펀드 지원 척수(누적) / 노후 어선* 척수 x 100 * 전년도 말 기준 31년 이상	원양 어선 허가 현황
② IUU어업 예방·근절 등 책임있는 조업기국 위상 제고를 위한 항만국 검색율(%) (가중치 50%)	7.6	8.2	8.2	9.0	○ IUU 어업 근절을 위해 국제수산기구에서 요구하는 항만국검색 수준(5%)보다 검색을 확대하여 목표치 설정	$\frac{\text{항만국검색 척수}}{\text{전체 입항신고 척수}} \times 100$	항만국 검색 실적

성과목표 Ⅳ-3 친환경·스마트양식업으로 전환하여 지속가능한 양식생산 환경을 조성한다.

(1) 주요내용

□ 스마트·친환경 양식생산 확대

○ (**스마트양식산업 전환**) 연관산업 집적화를 위한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스마트양식 시스템 보급**을 통해 **양식산업**의 **디지털 전환** 추진

○ (**핵심기술 R&D**) 유전체데이터에 기반한 **디지털 육종 기술**과 양식장 관리 **디지털화 기술 개발**을 통해 **생산성 및 친환경성**을 **강화**

○ (**연관산업 지원 강화**) 종자·사료·기자재 등 **연관산업 지원**을 **강화**하고 **전략품목별 육성**을 통해 **양식산업**의 **고부가가치 전환 추진**

□ 지속가능한 양식생산기반 조성

○ (**신규인력 유입**) **임대형 양식장 도입**, 청년·귀어인 신규면허 우선 발급 근거 마련 등 신규인력 진입을 위한 법제도 개선

○ (**건강한 어장**)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감소, **청정어장 재생사업** 확대(신규 2개소), **수산생물 질병 관리** 강화 등

○ (**기후 대응**) **고·저수온** 등 양식재해 피해 예방, 양식장 **친환경 설비**(히트펌프, 인버터) **보급** 등으로 경영안정화 및 저탄소화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0	'21	'22	'23			
① 양식 생산량 (천톤)	2,308	2,397	2,268	2,274	어장오염 악화, 어업인수 감소(어촌소멸), 자연재해 등으로 '17년 이후 양식생산량이 정체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코로나19 소비충격, 물류난 등으로 양식생산량 지탱이 어려운 실정이나, 전년대비 0.3% 상향한 매우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함	KMI 관측 자료 또는 통계청 통계	KMI 관측 자료 또는 통계청 통계

(3) 외부환경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양식산업의 양적인 성장 한계**에 따라 첨단기술 접목, 생산원가 절감, 환경·위생·안전관리 강화 등 **양식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 필요**

* 양식생산량(만톤) : ('18) 224 → ('19) 241 → ('20) 230 → ('21) 239 → ('22) 227

○ **(경험 의존)** 육안관측·경험에 의존한 생산·연구로 기술·설비가 표준화되지 않고 분절되어 기술 확산이 느리고 연관산업 미발달

○ **(재해 취약)** 기후 변화에 따른 해양환경 급변으로 해상양식은 **영양염류 부족, 고·저수온, 태풍** 등 자연재해에 상시 노출

* 양식 재해 피해현황(억원) : ('18) 713 → ('19) 82 → ('20) 84 → ('21) 408 → ('22) 205

○ **(안전 우려)** 금지약품 사용,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비브리오 패혈증, 노로바이러스 등으로 **양식수산물 식품 안전**에 대한 **불안감 상존**

○ **(환경 훼손)** 폐쇄형 연안에서의 **밀집·밀식**으로 **어장환경 수용력**을 초과, **생사료** 및 폐기자재 퇴적 등 **오염부하 심화**

(4) 기타

□ **어업생산 동향 등 통계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어업생산동향(www.kosis.kr)

○ KMI 수산관측(www.foc.re.kr)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1 첨단·친환경 양식산업 육성(Ⅳ-3-①)

양식산업과 (044-200-5631 / 5633 / 5635/ 5637)

□ **추진배경 (목적)**

○ 양식수산물의 고부가가치화 등을 위해 경험·노동력 중심의 양식업을 기술 중심의 **스마트·디지털화 및 규모화** 등 체질 개선 필요

○ 해양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어 친환경 생산 기반을 확대하고, 나아가 수산부산물의 체계적 관리 추진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① **양식업의 스마트화를 위한 기반 조성**

- 전국 6개소에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양식산업의 집적화, 규모화**를 추진하고, 테스트베드 등을 통한 **융복합 인재 양성 지원**

- 첨단 ICT 기술을 융복합하여 **내수면 양식시설**의 **스마트화 지원**을 통해 내수면 양식산업의 생산성 향상 추진

- 민간 및 지자체에 **바이오플락, 순환여과식 수처리 설비 등**을 지원하여 **스마트·친환경 양식기술 보급 및 확산** 추진

② **주요품종 등 전방위 지원을 통해 양식산업 체질 전환 가속화**

- 고부가 양식품목의 활성화를 위한 **핵심 기술개발** 및 현재 양식업의 문제점 해소를 위한 **외해 플랜트 양식시장 개척** 등 신규 과제 추진

- 스마트양식을 접목한 **참조기 양식시설 조성**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양식산업 구조**로 **전환 지원**

- 개체굴 등 **부가가치가 높고** 보다 **친환경적인 수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다수의 어가가 함께 사용하는 **다목적생산시설에 대한 지원** 강화

③ **친환경적인 양식산업을 위한 지원 강화**

- 친환경 수산물 인증 직불제 등을 통해 양식수산물의 **친환경적 생산**을 **지원**하고, **공익적 가치 및 품질제고**를 통해 **고부가가치화 추진**

- 수산부산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실태조사 추진** 및 **기초통계를 구축**하고, 자원화를 위한 **전처리 시설 보급** 추진

④ (**'22년도 미흡과제 개선계획**) 성과지표 개선·보완 및 정책소통·확산방안 발굴 등을 통해 정책효과 개선방안을 제고

- (**성과지표**) 친환경 양식산업 육성 과제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친환경 수산물 인증건수' 등 지표를 개발·대체

- (**정책효과**)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전문가 협의체 구성·운영('23.6) 등 **정책 소통**을 통해 다양한 정책효과 확대 방안 마련

< '2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첨단 참조기 양식시설 보조사업자 공모 추진	'23.1월	국정 73-1
	스마트양식 전문가 간담회 개최	'23.2월	국정 73-1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협의체 회의	'23.2월	국정 73-1 20대 중점
	2023년 수산부산물 재활용 시행계획 수립	'23.3월	
2/4분기	디지털양식 핵심기술개발 업무협약	'23.4월	국정 73-1
	내수면 스마트양식장 시범단지 기본계획 승인	'23.4월	국정 73-1
	친환경·첨단 양식 기술이전 교육 착수	'23.5월	국정 73-1
	수산부산물 기초통계 구축	'23.6월	
3/4분기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착공	'23.8월	국정 73-1 20대 중점
	디지털양식 핵심기술개발 현장 컨설팅	'23.9월	국정 73-1
	첨단·친환경 양식시설 지원사업 추진현황 점검	'23.9월	국정 73-1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관련 간담회	'23.9월	국정 73-5
4/4분기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이행점검	'23.11월	국정 73-5
	첨단·친환경 양식시설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23.11월	국정 73-1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추진현황 점검	'23.12월	국정 73-1 20대 중점
	수산부산물 전처리시설 보급	'23.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정책·사업의 수혜자**) 양식어가, 수산종자 업계, 소비자, 수산물 취급관련 업계(유통, 가공업계 등), 수산부산물 취급 관련 업계

○ (**이해관계자**) 양식어가, 수산종자 업체 및 수산물 취급관련 업계(유통, 가공업계 등), 환경단체 및 일반국민, 수산부산물 취급 관련 업계

□ 기대효과

○ 전통 방식의 양식업을 **첨단 디지털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IT 등이 접목된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에 기여

○ 민간 및 지자체에 대한 **지원 사업 확대** 등을 통해 인력난, 에너지 절감 등 **수산업이 처한 현안 대응** 등

○ 친환경 인증,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활성화 등을 통해 환경오염 저감, 친환경·저탄소 양식 등 **지속가능한 양식산업**으로 **전환 기대**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2	'23
어업인소득안정지원(Ⅱ-4-R&D①)			
① 수산연구개발(3433)	농특회계	69.2	119.61
▪ 수산종자산업 디지털혁신 기술개발(R&D)(325)		19.2	49.61
▪ 유수식 디지털양식 혁신기술개발(R&D)(326)		50	70
친환경양식육성(Ⅱ-3-일반재정③)			
① 친환경양식육성(3140)	농특회계	533	570.45
▪ 친환경양식어업육성(301)		533	548
▪ 수산부산물 자원순환 기반구축(355)		-	22.45
내수면어업(Ⅱ-3-일반재정④)			
① 내수면어업(3141)	농특회계	188	141
▪ 내수면자원조성(303)		188	141
수산공익직불제(Ⅱ-4-일반재정⑨)			
① 어가소득보전(3460)	농특회계	559	933
▪ 수산공익직불제(310)		559	933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0	'21	'22	'23			
①친환경 수산물 인증건수(건) (가중치 60%)	신규	신규	신규	100	친환경 수산물 생산 확대를 위해 최근 3년간 평균 친환경 수산물 인증(유기수산물, 무항생제 수산물, 활성처리제비사용) 건수(68건)보다 47% 상향한 100건으로 매우 도전적인 목표 설정	유기수산물 인증건수+무항생제 수산물 인증건수+활성처리제비사용 인증 * 건수는 품목 당 1건 기준으로 산출	인증정보시스템 친환경 수산물 인증건수 산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②친환경·첨단 양식기술이전 교육자(수) (가중치 40%)	신규	신규	신규	215	어촌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 친환경·첨단양식 등 양식분야 기술혁신 등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친환경·첨단 양식 기술이전 교육자수 목표 신규 설정 (최근 5년간 가장 실적이 높은 '22년 수준으로 목표 설정) * ('20) 201건 → ('21) 183건 → ('22) 215건	친환경양식 창업지원(양식기술이전교육) 건수 집계	창업지원 대상 조사 결과 (한국어촌어항공단)

2 고부가 양식품목 전략적 개발 육성 및 연관산업의 동반성장(Ⅳ-3-②)

양식산업과 (044-200-5631 / 5633/ 5683)

□ 추진배경 (목적)

○ 양식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품목에 제한된 수요 등으로 인해 **부가가치 창출*** 및 **외연 확장에 한계**

* 국내 수산물 중 양식생산량 비중은 62% 이상이지만, 생산금액 비중으로는 37%에 불과
** '21년 양식생산량 품종별 비율 : 해조류 76.4%, 패류 18.4%, 어류 3.8%

○ 양식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종자·사료·기자재·부산물 처리** 등 **연관산업**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① 전략품목 선정 및 육성 방안 마련

- 소비·수출확대 등 **성장 잠재력**이 있는 **양식 수산물 선정** 및 **전주기 육성*** **방안 수립**을 통해 양식산업의 **고부가가치 전환 추진**

* 주요 품목 선정과 함께, 품목별 종자·생산·유통·가공·소비·수출 등 산업 전 과정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산업 육성방안 연구 추진

② 수산종자 및 관상어 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추진

- **수산종자 실태조사**와 **생산표시**(종자명칭·생산지 등) **의무화, 관측사업 등 추진**을 통해 **수산종자산업 기초자료 확보**

- **안정적인 종자 공급 기반 구축**을 위해 **재해대응**(태풍·고수온 등) **종자시설**(김 냉동망) 등 **생산시설 지원**도 **추진**

- **내수면관상어 비즈니스센터 조성***, 관상어 **체험·전시시설 설치**** 및 **박람회 지원**('23.11월) 등을 통해 **관상어산업 활성화 추진**

* '20~'23(190억, 경북 상주) : 신품종 연구·개발, 양식·교육·전시·체험장 등
** '23~'24(90억, 충북 단양) : 미디어아트 아쿠아리움, 교육·판매·전시·체험장 등

③ **양식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고품질 배합사료 공급기반 구축 및 배합사료 사용 활성화 추진**

-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배합사료) 직불제 사업대상자 선정** 및 이행점검, **저어분·고효율 배합사료 양식현장 적용시험 추진**

- 안정적인 배합사료 공급을 위한 **친환경 배합사료 공장건립** 및 **양어사료 전문 생산시설 추진현황 현장점검**

< '2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배합사료 직불제 사업대상자 선정	'23.3월	국정 73-5
	수산종자관측 사업 추진	'23.3월	
	수산종자 생산정보 표시 사업 추진	'23.3월	
	미래 전략품목 워킹그룹 회의	'23.3월	20대 중점
2/4분기	저어분·고효율 배합사료 양식현장 적용시험 착수	'23.5월	국정 73-1
	양식산업 미래 전략품목 육성 연구용역 착수	'23.5월	20대 중점
	친환경 배합사료 공장건립 추진현황 점검	'23.6월	국정 73-1
3/4분기	관상어 체험·전시시설 증축 관련 추진상황 점검	'23.9월	
	수산종자산업 실태조사 국가통계 공표	'23.9월	국정 73-1
	배합사료 직불제 추진현황 및 이행점검	'23.9월	국정 73-5
4/4분기	한국관상어산업 박람회 개최	'23.11월	
	저어분·고효율 배합사료 양식현장 적용시험 결과보고	'23.12월	국정 73-1
	친환경 배합사료 공장 건립	'23.12월	국정 73-1
	양식산업 미래 전략품목 육성을 위한 계획 수립	'23.12월	국정 73-1 20대 중점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정책·사업의 수혜자**) 양식어가, 수산종자 업계, 소비자, 수산물 취급관련 업계(유통, 가공업계 등)

○ (**이해관계자**) 양식어가, 수산종자 업체 및 수산물 취급관련 업계(유통, 가공, 수출업계 등)

□ 기대효과

○ **고부가가치 양식산업 육성 및 보급**으로 **어업인 소득증대**

○ 병에 강하고 빠르게 성장하는 **종자 개발**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국내 양식 산업 경쟁력 제고**

○ **배합사료 사용 확대**를 통한 친환경 생산여건을 조성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여 지속 가능한 수산업 조성

○ **우량종자 생산 유통 기반 조성**을 통한 수산종자 생산어업인의 소득 증대 지원 및 안정적 양식산업 지원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2	'23
친환경양식육성(Ⅱ-3-일반재정③)			
① 친환경양식육성(3140)	농특회계	167.1	279.19
▪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300)		66	79
▪ 수산종자산업육성(305)		19	16
▪ 양식수산물전략품목육성(350)		44.1	114.19
▪ 관상어산업육성(351)		38	70
수산공익직불제(Ⅱ-4-일반재정⑨)			
① 어가소득보전(3460)	농특회계	559	933
▪ 수산공익직불제(310)		559	933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0	'21	'22	'23			
① 양식 9대 전략품목 생산금액(백억원) (가중치 60%)	신규	신규	신규	285	양식수산물 전략품목 육성을 통한 양식생산량 확대로 글로벌 수산강국 도약을 도모하고자 전략품목* 양식생산금액을 목표로 설정 * 넙치, 전복, 김, 해삼, 뱀장어, 참다랑어, 굴류, 연어류, 새우 등 9대 전략품종	9대 전략품목 양식생산금액 - 최근 3개년('20~'22) 생산금액 평균치(277백억)를 기준으로 약 3% 상향한 목표 설정	**통계청** (전략품목 생산금액, 어류양식동향조사)
② 배합사료 사용 어가(어가수) (가중치 40%)	신규	신규	신규	300	고품질 배합사료 사용 활성화를 위해 최근 2년간('21~'22) 평균 배합사료 참여어가(290개소) 보다 3% 상향한 300개소로 도전적인 목표 설정 * 지원현황 ('21) 285개소 → ('22) 295개소	'23년도 배합사료 직불제 참여어가수	**내부자료** (지자체별 배합사료 직불제 신청현황 보고)

3 지속가능한 양식산업 경쟁력 확충(Ⅳ-3-③)

어촌양식정책과 (044-200-5611 / 5614)

□ 추진배경 (목적)

○ **수산물 소비**는 **확대***되고 있으나 **수산자원**은 **감소****추세**에 있어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을 위해서 양식산업의 중요성***이 부각

* 1인당 소비량(kg) : ('16) 57.4 → ('17) 65.9 → ('18) 68.4 → ('19) 70.2 → ('20) 68.4
** 어업생산량(천톤) : ('90) 2,391 → ('22) 887(△**62%**) / 양식생산량(천톤) ('90) 773 → ('22) 2,267 (**193%**)
*** 국내 수산물 생산량 중 양식 비중 : ('90) 24% → ('00) 36% → ('10) 43% → ('22) 62%

- **양식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향후 5년간의 **중장기 정책방향** 설정 필요(「양식산업발전법」§6조)

○ **최근 어가인구 감소** 및 **고령화,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등 **대내·외 여건**에 대응한 **안정적인 양식산업 경영 여건** 마련 필요

* 어가/어가인구(내수면 제외) ('17) 5.3만가구/12.2만명 → ('21) 4.3만가구/9.4만명
** 어가 고령화율(%, 65세 이상) : ('11) 23.1 → ('20) 36.0 → ('21) 40.5

- 신규인력이 양식업 창업을 희망하더라도 **막대한 초기 자본***, 양식장 운영경험 미비 등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한계**

* 양식업권(면허) 매매 추정 가격 : 어류 3~4억원, 패류 3~5억원, 해조류 3~5억원

- 기후변화로 인한 고·저수온 심화,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양식 수산물의 수급 불안정 야기** 및 **양식어가 피해 심화***

* 양식 재해 피해현황(억원) : ('18) 713 → ('19) 82 → ('20) 84 → ('21) 408 → ('22) 205

○ 생산자 스스로 소비 촉진, 품질향상 등 **양식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수산물 자조금**의 **책임있는 운영**을 위해 **체계 개선 필요***

* 기존 희망 회원만 참여하는 임의방식에서는 품목 대표성 한계 및 무임승차자 문제 발생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중장기 발전방향**) 양식산업의 현황 및 전망, **대내·외 환경 변화 분석** 등을 통해 **양식산업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발전 방향 설정**

- (**기본계획**) 양식산업의 발전방향 설정, 고부가가가치 창출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5차 양식산업 발전 기본계획('24~'28)**' **수립**(~'23.11)

- (**양식장 실태조사**) 면허구역, 생산품종, 생산량, 계약현황 등 지자체 별로 관리하는 양식장 정보의 통합조사*를 통해 **객관적 현황 파악**

* 최근 전기료 인상 등 여건변화에 대응한 양식장 에너지 사용 실태분석 병행

- (**기후변화 대응**) 기후변화로 인한 어장 환경 분석을 토대로 지속가능한 양식을 위한 「**수산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응·적응 전략**」 **수립**(~'23.12)

○ (**개방성 강화**) 귀어인, 청년 등 신규인력의 **양식업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양식장 임대제도*** **도입** 추진

* 공공기관이 기존 양식장을 임차하고, 이를 청년, 귀어인 등 신규인력에게 다시 임대하는 제도

- (**제도기반 마련**)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양식업권 임대차 절차, 방법 등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사업지침 마련

- (**제도 개선**) 국내 양식장 유형별 재무여건 분석, 대내·외 투자여건을 분석하고 양식산업의 집적화·규모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 발굴**

○ (**안정적 수산물 공급**)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고수온·적조 등 **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 여건 마련

- (**재해 사전대비**) 피해 최소화를 위한 현장점검 및 고수온·적조 대응장비*(액화산소공급기, 산소발생기 등) 지원

* 고수온 대응 지원사업(40억원), 적조 등 유해생물구제(38억원)

- (**재해 대응**) 재해 특보 발표 해역 수와 피해규모 등을 감안하여 **위기경보 발령 기준**을 **정비**함으로써 효율적인 재해 대응 추진

- (**피해복구**) 재해 피해 발생시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계획 수립** 및 **복구지원**으로 피해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여건 마련

- (**수급정보 제공**) 주요 양식수산물의 입식·사육·생산량, 산지·도매가격 등 수급동향을 분석·제공*하여 양식업 경영 안정성 제고

* 전문가와 어업인이 참여하는 품목별 동향점검 회의 개최를 통해 관련정보 공유

- (**수산물 소비촉진**) 日 원전 오염수 방류 예상('23.上) 등 소비 위축 우려에 대비하여 수산물 안전성을 홍보하고, 양식수산물 요리대회 등 소비촉진을 도모하는 '2023 수산양식박람회(Sea Farm Show)' 개최 추진

* 일시/장소 : '23.9월 중(일정은 수산물 소비 동향에 따라 변경가능) / aT 센터

○ (**수산물 자조금 내실화**) 양식 수산물 생산자 단체가 자율적으로 품목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수산물 자조금 내실화 도모

- (**의무자조금 출범**) 임의자조금으로 운영되었던 양식수산물 품목별 단체들의 **의무자조금 전환**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운영여건** 마련

-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품목별 단체들이 책임있는 운영을 위해 자율성 및 대표성 확대, 지원체계 마련 등 '**수산물 자조금 단체 경쟁력 강화방안**'을 수립하고, 수산물 자조금 체계 개편 추진

- (**신규자조금 참여**) 각 지역별 정책설명회, 지자체 협력 등을 통해 **양식수산물 품목별 단체**의 **신규 자조금 참여** 유도

< '2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수산물 단체 자조금 경쟁력 강화방안 수립	'23.3월	
	수산물 의무자조금 출범식 개최	'23.3월	
	양식장 관리 실태조사 착수	'23.3월	
	「양식장 관리 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법률」 개정 추진	'23.3월	국정 73-4
2/4분기	자연재해 대응을 위한 해역 관리구역 개편	'23.5월	
	수산물 자조금 지원사업 추진 현황 점검	'23.6월	
	고수온·적조 종합대책 수립	'23.6월	
	임대형 양식장 도입을 위한 「양식산업발전법」 개정안 하위법령 마련	'23.6월	국정 73-4
3/4분기	수산물자조금 지원사업 워크숍 개최	'22.7월	
	고수온 피해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	'23.8월	
	주요산지 수급동향 현장점검	'23.8월	
	2023 수산양식박람회 개최	'23.9월	
4/4분기	제5차 양식산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	'23.11월	
	양식재해 대응평가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23.11월	
	저수온 종합대책 수립	'23.11월	
	2024년 수산물 자조금 사업지침 마련	'23.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양식어가, 종사자 등 양식산업 관련 업계 및 귀어·귀촌 어업인 등 양식업에 신규로 진입하고자 하는 인력·자본 등

○ (**이해관계집단**) 양식수산물을 소비하는 일반 국민, 양식수산물 수요 식품업체, 어촌계 등 기존 어업인

□ 기대효과

○ 기후변화로 지속·반복되는 **양식재해** 피해를 사전**예방**하고 신속한 **생산복구 지원** 등을 통한 양식수급 적정량 유지 지원

○ 임대형 양식장 도입 등 **청년·귀어인의 양식업 유입 및 정착**을 **촉진**하여 어촌경제 활성화

○ **자조금단체 기능 강화**를 통해 자율적 수급 조절, 품질개선 등 **양식생산자단체 스스로 경쟁력 강화 유도**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1	'23
재해대책			
① 재해대책(3443)	농특회계	80	80
▪ 양식등재해대책비(302)		80	80
수산관측			
① 수산물가격안정(3043)	농특회계	35	35
▪ 수산관측(300)		35	35
양식장 관리 실태조사			
① 수산물가격안정(3043)	농특회계	3	3
▪ 양식장관리실태조사(301)		3	3
수산물가격안정			
① 수산물가격안정(3065)	수산발전기금	35	35
▪ 수산물자조금지원(301)		35	35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0	'21	'22	'23			
① 수산물 자조금 단체 내실화 및 신규 단체 확대(%) (가중치 : 50%)	신규	신규	신규	100	- 품목별 단체 10개 중 의무자조금 전환을 추진 중인 단체 8개의 의무자조금 단체 전환 - 품목별 단체 중 '22년 신규단체로 임의자조금 운영이 우선 필요한 단체 2개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 - 양식수산물 품목별 단체 중 신규 자조금 단체로 참여할 수 있는 단체 발굴 및 자조금 참여 유도 (2개 신규단체 참여 목표)	A*70 + B*15+C*15 A:의무자조금 8개단체 전환 목표 달성 B:임의자조금 2개 단체의 운영 목표 달성 C:'24년부터 신규 단체 2개 목표 달성	행정자료
② 양식업 지속가능성 증대 (가중치 : 50%)	신규	신규	신규	100	- (신규인력 확보) 청년, 귀어인 등 신규인력에게 양식장을 임대 제공하는 양식장 임대제도 도입 - (기후변화 적응) 안정적인 양식수산물 생산을 위한 양식 분야 기후변화 대응 전략 수립	A+B A: 임대제도 도입을 위한 「양식산업 발전법 시행령」 개정(60) B: 수산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응·적응방안 마련 (40)	행정자료

④ 깨끗하고 안전한 양식수산물 생산기반 조성(Ⅳ-3-④)

어촌양식정책과 (044-200-5625 / 5623 / 5620)

□ 추진배경

○ **어장환경** 영향에 따른 양식수산물 **생산성 저하**, 양식장 피해 등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양식어장 환경관리** 필요

○ 수산생물 **전염병** 발생과 **해외 질병 유입**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양식생물 생산을 위한 **수산생물질병 관리** 필요

○ 수산동물 질병의 예방·진단·치료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의약품 개발** 및 건강한 양식수산물 생산을 위한 **의약품 사용 안전관리 필요**

⇒ **어장환경 개선**과 **수산생물의 질병** 및 **의약품 사용 관리** 강화 등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양식수산물 생산기반 조성**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어장환경 개선**) 반폐쇄성 만(灣) 단위 내 어장들을 묶어 동시에 정화하는 **청정어장 재생사업 확대**(계속 4개 + 신규 2개, 75억 원)

- 양식장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스티로폼 부표 신규설치 금지 시행**(11월), 인증부표 보급 및 스티로폼 부표 처리 지원(425억원)

○ (**어장관리 강화**) **어장청소 미이행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12월 시행)하여 양식업자의 **어장관리 책임성**을 강화하고,

- **어장환경평가**, 양식장 **관리실태**를 토대로 양식업 재면허 여부를 결정하는 **'면허 심사·평가제' 시행기반 마련**

○ (**질병관리 강화**) **수산생물질병 관리**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양서류**의 **수산생물전염병 3종*** **추가지정**하여 **관리**하고 주요 전염병에 대한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청정국 지위 유지·획득**

* 양서류항아리곰팡이병, 도롱뇽항아리곰팡이병, 라나바이러스병

- 수산생물 **질병 피해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수산 질병 **예찰 확대** 및 **수산동물 예방백신 사업 지원**('23, 19.5억원)

○ (**新통상규범 대응**) 수출, 해외생산시설 질병관리 기준, 시설 등록 및 취소 규정 마련 등 **국제적 위생·검역 규범 이행**을 위한 **제도** 정비

- WTO SPS, 세계동물보건기구 및 인·태경제프레임워크 등 **통상 및 위생검역 관리**에 관한 **국제적 규범** 논의 대응

○ (**의약품 개발**) 양식품종 다양화, 기후변화 등 급변하는 양식 환경 내 **신종·반복 발생 질병 대응**을 위한 수산용 의약품 개발

* 기(旣)허가 수산용 의약품의 사용 품종 확대 (연 10종), 신규 수산용 의약품 개발(연 10종)

- (**기술지원**) **제조업체 기술이전**으로 의약품 허가사항을 확충하고 **전자처방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데이터 정보화**로 수산진료 지원

*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Drug Utilization Review) 및 교육 콘텐츠 제작·배포

○ (**의약품 안전사용**) 처방대상 의약품 지정범위 확대 등 의약품 **판매·사용 제도개선 및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연구·소통 추진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23.上) 및 사용법 개선 등

- (**감시·점검**)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근절을 위한 **약사(藥事)감시*** 및 의약품 안전 사용문화 정착을 위한 **양식장 지도·점검**

* 제조·수입업체, 도매업소, 동물병원, 수산질병관리원 등, ** 전국 양식장의 30% 이상

○ (**'22년도 미흡과제 개선계획**) 성과지표 개선·보완 및 정책·소통 확산을 위한 이해관계자, 전문가 의견수렴 등 추진

- (**성과지표**) 올해부터 청정어장 재생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사업지 건강성 회복 성과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를 추가

- (**정책소통**) 정책 소통을 위한 정책설명회, 이해관계자 간담회, 전문가 의견수렴 등 다양한 자리 마련

< '2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어장종류별 청소 방법 시행(「어장관리법 시행령」 개정·시행)	'23.1월	
	인증부표 관련 어업인단체 간담회	'23.2월	국정 41-7
	수산동물용 의약품 안전사용법 안내	'23.2월	국정 73-3
	성과지표 개선을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 추진	'23.3월	평가개선사항 반영
2/4분기	수산동물용 의약품 안전사용기준 제조업체 기술이전	'23.4월	국정 73-3
	제90차 세계동물보건기구 정기총회 참석	'23.5월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 추진	'23.6월	
	이해관계자,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현장 간담회 추진	'23.6월	평가개선사항반영
3/4분기	청정어장 재생사업 현장 점검	'23.7월	
	제2차 국가항생제 내성 대책 추진실적 점검	'23.7월	
	수산생물전염병 청정국 선언 보고서 제출	'23.8월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 기준안 마련	'23.9월	
4/4분기	모든 양식장 내 스티로폼부표 신규 설치 금지 시행	'23.11월	국정 41-7
	수산생물전염병 1종 청정국 지위 추가 획득	'23.12월	
	어장청소 미이행자 대상 이행강제금 시행	'23.12월	
	수산용 의약품 안전사용 기준 확충 최종보고회	'23.12월	국정 73-3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양식어가, 종사자 등 양식산업 관련 업계, 일반 국민 등

○ (**이해관계집단**) 양식수산물을 생산하는 어업인부터 소비하는 일반 국민, 환경단체, 부표업체, 어장정화·정비업체 등

- 어장청소 이행강제금 시행, 스티로폼 부표 사용 금지 등에 대한 **어업인 반발**, 인증부표 관련 **어업인**, **환경단체**, **부표업체**, **시험기관**, **수협** 등 이해관계자 대립 상당

- 수산생물전염병 관련 조치 시 **조사기관**과 **양식어업인** 간 갈등, 수산생물 검역 규정 강화에 따른 우리나라로의 **수산생물 수출 국가**

□ 기대효과

○ 깨끗한 어장환경 조성과 책임 있는 양식업 관리로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양식수산물 생산**기반 마련

-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감소, 청정어장 재생사업**, 어장청소 **이행강제금 시행** 등 깨끗한 어장환경 조성과 양식장 관리 책임성 강화

- 체계적인 수산생물질병 관리를 통한 **질병 발생** 저감으로 양식어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수산물 제공으로 국민 신뢰 제고**

- 의약품 개발로 양식현장의 **질병 치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의약품 안전관리 감시강화로 **건강한 양식수산물 생산지원**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억원)

	회계구분	'22	'23
성과계획서상 재정사업 관리과제명(Ⅰ-1-일반재정②)			
① 친환경양식육성(3140)			
▪ 친환경어구보급(303) - 인증부표 보급	농특회계	400	423
▪ 친환경양식어업육성(301) - 청정어장 재생사업	농특회계	102	75
▪ 친환경양식어업육성(301) - 양식어장환경조사및평가	농특회계	26	26
① 해양수산환경 기술개발(R&D)(4132)			
▪ 해양미세플라스틱 오염대응 및 관리 기술개발(310) -해양 미세플라스틱 현안해결 기술개발(부표)	일반회계	22	22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0	'21	'22	'23			
양식생산 청정환경 조성 추진율(%)	신규	신규	신규	100%	①×30% + ②×40% + ③×30%		
					①양식장 스티로폼부표 제로화율 60% - 국정과제 '인증부표로의 전환' 결과지표 & 재정성과 동일 지표 - '22년 대비 12.7%p 상향한 60%, 매우 적극적으로 설정 (인증부표 보급 예산 변경 없음) * 과거 실적치 :31.5%('20년)→ 38%('21년) →47.3%('22년) * '22년은 '21년 대비 예산 2배 증가하였으나, 보급 증가율은 24.5%	(인증부표로 교체량 ÷전체부표량)×100	지자체 보고자료 및 수협 전수조사
					②청정어장 재생사업지 생태계 회복률 10% 상향 - 재생 전 득량만 저서동물자수(BHI) : 72	재생 전 후 저서동물지수 개선도	조사자료
	-	-			③수산용 의약품 안전기준 개발·정비 10종 - 의약품 안전사용기준 확충(10종) * 양식장 의약품 사용실태 조사, 어업인 현장 의견, 양식장 질병 발생 동향을 검토하고 전문가 약사심의위원회 로드맵 수립	(달성건수/목표건수(10종))×100	공문, 방침 등

성과목표 Ⅳ-4 신선수산물 유통·소비체계를 구축하고, 식품산업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한다.

(1) 주요내용

□ **안전하고 질 좋은 수산물 공급체계 구축을 통해 생산자 및 소비자가 상생하는 유통환경 조성**

○ 올바른 원산지 정보제공을 통해 소비자들이 수산물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 확대**

○ **위생환경**을 주요 **평가 요소**로 **포함**(현행 경영실적 위주)하고, **위판장 의무 위생기준 마련** 및 **위판장 수익구조 다변화** 등 추진

○ **온라인 거래 플랫폼**을 구축하고, 수산물 판매를 희망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주문·배송·재고관리** 서비스 일괄 제공 추진

○ 수산물이 위생적인 환경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유통환경**을 **개선**하고, **생산이력** 등 관련 정보도 **철저**하게 **관리**

□ **수급관리**를 통해 **물가안정**을 **기하고 수산물 소비활성화**

○ (**물가관리**) **대중성 어종** 등은 생산량·수급예측 모형을 고도화하고, 재고조사 시스템 개발을 통한 **재고량·수출입량 파악**으로 **수급관리**

○ (**소비촉진**) 참여 업체·규모를 늘려 **행사**(연 10회, 최대 40~50% 할인)를 **지속 개최**하고, 지자체와 함께 **지역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도 추진

- 학교·軍 등 **단체급식**은 **국내수산물 우선 구매** 등을 지원, 학생·장병 입맛을 고려한 **간편 레시피 11종**도 개발

□ **수출 전략형 수산식품산업 육성기반을 마련하고, 수산물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여 수산물 수출 확대**

○ 중소·중견기업을 글로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초보-성장-고도화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고, 전문 컨설팅 지원 등 **경쟁력 확보 지원**

○ **'K-Seafood관'** 입점기업을 **확대**하고, 온라인용 콘텐츠 제작, 쇼케이스 및 라이브 판매 등 지원으로 **비대면 소비시장 대응 강화**

□ **수산식품산업 육성 기반 마련**

○ 가공·R&D·수출이 연계된 **'수산식품 클러스터' 권역별 조성**을 위해 전남권* 수산식품 클러스터 공사착수 및 부산권** 설계 공모

* (전남권) 해조류 특화, 종합단지형 클러스터(가공공장, R&D시설, 창업·수출센터, 거래소 조성)
** (부산권) 어류·원양수산물·어묵 특화, 네트워크형 클러스터(수산식품개발플랜트(R&D 기능), 수출거점복합센터(수출지원 기능), 혁신성장지원센터(창업·수출·홍보지원 기능) 조성)

○ 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성과창출을 위해 IoT, AI 등 스마트화 기능을 접목한 수산가공 종합단지 조성 추진

* (새만금) 스마트 가공시설, 수산식품 R&D 및 협력지원센터, APT형 가공공장
** (신규 대상지) 총사업비 : 380억원, 사업기간 : 2023년 ~ 2026년

○ 김산업을 양적 성장에서 "질적성장"으로의 혁신을 통해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김산업 진흥구역* 지정·운영 추진

* '23년도 김산업 진흥구역 3개소 지정하고, 지정된 진흥구역에 대해 매년 평가·관리

□ **수산정책 대국민 소통강화를 통한 수산업활성화 추진**

○ 주요 수산정책에 대한 이해도 증진 및 현장 중심의 상향식 정책발굴을 위해 대국민 소통 기회 지속 확대 추진

○ 수산업 체질 개선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중장기 수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수립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0	'21	'22	'23			
① 수산식품산업 인프라 구축률 (%)	3	4.8	12.9	19.7	「수산식품산업법」 제13조에 의거, 전남권·부산권 수산식품 클러스터를 조성 중으로, 사업계획*에 따른 연차별 공정률을 목표치로 설정 * 전남권 클러스터('20~'25), 부산권 클러스터('22~'26)	(연도별 예산 누적 투자액(국비)/ 총사업비) × 100	내부보고자료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오염수 방류 이후 수산물에 대한 소비 급감, 업계 경영위기 발생 가능**

○ 수산물 안전에 대한 불확실한 정보가 생산·전파되고, 정부의 수산물 방사능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높아질 우려

○ 오염수 방류 후 수산물 전반에 대한 단기 소비 충격은 불가피할 것이며, 대응의 효과성에 따라 소비 회복탄력성은 상이할 전망

□ **수산식품기업 해외 시장 진출 확대 및 경쟁력 강화 지원**

○ 현지 무역지원센터 추가 개소를 추진하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 내 K씨푸드 판매관 운영하고, 해외시장 물류센터 확대 등 지원 강화

□ **대국민, 지자체, 전문가 및 언론 등에 대해 수산정책분야 중점 추진과제 설명회 및 간담회 등으로 현장이해도 증진 추진**

○ 현장 건의사항 등 규제혁신과제를 발굴하고 이행조치 노력

(4) 기타

□ **(관련 정보제공 누리집)** 수산물수출정보포털(http://www.kfishinfo.net)

☞ **안전한 수산물 공급**과 **유통경쟁력 강화**로 국민이 공감하는 **유통생태계 혁신 도모**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1 수산물 수급·물가위기 관리체계 구축 및 안심 유통환경 조성(Ⅳ-4-①)

유통정책과 (044-200-5441, 5442)

□ 추진배경 (목적)

○ 생산비용(유가 등) 증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수산물 물가는 **4월 이후 2%대 지속**, 日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등으로 수급불안 지속 전망

* 수산물 물가상승률(전년 동월비): (1월) 0.5%→ (2) 0.3→ (3) 0.6→ (4) 2.3→ (5) 2.7→ (6) 2.9

- 이와 함께, 수산물 **위생·안전**에 대한 **소비자 관심**도 **증가** 예상

○ 전체 **수산물 생산량**의 **40%**(연근해 수산물 82%)가 **위판장***을 **경유**하나, **위생시설**이 **없거나 노후한** 경우가 많아 위생확보에 한계**

* 연근해 수산물이 생산되어 유통되는 첫 단계로서 산지 위판장에서 수산물은 양륙–선별–위판–배송단계를 거쳐 도매시장 등으로 유통

** 211개 중 20년 이상 노후화된 위판장 85개소(40%), 위생시설이 없는 위판장 114개소(69%)

○ 1-2인 가구 증가, 코로나-19 장기화 등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수산식품 유통·소비트렌드는 **비대면·온라인 중심**으로 재편 중

* 농축수산물 온라인 거래액(통계청) : '17년 2조 4천억 → '20년 6조 2천억(연평균 37% 증가)

** 온라인 식품 구매경험(식품소비행태조사) : '16년 29.1% → '19년 51.2%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위생·안전관리**) 수산물이 위생적인 환경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유통환경**을 **개선**하고, **생산이력** 등 관련 정보도 **철저**하게 **관리**

- (**위판장**) 유통물량 상위 100개소를 선정, 순차적으로 현대화* 추진

* 목표: '29년까지 연근해산 80%를 저온 환경에서 처리 (現 전체 위판량의 9.1%)

- 시설·운영 현황 등을 분석, **유형별 현대화 전략**을 수립하고, 양륙-경매 등 위판 全과정 자동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속 추진

* 전자경매 및 자동선별 시스템 개발 등

- (**이력제**) 대형마트 등과 협업하여 민간참여 이력제 시범사업 실시하고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한 법령 정비(시행규칙 개정, ~'23.12)

○ (**수급·물가관리**) **비축·수매, 할인행사** 등을 **적기**에 시행하고, 수급 불안 상황의 **장기화**에 대비, **수급관리 역량 강화** 추진

- (**정부비축**) **설·추석** 등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시중 가격 대비 최대 **30%**를 **할인 판매**하고, **주 생산시**에는 **수매**

- (**할인행사**) 소비자 체감 물가 완화를 위한 **할인행사** 매월 **개최**

* 연 10회 이상 / 정부 20% + 업계 자체 20~30% / 대중성어종 6종 등

- (**모니터링**) 물가 관리 품목*의 **가격**을 **매일 모니터링**하면서, 적기에 물가 안정대책 추진

* 대중성어종 6종(명태, 고등어, 오징어, 갈치, 참조기, 마른멸치), 포장회 2종(광어, 우럭) 등

< '2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대한민국 수산대전 설특별전 개최	'23.1월	
	정부비축 품목선정위원회 개최	'23.2월	
	저온·친환경 위판장, 저온차량 등 공모	'23.2월	
	대한민국 수산대전 3월 봄맞이전 개최	'23.3월	
2/4분기	저온·친환경 위판장, 저온차량 등 사업자 선정	'23.4월	
	대한민국 5월 가정의 달 특별전 개최	'23.5월	
	민간 참여 이력제 시범사업 실시	'23.5월	
	어한기 소비자 가격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비축 물량 방출 추진	'23.5월	
3/4분기	대한민국 수산대전 여름맞이특별전 개최	'23.7월	
	대한민국 수산대전 추석 성수품 할인대전 개최	'23.9월	
4/4분기	대한민국 수산대전 가을맞이 특별전 개최	'23.10월	
	대한민국 수산대전 코리아수산페스타 개최	'23.11월	
	민간 참여 이력제 법적 근거 마련	'23.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일차적으로는 어업인, 유통업계 종사자이며, 최종 수혜자는 수산 식품을 소비하는 일반 국민

○ (**이해관계집단**) 어업인, 수산물 유통업계 등

□ 기대효과

○ 수산물 **수급·물가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위생적인 유통환경 조성 등으로 수산물 **소비촉진** 및 어업인 **소득증대** 유도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2	'23
수산물 유통개선(농특) (Ⅱ-2-일반재정②)			
① 수산물유통개선(3040)	농특회계		
▪ 유통단계 위생안전 체계 구축(317)	농특회계	23	97
▪ 직거래 등 신유통망 구축(319)	농특회계	26	25
안전한 수산물 공급관리(농특) (Ⅱ-2-일반재정③)			
① 안전한 수산물 공급관리(농특)(3041)	농특회계	24	24
▪ 수산물이력제(302)	농특회계	24	24
수산어촌알리기 (Ⅱ-2-일반재정⑤)			
① 수산어촌알리기(3044)	농특회계	218	660
▪ 수산업가치 및 소비촉진제고(340)	농특회계	218	660
수산물가격안정(기금·융자) (Ⅱ-2-일반재정⑧)			
① 수산물가격안정(기금·융자)(3066)	수발기금	759	1,750
▪ 비축사업(302)	수발기금	759	1,750
수산물유통자금지원(기금)			
① 수산물유통자금지원(기금)(3068)	수발기금	1,187	1,187
▪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300)	수발기금	1,187	1,187
수산연구개발			
① 수산연구개발(3433)	농특회계	83	85
▪ 수산물 신선유통 스마트 기술개발(319)	농특회계	83	85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0	'21	'22	'23			
① 할인혜택을 받은 소비자수 (쿠폰발행건수) (천명) (가중치 50%)	신규	신규	신규	3,600	1인당 할인 한도(1, 2, 4만원)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비자 수인 3,600천여명이 적정 목표이나, 10% 이상 상향된 소비자 수를 목표로 설정	할인혜택을 받은 소비자수 * 행사별 쿠폰발행 실적	- 사업결과 보고서
②이력정보시스템을 통한 생산 정보 관리 물량 (톤) (가중치 50%)	신규	신규	15.8	18만톤	국내 소비물량(266만톤) 중 대형마트 거래 물량(127만톤)의 20%(25.4만톤)를 이력관리 물량 목표치로 설정 * 민간 참여 이력제 본사업이 9월부터 실시 예정인 점을 고려하여, '22년 대비 14% 상향한 18만톤을 '23년 목표치로 설정	이력정보시스템을 통한 생산 정보 관리 물량(톤)	- 사업결과 보고서

2 수산식품 가공·수출 인프라 확대(Ⅳ-4-②)

수출가공진흥과 (044-200-5481 / 5482)

□ 추진배경

○ ‘22년 수산식품 수출은 **역대 최고**인 **31.6억 달러** 기록, 코로나19로 소폭 감소하였던 **’20년 이후 2년 연속 큰 폭**으로 **성장**

* 수산식품 수출실적(억$): (’19) 25.1 → (’20) 23.1 → (’21) 28.3 → (’22) 31.6

○ 수산식품 수출이 높은 성장을 유지하며 수출이 선도하는 **수산업**의 **선순환적 발전 구조*** 구축 필요

* 수출 증대 ↔ 상품 고부가화 ↔ 가공 기술 혁신 ↔ 생산(양식·연근해·원양) 역량 강화

○ 수산식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新소비트렌드**를 **반영**한 수산식품 가공·수출 지원 및 산업 전반의 육성기반 마련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수산식품 내수기업**을 **수출기업 전환·육성**

- **중소·중견기업**을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초보-성장-고도화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고, 전문 컨설팅 지원

* 상품 개발, 검사비, 해외인증 취득, 현지 판촉·홍보 등 지원항목을 제시하고 기업 선택 사용

** (’22) 33개사 / 초보 10, 성장 15, 고도화 8 → (’23) 35개사(+12) / 초보 10, 성장 17, 고도화 8

- **굴·넙치·전복** 등 대표 선도조직 육성을 위해 수출역량과 조직의 규모에 따라 특성에 맞는 선도조직 지원 추진

* 주요 품목별 선도조직을 지원, 중장기적으로 해당 품목 대표 통합조직으로 단계별 육성

○ **온라인 무역 거래 소비시장 집중 마케팅**

- 해외 온라인몰에 전용 판매관*을 운영, 소비시즌(美블랙프라이데이, 中광군제) 연계 할인행사 ‘K-씨푸드 글로벌 위크’ 개최

* (’22) K씨푸드관 입점(6개국 7개관) 업체 153개사 → (’23) K씨푸드관 입점업체 175개사

- '미디어 스튜디오*'를 활성화하여 온라인용 콘텐츠 제작, 수산식품 연계 K-브랜드 해외홍보관 운영, 부처 합동 K-박람회 등 추진

* ('22) 개관('22.8.31) 및 홍보 컨텐츠 제작 228회 → ('23) 홍보 컨텐츠 제작 400회

○ **수산식품산업 육성기반 마련**

- 가공·R&D·수출이 연계된 '**수산식품 클러스터**' 권역별 조성을 위해 전남권* 수산식품 클러스터 공사착수 및 부산권** 설계 공모

* (전남권) 해조류 특화, 종합단지형 클러스터(가공공장, R&D시설, 창업·수출센터, 거래소 조성)
** (부산권) 어류·원양수산물·어묵 특화, 네트워크형 클러스터(수산식품개발플랜트(R&D 기능), 수출거점복합센터(수출지원 기능), 혁신성장지원센터(창업·수출·홍보지원 기능) 조성)

- 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성과창출을 위해 IoT, AI 등 스마트화 기능을 접목한 수산가공 종합단지 조성 추진

* (새만금) 스마트 가공시설, 수산식품 R&D 및 협력지원센터, APT형 가공공장
** (신규 대상지) 총사업비 : 380억원, 사업기간 : 2023년 ~ 2026년

- **지역특산 수산물**을 활용한 수산식품 생산을 위해 **부산·목포·통영 거점 단지**를 중심으로 신제품·기술개발, 상품화 등 역량강화 지원 추진

○ **김산업 육성기반 마련**

- **김산업 진흥구역**을 **지정**을 통해 지역별 소규모, 산발적, 영세성의 지원을 지역별로 강점을 살려 특화할 수 있도록 생산, 위생·안전, 품질관리 및 수출경쟁력 제고

* 연차별 지정계획(개소) : ('23) 3 → ('24) 2 → ('24) 2 → ('25) 2 → ('26) 2

< '2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제1차 김산업 진흥구역 지정(3개소)	'23.3월	
	수산식품 수출기업 육성 사업 지원대상 선정	'23.3월	국정 73-2
	스마트 수산가공종합단지 신규 대상지 1개소 선정	'23.3월	국정 73-2
2/4분기	국제수산·식품 등 박람회 한국관 운영 및 참가	'23.4월	국정 73-2
	K씨푸드 미디어 스튜디오 홍보콘텐츠 제작	'23.5월	국정 73-2
	'제1차 김산업 진흥구역 지정' 사업 추진 현장 점검	'23.6월	
3/4분기	국제수산박람회 하반기 참가업체 모집 및 선정	'23.7월	국정 73-2
	'제1차 김산업 진흥구역 지정' 사업 추진 현장 점검	'23.9월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 신규 대상지 기본계획 수립	'23.9월	국정 73-2
4/4분기	K-SEAFOOD 해외 온라인 판매관 연계 마케팅	'23.11월	국정 73-2
	'제1차 김산업 진흥구역 지정' 사업 추진 현장 점검	'23.12월	
	전남 수산식품 클러스터(목포) 공사 발주	'23.12월	국정 73-2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일차적으로는 수산식품 수출·가공업체이나, 수산물 원료를 공급하는 어업인, 수산식품을 공급받는 모든 국민이 수혜자임

○ (**이해관계자**) 수산식품 수출·가공업계, 어업인, 수산 관련 단체 등

□ 기대효과

○ 수산식품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수출여건을 조성하고, 고부가가치 가공품 중심의 수출체계로 개선

○ 소비트렌드를 반영한 수산식품 제품 개발, 상품화 등을 지원하고, 수산식품 가공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수출 확대 기반 마련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2	'23
수산물 수출지원(Ⅱ-1-일반재정③)			
① 수산물 수출지원(2837)	농특회계	410	429
▪ 수산물해외시장개척(300)		410	429
품목별 경쟁력 강화(Ⅱ-1-일반재정④)			
① 품목별 경쟁력 강화(2838)	수발기금	1,324	1,324
▪ 우수수산물 지원(융자)(302)		1,324	1,324
식품산업육성(Ⅱ-1-일반재정①)			
① 식품산업육성(2832)	농특회계	139	194
▪ 수산식품산업육성		18	83
▪ 수산식품수출단지조성(301)		121	111
수산식품산업육성(Ⅱ-1-일반재정②)			
① 식품산업육성(2835)	균특회계	28.5	28.5
▪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조성(302)		28.5	28.5
수산연구개발(Ⅲ-2-R&D⑤)			
① 수산연구개발(4145)	농특회계	46	52
▪ 수산식품산업 맞춤형 기술개발(300)		46	52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0	’21	’22	’23			
①수산물 수출 활성화 추진율(%) (가중치 100%)	신규	신규	신규	100	‘수산물 수출 활성화(국정과제)’를 위한 주요 과정 및 결과의 달성 정도를 성과지표 목표치로 설정	① 100대 기업 수출액 20억불 달성(35%) ② 수출 확대를 위한 수산식품산업 육성대책 수립(25%) ③ 내수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육성을 위한 성장 사다리형 바우처 지원 (35개사) (20%) ④ 해외 온라인몰 전용 판매관 입점업체 확대 (175개사) (20%)	관세청 수출통계 내부자료 사업추진 성과보고서 사업추진 성과보고서

3 수산업 활성화를 위한 수산정책 지원 강화 (Ⅳ-4-③)

수산정책과 (044-200-5421 / 5422)

□ 추진배경

○ 정부는 수산업 진흥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규제를 개선 중이지만, **현장**의 **정책 체감도**와 **만족도**는 **낮은 상황**

○ 고물가·고금리, 원전오염수 방류 등 주요 **이슈**를 **해결**하고, **수산분야 위기상황**을 **전환**하기 위한 **터닝포인트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현장의 정책만족도 제고, 공동체 활성화로 어촌소멸 대응**

- **(현장 중심 정책) 수산인의 날 행사**(3월), **대국민 정책협의회**(연중) 등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규제 혁신** 등 **애로사항 해소**

- **(공동체 활성화) 어촌계 활성화방안 수립**(12월), **허베이조합 운영 정상화**(연중) 등을 통해 주요 **갈등**을 **해결**하고, **공동체 활성화** 유도

○ **수산의 미래전략·아젠다 발굴 및 민간 중심 생태계 조성**

- **(미래전략 발굴)** 중장기 수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8월), 수산 **R&D 혁신**(12월) 등 **미래전략 발굴** 및 **국정 아젠다 주도**

- **(창업·투자 확대) 펀드 신규결성**(11월), **창투센터 운영**(연중) 등을 통해 수산분야 **민간 금융투자 활성화** 유도 및 **창업·일자리 확대**

○ **안정적으로 수산업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

- **(금융안전망 구축) 정책자금** 공급, 재해 발생 시 **긴급자금** 지원, **신용보증** 확대(연중) 등을 통해 어업인의 **고금리 극복** 지원

- (**경영안전망 구축**) **전기료**(1월), **유류비** 등 **생산원가 감소, 소득·법인세** 세제 **지원** 등을 통해 어업인의 **생업기반 유지** 도모

- (**대외안전망 구축**) **IPEF, 원전오염수 방류** 등 대외 위협요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제도 개선** 및 **어업인 지원방안** 마련(즉시)

< '2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어업인 전기요금 부담 경감방안 시행	'23.1월	국정 73-5
	수산 민간금융투자 활성화방안 마련 및 대통령실 보고	'23.2월	국정 73-6
	'23년 수산정책현장 설명회 및 시도정책협의회 개최	'23.3월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23.3월	
2/4분기	'23년 수산분야 세제 개선사항 발굴 및 감면 건의	'23.4월	국정 73-5
	청년 수산창업인 토크콘서트 개최	'23.5월	국정 73-6
	양식업 소득 비과세 확대를 위한 세제당국 협의	'23.6월	국정 73-5
	전문가 정책협의회 및 기자단 간담회 개최	'23.6월	
	'23년 창업투자 지원사업 운영점검 및 업무협의회 개최	'23.6월	국정 73-6
3/4분기	중장기 수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수립	'23.8월	
	어업인 지원 조세특례 일몰기한 연장 정부안 반영	'23.9월	국정 73-5
	'24년 FTA 국내보완대책 어업인지원 투자·융자 계획 국회 제출	'23.9월	
	'23년 해양수산 창업콘테스트 결선	'23.9월	국정 73-6
4/4분기	수산정책협의회 개최	'23.11월	
	수산분야 펀드 신규 결성	'23.11월	국정 73-6
	수산 R&D 혁신 및 신규과제 발굴 추진	'23.12월	
	수산정책자금·긴급경영안정자금 공급 및 수산금융 제도 개선방안 마련	'23.12월	
	어촌계 활성화방안 수립	'23.12월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등 정상화 지속 추진	'23.12월	
	'22년 수산업·어촌에 관한 연차보고서 국회 제출	'23.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어업인, 유통·가공 등 수산업 종사자 및 관련 업계

○ (**이해관계집단**) 관련 유관기관, 어업인 및 수산업 단체 등

□ **기대효과**

○ **수산정책**에 대한 어업인 등 현장의 **만족·체감도 제고**

○ 어촌계, 조합 등 **공동체 활성화** 및 **수산분야 유입 증가**

○ **미래전략 수립**으로 **아젠다 주도** 및 **미래 산업생태계 조성**

○ **금융·세제·재정 지원** 등을 통해 **경영안전망 구축**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2	'23
수협경제사업활성화(Ⅱ-4-일반재정①)			
① 수협경제사업활성화(3431)	일반회계	46	35
▪ 수산지도경제사업활성화(301)		46	35
수산산업창업투자(Ⅱ-4-일반재정②)			
① 수산산업창업투자(3432)	일반회계	55	55
▪ 수산산업창업투자지원(300)		55	55
수산금융자금 이차보전(Ⅱ-4-일반재정⑤)			
① 수산금융자금 이차보전(3450)	농특회계	963	1,238
▪ 수산금융자금 이차보전(301)		963	1,238
어업경영자금(기금)(Ⅱ-4-일반재정⑩)/융자사업			
① 어업경영자금지원(3465)	수발기금	270 (426)	270 (426)
▪ 재해등대응 긴급경영안정자금(303)		200	200
▪ 수산모태펀드출자(370)		70	70
직접피해지원(기금)(Ⅱ-4-일반재정⑪)			
① 직접피해지원(3467)	수발기금	29 (29)	27 (27)
▪ 피해보전직불금(300)		20	18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302)		9	9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0	'21	'22	'23			
①수산분야 규제혁신과제 발굴(건) (가중치 : 40%)	신규	신규	신규	38	○ '22년 발굴된 규제혁신과제 36건의 5% 상향된 38건으로 목표치를 설정	이해관계자 및 정책고객과의 소통강화 간담회, 설명회 등에서 발굴된 규제혁신과제 건수	내부결재, 메모보고
② 수산분야 세제 및 금융 지원액(억원) (가중치 : 60%)	41,489	51,678	45,504	47,995	○ 최근 3년간('20~'22) 수산분야 일몰 연장·신규 세제감면액 및 수산정책자금 공급규모의 평균값 대비 5%('22년 평균 물가상승률) 상향한 47,995억원을 목표치로 설정	① 수산분야 일몰 연장 및 신규 세제 감면액(억원) * 국회 확정안을 기준으로 하되, 본회의 의결 지연 시에는 정부안 기준으로 판단 ② 수산정책자금 공급 규모(억원)	세제개편 건의 자료(기재부, 행안부 건의서 공문 등), 협의계획 및 결과, 세법 개정결과, 기재부 예산요구서, 내부결재 및 메모보고자료 등

Ⅳ. 환류 등 관련계획

Ⅳ 환류 등 관련계획

1. 이행상황 점검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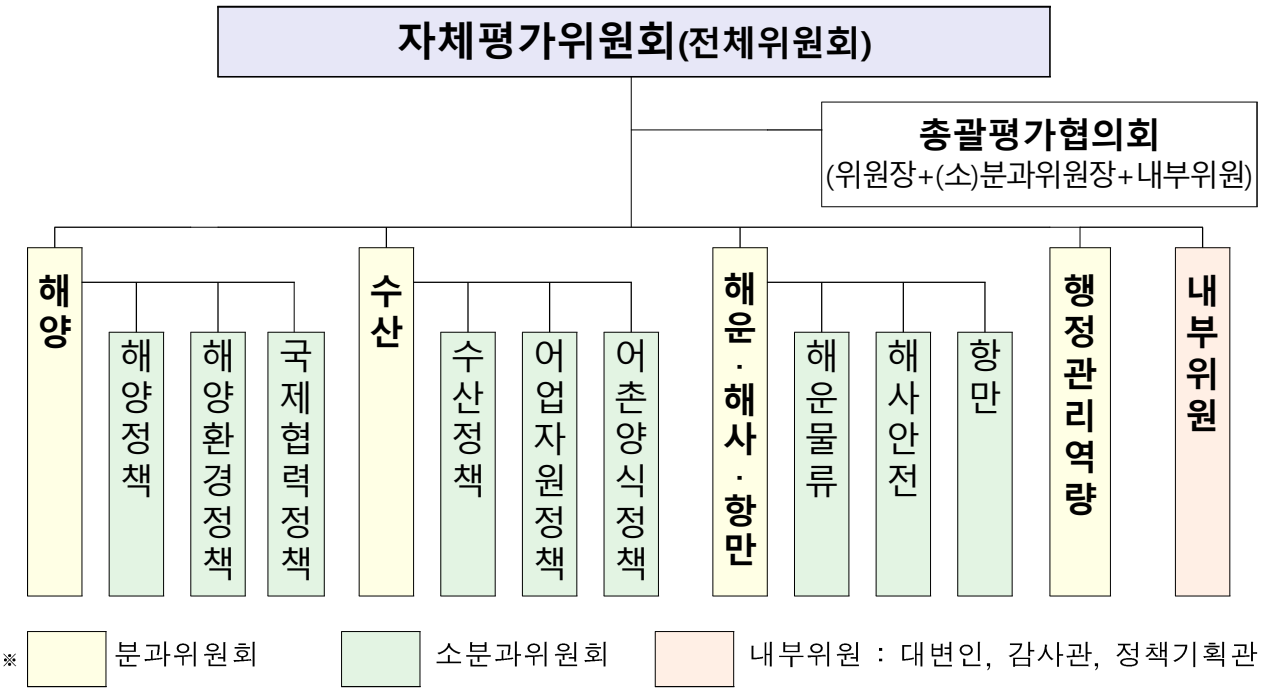
1 자체평가위원회 및 평가조직 구성 및 운영체계

ㅇ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전체위원회**) 성과관리전략계획·성과관리시행계획 · 자체평가계획 **심의**, 자체평가 대상 과제 추진상황 점검, **자체평가결과 심의 · 확정**

- (**분과위원회**) 전문 분야별 분과를 설치하여 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사전검토** 및 분과 소관 **관리과제 평가**

- (**총괄평가협의회**) 위원장, (소)분과위원장 및 내부위원으로 구성, 분과별 **평가결과 조정** 및 자체평가 운영을 위한 **사전 조율** 등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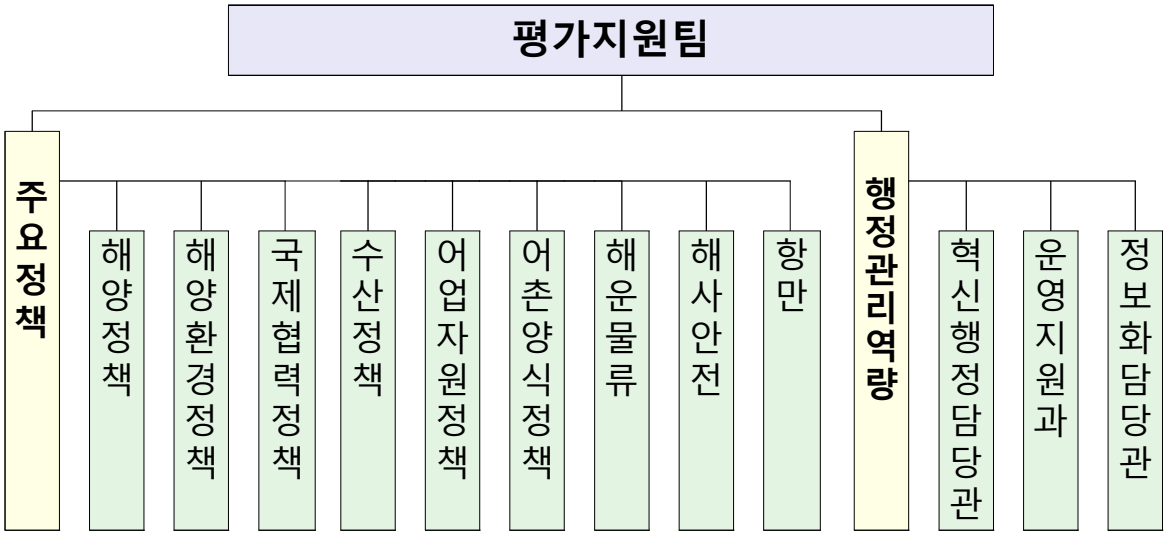
※ 재정사업평가부문은 별도로 구성·운영

○ 평가지원팀 구성 및 운영

- **전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고 자체점검 실시 및 환류 체계 구축 등을 위해 **총괄지원팀과 분과별 지원팀**을 **구성·운영**

- (**지원총괄팀**) 혁신행정담당관을 팀장으로 구성, 자체평가 시행계획 작성, 평가위원회 운영 등 **평가지원팀 총괄 및 추진현황 점검**

- (**분과지원팀**) 국(정책관)별 주무계장을 팀원으로 구성, 평가위원 **정책 현장 방문 및 정책자료 제공** 등 업무지원과 **분기별 자체점검**을 실시



※ 총괄 : 혁신행정담당관
※ 소분과별 지원팀은 각 국(정책관)의 기획 또는 관리계로 구성

2 자체평가 방법 및 일정

○ 평가 방법

- 관리과제별로 **정책 추진과정 전반**을 **점검·평가**하되, **성과지표 달성도·정책효과** 중심으로 **평가**

- 평가 결과를 자체평가위원회 전체회의에 안건 상정하여 심의·의결 후 **최종 결과 확정**

ㅇ **추진실적 점검**

- 자체평가위원회 주관의 과제평가 및 **과제 추진실적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평가위원회에 결과를 제공

ㅇ **평가 결과 공개**

- 해양수산부 자체평가위원회를 통해 확정한 평가결과(안)을 정부업무평가위원회(국조실)에 제출하고, 누리집을 통해 공개

- 관리과제 중 **매우 우수·부진과제** 평가 결과를 **부내 공유**하고, **우수등급**을 받은 관리과제는 **모범사례**로 전파

< 자체평가 주요일정 >

구 분	추진일정	주요 내용
ㅇ '23년도 계획 수립	3월	· **자체평가위원회(전체회의) 개최** * '23년도 자체평가계획 심의·확정
ㅇ 중간점검	7월	· **상반기 추진실적 점검** * 점검결과를 자체평가위원회에 보고
ㅇ 계획 수정(필요시)	하반기	· **자체평가위원회 보고**
ㅇ 평가위원 정책현장 방문	하반기	· **주요정책 추진현황 파악**(분과위)
ㅇ 서면 평가	12월	· **분과위원회 개최** * 추진계획의 충실성, 성과지표의 난이도 등 평가
ㅇ 대면 평가 및 평가결과 최종 확정	'24.1월	· **분과위원회 개최** * 자체평가, 분과별 과제 등급 결정
		· **총괄평가협의회 개최** * 분과별 평가결과 조정
		· **전체회의 개최** * 평가결과 심의·확정
ㅇ '22년 자체평가 운영실태 점검(국무조정실 주관)	'24.2월	·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내실화**

2. 평가결과 환류체계

1 기본원칙

○ 평가 결과는 **정책, 예산, 조직, 인사** 등에 반영하는 등 성과관리를 통해 **평가의 실효성 제고**

○ 평가 결과를 공개하여 **매우 우수과제**는 적극 **홍보**하고, **미흡·부진 과제**는 **제도개선**을 통해 **성과향상**을 **도모**

2 평가 결과의 정책, 예산, 조직 등에의 활용계획

○ **최종 평가 결과**를 예산, 조직담당 부서 등에 통보하여 관련 사업 예산편성, 조직 재설계 등에 **활용**

○ (**주요정책 부문**) 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정책의 연속성 및 정책성과 향상 도모

- 상반기 점검 및 자체점검을 통해 지연과제, 정책효과 미흡과제를 발굴하여 **점검회의** 등을 통해 **추진현황**을 **지속 점검·관리**

- 최종평가 결과 **미흡·부진과제**는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보완 필요사항을 다음연도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명시적으로 **반영·관리**

- **재정사업평가 결과**(미흡사업 성과관리 개선대책 등)를 **주요정책 추진상황 점검**에 **반영**하여 자체평가 부문 간 연계 강화

○ (**조직 부문**) 주요정책 평가 결과 및 조직진단 결과 등을 종합하여 조직개편, 인력증원 및 **중기인력운영계획** 등에 **반영**

- **행정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정책 및 대국민 현장서비스 강화 등 집행 부문에 대해서는 **조직 및 인력 우선확충 추진**

- 특히, 조직 및 인력 부족에 따른 **미흡·부진과제**에 대해서는 조직 차원의 분석을 통해 **인력증원 소요제기** 등 **추진체계 강화**

○ (**행정관리역량 부문**) 전년도 평가 결과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안 제시**를 통해 행정관리 역량 제고

- 특히, 자체평가위원회의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노력과 성과 향상내용을 **지속 점검**하여 정책 환류를 도모하고,

- **타기관**의 행정관리역량 자체평가 **운영 우수사례**를 벤치마킹 하여 자체평가 **운영의 충실성** 제고

3 평가 결과의 개인성과(인사, 포상, 성과급 등) 활용계획

○ **최종평가 결과**를 소관부서에 통보하여 **성과평가 시스템** 등을 통해 **인사, 개인 성과급** 등에 **반영**

○ (**인사 부문**) 승진·보직·직위공모 등 각종 **인사관리 자료**로 활용

- 미흡·부진과제에 대해서는 업무량 대비 인력 배분 적정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전보·승진 등 인사 운영에 반영

- 성과평가 결과를 **근무성적 평정 및 승진심사 참고자료**로 제공하여 성과달성도를 인사관리에 활용

○ (**포상**) 국정과제를 포함한 주요정책과제의 **우수 부서**에 **장관 표창, 포상금** 및 **부서 성과평가 가점** 등을 지급(연말 표창)

* 장관 표창계획에 포함된 주요 정책과제 우수부서 표창 활용

○ (**성과급**) 성과평가 시스템을 통해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포함된 **모든 관리과제**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를 **개인 성과급 지급**에 반영

- 자체평가 결과를 **부서 단위의 평가항목에 반영**(과제평가/40%) 하고, 부서 단위 평가 결과를 **개인 평가**에 **반영***

* 부서장(과·팀장급 이상)은 부서평가를 100%, 부서원(복수직 4급 이하)은 60%

4 평가결과 공유·확산 방안

○ 각 부서의 관리과제 중 매우 **우수·부진과제**를 중심으로 평가 결과를 **부내**에 **공유**

- 평가 결과 매우 우수 관리과제와 지표의 난이도, 정책효과 등에서 **우수등급**을 받은 관리과제를 **모범사례**로 **전파**

- 미흡과제는 미흡 원인의 핵심적인 원인을 분석하여 사례로 전파

3. 변화관리 계획

1 추진배경

□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구성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지속 지원 필요

○ '변화와 혁신'을 기반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업무 생산성 향상, 대국민 소통 활성화 지속 요구 중

<'22년도 변화관리 평가>

○ 전직원 워크숍(9.30, 온·오프라인), 부서 간 협업프로그램('22.11), 정부혁신 소식지 제작(3회) 등을 통해 새로운 조직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해양수산 아카데미(11회), 연구모임(11개) 운영을 통해 직원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등 변화관리 프로그램 계획 목표 달성

○ 자체 조직문화 진단(11.15~11.22.)을 통해 직원들의 조직문화에 대한 기대와 현재 수준에 대한 인식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효과적인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기반 마련

2 추진방안

<'23년도 추진방향>

- ㅇ '22년도 변화관리 계획을 바탕으로 기존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되, 업무 프로세스와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조직 구성원의 역량을 길러 조직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신규 프로그램 발굴 추진
- ㅇ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운영되었던 프로그램들을 특성에 따라 대면·집합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탄력적 운영 필요

1 해양수산 업무 프로세스 개선

<일하는 방식 효율화>

ㅇ (**단순·반복업무 RPA***) 자동화 필요 업무 **수요 파악**을 통해 단순·반복 업무의 비중 감소, **자동화 대상 업무 지속 발굴 추진**

* Robotic Process Automation : 사전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사람이 하는 작업을 모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소프트웨어 로봇, 단순·반복적 업무를 알고리즘에 따라 자동처리

- (**과제발굴**) 범정부 RPA 활성화 계획('22.2월) 적극 이행 및 **과제발굴 공모전**(행안부)에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

ㅇ (**데이터 기반 행정**) **ICT 기반 디지털 기술**을 **행정서비스**에 **접목**시켜 대국민 서비스와 정책 결정 과정의 **효율성 제고**

- (**ICT 기반 업무혁신**)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효율적·선제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ICT 기반 업무 효율화 추진

- (**공공 빅데이터 활용**) 공공 데이터 활용·분석을 통한 민원해결, 사회현안 해결, 주요 정책수립 및 의사결정의 근거 마련

ㅇ (**비대면 행정활성화**) 전직원의 이용률 제고를 위해 **공지사항** 등을 **자체 운영 포탈**(바다넷)에 게시하고, 이용현황에 대해 **정기 점검**(분기)

- **'성과평가 계획' 반영***을 통해 영상회의, 모바일 결재 **활용 실적 평가**

* 부서별 달성 목표를 부여하고 부서별 인원 대비 사용 비율에 따라 차등 점수 부여

<국민 참여성과 정책화>

○ (**민관 소통 강화**) 자문위원회별 소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자문 방식·위원 구성을 다양화하여 현안 발생에 적극 대응

- (**소위원회 활성화**) 분과별 소위원회에서 현안과제(반기별 1개 이상)를 **심층 논의**하고 **본위원회**에서 **총괄 검토**하는 방식으로 확대 운영

- (**다양성 확보**) **비대면**(이메일, 메신저 등) **자문방식**을 대면토론과 병행하고, 자문위원으로 **젊은(20~30대) 인재·현장전문가**를 **포함**

○ (**국민참여제도 활성화**) 해양수산 전분야에 **다양한 국민 참여제도**를 **확대 운영**하여, 정책 서비스 개선과 **국민 체감도 향상 도모**

- 국민의 좋은 **아이디어는 채택**하여 정책으로 만들고, 국민과 **다양한 소통** 및 국민이 정책을 **직접 설계·기획**할 수 있는 **창구 활용**

- 정책의 품질 제고를 위해 **국민이 정책집행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국민 입장에서 **정책을 진단**하고, **개선의견**이 있는 경우 **적극 반영**

-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 현장에 대한 **평가**는 **국민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 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

2 조직문화 개선

<조직 내부 소통·협력 확대>

○ (**소통창구 개설**) 부내 혁신 아이디어 공유, 일하는 방식 및 업무환경 개선점 논의 등을 위한 직원들과의 **SNS 소통창구 개설**('23.3)

○ (**조직문화 진단**) 직원대상 설문조사(연 1회)를 통해 조직문화를 분석하고,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추가 프로그램 개발·운영

○ (**전 직원 워크숍**) 본부·소속기관 등 직원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화합의 장 마련(연 1회)

○ (**부서 간 협업 워크숍**) 혁신 아이디어 발굴, 타 부서의 정책 이해도 제고, 정책 개선방향 토론, 팀웍 빌딩 등 문제해결 능력을 강화하고 소통·화합 위한 기회 제공(부서별 2인 이상 참여)

<MZ세대 중심 조직문화 혁신>

○ (**일하는 방식**) 팀원 간 수시 모임(온·오프라인)을 통해 정부의 업무처리 방식 중 변화가 필요한 아이디어 발굴 및 실행 방안 제안

* 근무경력 10년 이하, MZ세대 직원 17명으로 정부혁신 어벤져스 구성·운영(3월~)

- '23년 정부의 일하는 방식 개선 추진 방향에 따라 우리 부에 적용 가능한 일하는 방식 개선 과제 적극 발굴

○ (**현장소통**) **특정 분야를 중심**으로 멤버를 그룹화(4~5인)하여 **권역별 현장방문**을 통한 **정책 이해도 제고 및 소통 역량 강화**

* 정책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해양수산 분야 전문가·청년기업·사회적기업과 공감대를 형성 및 소통·협력 추진

○ (**주니어보드 교류**) **타 부처, 산하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주니어 보드**와의 **교류**를 통한 **정책과제** 및 **조직문화 개선 과제 공유·발굴**

* 연합 워크숍, 각 기관·기업 교류 방문 등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협업을 통한 다양한 과제 발굴 추진

<협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 (**협업문화**) **협업수준 진단**(행안부)을 통해 우리 부 협업 **증진요인** 및 **방해요인**을 분석하여 협업 활성화를 위해 **개선방안** 도출

- 직원들이 조직 내 및 타 기관과의 원활한 협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소통·협업 프로그램**을 **운영**

* 내부 직원 간 소통·협업 프로그램 운영(상반기), 부처 간 협업 아카데미 운영(하반기), 협업 우수사례 창출 민간기관 등 방문(하반기)

○ (**협업시스템**) 협업 상대방을 찾고, 이음이 성사될 수 있도록 '**협업 이음터**'를 적극 활용하고, 협업의 어려움은 '**협업 SOS**' **우선 활용**

- 협업이음터 활용 교육, 협업이음터 홍보(누리집 등), 부서별 **협업이음 현황**(협업이음터 활용, 협업 SOS 해결 등)을 **점검**(분기)하여 **성과평가 반영**

* 협업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전문가 초청 강연회 개최(상반기)

○ (**협업과제**) 기관관리 **주관 협업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이행**

- 온나라 협업블로그를 통해 협업과제를 등록·관리하고, 주기적으로 추진실적을 점검

○ (**인센티브**) **협업 잘하는 개인·부서**에 대해 **인센티브 제공**

- 협업인재에 대해 **성과평가 점수 부여**, 부서에 대해 **성과평가 가점** 부여

<**적극행정 활성화 및 소극행정 예방**>

○ (**기관장 선도**) 모니터링단·적극행정위원회 자문을 거쳐 **주요 성과**를 **선정**하고 **추진상황 관리**, 해양수산 아카데미, 정부혁신 어벤져스, 바다스터디 등 **직원역량 및 소통 강화**

○ (**우수공무원 선발**)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6, 10월)하여 우수공무원을 선발(반기별, 총 42명)하고 포상 및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 (**보호·지원**)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제도, 소송지원** 등으로 개인부담 최소화, **지원제도**(위원회, 사전컨설팅) 운영으로 적극행정 추진 지원

○ (**소극행정 예방**) 소극행정 사전예방 및 근절을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현장점검·특별점검 등을 통해 **소극행정 점검 강화**

○ (**소통·홍보**) 국민참여 **모니터링단** 운영, 온·오프라인 **우수사례 홍보**, 심화교육 추진, 국민신청·추천제 등을 통해 참여·소통 활성화

* 온라인(누리집, SNS, 적극행정 온(ON)), 오프라인(전시회, 게시판) 등

3 직원 역량 강화

<혁신교육 확대운영 및 다양한 학습 환경 조성>

○ (**혁신 교육**) 혁신 우수사례 벤치마킹, 디지털 소통 향상, 적극행정 등 분야별 전문가 초청 강연회(월1회) 및 온라인 디지털 학습 콘텐츠 운영

* 코로나19 상황으로 실시간 유튜브 강연을 적극 활용하고, 직원 재능기부로 강사단 위촉

○ (**정책현장 체험**) 직원들이 현장을 제대로 알고 정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정부혁신 어벤져스 등 현장체험 및 현장과 소통하는 기회 제공

○ (**소통활동**) 직원 혁신워크숍, 부서 간 협업 워크숍 및 장관님과 직원 간 소통 위한 온·오프라인(Zoom 등) 행사 개최(연 2회)

○ (**경진대회**) 정부혁신, 적극행정 등 업무 성과 창출 독려 및 우수사례를 발굴·홍보하기 위한 자체 경진대회 개최(상·하반기)

○ (**개인학습**) 멀티미디어 지식 콘텐츠*, 나라배움터** 등을 활용하여 직원 **개인별 직무** 및 **변화관리 학습기회 확대**

* (지해로) '23년 서비스 제공업체 제작 콘텐츠(리더십, 4차 산업혁명, 인문교양, 글로벌 이슈 등) 및 우리부 특화 콘텐츠 제공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나라배움터 사회적가치 등 개설·운영 중

<혁신 인센티브 제공>

○ (**혁신우수공무원**) **협업**, **정부혁신**, 적극행정 등 혁신 성과를 거둔 공무원(부서)을 선발하여 **장관 표창·포상금** 등 **인센티브** 부여

* 분야별 성과를 창출한 우수공무원에게 포상휴가 부여(2~3일)

○ (**연구모임 지원**) 자발적으로 혁신 연구모임을 구성토록 독려하고, 모임에 대해서는 운영 경비(강사료·도서구입비 등) 지원(15개 내외)

○ (**혁신 아이디어 포상**) 혁신 아이디어 발굴 이벤트를 진행, 참여자 중에서 **우수한 아이디어**를 제출한 경우, **모바일 상품권 제공**

○ (**가점 부여**) 협업 우수 부서(장관 가점), 혁신활동 조직 참여 부서(1점),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입상 부서(0.1점) 등 **성과평가 가점 부여**

4 성과 모니터링 및 홍보 강화

<성과 모니터링>

○ (**키워드분석**) 우리부 관련 온라인 기사, 댓글 등을 분석하여 우리부에 대한 국민의 평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실시

* 주요 홍보 이슈 분석 및 대응방안 등 정책기획홍보TF회의 등을 통해 지속 관리

○ (**데이터분석**)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제기된 사항에 대해 **빅데이터 분석*을 거쳐** 국민이 **불편해하는 사항**을 진단, **조치방안 검토**

* 빅데이터로 보는 국민의 소리(국민권익위원회), 온나라 '혜안'(국가정보자원관리원)

- (**중장기전략**) 키워드분석 결과 등과 연계하여 중장기 관점의 우리부 **변화관리 전략 수립**에 적극 활용

<성과 확산 및 홍보>

○ (**디지털 소통**) 혁신과제에 대한 카드뉴스, 썸네일(대표이미지), 동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 등으로 **제작, SNS**를 **활용 국민에게 집중적**으로 **홍보**

- **혁신24 홈페이지**에 관련 홍보자료를 **동시**에 **게시**하도록 독려하고, 정부혁신 어벤져스 중심으로 유튜버 선발 및 혁신활동 수행

○ (**보도·인터뷰·기고**) **국민체감도 향상**을 위해 **방송, 인터뷰** 등 언론을 통한 홍보 추진

○ (**현장중심 홍보**) 정부혁신 주요과제와 관련 있는 **박람회** 및 **전시회** 시, **정부혁신 키워드** 또는 **이미지** 등 **표출**(포스터, 현수막, 배너, 리플릿 등)

- 정부혁신 주요과제 관련 **장관님 등 간부급의 현장방문, 기념행사, 포럼, 세미나** 시, **정부혁신 성과**도 **함께 홍보** 추진

○ (**홍보 인센티브**) 부서 및 소속기관별 **정부혁신과제 홍보실적**을 **성과평가**(부서평가)에 **반영**하고, 홍보 방식별 점수를 차등 부여

4. 현장의견의 정책반영 계획

□ 과제별 현장의견 반영계획

○ (**대상과제**) **모든 관리과제**가 대상이며, 과제담당부서는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반영·개선** 등 **활용방안**을 마련토록 함

○ (**의견수렴 방법**) 해당 정책의 영향력이 미치는 시기, 정책수요자, 지역적 범위 등을 고려하여 과제별로 가장 적합한 방식을 선정

○ (**정책반영·환류**) **의견수렴 활동** 및 **반영 노력**을 **평가**

□ 평가시 현장의견 반영계획

○ 자체평가위원의 객관적인 현장의견 수렴을 위하여 **정책현장방문**계획을 수립하고, **현장방문**을 **추진**

* 정책현장방문 계획(2분기)을 수립(실·국 및 자문위 협의)하고 3~4분기 현장 방문 추진

[붙 임]

붙임 1 **성과지표 현황**

1. 총괄현황

(단위: 개)

구 분		성과지표						
		소계	정량화		지표성격			
			정량	정성	투입	과정	산출	결과
전략목표	4	5	5	0	0	0	2	3
성과목표	15	15	15	0	0	0	11	4
관리과제	53	96	66	30	1	24	58	15

2. 전략목표별 성과지표 현황

전략목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7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전략목표 Ⅰ. 세계를 선도하는 해운물류강국으로 도약한다.	원양 선복량 (만TEU)	연도별 원양 컨테이너 선사 선복량	130	정량	결과	
전략목표 Ⅱ. 안전하고 국민 친화적인 해양·항만을 조성한다.	해양사고 인명 피해(사망·실종, 명)	해양안전심판원 통계	93	정량	결과	
전략목표 Ⅲ. 경제활력을 높이고, 국민행복을 키우는 해양공간을 구축한다.	극지 및 대양탐사 진척도(%)	①실제 조사 정점 수 /조사 목표 정점 수(%)	100	정량	산출	
	극지 및 대양연구 분야 논문발행 수(건)	②극지 및 대양분야 연구 논문 발행건수 집계	60	정량	산출	
전략목표 Ⅳ. 경쟁력있는 수산업을 육성하고 활력넘치는 어촌을 조성한다.	수산물 수출액(억불)	관세청 수출통계	45	정량	결과	

3.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현황

성과목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3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전략목표 Ⅰ. 세계를 선도하는 해운물류강국으로 도약한다.						
1. 국적 선대 확충 및 선화주 상생을 통해 안정적인 해상 수송망을 구축한다.	①정책금융기관의 지원실적(백억원)	국적 해운선사의 선박 발주, 터미널 확보 등에 대한 정책금융기관의 금융지원 실적	110	정량	산출	
2. 스마트기술 융합을 통한 물류서비스 고도화하고 항만경쟁력을 제고한다.	①부산항 컨테이너 부두별 하역능력 합산(만TEU)	부산항 컨테이너부두 하역능력	2,303	정량	결과	
3. 디지털 해상교통망을 구축하고 친환경 선박시장을 주도한다.	①공공선박 친환경선박 전환 실적	국가예산 투입 선박 건조·개조 이행현황	23	정량	산출	
4. 해운강국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해상물류인력을 양성한다.	①국적 해기사 양성 및 취업 연계	외국인 선원 대체고용 지원 실적 및 미취업·비전공자 대상 교육양성 인원	370	정량	산출	
전략목표 Ⅱ. 안전하고 국민 친화적인 해양·항만을 조성한다.						
1. 연안·항만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한다.	①신규 재개발사업 추진	항만재개발 사업 직접 공모 또는 제3자 제안 공모 공고문, 기본구상안	1	정량	산출	
2. 재해·기후위기에 안전한 연안·항만을 조성한다.	①재해대응 안전항만 구축 추진율	(실적공정률 / 계획공정률) X 100	95	정량	산출	
3. 해상사고 사전 예방을 통해 국민안전을 확보한다.	①해양사고 발생 건수	3년간('20~'22년) 평균 해양사고 발생건수(2,913건)를 기준으로 매년 2%씩 감축	2,855	정량	결과	
전략목표 Ⅲ. 경제활력을 높이고, 국민행복을 키우는 해양공간을 구축한다.						
1. 해양선도경제를 조성하고 해양영토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①해양신산업 상용화 기반 구축율	(차세대 선박해양 플랜트 산업 인프라 구축율 +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노력도 + 친환경선박 보급 기반 마련율) ÷ 3 × 100	100	정량	산출	
2. 국민 행복을 위해 해양레저관광·해양문화 강국으로 도약한다.	①국민 해양레저관광 체험률	5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약3천여명)으로 해양레저관광(지역축제, 해양레저스포츠, 마리나, 해안가 캠핑) 체험율을 측정	17	정량	결과	22년도 10.4 미달로 23년도에 22년도 목표 재설정
3.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해양 경제영토 확장 및 관리역량을 강화한다.	①해양영토 관련 학술연구 성과	'23년 지원 사업을 통해 발표한 해양영토 관련 국제학술논문 건수	9	정량	결과	

성과목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3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4. 해양환경 위해요소에 대한 안전망 구축 및 해양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여 지속가능한 해양이용기반을 마련한다.	①해양수질 개선율	(WQI 1등급 정점 수) ÷ (전체 연안 해역 조사정점 수) × 100%	47	정량	산출	
전략목표 Ⅳ. 경쟁력있는 수산업을 육성하고 활력넘치는 어촌을 조성한다.						
1. 어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어업인의 경영여건을 개선한다.	①귀어귀촌 정책자금 수혜자 수(명)	귀어 창업·주택 자금 지원 대상 선정자 수	727	정량	산출	
2. 수산자원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어업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①수산자원 직접 조사 정점 수 목표 달성율(%)	'23년도 수산자원 직접조사 정점수 / 수산자원 직접조사 목표 정점수 500개] × 100%	100	정량	산출	
3. 친환경·스마트양식업으로 전환하여 지속가능한 양식생산 환경을 조성한다.	①양식 생산량(천톤)	KMI 관측 자료 또는 통계청 통계	2,274	정량	산출	
4. 신선수산물 유통·소비체계를 구축하고, 식품산업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한다.	①수산식품산업 인프라 구축률(%)	(연도별 예산 누적 투자액(국비)/총사업비) × 100	19.7	정량	산출	

4. 관리과제별 성과지표 현황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3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전략목표 Ⅰ. 세계를 선도하는 해운물류강국으로 도약한다.							
1. 국적 선대 확충 및 선화주 상생을 통해 안정적인 해상 수송망을 구축한다.							
	①저시황기 국적선사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	①중소선사 경영안정 프로그램 추진율(%)	{(중소선사 대출이자 지원사업 '23년실적이 22년실적보다 높으면 1, 낮으면 0 x 0.5) + (S&LB 지원사업 : '23년실적이 22년실적보다 높으면 1, 낮으면 0 x 0.5)} ×100	100	정성	산출	
		②선박투자 활성화 방안 추진율(%)	{(민간선박투자 활성화 방안 수립×0.5) + (정책펀드 조성 추진×0.5)}×100	100	정성	산출	
	②국적선사-수출입기업 간 상생 촉진	①수출입 물류지원 추진율(%)	{(중소화주·농수산물 전용선적공간×0.5)+ (장기운송 제공×0.5)} × 100	100	정성	산출	
		②선·화주 상생 추진율(%)	{(우수 선화주기업 선정×0.5)+(우수 선화주기업인증 제도개선×0.5)} × 100	100	정성	산출	
2. 스마트기술 융합을 통한 물류서비스 고도화하고 항만경쟁력을 제고한다.							
	①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및 규제개선	①자율운항선박 요소기술 시험평가 및 시제품 제작(건)	측정산식 : 시험평가 실적(건) 및 시제품 제작 실적(건) * 기본설계-상세설계-제작-성능시험-인증	8	정량	산출	
		②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달성도(%)	법률 국회 통과 시 100% 달성	100	정성	결과	
	②한국형 스마트항만 구축과 물류거점 항만개발로 항만 경쟁력 강화	①항만물류 인프라 적기 확충 및 스마트항만 도입 추진율(%)	ⓐ신항만 인프라 확충률(50%) - (달성목표) 12개 신항만 인프라 확충률 4.4% 증가('22 : 18.2% → '23 : 22.6%) · 신항만인프라 확충률(%) = 신항만인프라 투자(누적) / 신항만기본계획상 필요투자(16.1조원)('19~'40) × 100 * '22년 인프라 확충 증가율(4.2%) 감안 4.4% 증가 설정	100	정량	과정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3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스마트항만 도입 및 산업 육성 추진율(50%) - 스마트항만 기술산업 육성전략 수립(30%),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발주(20%)				
	③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고부가가치 항만 실현	①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고부가가치 항만 실현 추진율(%)	ⓐ탄소중립 항만구축 기본계획 수요조사 및 중간보고(50%)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수립용역 착수(50%)	100	정성	과정	
	④해외 물류거점 확보 등 진출 지원 강화	①해외물류시장 신규 진출건수 (건) (계획포함)	해외 물류시장 신규 진출 건수 (계획포함)	10	정량	산출	
	⑤'컨' 항만 경쟁력 및 경제적 가치 제고	①주요 항만 '컨' 물동량(1~11월) (만TEU)	항만 물동량 통계 시스템(port-mis) 확인	2,513	정량	산출	
		②민간투자유치 실적(억원)	항만배후단지 입주 기업 공모 시 제출한 기업의 투자계획 확인	4,000	정량	산출	
	⑥민간참여를 통한 항만 고부가가치 창출 및 해외협력 기반마련	①항만 민자사업 추진율(%)	ⓐ신규 민자사업 추진(50%) -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1건) - 사업시행자지정(1건) * 측정방법 : (실적건수/목표건수) × 100% ⓑ 운영중인 민자사업 관리 (50%) - 민자부두 현장점검(2회) - 비관리청 청렴교육(1회), 간담회 개최(1회) * 측정방법 : (실적횟수/목표횟수) × 100%	100	정성	과정	
		②해외항만개발협력 지원체계 구축 추진율(%)	ⓐ 해외항만개발 협력사업 (타당성조사 등) 추진 (40%)(4건) * 측정방법 : (실적건수/목표건수) × 100% ⓑ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소통 추진(60%)(4건) -항만관계관초청연수, ESCAP세미나, 지원 협의체회의개최 등 * 측정방법 : (실적건수/목표건수) × 100%	100	정성	과정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3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⑦항만 서비스의 품질제고 및 항만운영의 안정성 확보	①항만서비스 효율화를 위한 제도 개선율(%)	ⓐ친환경 선박연료산업 활성화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안 발의 실적(50%) ⓑR&D과제 연구추진율(50%)	100	정성	결과	
		②항만안전투자율 및 항만보안시설 확충률(%)	ⓐ민간사업자 안전투자율 (민간사업자 재해예방시설 투자액/목표액(23억원)×100, 50%) ⓑ항만보안시설 확충률 (항만보안 강화 재정 투자액/목표액(70억)×100, 50%)	100	정성	산출	
3. 디지털 해상교통망을 구축하고 친환경 선박시장을 주도한다.							
	①디지털 해상교통정보 (바다내비) 제공 및 신산업 육성	①디지털 해상교통정보 제공 및 저변확대(%)	ⓐ신규 바다내비 이용자(척) 수 3,000척 이상(50%) ⓑ신규 서비스 개발 및 시범사업(2건이상) 추진율(50%)	100	정량	결과	
		②디지털 해상교통정보 신산업 육성 추진율(%)	ⓐ해상교통정보 산업육성 지원책 마련 (민·관 협의체 구성, 산업육성 추진계획 수립 60%) ⓑ국제 디지털항로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차세대 선박항해장비, 통합 플랫폼, 테스트베드 구축 설계서 각 1건, 4%)	100	정성	과정	
	②차세대 해양 위치정보(PNT) 및 디지털 안전정보 서비스 제공	①고품질 해상활동 지원 인프라 구축율(%)	ⓐ해양 PNT 위치정확도 (≤10cm) 전국망 실증(60%) [(목표정확도/실증값)×100]×60% ⓑeLoran 광주송신국 개량 완료(40%)	100	정량	산출	
		②스마트 항로표지 기반시설 구축율 및 해로드 앱 활성화(%)	ⓐ연구개발 성능시험 테스트베드 구축(70%) ⓑ[구조기관간 실증훈련 횟수 / 실증훈련 목표 횟수]×100 (30%)	100	정량	산출	
	③그린 쉬핑(Green Shipping) 생태계 기반 확충	①친환경선박 전환 및 신기술 상용화 기반 마련율(%)	ⓐ공공·민간선박 친환경 전환 척수(37척)(50%), ⓑ해상실증용 선박 (Test-bed)운영(1척)(50%)	100	정성	과정	
		②국제협력 및 온실가스 감축규제 대응 추진율(%)	ⓐ한-미 녹색해운항로 구축 사전타당성조사 수행 및 결과 발표(1회)(50%), ⓑ규제이행 컨설팅 및 보조금 지원 척수(100척) (50%)	100	정량	산출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3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4. 해운강국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해상물류인력을 양성한다.							
	①양질의 국적선원 일자리 창출	①해기인력 양성 및 취업목표 달성율 (%)	ⓐ해사고 목표 취업률(80%) 대비 달성율(50%) ⓑ오션폴리텍 목표 취업률(80%) 대비 달성율(50%)	100	정량	결과	
		②해기사 글로벌 역량강화 및 승선실습 제도개선 추진율(%)	ⓐIMO 표준해사영어 온라인 강의 플랫폼 구축 및 업로드(50%) ②선사 승선실습생의 안전 확보와 체계적인 교육 제공(현장승선실습 운영 지침 개정(50%)	100	정량	과정	
	②두터운 선원복지 제공	①선원근로여건 개선 추진율 (%)	ⓐ임금체불 예방 특별근로 감독(40%, 2회) ⓑ외국인 선원 근로실태조사 및 이행 점검(60%, 6회)	100	정성	과정	
		②선원복지 증진사업 추진율(%)	ⓐ해양원격의료 지원 시범사업 대상선박 확대 달성율(50%, 160척) ⓑ선원복지고용센터 충남 지역사무소 운영 개시(50%)	100	정성	과정	
전략목표 Ⅱ. 안전하고 국민 친화적인 해양·항만을 조성한다.							
1. 연안·항만 재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한다.							
	①항만 및 연안공간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기반 조성	① 항만재개발 추진율(%)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계획(안) 마련(50%) ⓑ광양항 3단계 항만재개발 사업계획 변경 수립 및 공사 착공(50%)	100	정량	산출	
		②연안침식관리강화 추진율(%)	ⓐ연안정비사업 추진율(50%) $=\frac{(\text{집행누계금액}/\text{총사업비})\times 100}{\text{'23년 목표치}(18\%)}$ ⓑ국민안심해안 후보지 선정(50%) $=\frac{\text{후보지선정개소}}{\text{목표개소}(20\text{개소})}\times 100$	100	정량	산출	
	②부산항 북항 글로벌 경쟁력 강화	①북항재개발 추진율(%)	ⓐ부산북항 1단계 사업계획 변경(10차), 기반시설 준공 및 시민행사, 총사업비(1단계) 정산용역 준공 업무처리(40%) ⓑ부산북항 2단계 조기착공 T/F 운영, BIE 실사 지원, 관광지도 제작 및 사진공모전 개최(60%)	100	정량	산출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3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2. 재해·기후위기에 안전한 연안·항만을 조성한다.							
	①기후변화 대비 등을 위한 안전항만 구축 추진	①기후변화 대비 재해안전항만 강화 추진율(%)	ⓐ재해안전항만 중장기 보강계획 수립 및 항만기본계획 변경(70%) ⓑ항만분야 중대재해 예방 추진 (30%)	100	정성	투입	
3. 해상사고 사전 예방을 통해 국민안전을 확보한다.							
	①국가 해양수산 재난관리체계 선진화	①국가 해양수산 재난관리체계 선진화 추진율(%)	ⓐ재난 예방·대비 추진(50%) -실적/계획(16) X 100% * 계획 8건, 대응훈련 1회, 상황전파훈련 4회, 합동점검 3회 ⓑ재난매뉴얼 현장 작동성 강화(50%) - 실적/ 계획(41) X 100% * 해양 선박사고 표준·실무·행동 25개, 풍수해 실무·행동 매뉴얼 16개	100	정량	결과	
		②해양수산분야 중대재해 예방활동 이행율(%)	ⓐ유해·위험요인 개선(50%) -대책이행 건수 / 대책수립 건수 X 100% ⓑ안전보건확보 추진 및 민간지원(50%) -이행건수/추진과제건수(41) X100%	100	정량	결과	
	②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범정부 해사안전대책 시행	①국적선 1천척당 해양사고 피해지수 저감(점)	[3년평균 1천척당 사망·실종자 + 3년평균 1천척당 주요사고* 건수] x 0.90	37.8	정량	결과	
	③연근해어선 안전관리 체계화	①어선 위치 확인 안전설비 보급율(%)	안전설비 설치 완료 척수/안전설비 보급 대상 척수×100	75.6	정량	산출	
		②연근해어선 중대사고 사고율(%)	당해연도 주요 어선사고 건수/국내 등록 연근해어선 수 ×100	1.27	정량	산출	
전략목표 Ⅲ. 경제활력을 높이고, 국민행복을 키우는 해양공간을 구축한다.							
1. 해양 신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여 해양선도 경제를 조성한다.							
	①해양에너지, 해양플랜트 등 해양과학 新산업 육성	①해양에너지 실증시설 추진율(%)	파력발전 실해역 시험장 이용건수, 해양그린수소 실증시스템 육상성능평가 완료, 1MW급 조류발전기 시운전완료	100	정성	과정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3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②차세대 선박과 해양플랜트산업 육성기반 구축율(%)	차세대선박구축공정율,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발전기반 구축율	100	정량	산출	
	②해양신산업 전략적 육성을 위한 해양바이오산업 기반 구축	①해양수산생명자원 주권 강화율(%)	ⓐ확증표본 750종 +미확보종 35종 확보(50%) ⓑ소재 효능 950종 등급화(50%)	100	정량	과정	
		②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노력도(%)	ⓐ해양바이오뱅크 분양 건수 290건(50%) ⓑ해양바이오 전문인력 양성 30명(50%)	100	정성	과정	
	③해양산업 창업·투자 생태계 조성	①해양수산 분야 창업·투자지원 업체 수(개소)	지원업체 수	254	정량	산출	
		②투자유치액(억원)	지원업체의 투자 유치금액 합계	372	정량	산출	
2. 국민 행복을 위해 해양레저관광·해양문화 강국으로 도약한다.							
	①권역별 해양관광명소 조성 및 해양관광 콘텐츠 확산	①해양레저관광 수요창출 노력도	ⓐ국내항에 입항한 크루즈 입항 목표 항차(119항차) 달성률(%)(50%) ⓑ해양관광 증대 행사실적(연 2회 개최)(50%)	100	정량	산출	
		②해양레저관광 기반 조성 추진율(%)	(총사업비 누계 집행실적/총사업비)× 100	60	정량	산출	
	②해양교육문화 콘텐츠 확충 및 향유기회 확대	①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제도 강화율(%)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기반 강화를 위한 중점 정책 추진 등	100	정성	과정	
		②해양문화시설 인프라구축 및 운영 효율화(%)	운영 효율화에 따른 박물관·과학관 목표 관람객수 및 관람 만족도 측정	100	정성	산출	
3.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해양 경제영토 확장 및 관리역량을 강화한다.							
	①무인도서의 체계적·효율적 관리 강화	① 무인도서 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율(%)	종합정보시스템의 기능개선 등 계획수립(30%) + 기능개선 3건(40%) + 무인도서관련 홍보 12건(30%)	100	정량	산출	
		② 무인도서 관리기반 구축 추진율(%)	무인도서법 개정안 국회 추진(25%) +무인도서법 하위법령안 마련(25%) + 영해기점 도서에 대한 통합 (50%)	100	정량	산출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3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②해양영토의 과학적 관리기반 확충	① 해양조사 인프라구축률(%)	동해해양과학기지 설계(기본(30%)+실시(30%))+이안류 감시체계 10개소 운영(40%)	100	정량	산출	
		② 독도탐방사업 만족도(점)	독도탐방사업 만족도 - 참여자 대상 만족도 조사	90.5	정량	결과	
	③극지진출 및 대양연구 기반 구축	①극지 및 대양 진출 역량 강화율(%)	(정책기반구축율+연구역량 강화율+국제협력확대율)/3	100	정성	과정	
	④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산분야 통상협상 대응	① 규범 협상 대응 전략 마련 및 협상 대응	주요 쟁점에 대한 제안서 제출 또는 발언 건수 /WTO 및 IPEF 회의 참석건수* * 단, 회의 1회당 실적은 1건 까지만 인정	100%	정량	산출	
		②주요 FTA 상대국의 수산물 개방요구에 대한 우리나라의 불수용률(%)	(우리측 미개방 품목수 / 우리측 시장개방 대상 품목수)×100	35.5	정량	산출	
	⑤해양수산 ODA 확대 및 양자협력 증진	① 해양수산 신규 ODA 추진건수(건)	다음해 예산안에 신규로 포함된 ODA 추진 건수	17	정량	산출	
		② 한-미 국제어업 정례협의회 활성화	협의회 대면회의 개최 건수	1 (대면)	정량	산출	
	⑥해외 수산자원 확보를 위한 국제협상력 강화	① 주요 국제수산기구 회의 대응 및 제안서 제출 비율(%)	제안서 제출건수 / 11 × 100 * 단, 우리부 단독/주도 제안은 1건, 타국 주도 공동제안 참여는 0.5건으로 산정	100	정량	산출	
		② 국제협상 전문가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실무참여(%)	ⓐ협상 전문가 대상 필수교육** 실시(50%) * 교육이수 인원 / 전체인원 × 100 ⓑ협상 전문가의 주요 국제수산기구 회의 참여(50%) * 협상 전문가 참여 회의 / 11개 주요 국제수산기구 회의 ×100	100	정량	산출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3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4. 해양환경 위해요소에 대한 안전망 구축 및 해양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여 지속 가능한 해양이용기반을 마련한다.							
	①해양쓰레기 전(全)주기 대응 및 보전·개발이 조화로운 해양 관리 강화	①해양쓰레기 수거량(톤)	당해 연도 해양쓰레기 수거량	117,881	정량	산출	
		②해양환경성 검토 제도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특허 출원등록 건수/목표건수(8건) ×70% ⓑ간담회 건수/ 목표 건수(3건) ×30%	100	정성	산출	
	②지속 가능한 해양환경관리체계 마련	①지속가능한 해양환경을 위한 인식 증진 노력	ⓐ해양환경교육 이수 인원 달성률(이수인원/목표인원(80,769명)) ×50% ⓑ(해양환경교육 전·후 인식 변화율/목표 변화율(5%)) × 50%	100	정량	산출	
		②해양수산 온실가스 감축 기반 강화 노력	ⓐ산정 항목 확충 목표 달성도 ×70% ⓑ(설명회 개최 건수(4건)/목표건수(4건)) ×30%	100	정량	산출	
	③개발과 보전의 상생 및 공존을 위한 해양공간관리 체계화	①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관리기반 구축을 위한 제도 정비 및 공간정보체계 고도화	ⓐ(실태조사완료(1건)+재자연화 계획 수립(1건)+맞춤형 업무서비스 개발(1건))/목표건수(3건)×50% ⓑ(빅데이터 통합창구 구축(1건)+예측기술 분석 보고서 마련(1건))/목표건수(2건)×50%	100	정성	과정	
		②해양공간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국민 등 이해관계자 소통 및 협업 활성화	ⓐ(협의회·자문회 개최건수(7건)/목표건수(7건))×50% ⓑ(토론회·설명회 개최건수(2건)/목표건수(2건))×25% ⓒ(협의체 구성 (1건)+개최건수(2건))/목표건수(3건)×25%	100	정성	과정	
	④해양자산 관리 강화 및 해양생태계 보전	①해양생태계 보전사업 달성도(%)	·법정관리종(해양보호생물, 유해종, 교란종) 및 법정관리기관(서식지외보전기관, 구조치료기관) 지정·해제 건수 - 법정관리종 지정 1건(50%) - 법정관리기관 지정 2건50%	100	정성	과정	
		②해양보호구역 지정 개소수(개소)	∑(연도별 해양보호구역 지정 또는 확대 개소수)	36	정량	산출	
	⑤국민이 행복한 청정·안심 해양환경 안전망 구축	①해양방사성물질 감시망 강화	ⓐ(연간 해양방사성물질 측정정보 공개 실적) / (연간 해양방사성물질 측정정보 공개 목표(746건)) ×50% ⓑ(해양방사능 관련 정책 소통 개최건수(3건)/목표건수(3건))×50%	100	정량	산출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3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②해양오염 위기 대응을 위한 훈련 및 교육 확대	ⓐ(모의훈련 실시건수(3건)/ 훈련 목표건수(3건))×50% ⓑ(연간 해양오염 방제교육 이수 인원 / 목표인원)×50%	100	정량	산출	
전략목표 Ⅳ. 경쟁력있는 수산업을 육성하고 활력넘치는 어촌을 조성한다.							
1. 어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어업인의 경영여건을 개선한다.							
	①어촌·어항 개발을 통한 어촌경제 활성화	①어촌 활력 추진율(%)	ⓐ*60 + ⓑ*30 + ⓒ*10 ⓐ어촌관광·체험 직접소득액 220억원 ⓑ정책자금 지원자수 727명 ⓒ청년 신규인력 정착률	100	정량	산출	
		②어항개발 추진율(%)	ⓐ*60 + ⓑ.*40 ⓐ과정 달성도(%) *어항개발 착수 6건 및 준공 9건 ⓑ 국가어항 관광 방문객 53,454천명	100	정성	과정	
	②어촌 활력증진을 위한 기반 확보	①어촌활력지역 변화율(%)	3개 부분 값*을 정규 분포화 하여 등급을 구분하고, 4·5등급이 2개 이상 해당되는 어촌의 전체 중 비율 *사업대상지의 인구사회 (지역소멸지수), 산업경제 (가구당 수산물 판매실적), 물리환경 (척당 어항투자비용)	41.5	정량	산출	
		②어촌신활력증진 지원 규모(개소)	연도별 지원개소	60	정량	산출	
	③어업인의 생활·복지 지원 강화 및 안정적 경영 여건 조성	①소득보장 및 경영 안정 지원 프로그램 수혜율(%)	ⓐx33 + ⓑx33 + ⓒx34 ⓐ3톤 미만 어선원보험 가입률 ⓑ어업인 안전쉽터 조성 (누적개수) ⓒ장기체류가 가능한 외국인 근로자 규모 등	100	정성	과정	
	④수산업·어촌 공익증진과 연계한 어가소득 기반 강화	①소규모어가 어선원 직불금 수급자수(호)	당해연도 소규모어가 직불금 수급자수	30,000	정량	결과	
		②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수급 척수(척)	당해연도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수급척수	750	정량	결과	
	⑤연안해운 공공성 및 안전관리 강화	①연안여객선 수송실적(천명)	연안여객선 이용객 수	14,673	정량	결과	
		②연안여객선 안전관리 강화율(%)	ⓐ여객선 안전관리 개선도(50%) *(개선이행건수/특별점검지적 건수)×0.5 ⓑ여객선 안전제고방안 마련 (50%) *방안 마련 및 지침 개정×0.5	100	정성	산출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3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2. 수산자원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어업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①수산자원 조성 및 자원관리체계 고도화	①수산자원조사 실적 지수 달성률(%)	수산자원조사실적 지수 달성률 =실적지수(a.조사 기준정점 정밀 조사 달성지수+ b.주요 자원 수직분포 누적 구명지수) 목표치의 달성률	100	정성	과정	
		②연안생태계 건강성 향상 실적	당해연도 조성완료해역(4년차)의 해조류, 저서동물 등의 생물종 다양성 분석	2.77	정성	과정	
	②어선어업 구조개선 추진	①근해어선 감척 이행율(%)	(근해어선 감척수/근해어선 감척 추진계획)×100	80	정량	산출	
	③어업 안전 보장 및 조업질서 유지 역량 강화	①국내어선 불법 조업율(%)	국내어선 블법어업 단속 건수/ 승선조사건수×100	15.1	정량	산출	
		②중국어선 불법대응 건수(건)	우리수역내 입어하는 중국어선에 대한 직접승선 조사 건수	1,100	정량	산출	
	④연근해어업 경쟁력 강화	①연근해어업 업종별 중대재해 표준매뉴얼 제작·보급(업종수)	표준매뉴얼이 개발된 업종의 갯수	21	정량	산출	
		②어업규제완화 시범 단체 수(개)	당해연도 사업 참여단체 수 측정	2	정량	산출	
		③유실·침적 폐어구 수거·처리 면적(㎢)	당해연도 사업예산 × 최근 3년간 예산 투입 대비 수거면적 평균치	2,242	정량	산출	
	⑤해외 수산물 공급기반 확충	① 원양어선 노후화 개선율(%) (가중치 50%)	안전펀드 지원 척수(누적) / 노후 어선* 척수 x 100 * 전년도 말 기준 31년 이상	4.2	정량	산출	
		② IUU어업 예방·근절 등 책임있는 조업기국 위상 제고를 위한 항만국 검색율(%) (가중치 50%)	(항만국검색 척수/전체 입항신고 척수) × 100	9.0	정량	산출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3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3. 친환경·스마트양식업으로 전환하여 지속가능한 양식생산 환경을 조성한다.							
	①첨단 친환경 양식산업 육성	①친환경 수산물 인증건수(건)	유기수산물 인증건수+무항생제 수산물 인증건수+활성처리제 비사용 인증 * 건수는 품목 당 1건 기준으로 산출	100	정량	산출	
		②친환경·첨단 양식 기술이전 교육자(수)	친환경양식 창업지원(양식기술 이전교육) 건수 집계	215	정량	산출	
	②고부가 양식품목 전략적 개발 육성 및 연관산업의 동반성장	①양식 9대 전략품목 생산금액(백억원)	9대 전략품목 양식생산금액	285	정량	산출	
		②배합사료 사용 어가(어가수)	'23년도 배합사료 직불제 참여 어가수	300	정량	산출	
	③지속가능한 양식산업 경쟁력 확충	①수산물 자조금 단체 내실화 및 신규 단체 확대(%)	ⓐ*70 + ⓑ*15 + ⓒ*15 ⓐ품목별 수산물 단체(10개) 중 8개소 의무자조금으로 전환 ⓑ품목별 수산물 단체 중 2개소 임의자조금 운영 ⓒ24년부터 신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2개소 신규 자조금	100	정량	산출	
		②양식업 지속가능성 증대	ⓐ*60+ⓑ*40 ⓐ임대제도 도입을 위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 ⓑ수산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응·적응방안 마련	100	정성	과정	
	④깨끗하고 안전한 양식수산물 생산기반 조성	①양식생산 청정환경 조성 추진율(%)	ⓐ*30+ⓑ*40+ⓒ*30 ⓐ양식장 스티로폼부표 제로화율 60% * (인증부표로 교체량÷전체 부표량)X100 ⓑ청정어장 재생사업지 생태계 회복률 10% 상향 ⓒ수산용 의약품 안전 관리 개발 정비 10종 * 달성건수/목표건수(10종)x100	100	정량	산출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3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4. 신선수산물 유통·소비체계를 구축하고, 식품산업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한다.							
	①수산물 수급·물가위기 관리체계 구축 및 안심 유통환경 조성	①할인혜택을 받은 소비자수(천명)	할인혜택을 받은 소비자수	3,600	정량	결과	
		②이력정보시스템을 통한 생산 정보 관리 물량 (톤)	이력정보시스템을 통한 생산 정보 관리 물량 (톤)	18만톤	정량	결과	
	②수산식품 가공·수출 인프라 확대	①수산물 수출 활성화 추진율(%)	ⓐ100대 기업 수출액 20억불 달성(35%) ⓑ수출 확대를 위한 수산식품산업 육성대책 수립(25%) ⓒ내수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육성을 위한 성장 사다리형 바우처 지원 (35개사) (20%) ⓓ해외 온라인몰 전용 판매관 입점업체 확대 (175개사) (20%)	100	정량	산출	
	③수산업 활성화를 위한 수산정책 지원 강화	①수산분야 규제혁신과제 발굴(건)	간담회, 설명회 등에서 발굴된 규제혁신과제 수	38	정량	결과	
		②수산분야 세제 및 금융 지원액(억원)	ⓐ+ⓑ ⓐ수산분야 일몰연장 및 신규 세제감면액(억원) ⓑ수산정책자금 공급규모(억원)	47,995	정량	결과	

붙임 2 관리과제와 국정기조 등 연계 현황

성과목표	관리과제	국정기조 연계
전략목표 Ⅰ. 세계를 선도하는 해운물류강국으로 도약한다.		
1. 국적 선대 확충 및 선화주 상생을 통해 안정적인 해상 수송망을 구축한다.		
	①[핵심]저시황기 국적선사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	국정 40-1
	②[핵심]국적선사-수출입기업 간 상생 촉진	국정 40-2
2. 스마트기술 융합을 통한 물류서비스 고도화하고 항만경쟁력을 제고한다.		
	①[핵심]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및 규제개선	국정 40-3
	②[핵심]한국형 스마트항만 구축과 물류거점 항만개발로 항만 경쟁력 강화	국정 40-3
	③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고부가가치 항만 실현	국정 40-3
	④[핵심]해외 물류거점 확보 등 진출 지원 강화	국정 40-2
	⑤[핵심]'컨' 항만 경쟁력 및 경제적 가치 제고	국정 40-2
	⑥[핵심]민간참여를 통한 항만 고부가가치 창출 및 해외협력 기반 마련	국정 40-3
	⑦[핵심]항만 서비스의 품질제고 및 항만운영의 안정성 확보	
3. 디지털 해상교통망을 구축하고 친환경 선박시장을 주도한다.		
	①[핵심]디지털 해상교통정보(바다내비) 제공 및 신산업 육성	국정 40-4
	②[핵심]차세대 해양 위치정보(PNT) 및 디지털 안전정보 서비스 제공	국정 40-4
	③[핵심]그린 쉬핑(Green Shipping) 생태계 기반 확충	국정 40-4
4. 해운강국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해상물류인력을 양성한다.		
	①양질의 국적선원 일자리 창출	국정 40-5
	②두터운 선원복지 제공	국정 40-5
전략목표 Ⅱ. 안전하고 국민 친화적인 해양·항만을 조성한다.		
1. 연안·항만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한다.		
	①항만 및 연안공간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기반 조성	국정 41-5
	②부산항 북항 글로벌 경쟁력 강화	국정 102-3
2. 재해·기후위기에 안전한 연안·항만을 조성한다.		
	①기후변화 대비 등을 위한 안전항만 구축 추진	국정 41-5
3. 해상사고 사전 예방을 통해 국민안전을 확보한다.		
	①국가 해양수산 재난관리체계 선진화	국정 40-4
	②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범정부 해사안전대책 시행	국정 40-4
	③연근해어선 안전관리 체계화	국정 41-7, 73-4

성과목표	관리과제	국정기조 연계
전략목표 Ⅲ. 경제활력을 높이고, 국민행복을 키우는 해양공간을 구축한다.		
1. 해양 신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여 해양선도경제를 조성한다.		
	①해양에너지, 해양플랜트 등 해양과학 新산업 육성	국정 41-1
	②해양신산업 전략적 육성을 위한 해양바이오산업 기반 구축	국정 73-6
	③해양산업 창업·투자 생태계 조성	국정 73-6
2. 국민 행복을 위해 해양레저관광·해양문화 강국으로 도약한다.		
	①권역별 해양관광명소 조성 및 해양관광 콘텐츠 확산	국정 73-7
	②해양교육문화 콘텐츠 확충 및 향유기회 확대	
3.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해양 경제영토 확장 및 관리역량을 강화한다.		
	①무인도서의 체계적·효율적 관리 강화	국정 41-1
	②해양영토의 과학적 관리기반 확충	국정 41-1
	③극지 진출 및 대양연구 기반 구축	국정 41-1
	④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산분야 통상협상 대응	
	⑤해양수산 ODA 확대 및 양자협력 증진	
	⑥해외 수산자원 확보를 위한 국제협상력 강화	
4. 해양환경 위해요소에 대한 안전망 구축 및 해양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여 지속가능한 해양이용기반을 마련한다.		
	①해양쓰레기 전(全)주기 대응 및 보전·개발이 조화로운 해양 관리 강화	국정 41-6,7
	②지속 가능한 해양환경관리체계 마련	국정 41-6,7
	③개발과 보전의 상생 및 공존을 위한 해양공간관리 체계화	국정 41-6
	④해양자산 관리 강화 및 해양생태계 보전	국정 41-7
	⑤국민이 행복한 청정·안심 해양환경 안전망 구축	국정 41-6,7, 73-3
전략목표 Ⅳ. 경쟁력있는 수산업을 육성하고 활력넘치는 어촌을 조성한다.		
1. 어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어업인의 경영여건을 개선한다.		
	①어촌·어항 개발을 통한 어촌경제 활성화	국정 73-4
	②어촌 활력증진을 위한 기반 확보	국정 73-4
	③어업인의 생활·복지 지원 강화 및 안정적 경영 여건 조성	국정 73-4,5

성과목표	관리과제	국정기조 연계
	④수산업·어촌 공익증진과 연계한 어가 소득 기반 강화	국정73-5
	⑤연안해운 공공성 및 안전관리 강화	국정 41-4
2. 수산자원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어업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①수산자원조성 및 자원관리체계 고도화	국정 41-7, 73-1
	②어선어업 구조개선 추진	국정 41-7
	③어업 안전 보장 및 조업질서 유지 역량강화	국정 41-1, 73-1
	④연근해어업 경쟁력 강화	국정 41-7
	⑤해외 수산물 공급기반 확충	
3. 친환경·스마트양식업으로 전환하여 지속가능한 양식생산 환경을 조성한다.		
	①[핵심]첨단 친환경 양식산업 육성	국정 73-1,5
	②고부가 양식품목 전략적 개발 육성 및 연관산업의 동반성장	국정 73-1,5
	③지속가능한 양식산업 경쟁력 확충	국정 73-4
	④깨끗하고 안전한 양식수산물 생산기반 조성	국정 41-7
4. 신선수산물 유통·소비체계를 구축하고, 식품산업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한다.		
	①수산물 수급·물가위기 관리체계 구축 및 안심 유통환경 조성	국정 73-3
	②[핵심]수산식품 가공·수출 인프라 확대	국정 73-2
	③수산업 활성화를 위한 수산정책 지원 강화	국정과제 73-5, 73-6